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1050-01

최종보고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 연구

2017. 11. 30.

연구책임자: 은기수 (서울대학교)

한 국 인 구 학 회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 연구”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30.

연구진

연구책임자: 은기수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자: 김주현 (충남대학교)
차승은 (수원대학교)
최 율 (한국교원대학교)
전지원 (옥스퍼드대학교)
변종석 (한신대학교)
박민규 (고려대학교)
박인호 (부경대학교)
김석호 (서울대학교)
박효민 (성균관대학교)
연구보조원: 강은혜 (서울대학교)
황현길 (부경대학교)
하헌주 (성균관대학교)
구서정 (서울대학교)

한 국 인 구 학 회

세부과제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심층분석

연구책임자: 은기수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자: 김주현 (충남대학교)

차승은 (수원대학교)

최 율 (한국교원대학교)

전지원 (옥스퍼드대학교)

연구보조원: 강은혜 (서울대학교)

요약문

1장. 인구 구조와 혼인상태

모든 사회현상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출산,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겉보기에 매우 단순한 인구현상의 변화가 한 사회의 기본구조의 근간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낳고,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력, 결혼시장, 연금제도, 건강과 보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 심지어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적 지형의 변화까지도 낳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제1장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와 혼인상태를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2000, 2005, 2010 그리고 201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한국 인구구조의 근간을 밝힌다. 두 번째는 2015년 표본조사자료를 통해 여러 혼인상태 집단의 특성을 밝혀 저출산과 고령화의 구조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의 인구구조 및 혼인상태의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발표자료(KOSIS)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한 미혼자, 기혼자, 이혼자 등 구체적 집단의 인구 특성 및 출산 실태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인구구조는 방추형 인구피라미드로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따라서 유소년인구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반해, 사망력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인구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구의 평균연령이 빠르게 증가하여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지수가 2000년에는 35였는데 2015년에는 고령화지수가 95.1로 거의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혼인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이혼인구 비율도 증가했는데, 유배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평균 초혼연령 이후에 미혼인 상태에 있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별 특성 차이가 있다. 미혼자 여성은 고학력의 일하는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비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 집단에서 남성 미혼집단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고, 나이는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남녀 미혼자 중 취업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여성 미혼집단에서 남성에 비해 전문 및 관리직과 사무직이 많은 경향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출산의 전(前) 생애사건으로 인식되는 결혼을 연기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초혼연령의 상승을 통해 결혼연기 현상을 확인하였다. 혼인연령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은 성,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20대 후반 부터 30대까지로 미뤄지는 결혼연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은 고학력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경향은 이미 한국사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생산성 감소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필요한 일이므로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하여 여성의 노동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장. 가구와 가족

제 2장에서는 가구와 가족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 2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분석이 구분된다. 하나는 시계열분석을 통한 가구구조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두 번째에서는 다양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가족의 변화 모습을 단면들을 살펴 보았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5년 현재, 1인가구와 2인가구인 미니가구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2000년 센서스에서만 해도 4인가구가 대세를 이루었던 것을 비추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배우가구 역시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3세대 이상 가구형태는 크게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족은 단출하게 살아가면서, 가족이 서로를 방문하는 사이가 되었다.

각론에서는 다양한 가구 형태와 그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로 1인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같은 1인가구라 하더라도,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에 겪을 때 상황과 조건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집단이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과정과 1인가구로 살아갈 지속기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의 부담과 문제들 역시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

두 번째로 살펴본 분거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분거가구는 크게 직장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가족 내에서 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형성된 가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남성1인가구는 대체로 직장이 중소도시나 농촌에 위치한 사례가 부각되는 한편, 기혼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기혼편부모 가구는 주요도시,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특화된 지역에 편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이 친밀과 독립성 두 가지를 동시에 획득하기 위해 분거가 이루어진다는 외국의 분거가구와는 달리, 한국의 분거가구는 남성홀별이 가구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구적 특성”이 극대화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가구는 자녀 없이 살아가는 가구, 즉 일명 알려진 덩크족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덩크족은 30-40대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고, 자녀 출산을 원하는 덩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출산을 원하는 덩크부부는 거주지가 아직은 불안정하고, 통근시간이 길며,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덩크부부라도 자녀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부는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덩크부부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고, 직업지위 역시 취약한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남편과 아내의 직장상황이 열악하고, 주택소유 상황도 열악하다는 점을 센서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국제결혼가구의 경우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로 구분해 본 결과, 남편외국인 가구는 귀화자의 비율이 낮았고, 주택거주상황 역시 월세나 전세 비중이 집을 소유한 경우보다 높았다. 그에 비해 아내외국인 가구는 귀화자 비율이 높기는 하나, 아내가 혼인이주를 한 경우 이들 남편들의 교육수준, 직업상황은 남자가 혼인이주한 경우 보다 더 열악하였다.

3장. 교육과 경제

제3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교육 및 경제활동 상태를 세 가지 연구 주제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각 연구 주제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2000년 이후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 전공계열의 경우 남성은 공학계열, 여성은 인문계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 전공 구조의 경우, 2000년과 2015년의 변화폭은 크지 않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인문, 사회, 교육, 농림수산 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공학, 의학, 자연, 예체능 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남성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직업구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능직, 장치기계, 관리자 등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사무직,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전공계열과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성은 공학과 의약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의약과 교육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남녀 공통적으로 공학과 교육계열이었다. 전공 계열에 따른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교육, 의약, 공학 등과 같이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전공들에 비해 인문, 사회, 자연계열등의 경우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타 전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해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고등학교 이하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데 비해 대학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직업구조의 변화는 모든 직종에서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대졸자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다양한 직종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연구 주제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다룬 니스 (NEES) 족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니스족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니스족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에서 니스족의 분포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스족은 비니스족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으며 고령층의 경우 비니스족에 비해 사적, 공적 부조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니스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니스족의 혼인상태와 가구유형 분석을 살펴보면, 청장년층 남성과 여성은 혼인이나 가구 유형에 따른 니스족 비중에서 상반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혼인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여성은 혼인이나 2세대, 3세대 가구 구성이 오히려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남녀 모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에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가족 유대감이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장. 고령화의 명과 암

제4장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한국 고령층의 특성을 분석, 고령사회의 명(明)과 암(暗)을 살펴보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 사회 고령층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및 교육수준, 그리고 이들을 부양할 만한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고령사회가 갖는 함의는 달라진다. 따라서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들의 프로필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취약 계층은 누구이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이 누구와 함께 (혹은 따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구유형별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와 고령자 부부가구가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등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층이 많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막상 돌봄이 필요할 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할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증가하면 현재의 1인가구, 부부가구 위주의 가구 분포는 적절한 돌봄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1인가구는 물론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앞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돌봄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돌봄과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층의 프로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 2005년과 비교해서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은 남성 노인 비중의 증가로 노년의 성비 불균형이 약간 완화됐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 줄어들고 전 연령대에서 유배우자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남성 평균수명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층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관리 및 삶의 질 관리 등 노년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고령사회에 고무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신체적/정신적 제약 유무로 살펴본 건강상태 역시 2005년에 비해 최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5년과 유사하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참여율 역시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 수준 및 건강 상태 측면에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 역시 아직까지는 연금보다는 국가보조 및 자녀의 도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 자원을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노(老老)가구, 조손가구,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특히 노노(老老)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 및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향후 관리가 중요한 타겟 집단이다. 이들이 자녀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작업, 즉, 누가 돌봄을 담당하고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 및 제도적 준비가 요구된다. 고령층이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인 만큼,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필에 기반해 고령사회의 명과 암을 구분하고, 향후 고령화를 어떻게 잘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장. 한국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및 출산력

제5장은 한국의 저출산을 이끌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력단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의 요인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이다. 개인적인 수준의 요인이 있고, 가족, 사회적인 차원의 원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요인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정말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는 출산력에 차이가 있을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2015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을 고려하여,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과 경력단절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했는지,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면, 여러 계기나 이유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결혼 전에 일하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주요 이유는 결혼과 출산이었다. 먼 과거에는 결혼만으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젊은 여성들은 결혼만으로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자녀 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력단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기혼여성(인구주택총조사 당시 유배우 여성, 이혼 여성, 사별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여부, 2015년 현재 경제활동상태의 세가지 변수를 가지고, 일의 연쇄(work sequence)를 구성하였다. 일의 연쇄는 1) 결혼 전 일하지 않았음-현재도 일하지 않음 2) 결혼 전 일하지 않았음-현재는 일함 3)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없었음-현재도 일함 4)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없었음-현재는 일하지 않음 5)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있었음-현재는 일함 6)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있었음-현재는 일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된다.

일의 연쇄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의 연쇄 유형 중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없었음-현재도 일함’의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결혼 전에 일을 했든, 안했든, 그리고 결혼 전에 일을 했었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높았다. 이 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과 배치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고, 지금도 일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도 직업위세가 비교적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이 낮은 것은, 자녀를 출산하면 결혼 및 출산 전에 종사하는 직장에서 그만 둘 위험성이 커지고,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잃어야 할 비용, 즉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적게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고학력,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 좋은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오히려 출산을 미루거나, 적게 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한국의 저출산문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경력단절이 두려운 여성은 자녀를 더 낳고 있지 않다.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원하는 만큼의 자녀도 출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부과제 2

등록센서스 패널 구축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변종석 (한신대학교)

공동연구원: 박민규 (고려대학교)
박인호 (부경대학교)

연구보조원: 황현길 (부경대학교)

요약문

본 과제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연구로 인구 및 가구에 대한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센서스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등록센서스 패널 대상 시범 분석 등의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통계청에서 고려하는 등록센서스 패널은 패널 구축 및 자료의 관리가 등록된 행정자료에 기반하므로 패널의 해외 이주 및 사망 등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표본 마모 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등록센서스 패널의 구축을 위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등록센서스의 제공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패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가구원에 대한 직업 및 고용 활동 자료, 소득 관련 자료, 건강 자료 등 가구 및 인구 특성 자료이외에 사회적 및 경제적, 건강 관점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 및 행정자료와의 연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다른 목적성 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되기 위해 가구 및 인구 특성 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료(doner-data)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 분야의 자료, 이민 자료, 직업 및 고용 자료, 생활시간 자료 등과 연계를 통해 가구 및 가구원 특성 변화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지므로 다른 조사의 연계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패널 자료와 연계하는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과제에서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을 위한 인총패널화 방안에 대한 가구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등록센서스의 인총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 시군부로 모집단을 층화하였고, 균형적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세대원수, 거주유형을 내재적 층화변수(정렬순)로 고려하였다. 인총 가구패널의 표본규모는 총 19,111,030개 가구 중 약 2% 규모인 가구표본, 즉 $n=382,220$ 개 가구로 결정하였고, 표본(패널) 가구내 가구원은 모두 패널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본배분은 전국수준은 물론 시도 내 시·군부 수준의 추정량이 갖는 정도수준이 적절할 수 있는 표본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제곱근할당(square-root allocation)과 키쉬할당(Kish allocation)과 같은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였다. 등록센서스 자료로 제공되는 주요 문항에 대한 예상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를 확인해 볼 결과, 이주율 등 주요 추정량의 오차한계와 상대표준오차(CV)는 키쉬할당과 제곱근비례할당에서 모두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널 구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패널 가구원에 의한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유입이 발생하여 모집단 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총 가구패널을 위한 가중치 산출은 패널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정의되지만 최초 패널을 고정한 고정패널모형을 가정하여 패널 가구와 가구원, 비가구원에 대해 횡단면 및 종단치 가중치 산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패널 가구와 가구원, 원패널 가구원에 의한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은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모두 산출하지만 비원가구원 유입 시 기본적으로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록센서스 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등록센서스 자료 중 2%를 추출하여 등록센서스 자료 기반으로 패널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2015년과 2016년의 두해에 걸친 분포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구패널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주거지역, 주거형태 그리고 가구구성과 같은 동태적 변수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패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센서스에서 제공되는 변수 이외에 다양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인총 패널에서 주어진 문항의 수가 패널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작아 통계적 매칭이나 자료 연결을 통해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위해 제공된 등록센서스 패널의 단위가 양 시점에 조사된 개인이 속한 가구와 이에 대응하는 가구원을 패널로 구성하는 형식보다는 가구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패널 구성 시점 시에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 내 가구원을 가구 혹은 가구원 패널로 구성한 후에 이 후 시점에는 신규 가구 및 가구원을 추적하는 형태의 패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패널의 유지 및 가중치 산출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등록센서스 인총패널 구축을 위해 현재 구축을 검토하는 개인 기준의 인구패널보다는 일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인총 가구패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인총 패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패널 가구로의 가구원 유입 및 유출되는 변화를 통해 모집단 가구 변화 특성, 가구원의 이동 및 가구 특성이 세대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 등 가구와 가구원의 연계된 특성 분석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패널의 기본 단위로 가구원(개인)보다는 가구 단위 관점에서 모집단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등록센서스 이외의 패널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등록자료 혹은 조사자료를 연계한 문항의 추가 제공을 검토하고,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패널 관리 기준과 추적 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가중치 산출 방안에 대해 마련하는 연구를 통해 일반 가구의 가구 및 인구에 대한 다양한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과제 3

중장기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책임연구원: 김석호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박호민 (성균관대학교)

연구보조원: 하현주 (성균관대학교)
구서정 (서울대학교)

요약문

본 연구는 변화하는 조사환경과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문항의 구성과 조사주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시점에서 센서스의 장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센서스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자료 혹은 행정자료의 신뢰성과 가용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조사환경에 유리한 측면의 변화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센서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빠르게 증가 하는 것과 같이 조사환경에 불리한 측면의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해외사례와 통계청 기존 조사자료 검토를 통해, 센서스 표본조사 조사항목 및 질문지를 개발하고, 센서스/표본조사와 기존 조사 간 공동조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센서스는 상당히 오래된 조사로, 근대에 들어서는 많은 국가에서 모든 개인과 가구를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센서스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적인 전수방문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센서스를 수행하는 기법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공식적인 인구등록자료나 다른 행정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방문조사 정보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정부의 공식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방문조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센서스 역시 1925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전통적 방문조사 방식을 중단하고,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등록센서스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센서스 조사 방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한국의 센서스는 전 인구와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전수조사(short form)와 더불어 추출된 10%의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표본조사(long form)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전수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던 전수조사 자료는 행정통계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현장 표본조사의 비율을 전체가구의 20%로 늘려 전체적인 센서스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전수조사항목 12개(인구 7개, 가구 1개, 주택 4개), 표본조사 항목 52개(인구 34개, 가구 12개, 주택 6개)로 총 53개 항목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현장조사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인구주택총조사의 품질저하 및 대규모 현장조사(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행정자료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로 실시되었던 19개의 항목 중 9개의 항목(인구: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 사용방수, 건물 및 거주층,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타지주택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주택: 총방수, 주거시설 수)이 표본조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0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이전 조사에서 전수항목이었던 본관과 2010년 조사에서는 표본항목이었던 대지면적 항목의 경우, 등록센서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집자료를 보다 시의적절하고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 현행 표본조사 항목을 보다 다양화 하고, 조사항목을 보다 다양한 주기와 방식으로 조사를 하여 5년마다 대규모의 조사를 일시에 실시하는 전통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센서스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센서스 표본조사 조사항목 및 질문지 개발과 센서스와 표본조사와 기존연구의 공동조사 방안 마련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UN이나 유럽연합의 권고안,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의 센서스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인구항목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교육, 가구, 출산력 등에서는 항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이동, 특히 국제적 인구이동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여 질문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특성 역시 충분히 질문이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인상태, 주택소유, 종교 등의 항목은 응답항목 혹은 질문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통계청조사를 통해 통합조사가 가능하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8개 개인 및 가구 대상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자료 항목 중 응답자와 관련된 사실을 질문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주기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제약,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혼인상태, 이전 거주지, 주차장소, 주택의 방 수 등은 현재 조사주기를 조정해야 한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내용의 중복과 조사 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센서스 디자인 연구 필요하다. 둘째, 통계청 이외 기관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조사와의 결합과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사교육비의식조사는 통계청의 초, 중, 고 사교육실태조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 및 조사의 효과성 차원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충실한 형태의 통합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셋째, 통계청 외 기관과의 협조와 더불어 통계청 내부에서도 조사추진체계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통계청 내부 부처간 협업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조사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센서스 조직의 법적 권한 확보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실제 가용자원에 기반하여 실제 추가할 수 있는 문항의 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청의 지표체계들을 위해 별도의 조사 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면접조사 이외에 전화 및 인터넷 등 대안적인 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인 자료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자료 생성과정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 대한 파라미터 수집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매뉴얼을 계속해서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세부과제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심층분석

제1장 인구 구조 및 혼인 상태	3
I. 서론	3
II. 본론	5
1. 2000-2015 연령 및 성별 인구 구조의 변화	5
2. 혼인상태별 인구구조 변화	13
3. 혼인연령의 변화	21
4. 저출산 및 고령화 구조 분석	22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2
제2장 가구 및 가족	35
I. 서론	35
II. 본론	35
1. 가구의 변화: 15년간의 가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35
2. 가구와 가족관계의 지형변화	46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1
제3장 교육 및 경제활동	75
I. 서론	75
II. 본론	77
1. 교육구조와 경제활동 상태의 시계열 변화: 2000-2015	77
2.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	85
3.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 니스(NEES) 족의 특성 (2010-2015)	92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1

제4장 고령사회의 명(明)과 암(暗)	103
I. 서론	103
II. 본론	105
1. 고령자가구의 유형 및 특성	105
2. 고령층의 특성 및 변화: 2005년-2015년	112
3. 고령 취약계층	121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1
제5장 한국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및 출산력	135
I. 서론	135
자료와 분석방법	138
II. 본론	140
1. 결혼 전 직장경험과 경력단절 경험	140
2. 일의 연쇄 (sequence of work)	147
3.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와 일의 연쇄(2)	151
4. 여성의 결혼 전 일의 경험, 경력단절과 평균 출산아수의 관계	156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4
부록	167

세부과제 2: 등록센서스 패널 구축 방안 연구

I. 인총패널	17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7
2. 연구 내용	177
3. 연구 방법	178
4. 기대효과	178
II.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	179
1. 인구주택총조사 종단자료 구축 및 활용 사례	180
2. 패널조사 사례	183
2-1. 국내 사례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83
2-2. 해외 사례	188
3. 시사점(소결)	200
III. 인총패널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출 방안	202
1. 개요	202
2. 인총자료 검토	202
3. 표본설계안	216
1) 표본설계 원칙	216
4. 인총패널 가중치 산출 방안	224
IV. 2015년 기반 등록센서스 2% 자료 분석	228
1. 패널데이터 분석	228
2. 등록센서스 인구패널 데이터 분석	237
3. 등록센서스 가구패널 데이터 분석	244
4. 2016년 추가가구 데이터 분석	250
5. 소결	254
V. 결론 및 제언	255

세부과제 3: 중장기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제1장 서론	261
1) 배경	261
2) 연구의 필요성	268
제2장 한국의 센서스 구조	269
1) 조사항목 연혁	270
제3장 해외사례	285
1) 개괄	285
2) UN 권고안	286
3) 유럽연합 센서스(European Union Census)	289
4) 미국센서스 (전수조사 + 순환센서스)와 ACS	292
5) 프랑스 센서스	296
6) 캐나다 센서스	298
7) 호주 센서스	301
8) 소결	303
제4장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향	305
1) 항목수정 및 신규항목 제안	305
2) 신규항목 제안	310
3) 통계청 조사통계와 통합조사 가능한 표본항목 제안	315
4) 조사항목별 조사주기 제안	328
제5장 결론 및 제언	339
1) 소결	339
2) 기술적 이슈와 제언	340

세부과제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심층분석

제1장 인구 구조 및 혼인 상태

제2장 가구 및 가족

제3장 교육 및 경제활동

제4장 고령사회의 명(明)과 암(暗)

제5장 한국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및 출산력

제1장 인구 구조 및 혼인 상태

김 주 현 | 충남대학교

은 기 수 | 서울대학교

차 승 은 | 수원대학교

I. 서론

한 사회의 인구구조는 그 사회의 노동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돌봄의 대상인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만약 은퇴한 고령층을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성별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성과 연령의 측면에서 원하는 짝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연령구조의 측면에서 젊은 사회인지, 아니면 나이든 사회인지 등 한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의 근원을 이룬다. 한 사회가 어떤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 사회가 어떤 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 인구구조가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소위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20세기 후반, 21세기 전반에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회의 인구구조는, 그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의 근원을 형성한다.

한국사회는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전하고 있다. 고령화의 정도로 보면, 한국은 2000년에야 비로소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인구인, 소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 경향과 맞물려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단 낮아진 출산력은 반등의 기미 없이 꾸준히, 그리고 끝없이 낮아져, 소위 초저출산력을 기록하고 있다. 그와 함께 유소년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져, 곧 한국사회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고, 다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전체 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제 단순히 비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낮은 출산력 상황에서 일 년에 50만 명 정

도 태어나던 신생아가 5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4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출생아수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낮아지는 것은 미혼 상태가 길어지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며, 결혼 자체가 적어지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사회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궁극적으로 다 결혼한다는 소위 “보편혼”의 전통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고, 결혼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 다 결국 결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 가운데, “꼭 결혼해야 돼?” 라고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많다. 과거에는 결혼 안 한 사람을 단지 “미혼”이라는 하나의 혼인상태로 파악해 왔는데, 지금은 “미혼”은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뿐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는 가정을 품고 있다고 보고, 내 의지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는 “미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는 개념으로 혼인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혼인상태를 물어보면 “비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겪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은 모두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출산력과 사망력 그리고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현상의 변화의 결과이다. 그런데 출산, 사망, 인구이동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과학기술의 발달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하는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와중에 AI, 생명과학의 발달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면,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출산,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겉보기에 매우 단순한 인구현상의 변화가 한 사회의 기본구조의 근간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낳고,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력, 결혼시장, 연금제도, 건강과 보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 심지어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적 지형의 변화까지도 낳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일견 매우 단순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혼인상태의 변화가 사실은 한국사회에 그 위력을 짐작하기 힘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와 혼인상태를 분석하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2000, 2005, 2010 그리고 2015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한 요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인구현상인 혼인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 연기되고 늦어지면서 미혼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리고 미혼이라는 혼인상태 속에는 미혼인지, 비혼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한국 인구구조의 근간을 밝힌다. 두 번째는 2015년 표본조사자료를 통해 여러 혼인상태 집단의 특성을 밝혀 저출산과 고령화의 구조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의 인구구조 및 혼인상태의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발표 자료(KOSIS)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한 미혼자, 기혼자, 이혼자 등 구체적 집단의 인구 특성 및 출산 실태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II. 본론

우리는 이 절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1세기 첫 15년간 한국의 인구가 성별,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2000-2015 연령 및 성별 인구 구조의 변화

먼저 인구의 규모 및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본다.

1) 성별, 연령별 인구 변화

(1) 인구수 및 인구 피라미드

한국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1세기 첫 15년간 증가해왔다. 2000년 총인구수가 45,985천명에서 2005년에 47,041천명으로, 2010년에는 47,990천명, 그리고 2015년에는 49,705천명으로 증가해왔다. 인구 5천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표 1-1).

<표 1-1>을 보면, 2000년까지는 전체 인구 중 남성이 23,068천명, 여성이 22,917천명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약간 많았다. 그러나 2005년에는 남성 인구가 23,465천명, 여성 인

구가 23,575천명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하고 이후 2015년에 남성 인구 24,819천명, 여성 인구 24,885천명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더 많다. 한국은 총인구 측면에서 여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인구는 2000-2015년 사이에 조금씩 증가해왔지만, 인구사(人口史)의 측면에서 보면, 위의 <표 1-1>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저출산의 지속으로 0-4세의 영유아, 더 넓게는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 0-4세까지의 인구는 313만 명이었다. 그런데 저출산이 지속되고 매해 출생아수가 급감하면서, 2005년에는 238만 명, 2010년에는 222만 명, 2015년에는 223만 명 등으로 줄고 있다. 연령구간을 좀 더 넓혀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로 확대해서 보면, 2000년에는 963만 명이었던 유소년인구가 2005년에는 898만 명, 2010년에는 778만 명으로 줄더니 2015년에는 69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에 거의 일천만 명이나 되

<표 1-1> 성별·연령별 전체 인구 변화, 2000-2015

연령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체	남자(명)	여자(명)									
합계	45,985,289	23,068,181	22,917,108	47,041,434	23,465,650	23,575,784	47,990,761	23,840,896	24,149,865	49,705,663	24,819,839	24,885,824
0~4세	3,130,258	1,641,166	1,489,092	2,382,350	1,237,301	1,145,049	2,219,084	1,142,220	1,076,864	2,235,397	1,147,126	1,088,271
5~9세	3,444,056	1,831,446	1,612,610	3,168,887	1,654,228	1,514,659	2,394,663	1,243,294	1,151,369	2,252,950	1,162,087	1,090,863
10~14세	3,064,442	1,615,013	1,449,429	3,434,891	1,816,318	1,618,573	3,173,226	1,654,964	1,518,262	2,418,360	1,257,902	1,160,458
15~19세	3,691,584	1,913,885	1,777,699	3,100,523	1,626,378	1,474,145	3,438,414	1,826,179	1,612,235	3,170,545	1,657,722	1,512,823
20~24세	3,848,186	2,028,206	1,819,980	3,662,123	1,915,902	1,746,221	3,055,420	1,625,371	1,430,049	3,385,936	1,808,857	1,577,079
25~29세	4,096,978	2,057,321	2,039,657	3,671,847	1,858,332	1,813,515	3,538,949	1,802,805	1,736,144	3,027,896	1,581,887	1,446,009
30~34세	4,093,228	2,068,202	2,025,026	4,096,282	2,059,913	2,036,369	3,695,348	1,866,397	1,828,951	3,611,034	1,854,905	1,756,129
35~39세	4,186,953	2,117,492	2,069,461	4,112,785	2,065,668	2,047,117	4,099,147	2,060,233	2,038,914	3,783,589	1,927,388	1,856,201
40~44세	3,996,336	2,029,413	1,966,923	4,123,041	2,082,427	2,040,614	4,131,423	2,071,431	2,059,992	4,215,921	2,142,101	2,073,820
45~49세	2,952,023	1,496,104	1,455,919	3,900,899	1,961,859	1,939,040	4,073,358	2,044,641	2,028,717	4,266,941	2,151,070	2,115,871
50~54세	2,350,250	1,185,239	1,165,011	2,855,297	1,426,597	1,428,700	3,798,131	1,887,973	1,910,158	4,145,976	2,094,318	2,051,658
55~59세	1,968,472	959,680	1,008,792	2,278,438	1,126,997	1,151,441	2,766,695	1,360,747	1,405,948	3,863,095	1,922,796	1,940,299
60~64세	1,788,849	836,465	952,384	1,888,853	897,384	991,469	2,182,236	1,057,035	1,125,201	2,758,941	1,348,273	1,410,668
65~69세	1,376,122	593,974	782,148	1,680,067	755,949	924,118	1,812,168	833,242	978,926	2,117,875	1,015,463	1,102,412
70~74세	918,121	348,226	569,895	1,252,734	514,241	738,493	1,566,014	672,894	893,120	1,760,932	789,607	971,325
75~79세	600,598	211,347	389,251	766,870	270,632	496,238	1,084,367	410,726	673,641	1,356,014	550,684	805,330
80~84세	303,759	94,135	209,624	432,259	136,705	295,554	595,509	186,008	409,501	810,891	275,462	535,429
85~89세	173,206	39,715	133,491	171,521	46,463	125,058	271,166	74,118	197,048	371,527	98,367	273,160
90~94세				50,738	10,596	40,142	78,329	17,770	60,559	124,111	28,565	95,546
95~99세				10,069	1,656	8,413	15,279	2,593	12,686	24,573	4,831	19,742
100세 이상				960	104	856	1,835	255	1,580	3,159	428	2,731
미상	1,868	1,152	716									

주: 2000년의 85-89세는 85세 이상 인구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연령 미상이 있음.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던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가 불과 15년 사이에 7백만 명이 안 되는 수로 줄어든 것이다.

둘째,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다른 연령층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소위 생산인구라고 불리는 15-64세까지의 인구는 21세기 첫 15년간 증가해왔다. 2000년에는 생산인구의 규모가 3297만 명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는 3369만 명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다시 347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362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학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 인구도 전통인구에서 근대인구로 이행한다고 한다. 근대인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출산력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증가한다. 절대수로도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한다. 생산인구가 증가하면 전 사회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여겨진다. 이런 현상을 인구보너스(demographic dividend)라고 부른다. 이는 출산력과 사망력이 감소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인구의 비중이 높아져, 인구구성 면에서 노동력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도달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국사회가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지만, 2015년 현재,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의 결과, 인구학적으로는 인구보너스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어, 이 인구보너스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생산인구도 증가하지만, 동시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 명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이 인구가 436만 명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다시 542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657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정도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실제 고령인구 규모의 변화를 보면 한국사회에 고령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규모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소위 베이비부머(1955-1963년 생)들이 은퇴시기에 접어들었다. 2015년은 베이비부머들이 이미 상당수 은퇴하고, 베이비부머 후반 인구가 계속 은퇴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2015년 현재 베이비부머는 위의 <표 1-1>에서 50-59세 사이에 들어있다. 2015년에 베이비부머가 이 50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00-2015년 사이에 50대 인구의 규모가 놀랍게 변했다. 2000년에는 50대 인구수가 431만 명이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50대에 속한 2015년에는 50대 인구수가 무려 800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섯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니지만 1963년 이후에도 신생아가 많이 태어났다. 그 영향으로 2015년 현재 40대의 인구수도 2000년에 비하면 크게 증가해 있다. 2000년에 40대의 인구수는

69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 40대의 인구수는 848만 명으로 15년 사이에 150만 명 정도 더 증가해 있다.

여섯째, 그러나 출산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30대의 인구는 2000년에 비해 2015년의 규모가 더 작아졌다. 2000년에는 30대의 인구수가 828만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이 인구수가 739만 명으로 감소해 있다.

이처럼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불과 15년 사이에도 한국의 인구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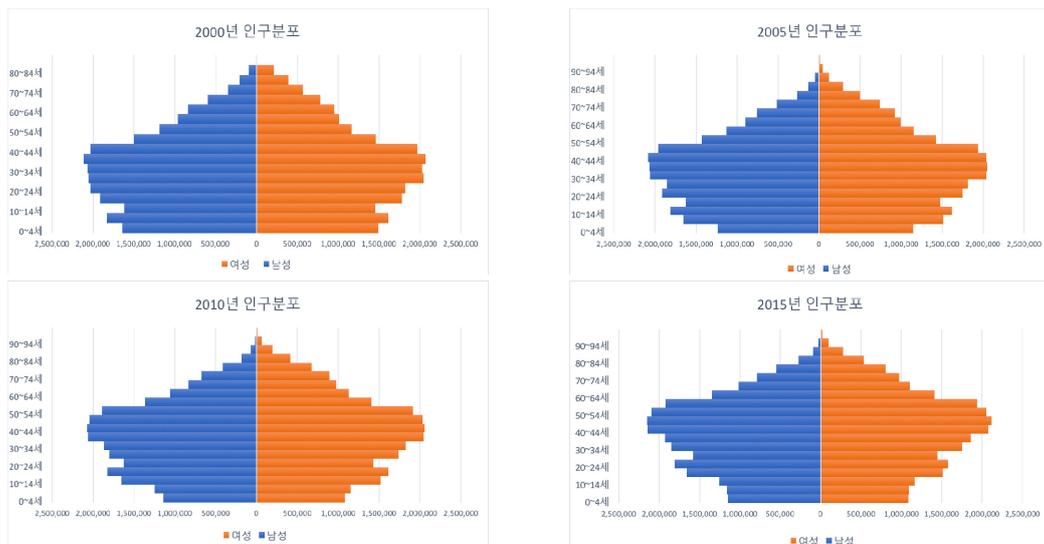
인구구조의 변화를 좀 더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0-44세 인구와 4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율을 살펴보자. 다음 <표 1-2>는 0-44세 인구와 4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는 44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73%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05년에는 67.5%로 감소하고, 2010년에는 62%, 그리고 2015년에는 56.5%로 감소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2015년의 전체 인구가 44세 이하의 인구와 45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절반씩 나뉘는 현실에 다가선 것이다.

<표 1-2> 0-44세 인구와 45세 이상 인구 비율: 2000-2015

연령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전체	남자	여자									
0-44	73.0	75.0	70.9	67.5	69.5	65.5	62.0	64.1	59.8	56.5	58.6	54.5
45+	27.0	25.0	29.1	32.5	30.5	34.5	38.0	35.9	40.2	43.5	41.4	45.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그림 1-1> 2000-2015 인구피라미드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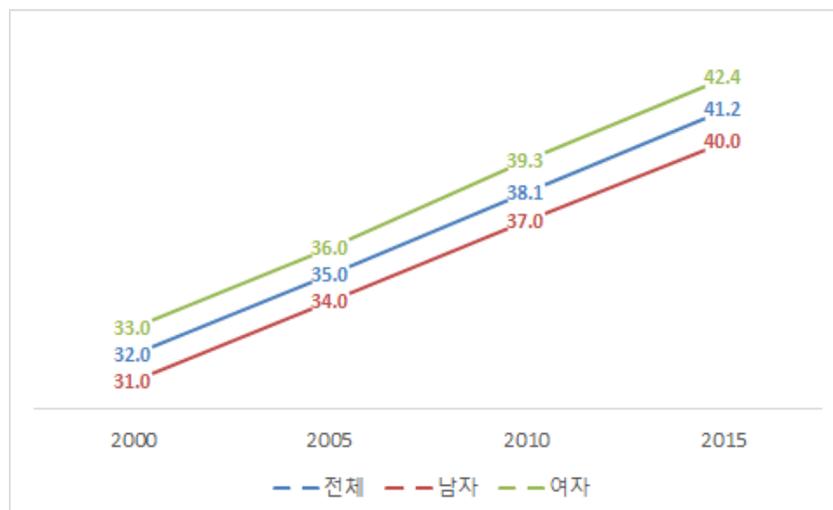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1-1>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만 해도, 0-14세까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고,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초저출산력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신생아의 수가 격감하여, 0-4세까지의 인구, 5-9세까지의 인구, 10-14세까지의 인구 등 유소년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 중위연령의 변화

저출산은 고령화를 동반한다. 어느 사회든지 저출산이 시작되면, 동시에 고령화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두 개의 다른 인구현상이지만, 동시에 동전의 앞 뒤면과 같이 붙어 있는 인구현상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 전체 인구가 젊은 인구에서 나이든 인구로 변한다. 이는 인구의 평균연령으로 확인된다. 인구학에서는 인구의 평균연령은 평균값(mean)보다는 중위연령(median age)으로 계산한다.

한국의 인구는 끊임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2000년에는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이 32세였다. 이 평균연령이 2005년에는 3살이나 늙은 35세로 꺾충 뛰더니, 2010년에는 다시 38.1세로 3살이나 더 늘어버렸다. 급기야 2015년에도 다시 세 살이 더 많아진 41세가 되었다. 5년마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이 세 살씩 증가하는 사회는 전 인류의 인구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21세기 첫 15년간 한국의 인구는 고령화라는 측면에서 인구사(人

<그림 1-2>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의 변화, 2000-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口史)를 다시 쓰게 하는 사회인데, 매 5년마다 인구의 평균연령이 세 살씩 증가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고령화의 부양 지표

한국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현상을 중위연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령화는 부양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우리는 이 절에서 부양구조가 21세기 첫 15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 부양지표를 이용해서 살펴보자. 다음 <표 1-3>은 몇 부양지표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생산인구가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 및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0-14세까지는 노동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으며 성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성인이지만, 더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생산인구에 의해서 부양을 받는 존재로 간주된다. 한 사회의 부양부담이 적기 위해서는 생산인구(15-64세 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

<표 1-3>에 나타난 한국 인구의 부양구조를 보면,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인구 및 고령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양인구비는 분자에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포함하고 있고, 분모는 15-64세까지의 생산인구로 설정되는데, 2000년에 39.5인 부양인구비가 2015년에 37.2로 약간 낮아졌다. 부양인구비로 보면, 생산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난 15년간 계속 감소해 온 것이다. 부양인구비로만 본다면 한국의 인구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생기는 착시현상이다. 저출산으로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생산인구가 인구보너스 현상으로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쨌든 부양인구비 자체로는 생산인구가

<표 1-3> 2000-2015년의 부양지표

지표	2000	2005	2010	2015
부양인구비	39.5	39.6	38.0	37.2
유소년부양인구비	29.2	26.7	22.4	19.1
노년부양인구비	10.2	13.0	15.6	18.1
고령화지수	35.0	48.6	69.7	95.1

주 1): <표 1-1>을 기반으로 필자가 계산함.

주 2): 부양인구비는 (15세 미만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이상 인구로 계산

유소년부양인구비는 15세 미만 인구/15-64세 인구로 계산

노년부양인구비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로 계산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로 계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부담해야 할 부양의 부담이 지난 15년간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유소년부양인구비는 2000년에 29.2에서 2015년에 19.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인구가 부담하는 유소년인구의 부양 부담은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은 고령화를 초래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인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65세 이상 인구 10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이 부담이 18명으로 증가하였다. 유소년부양의 부담은 빠른 속도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인구 부양의 부담은 역시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생산인구의 전체적인 부양 부담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의 지표인 고령화지수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삼 절감할 수 있다. 고령화지수는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의 비로 계산된다. 이 고령화지수가 2000년에는 35였다. 즉 0-14세 유소년 1명당 65세 이상 인구 35명이 한국사회에 존재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고령화지수가 95.1로 거의 세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따라서 유소년인구 규모가 빠른 속도로 쪼그라드는데 반해, 사망력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인구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소년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의 규모로 표시되는 고령화지수는 매우 빠르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성비의 변화

출산과 사망의 변화는 한 인구의 성별 구조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성별 구조의 변화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전체 인구의 성비는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다. 2000년에 한국 인구의 전체 성비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약간 더 많았기 때문에 성비가 100.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보다 많은 여초현상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성비가 100 이하로 낮아졌다. 그래서 2015년 현재 전체 인구의 성비는 99.7로 나타난다.

한국 인구의 성비는 1990년대 중반에 가장 크게 왜곡되었었다. 그 당시 아직도 남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미 원하는 자녀의 수는 2명대로 크게 줄어 있었다. 태아의 성감별이 허용되었었기 때문에 자녀를 2명 정도 원하지만, 그 중 아들 한 명을 꼭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태아의 성감별 후 태아가 여아이면 인공임신중절을 하고, 남아이면 낳는 식의 출산이 이루어져, 태아의 성감별이 불법으로 규정된 1990년대 후반 이전에 출생 시 성비가 크게 왜곡되었었다. 이러한 실정이 2000년의 연령별 성비에 반영되어 있다. 2000년 현재 연령별 성비를 보면 0-4세의 성비가 110.2로 완전한 자연성비로 돌아와 있지 않다. 즉 아직도 남아를 선호하는 사

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써서라도 남아를 얻고 있어, 결국 0-4세의 성비가 1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더 왜곡된 성비가 나타난다. 5-9세의 성비는 113.6으로 5년 전인 1995년 무렵에 남아선호에 따른, 의도적인 남아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0-14세나 15-19세의 성비는 5-9세의 성비보다는 높지 않지만, 역시 자연 성비보다 높은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는 이미 태아의 성감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의사들은 산모에게 태아의 성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성비를 나타내주는 0-4세의 성비가 108.1로 2000년도의 0-4세의 성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이후 출생시 성비가 계속 정상적인 성비로 회귀하면서 2010년에는 0-4세의 성비가 106.1, 2015년의 0-4세의 성비는 105.4로 정상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과거 왜곡된 출산행태로 출생 시 성비가 왜곡되어 15-29세의 연령층은 성비가 자연스러운 성비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15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성비가 계속 정상 성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1-4> 연령별 성비구조,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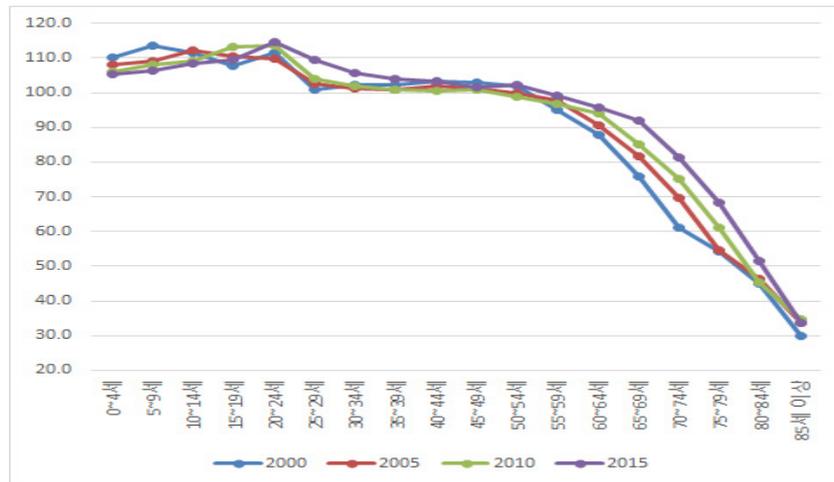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합계	100.7	99.5	98.7	99.7
0~4 세	110.2	108.1	106.1	105.4
5~9 세	113.6	109.2	108.0	106.5
10~14 세	111.4	112.2	109.0	108.4
15~19 세	107.7	110.3	113.3	109.6
20~24 세	111.4	109.7	113.7	114.7
25~29 세	100.9	102.5	103.8	109.4
30~34 세	102.1	101.2	102.0	105.6
35~39 세	102.3	100.9	101.0	103.8
40~44 세	103.2	102.0	100.6	103.3
45~49 세	102.8	101.2	100.8	101.7
50~54 세	101.7	99.8	98.8	102.1
55~59 세	95.1	97.9	96.8	99.1
60~64 세	87.8	90.5	93.9	95.6
65~69 세	75.9	81.8	85.1	92.1
70~74 세	61.1	69.6	75.3	81.3
75~79 세	54.3	54.5	61.0	68.4
80~84 세	44.9	46.2	45.4	51.4
85 세 이상	29.8	33.7	34.8	33.8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자연상태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출생하고, 거기에 남아선호까지 더해, 한국의 성비는 100을 훨씬 넘는 성비를 기록하였다. 2015년 현재, 이러한 출산행태가 반영되어, 54세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 40대 남성이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더라도, 출생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태어난 출산행태의 누적적 결과로 54세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아 성비가 100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나 2015년에 5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55-59세 연령층의 성비는 99.1을 기록한다. 그런데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의 성비는 계속 큰 폭으로 낮아진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성비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 <그림 1-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3> 5세 연령별 성비의 변화, 2000-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2. 혼인상태별 인구구조 변화

이 절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혼인상태의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 <표 1-5>는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1-5>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의 변화, 2005-2015

연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합
2005	30.2	59.3	7.6	3.0	100.0
2010	30.6	57.7	7.6	4.0	100.0
2015	31.3	55.9	7.6	5.1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전체 인구의 혼인상태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는 전 인구의 30%가 미혼이고, 59.3%가 유배우 상태였다. 사별인구는 전 인구의 7.6%를 차지했다. 이혼인구는 가장 적은 3.0%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혼인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이혼인구 비율도 증가했는데, 유배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2015년에 전 인구 가운데 미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3%, 유배우 인구 비율은 55.9%, 이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1%로 변했다. 사별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2005-2015년 사이에 변함이 없다.

1) 미혼 남성과 여성의 증가

한국인은 늦게 결혼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로 미혼율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의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 <표 1-6>은 성별 연령별 미혼율을 보여준다. 점차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조금씩 늘면서 미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는 최근의 미혼 혹은 비혼의 증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20세 후반에 주목해서 보면, 2005년에는 25-29세에서 남성의 미혼율은 82%, 2010년에는 85.4%, 2015년에는 90%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 2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은 남성은 10명 중 9명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에 59.1%에서 2015년에 77.3%로 크게 증가하였다. 20대 후반의 미혼율 증가에서 남성의 미혼율 증가보다 여성의 미혼율 증가가 훨씬 크다.

이러한 현상은 30대 초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2005년에 30-34세 연령층에서 남성의 미혼율은 41.3%였다. 2005년의 30대 초반이 되면 절반 이상의 남성이 이미 결혼을 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 연령층의 남성 미혼율이 50%로 높아지고, 2015년에는 55.8%로 다시 높아진다. 2015년에는 30대 전반에 남성 2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율이 2005년에 19%였는데, 2015년에는 37.5%로 급증한다. 비교적 일찍 결혼하던 한국의 여성들이 2015년에는 30대 전반에도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후반이면 어느 정도 모두 결혼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이 연령층의 남성 중 33%가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19%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세 명 중 한 명이, 여성의 경우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30대 후반에도 결혼하지 않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거의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한 경우에 이 연령층에 이르면 결혼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50대 후반의 미혼율은 어떨까? 2015년 현재 50-54세 연령층에서 남성의 미혼율은 7.9%, 여성의 미혼율은 3.7%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 연령층에서도 100명 중 8명은 여전히 결혼을 안 한 채로 지낸다. 여성은 이보다는 낮지만 100명 중 4명은 미혼 상태로 지낸다.

이 표에서 미혼인지, 아니면 비혼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다. 아직 비혼에 관한 여러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인상태에 관한 단순한 표만으로는 미혼인지 아니면 비혼인지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평생 안 하겠다는 사람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연령별 미혼율을 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표 1-6> 성별, 연령별 미혼율, 2005-2015

연령	2005		2010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세	99.8	99.6	99.7	99.6	99.8	99.8
20~24 세	98.2	93.7	98.8	96.0	98.8	96.8
25~29 세	81.8	59.1	85.4	69.3	90.0	77.3
30~34 세	41.3	19.0	50.2	29.1	55.8	37.5
35~39 세	18.4	7.6	26.7	12.6	33.0	19.2
40~44 세	8.5	3.6	14.4	6.2	22.5	11.3
45~49 세	4.5	2.4	7.5	3.3	13.9	6.4
50~54 세	2.4	1.7	4.1	2.3	7.9	3.7
55~59 세	1.3	1.1	2.3	1.7	4.7	2.8
60~64 세	0.8	0.8	1.3	1.2	2.6	2.2
65~69 세	0.5	0.6	0.8	0.8	1.5	1.6
70~74 세	0.4	0.5	0.5	0.6	1.0	1.2
75~79 세	0.3	0.5	0.4	0.6	0.6	0.9
80~84 세	0.4	0.5	0.3	0.6	0.5	0.9
85 세이상	0.5	0.6	0.5	0.8	0.7	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2) 유배우 남성과 여성의 감소

미혼 남성과 여성의 증가는 바로 유배우 남성과 여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변화는 단지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차별사망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남성들의 사망력은 여성들의 사망력보다 높다. 재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하지 않고, 사별상태로 지내는 여성이 아직도 많다. 따라서 연령별 유배우율은 남성과 여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 <표 1-7>은 성별, 연령별 유배우율을 보여준다.

우선 대부분이 혼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30대의 유배우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05년에 35-39세의 남성의 유배우율은 78%였다. 반면에 여성의 유배우율은 86.8%였다. 여성들은 100명중 87명은 결혼을 했는데, 남성들은 100명중 22명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 2015년에는 35-39세 연령층에서 남성은 64.5%만 유배우 상태에 있다. 반면에 여성의 유배우율은 남성보다 높지만, 76%만이 유배우 상태에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이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 30대 후반에도 유배우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남성의 경우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 유배우율이 가장 높았다. 55-59세 남성의 유배우율은 90.6%. 60-64세 남성의 유배우율은 90.8%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유배우율이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전반에 유배우율이 제일 높고, 이때의 유배우율은 87.3%이다. 남성의 유배우율이 정점에 달할 때의 유배우율보다 낮다. 여성은 40대 초반에 유배우율이 정점에 도달한 후 이후 급속도로 유배우율이 낮아진다.

2015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남성의 경우 2015년에 유배우율이 최고에 달하는 연령층은 60대 전반으로 2005년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유배우율은 86.3%로 2005년에 비해서는 낮다. 2015년에 남성의 유배우율은 60대 전반까지 갈수록 높아지다가 60대 전반을 지나면서 유배우율이 낮아진다.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에 유배우율이 79.4%로 정점에 도달한다. 2005년의 84.9%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다. 이후 여성의 유배우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낮

<표 1-7> 성별, 연령별 유배우율,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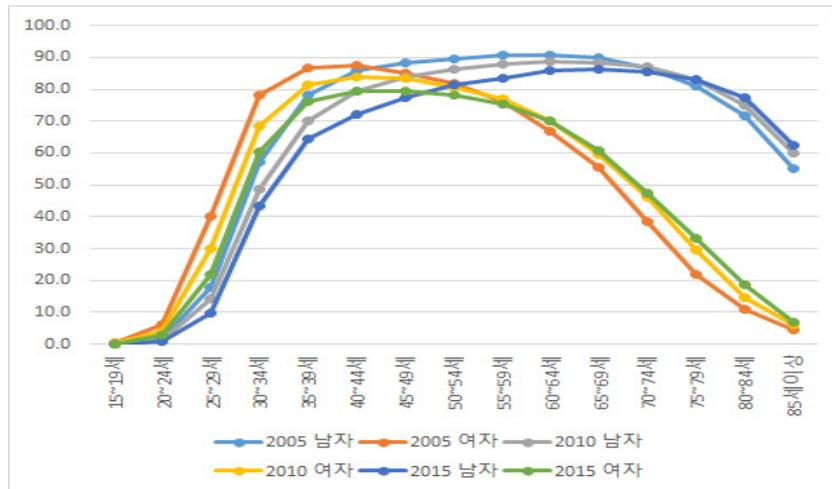
연령	2005		2010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세	0.2	0.4	0.2	0.3	0.1	0.2
20~24 세	1.8	6.2	1.1	3.9	1.0	2.9
25~29 세	17.9	40.1	14.3	30.0	9.8	22.0
30~34 세	57.2	78.2	48.6	68.5	43.2	60.5
35~39 세	78.0	86.8	69.9	81.6	64.5	76.1
40~44 세	85.7	87.3	79.4	84.0	72.1	79.2
45~49 세	88.1	84.9	84.0	83.3	77.4	79.4
50~54 세	89.6	81.8	86.1	80.7	81.3	78.2
55~59 세	90.6	76.2	87.7	77.2	83.6	75.3
60~64 세	90.8	67.0	88.7	70.2	85.7	70.3
65~69 세	89.9	55.4	88.5	59.5	86.3	60.6
70~74 세	86.9	38.5	86.9	46.3	85.5	47.6
75~79 세	80.9	21.7	83.0	29.6	83.2	33.3
80~84 세	71.8	10.9	74.9	14.5	77.4	18.6
85 세이상	55.0	4.4	59.9	6.1	62.5	7.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아진다.

이와 같은 유배우율의 성별, 연령별 차이는 다음 <그림 1-4>을 보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은 60대 후반까지 유배우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40대를 기점으로 유배우율이 감소하여 남성과 여성의 유배우율의 변화가 교차하여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림 1-4> 성별, 연령별 유배우율, 2005-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3) 이혼 남성과 여성의 증가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나 재혼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면 횡단적으로 이혼 상태로 머물러 있는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음 <표 1-8>은 성별 연령별 이혼율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성별 연령별 이혼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혼의 증가는 연령별 이혼율의 증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5년으로 진행할수록, 연령별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층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2005년의 경우 남성의 연령별 이혼율은 45-49세에 6.2%로 정점에 도달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연령대에 7.2%로 정점에 도달한다.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율은

감소한다.

2010년에는 남성의 연령별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54세로 50대 전반으로 약간 늦춰졌다. 이때 이혼율은 8.0%로 2005년보다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45-49세 연령층에서 이혼율이 9.4%로 가장 높다.

2015년에도 남성의 이혼율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50-54세 연령층에서 9.6%로 정점을 기록한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율은 낮아진다. 여성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이혼율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층이 약간 늦어진, 50-54세 연령층으로 12.1%가 이혼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율이 최고에 달한 연령층의 이혼율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2005년에 6.2%에서 2010년에 8.0%, 2015년에 9.6%로 연령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에 7.2%, 2010년에 9.4%, 2015년에 11.4%로 남성보다 더 높은 연령별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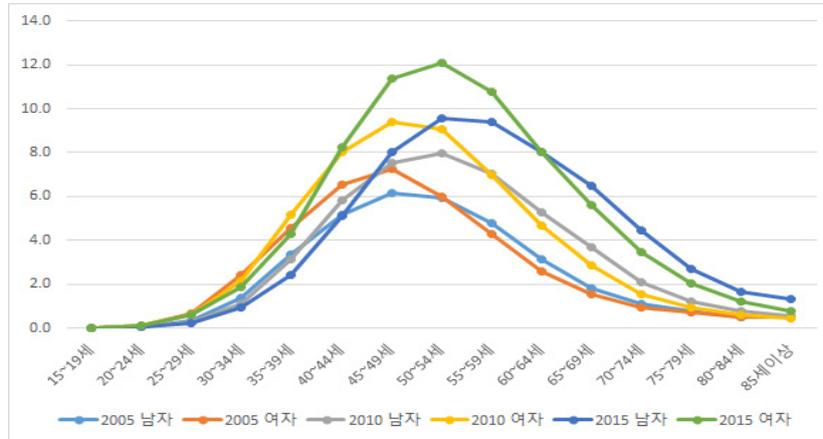
연령별 이혼율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그림 1-5>를 참조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의 연령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집단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더 크다.

<표 1-8> 성별, 연령별 이혼율, 2005-2015

연령	2005		2010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 세	0.0	0.0	0.0	0.0	0.0	0.0
20~24 세	0.1	0.1	0.0	0.1	0.1	0.1
25~29 세	0.3	0.7	0.3	0.6	0.2	0.6
30~34 세	1.4	2.4	1.1	2.2	0.9	1.9
35~39 세	3.3	4.5	3.2	5.1	2.4	4.3
40~44 세	5.2	6.5	5.8	8.0	5.1	8.2
45~49 세	6.2	7.2	7.5	9.4	8.0	11.4
50~54 세	5.9	6.0	8.0	9.1	9.6	12.1
55~59 세	4.8	4.3	7.0	7.0	9.4	10.8
60~64 세	3.1	2.6	5.3	4.7	8.0	8.0
65~69 세	1.8	1.5	3.7	2.9	6.5	5.6
70~74 세	1.1	1.0	2.1	1.6	4.4	3.4
75~79 세	0.7	0.7	1.2	0.9	2.7	2.0
80~84 세	0.5	0.5	0.8	0.6	1.7	1.2
85 세이상	0.5	0.5	0.6	0.4	1.3	0.8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그림 1-5> 성별, 연령별 이혼율의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4) 성별, 연령별 사별율의 변화

사별상태로 머물러 있는 남성과 여성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다음 <표 1-9>는 성별, 연령별 사별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별율의 특징은 첫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의 연령별 사별율보다 여성의 사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시기로 올수록 연령별 사별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먼저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번째의 특징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사별율이 증가한다. 2005년 현재 85세 이상 생존한 남성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100명 중 44명이다. 여성의 경우는 85세 이상 생존한 여성 가운데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는 94.5%로 거의 모든 생존 여성들이 배우자와 사별한 가운데 살고 있다. 2015년에도 현상은 동일하여, 85세 이상 남성이 배우자를 사별로 상실한 경우가 35.5%, 여성은 동일한 연령층에서 90.6%가 배우자를 사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두 번째 특징대로, 65-69세 연령층을 보면, 2015년에 남성의 배우자 사별율은 5.6%인데 반해, 여성의 배우자 사별율은 32.2%로 남성과 여성의 사별율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연령에 따라 사별율에 큰 차이를 보며 사별율이 증가하다가, 고연령층에 이르면, 성별 사별율에 차이가 약간 감소한다.

세 번째 특징대로 시간이 지나 최근에 올수록 연령별 사별율은 감소한다. 80-84세 연령층을 예로 들면, 2005년에 남성의 사별율은 27.3%였는데, 이 사별율이 2010년에는 23.9%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20.4%로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2005년에는 이 연령층에서 사별율이 88.1%인데, 2010년에는 84.3%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79.3%로 다시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로 남아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사별율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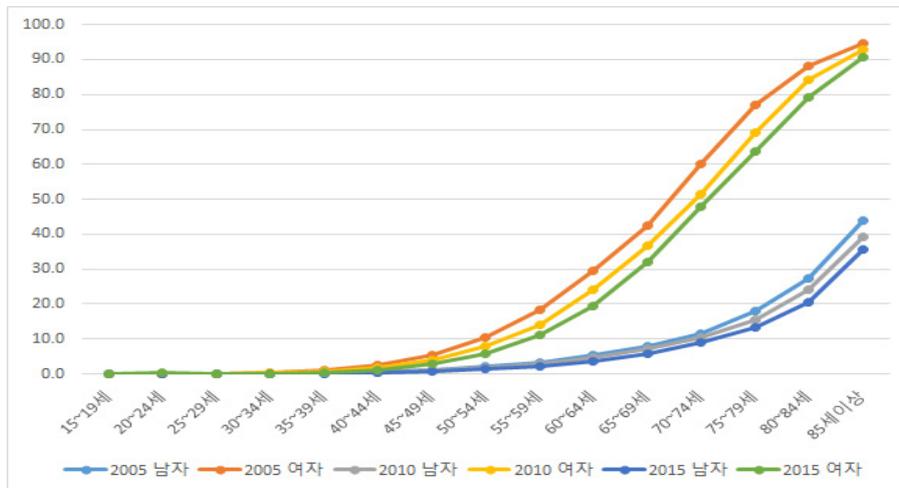
<표 1-9> 성별, 연령별 사별률, 2005-2015

연령	2005		2010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19세	0.0	0.0	0.0	0.0	0.0	0.1
20~24세	0.0	0.0	0.0	0.0	0.1	0.2
25~29세	0.0	0.1	0.0	0.1	0.0	0.1
30~34세	0.1	0.3	0.1	0.2	0.1	0.2
35~39세	0.3	1.0	0.2	0.7	0.1	0.4
40~44세	0.6	2.5	0.5	1.8	0.3	1.2
45~49세	1.2	5.5	1.0	4.0	0.7	2.8
50~54세	2.1	10.5	1.8	7.8	1.3	5.9
55~59세	3.3	18.4	2.9	14.1	2.2	11.1
60~64세	5.3	29.6	4.7	24.0	3.6	19.6
65~69세	7.8	42.5	7.0	36.8	5.6	32.2
70~74세	11.6	60.1	10.5	51.6	9.1	47.8
75~79세	18.1	77.1	15.4	68.9	13.4	63.7
80~84세	27.3	88.1	23.9	84.3	20.4	79.3
85세이상	44.0	94.5	39.1	92.7	35.5	90.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시기별로 성별, 연령별로 사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위에 제시한 사별율의 세 가지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1-6> 성별, 연령별 사별율의 변화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6> 성별, 연령별 사별율의 변화,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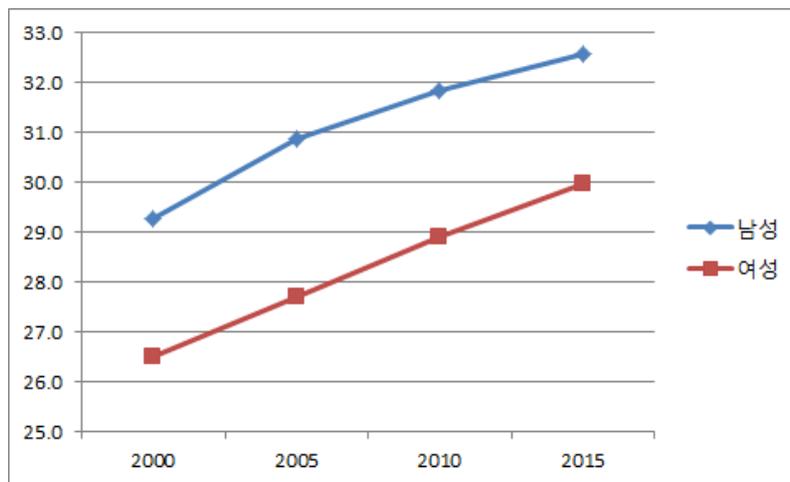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3. 혼인연령의 변화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의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혼인연령의 증가이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결혼에 관한 사회규범이 매우 강하다. 가족의 형성은 결혼으로 시작한 결합만이 가족형성의 계기로 인정된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적법한 결합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거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적법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경제적 능력은 증가하는 반면, 남성들의 경제적 능력은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의 신장과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고, 별다른 변화 없이 과거나 현재 모두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은 과거에는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찾다가 못 찾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을 지닌 남성을 찾아 결혼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아진 여성들은 적합한 결혼 상대를 만나기 어렵게 되고 있다. 남성도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도 약화되고, 주택가격은 폭등하며,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되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찾기 어렵고, 설사 직장을 찾더라도, 결혼하기 위해 함께 살 주택을 찾아보면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은 비싸다. 이런 형편에서 남성과 여성은 결혼을 자꾸 미루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다음 <그림 1-7>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15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혼인연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림 1-7> 성별 혼인연령의 변화, 2000-2015



자료: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KOSIS 자료

2000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이 30세 미만이었다. 남성의 평균 혼인연령이 29.3세로 30세에 매우 가깝게 접근해 있었고,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은 26.5세로 30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마치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이 5년마다 세 살씩 뛰어 오른 것처럼 혼인연령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남성의 혼인연령이 2005년에는 30.9세로 30세를 훌쩍 뛰어 넘었고, 2010년에는 31.8세, 그리고 2015년에는 32.6세로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혼인연령도 2000년에 26.5세 이었는데 2005년에는 27.7세로 1.2세 더 높아졌고, 2010년에는 28.9로 다시 1.2세 더 높아졌으며, 2015년에는 드디어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도 30세가 되었다.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이 30세라는 것은 30세보다 훨씬 더 높은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결혼하는 여성도 많음을 뜻한다. 물론, 30세 이전에도 결혼하는 여성이 있지만, 미혼율과 유배우율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는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20대에 유배우율이 매우 낮아지고, 20대에 혼인하는 여성이 크게 줄고 있다. 따라서 2015년의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 30세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20, 30대 여성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미혼 혹은 비혼 상태로 지내는 여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과거의 기준대로, 소위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결혼적령기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미 20대를 넘어서 30대로 넘어갔을지 모른다. 지금의 나이든 세대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결혼적령기를 생각하고, 20대 후반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지,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든지 등을 말한다면, 이미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어, 평균 초혼연령이 30대 초반에 이른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일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지, 한국 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혼인상태의 변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인상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및 혼인상태의 변화로 초래되는 수많은 엄청난 사회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 사회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혼인상태의 변화에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저출산 및 고령화 구조 분석

이제 이 절에서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분석을 시도한다. 혼인상태는 현재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혼인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출

산과 양육상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배우 집단 이외의 혼인 상태에 있는 집단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주도하는 또 다른 원동력은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외에도 결혼에 진입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결혼이 해체된 후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인구가 누구이며, 이들 인구의 특성이 어떠한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출산의 전(前) 생애사건으로 인식되는 결혼을 연기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초혼연령의 상승을 통해 결혼연기 현상을 확인하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미혼자 결혼시장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혼인상태(유배우자와 사별자 그리고 이혼자 집단)별로 개별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성 대해서도 살펴본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초혼연령

각 생애 사건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달라짐에 따라 생애과정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저출산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우원규, 조영태, 유승현, 2013; 이성용, 2009).

우리는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가운데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44세 이하 응답자의 초혼연령을 살펴보았다. 20-44세로 연령을 한정된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결혼한 결혼 코호트의 초혼연령 특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처럼 연령을 제한한 후 최근 코호트의 결혼연

<표 1-10> 인구특성별 평균 초혼연령 (세), 2015

변수		초혼연령	변수		초혼연령	
성별	남성	29.1	직종	관리직	29.3	
	여성	26.6		전문직	28.5	
교육수준	초졸 이하	25.3	사무직	28.2		
	중졸	24.7	서비스직	27.1		
	고졸	26.3	판매직	27.7		
	전문대졸	27.7	농림어업	26.7		
	대학교 이상	28.8	기능직	28.2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8.6	장치기계	27.7	
경기도		27.8	단순노무		27.0	
광역시		27.7	혼인상태	유배우자	27.9	
중소도시		27.3		사별자	24.5	
농촌				26.6	이혼자	25.5

주: 필자의 분석임.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령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0>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남성의 초혼연령이 여성보다는 3살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보면 대졸이상의 학력인 경우에 그 이하의 학력에 비하여 4살 이상 초혼연령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최근 결혼코호트라고 하더라도 저학력자들은 25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학력자들의 경우 초혼연령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지연현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거주지와 초혼연령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별 결혼당시 연령을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거주자의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농촌지역 거주자의 초혼연령은 가장 낮았다. 이는 도시환경 속에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종별로 초혼연령의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직종별 초혼연령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적어도 관리직이나 전문직, 그리고 기능직 종사자의 초혼연령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에 비해 농림어업 종사자나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초혼연령이 낮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혼인상태에 따라 초혼연령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결혼상태가 이혼인 사람들의 초혼연령이 25세인데 반해, 기혼자의 초혼연령은 그보다 높은 27세이다. 어린 나이에 이룬 결혼이 이혼 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혼지연이 결혼안정성이 높은 결혼을 위한 전략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 미혼자에 관한 분석

(1)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분석에서는 혼인상태가 미혼인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에서 일반가구에 살고 있으면서, 본인의 혼인상태를 미혼이라고 밝힌 20세 이상 응답자는 24.3% (인구승수 적용)로, 이들은 결혼경력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자들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표1-11> 참조), 전체적으로 남성미혼자의 비율이 여성미혼자보다 높으며, 이러한 남초 현상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20대 미혼자 비율이 전체 미혼자의 절반을 넘어 있지만, 나머지 절반 가까이가 30대와 40대에 분포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이 결혼을 선택할지, 평생 미혼상태 즉 비혼자가 될지 주목된다. 흥미로운 점은 농촌의 경우 50대 이상 미혼자도 전체 농촌거주 미혼자의 6.0%에 이른다. 미혼자의 학력은 50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미혼자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도시미혼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농촌미혼자의 학력은 4년제 대

학졸업자 이상이 40.4%,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고졸자로 29.1%에 이른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표 1-11> 지역별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

변수		전체 미혼자	도시 미혼자	농촌 미혼자
성별	남성	56.6	55.4	64.2
	여성	43.4	44.6	35.8
연령	20 대	54.8	55.0	51.1
	30 대	27.9	28.2	26.6
	40 대	11.9	11.5	14.5
	50 대	3.9	3.6	6.0
	60 대	1.0	0.9	1.4
	70 대이상	0.3	0.3	0.5
교육수준	초졸이하	1.2	1.0	2.6
	중졸	2.1	1.8	3.6
	고졸	22.2	21.1	29.1
	전문대이상	22.9	22.7	24.2
	4년제 및 대학원이상	51.6	53.4	40.4
취업여부	일함	57.0	56.5	60.3
	일 하지 않음	43.0	43.5	39.7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에도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미혼자가 전체 64.6%로, 상당수의 미혼자들이 고학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25-49세 미혼자의 성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이러한 미혼자들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25-49세로 제한하여, 이 청장년기 미혼자의 연령과 학력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5-49세 미혼자 중에서 남자의 비율은 60.4%이고 여성의 비율은 39.6%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25-49세 연령의 미혼자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남성미혼자의 42.9%가 30대이고, 그 다음 순위로 20대가 많다. 반면에 여성 미혼자의 경우 44.6%가 아직 20대이고 30대는 40.2%이다. 40대 미혼자의 비율은 남성미혼자집단이 여성미혼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남성과 여성미혼자 모두 4년제 및 대학원 이상자의 비중이 높지만, 고졸이하의 저학력자 비율은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거의 1.5배 가량 높다. 같은 미혼집단이지만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학력이 낮고, 나이는 많다는 특징이 있다. 남녀 미혼자 중 취업자의 직

<표 1-12> 성별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

변수		25-49 세 남성 미혼자	25-49 세 여성 미혼자
연령	20 대	36.5	44.6
	30 대	43.2	40.7
	40 대	20.3	14.7
교육수준	고졸이하	29.6	20.1
	전문대	21.3	23.2
	4 년제 및 대학원이상	49.1	56.7
취업여부	일함	69.4	71.2
	일 하지 않음	30.6	29.8
직종	전문 및 관리직	23.2	40.4
	사무직	17.3	30.6
	서비스	8.3	10.1
	판매직	11.7	11.3
	농림어업	1.8	0.3
	기능직	12.6	1.8
	장치기계	15.5	3.5
	단순노무	9.2	2.3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가중치 사용). 직업중 군인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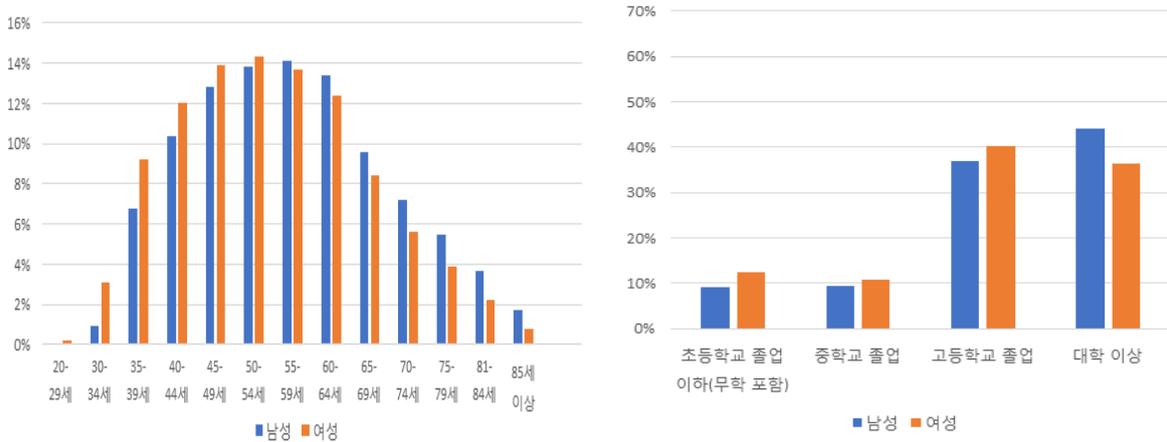
종을 살펴본 결과, 여성미혼집단에서는 전문 및 관리직과 사무직까지 합했을 때 비율이 80%를 넘지만, 남성미혼자의 경우 연령은 더 높았지만, 전문 및 관리직, 사무직종 종사자 비율이 40% 수준이다.

3) 유배우자에 관한 분석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세 이상 유배우자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반가 구에서 살아가는 20세 이상 유배우자는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에서 전체의 61.9%에 달한다. 유배우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은 50.2%이고 여성은 49.7%이다.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유배우자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후반부터 유배우자 비율이 높아지다가 고령집단부터 유배우자 비율이 감소한다. 이혼이나 사별 등의 원인으로 결혼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가 이탈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앞의 미혼자와는 상반되게 고학력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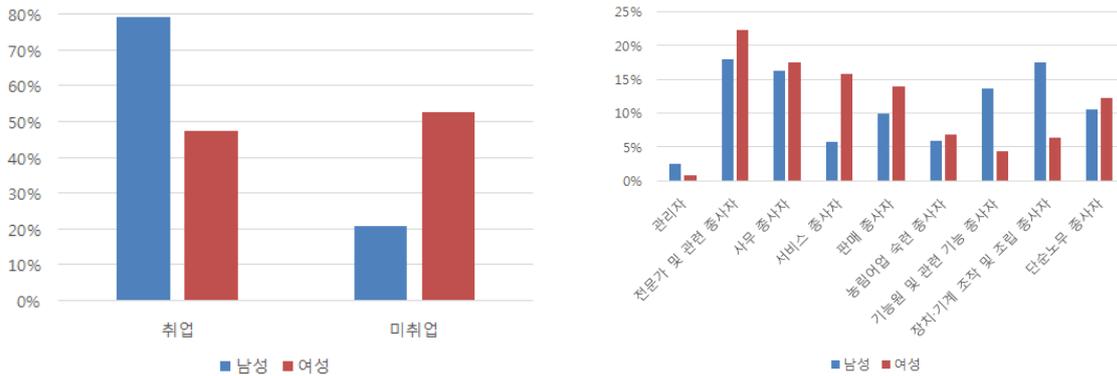
유배우자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와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을 한 남성의 경우와, 미취업 상태인 여성의 경우에 유배우자 비율이 높다. 종사상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기능/기계직 종사자인 남성집단의 유배우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고,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인 여성집단의 유배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1-8> 성 연령 및 교육수준 별 유배우자 비율 (%), 2015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그림 1-9> 경제활동 상태 및 직종 별 유배우자 비율 (%), 2015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4) 사별자에 관한 분석

사별자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에서 사별자를 추출

하였다. 우선 일반가구에서 살아가는 20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사별자 비율을 알아본 결과,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는 전체의 8.2% 수준이다. 사별자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 다시 재혼하지 않고 무배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생애사건을 겪는 개연성이 높은 연령집단에서 그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사별자 전체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표 1-13> 참조).

<표 1-13> 사별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

변수		사별자 전체	도시거주 사별자	농촌거주 사별자
성별	남성	13.5	13.9	12.6
	여성	86.5	86.1	87.4
연령	40 대 이하	3.5	4.1	2.4
	50 대	12.7	14.6	8.8
	60 대	23.1	24.7	19.1
	70 대 이상	60.5	56.7	69.7
교육수준	초졸 이하	62.1	55.3	78.7
	중졸	14.6	16.5	10.2
	고졸	17.1	20.6	8.8
	전문대이상	1.8	2.2	0.8
	4년제 및 대학원이상	4.4	5.5	1.6
취업여부	일함	22.6	20.5	28.9
	일 하지 않음	77.4	79.5	71.1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사별자 집단에서는 여성이 86.5%, 남성이 13.5%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다. 배우자사망의 생애사건이 현대사회에서는 고령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게 된 이유로 이 사별자의 여초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사별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령자가 많이 포함된 탓인지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사별자의 경우 초졸 이하 학력자가 78.7%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별자 역시 초졸 이하 학력자가 55.3% 수준에 달하는데, 고졸학력자 비율은 20.6%, 그리고 중졸 학력자 비율은 16.5% 이다. 사별자들은 대체로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사별자에 고령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도시보다 농촌에서 취업자 비율이 다소 높다. 취업률이 이처럼 낮게

<표 1-14> 사별자 집단의 세대유형 및 거주상황, 2015

		사별자 전체	도시거주 사별자	농촌거주 사별자
세대유형	편부모가구	20.7	24.5	12.6
	3세대 이상 가구	12.1	13.4	9.1
	직계가구(노부모 부양)	4.3	3.5	6.2
	1인 가구	45.8	41.2	56.8
	기타 친족가구	16.6	17.4	14.8
	비혈연가구	0.4	0.4	0.5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나타나는 점은 취업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 사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령화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1-14>에서는 사별자 집단이 어떠한 가구에서 살아가는 알아보기 위해 사별자가 속해있는 세대유형을 알아보았다. 사별자들은 대체로 1인가구로 혼자 살아가고 있거나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별자는 친족일원과 함께 거주지를 공유하고 있는 점도 살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도시의 경우 사별자가 3세대 가구에 속해 있는 비율이 13.4% 정도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농촌의 경우 3세대 이상 친족가구에서 살아가는 사별자는 10% 이하이다.

한편, 사별자 중에는 직계가구로 노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4.3% 가량 파악된다. 직계가족에서 살아가는 비율은 도시 사별자(3.5%)보다 농촌 사별자(6.2%)가 다소 높았다. 이렇게 볼 때, 사별자들은 물론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편부모 가구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거나, 노부모나 기타 친족과 주거를 함께 하면서 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혼자에 관한 분석

이혼으로 결혼 해체를 경험한 이혼자 및 이혼가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5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 자료에서 혼인상태를 이혼이라고 응답한 20세 이상 응답자는 전체의 5.8% (인구승수 적용)에 해당한다. 이혼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표가 <표 1-15>이다. 전국단위에서 나타나는 이혼자의 특성과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에서 나타나는 이혼자의 특성을 대비해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이혼자들은 84.4%가 도시(동부)에 거주하고 있고, 15.6% 가량의 이혼자는 농촌(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다. 우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혼자

들의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연령으로 보면, 50대와 40대 그리고 60대 순으로 나타난다. 이혼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결혼기간이 20년을 넘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 탓도 있지만, 이혼 후 다시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재혼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많아 여초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자 비율이 가장 높고(47.7%), 그 다음이 4년제 이상 학력자(16.8%), 그리고 중졸자(13.8%)로 나타난다. 이혼자 중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73.4%에 이른다. 한편, 이혼자 중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의 60% 수준으로 취업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이혼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도시의 경우 이혼한 여성이 이혼한 남성비율보다 높지만, 농촌의 경우 이혼한 남성비율이 이혼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로 보면 농촌은 도시에 비해 50대 이상 이혼자의 비율이 높다. 농촌 이혼자들의 전반적인 학력사항 역시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고졸이하의 비율이 농촌 전체 이혼자의 80% 수준을 육박한다. 이러한 고령 이혼자들이 많은 농촌의 경우, 현재 취업한 이혼자의 비율도 높다. 이러한 이혼자의 상황과 함께 이번에는 현재 가구주이면서 혼인상태가 이혼인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로 남성이혼가구주와 여성이혼가구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15> 20세 이상 이혼자의 사회인구학적 차별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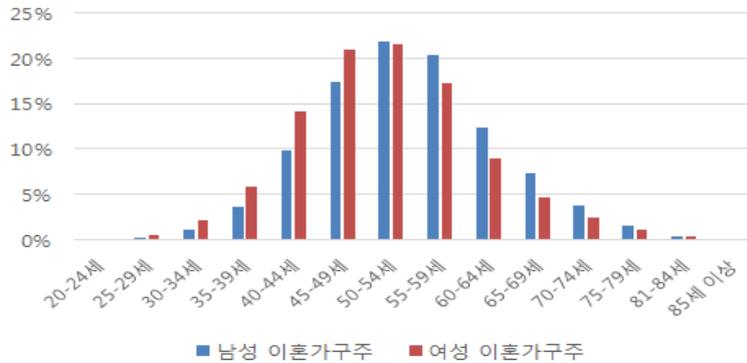
변수		이혼자 전체	도시거주 이혼자	농촌거주 이혼자
성별	남성	43.5	41.5	54.3
	여성	56.5	58.4	45.7
연령	20대	0.7	0.6	0.6
	30대	8.0	8.2	7.9
	40대	31.8	32.0	32.0
	50대	38.4	37.8	38.5
	60대	16.0	15.8	16.0
	70대 이상	5.1	5.3	5.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1.9	11.3	15.2
	중졸	14.5	14.1	16.1
	고졸	48.8	48.9	48.3
	전문대이상	9.6	9.3	9.0
	4년제 및 대학원이상	15.7	16.4	11.4
취업여부	일함	61.5	60.6	65.8
	일 하지 않음	39.5	39.4	34.2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그림 1-11>은 이혼가구주의 성별 연령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이혼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에서 여성이혼가구주가 남성이혼가구주보다 그 수가 많고, 50대 이후부터는 남성

이혼가구가 여성이혼가구보다 더 많다. 학력별로 구분해서 보면 고등학력수준의 집단에서는 여성이혼가구가 많고, 대학이상의 학력인 집단에서는 남성이혼가구가 더 많다.

<그림 1-10> 이혼가구 유형별 연령 및 교육수준(%), 2015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표 1-16> 20세 이상 이혼자의 지역별 세대유형의 차별성

	이혼자 전체	도시거주 이혼자	농촌거주 이혼자
세대유형			
편부모가구	34.3	36.3	23.4
3세대 이상가구	1.7	1.7	1.7
직계가구(노부모 함께)	0.3	0.3	0.3
1인가구	39.1	38.7	41.9
기타친족가구	23.2	21.7	31.1
비혈연가구	1.3	1.2	2.3

자료: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인구가중치 사용)

한편, 이혼자들이 어떠한 가구에서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대유형을 알아보았다. 이혼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세대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형태는 편부모가구로 응답자의 34.3%가 해당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세대유형은 1인가구이고, 기타 친족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26.7%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혼자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형태(0.3%)나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살아가는 경우(2.1%)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이혼자들은 주로 자녀를 데리고 한부모 가구 형태로 살아가거나 혼자 살고, 그 외에 형제자매 혹은 조카나 친족과 함께 살지만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혼자의 세대유형을 살펴보면, 농촌이 도시에 비해 혼자 살아가는 이혼자 혹은 기타친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혼자 비율이 높다. 심지어 농촌에는 비혈연가구에서 살아가는 이혼자의 비율도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장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200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및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혼인상태의 변화를 통해 2015년 현재 한국 인구의 인구구조의 특성을 개괄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1세기 첫 15년 사이에 한국의 인구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방추형 인구피라미드로 나타난다. 2015년까지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의 결과 인구학적으로는 생산인구의 규모가 가장 큰 인구보너스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초저출산의 지속으로 인구보너스 시기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인구보너스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출산을 늘림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따라서 유소년인구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반해, 사망력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인구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5년 간 매 5년마다 한국인구의 평균연령이 세 살씩 증가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지수가 2000년에는 35였는데 2015년에는 고령화지수가 95.1로 거의 세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부양 부담과 개인의 평균 수명의 증가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구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과 고령 노동을 활용하는 정책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 인구 구조는 2005년 이후로 100이하의 성비가 지속되면서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집단별 성비를 검토하면 고령집단의 여성화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비의 차이는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각 연령대별 성비의 큰 차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미혼이고, 59.3%가 유배우 상태였다. 사별인구는 전 인구의 7.6%를 차지했다. 이혼인구는 가장 적은 3.0%를 기록했다. 미혼인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이혼인구 비율도 증가했는데, 유배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2015년에 전체 인구 가운데 미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3%, 유배우 인구 비율은 55.9%이다. 2005년부터 2015년에 걸쳐 20대에 혼인하는 연령집단의 비율은 줄고 30대에 혼인하는 비율이 빨리 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 이후에 미혼인 상태에 있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별 특성 차이가 있다. 미혼자 여성은 고학력의 일하는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비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 집단에서 남성 미혼집단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고, 나이는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남녀 미혼자 중 취업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여성 미혼집단에서 남성에 비해 전문 및 관리직과 사무직이 많은 경향이 보인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출산의 전(前) 생애사건으로 인식되는 결혼을 연기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초혼연령의 상승을 통해 결혼연기 현상을 확인하였다. 한국 인구의 평균연령이 5년마다 세 살씩 뛰어 오른 것처럼 혼인연령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은 성,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높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초혼연령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고학력자들의 경우 초혼연령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지연현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시환경 속에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직종별로 초혼연령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관리직이나 전문직, 그리고 기능직 종사자의 초혼연령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

20대 후반 부터 30대까지로 미뤄지는 결혼 연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은 고학력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경향은 이미 한국사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 추세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생산성 감소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필요한 일이므로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하여 여성의 노동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연기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결혼 방해요인과 결혼 유인요인을 도출해서 정책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 교육수준, 직종별 유배우율의 차이에 주목하여 특정 집단별로 유배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별 유배우율의 차이에 대해서 지자체별 정책 차이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우원규·조영태·유승현 (2013) “기혼여성이 자녀출산시기결정시 고려하는 연령: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36(4): 25-49
2. 이성용 (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 인구학》32(1): 51-70

제2장 가구 및 가족

차 승 은 | 수원대학교

I. 서론

최근 2000년 이후 한국 가구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가구 구조의 다양화와 소규모화”이다. 이를 가족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원들이 함께 살지 않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3세대 가구가 줄고 2세대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의 분리가 목격된 1980년대부터 이미 예고된 현상이었다. 다만, 학자들은 가구가 분리되어도 가족생활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핵가족(intact family)이 전체 가구의 다수를 이루는 이상 우리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그 신화는 유지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와서 가구원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2세대 가구마저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가구구조의 다양화와 소규모화의 현상을 2세대 가구의 분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가구의 변화’에서는 2015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2000년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지난 15년간 가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가구구조나 가구유형에서 주요 변화내용을 간추려서 제시하였다. ‘가구와 가족관계의 변화’절에서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자주 회자되는 1세대 및 2세대 가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변화하는 가구와 가족의 단면들을 스냅샷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II. 본론

1. 가구의 변화: 15년간의 가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1) 가구의 규모의 축소: 미인가구의 출현

지난 193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자료(권태환, 김태헌, 최진호, 1992)에 따르면, 당시 평균가구수는 5.26명이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친족가구에서는 가구원수가 4.0명을 유지해

왔다. 비친족가구(1인가구)까지 포함하더라도 평균가구원수는 3.71명 수준이었다(권태환, 김태헌, 최진호, 1992). 가구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친족가구 내에서 평균가구원수에서 만큼은 1990년대까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부와 자녀라는 혈연집단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규모, 가족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 가족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 2-1> 평균가구원수의 변화, 1980-2105

(단위: 명수)

연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평균가구원 수	4.55	3.71	3.1	2.9	2.7	2.5

자료: KOSIS 연도별 데이터 추출

그런데, 200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비친족가구의 증가세가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친족가구에서는 가구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표 2-1 참조). 그리고 최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평균가구원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한 가구에 사는 사람의 수가 세 명 이하로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 2명이 살아가는 미니가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단출해진 가구, 그 속에서 한국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표 2-2>는 2000년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각 가구를 가구원수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전국자료와 함께 지역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였고, 이 때 서울, 세종특별시, 경기도 지역은 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지역별로 가구의 분포를 살펴본 것은, 지역별로 특정 가구유형이 많이 분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평균가구원수는 줄었지만,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감소인지, 혹은 전반적으로 3-4인 가구도 줄어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몰려와 도시에서 결혼하고 도시에 머무르는 이른바 “도시핵가족”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도시는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고, 농촌은 노인들만 남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별 가구형태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적어도 도시의 3-4인 가구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표 2-2>를 살펴보면 이러한 도시와 농촌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던 가구유형의 격차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분명히 관찰된다. 그런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1인가구 그리고 2인가구가 다수인 형태가 발견된다. 3인이나 4인가구가 많았던 2000년대 도시 풍경도, 2015년에는 1인 혹은 2인가구로 살아가는 가구가 대세인 가구가 된 것이다. 도농간의 차이

도 사라졌고, 정부청사의 이전으로 가구이주가 나타난 세종시는 현재 1-2인가구가 주류를 이룬다. 심지어 신혼부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한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역시 4인 이상 가구는 3순위 이하로 밀려가 있다.

<표 2-2> 수도권과 읍면동별 가구원수의 변화, 200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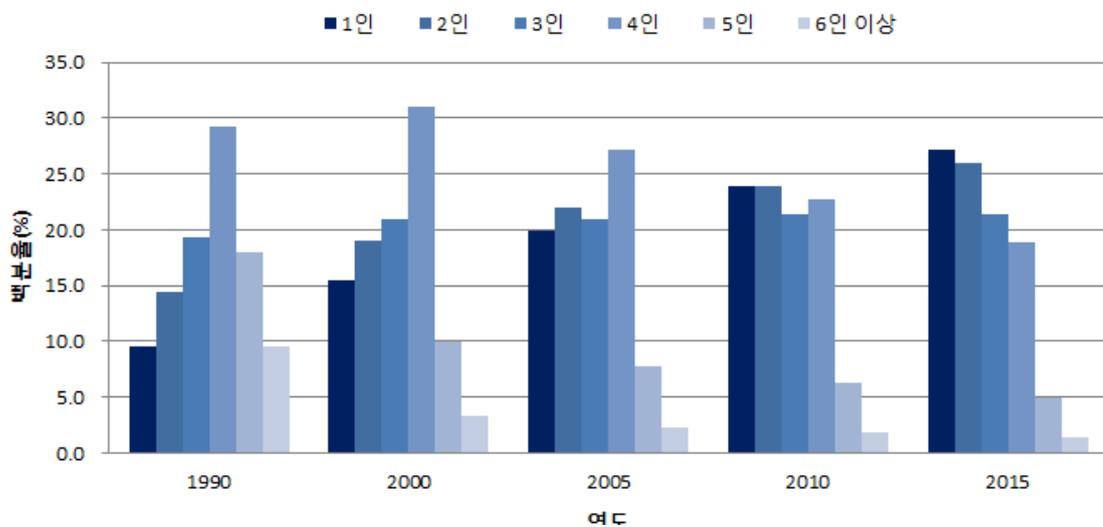
(단위: 백분율)

행정구역별(읍면동) (%)	200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전국	15.54	19.08	20.87	31.07	10.08	2.41	0.94
읍부	15.54	21.65	20.21	28.31	10.23	2.81	1.25
면부	20.89	30.67	17.34	17.72	8.62	3.13	1.63
동부	14.63	16.83	21.55	33.64	10.32	2.25	0.79
서울특별시	16.28	17.00	21.73	32.07	10.14	2.06	0.72
경기도	12.65	16.41	21.60	35.36	10.48	2.52	0.98
행정구역별(읍면동) (%)	2015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전국	27.23	26.13	21.46	18.78	4.92	1.14	0.35
읍부	26.45	28.04	20.69	17.66	5.34	1.35	0.46
면부	32.68	34.95	16.58	10.21	3.78	1.26	0.54
동부	26.63	24.82	22.15	19.97	5.02	1.10	0.31
서울특별시	29.48	24.59	21.60	18.55	4.48	1.02	0.29
세종특별자치시	29.10	23.94	20.23	19.36	5.63	1.32	0.41
경기도	23.41	24.23	22.93	22.15	5.62	1.28	0.38

자료: KOSIS연도별 데이터 추출

<그림 2-1> 평균가구원수의 비율 변화, 1990-2015

(단위: 백분율)



자료: KOSIS연도별 데이터 추출

이러한 <표 2-2>의 양상을 이번에는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2-1). 지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가구의 구성이 급격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자료에서는 4인가구가 대세가구를 이루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인다. 그런데, 2015년의 가구유형에서는 1인가구가 대세가구를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가구유형의 분포가 이와같은 변화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2) 2세대 가구의 감소 현상

지난 1980-1990년대 세대연구에서 가구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촌의 1세대 가구의 증가이다. 농촌의 1세대 가구는 당시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촌향도가 주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촌에는 노인부부, 노인 1인가구 등 노인 1세대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2000년 이후 가구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이제 노인 1세대 가구가 농촌에서만 많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찰되는 현상으로 보면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1세대 가구가 다수 가구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가족 및 가구통계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은 비친족가구의 증가이었다. 비친족가구는 1인가구와 비혈연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당시 사회과학자들은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더불어서 비친족가구의 증가 속도가 예상외로 빠르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1인가구가 독보적으로 늘어나면서 2세대 부부+미혼 가구와 거의 비등할 만큼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 비친족가구(공동체 가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가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과 2015년의 가족유형을 핵가족, 핵가족을 제외한 가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표 2-3>), 앞서 살펴본 1세대 가구의 증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인가구와 부부가족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2000년 이후에는 부부+미혼자녀의 조합(부부+미혼, 편부모+미혼, 부부+노부모까지 포함), 즉 핵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형태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의 비중이 친족가구 내에서 거의 60% 수준을 차지한다. 1990년에 비해 그 비중은 다소 낮아졌지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부모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구는 조부모+손자녀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일반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런데, 2015년대에 오면 친족가구에서 부부+미혼자녀의 조합을 가진 가구 비중은 40%대 초반까지 감소하였다. 도시 농촌의 격차는 더 커서 농촌에서 부부+미혼자녀의 조합을 가진 가구는 30%내로 내려앉았다. 부부+미혼자녀로 살아가는 조합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부부가구와 1인가구 형태로 분화된 양상이다.

〈표 2-3〉 핵가족의 연도별, 지역별 분포, 2000, 2015

2000						
가구형태	전국	전국일반 가구대비 (%)	도시	도시일반 가구대비 (%)	농촌	농촌일반 가구대비(%)
일반가구(총계)	14,311,807	100.0	11,229,476	100.0	3,082,331	100.0
핵가족						
부부	1,765,365	12.3	1,109,896	9.9	655,469	21.3
부모+미혼자녀	6,891,558	48.2	5,815,984	51.8	1,075,574	34.9
편부모+미혼자녀	1,123,854	7.9	940,580	8.4	183,274	5.9
부부+노부모	137,414	1.0	69,572	0.6	67,842	2.2
조부모+손자녀	45,225	0.3	25,996	0.2	19,229	0.6
기타 친족가구	1,964,727	13.7	1,497,770	13.3	466,957	15.1
1인가구	2,224,433	15.5	1,642,618	14.6	581,815	18.9
비친족가구	159,231	1.1	127,060	1.1	32,171	1.0
2015						
가구형태	전국	전국일반 가구대비 (%)	도시	도시일반 가구대비 (%)	농촌	농촌일반 가구대비 (%)
일반가구(총계)	19,111,030	100.0	15,487,901	100.0	3,623,129	100.0
핵가족						
부부	2,982,028	15.6	2,216,012	14.3	766,016	21.1
부모+미혼자녀	6,150,381	32.2	5,314,253	34.3	836,128	23.1
편부모+미혼자녀	2,060,162	10.8	1,744,549	11.3	315,613	8.7
부부+노부모	145,235	0.8	97,935	0.6	47,300	1.3
조부모+손자녀	113,111	0.6	81,335	0.5	31,776	0.9
기타 친족가구	2,242,252	11.7	1,857,151	12.0	385,101	10.6
1인가구	5,203,440	27.2	4,124,961	26.6	1,078,479	29.8
비친족가구	214,421	1.1	51,705	0.3	162,716	4.5

자료: KOSIS, 연도별 데이터 추출

한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중년 및 노부부가 자신의 노부모를 돌보는 노노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흥미롭게도 부부가 노부모를 모시는 직계가족 형태의 가구는 그동안 많이 늘지 않았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지역에서도 부부가 노인을 모시는 형태의 가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존의 가족이 부모와 자녀의 살아가는 형태가 감소하고, 부부가 노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이 더 이상 양육이든 부양이든 가족

의 독특한 영역으로 생각되었던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친밀감으로 유지되는 가족 즉 최근에 더 중요해지는 부부가족의 형태가 대세가족으로 자리잡는 경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농촌에서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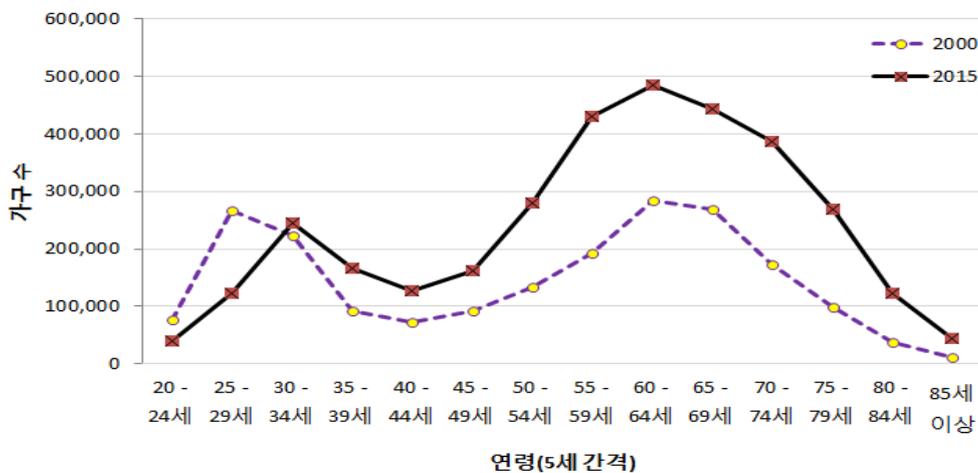
3) 부부가구의 약진과 유배우가구의 분화

이처럼, 1세대 가구의 증가 특히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와, 뒤이어 부부가구의 약진이 2015년 가구관련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으로 떠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르면, 부부가구는 신혼기에, 아직 자녀양육이 시작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관찰되고, 이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증가현상은 이 빈둥지(empty nest) 시기 효과가 견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2>는 2000년과 2015년 연령별 부부가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은 5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2015년이 2000년에 비해 부부가구 비중이 40세 이후 집단에서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림 2-2>를 보면, 가족생활주기에서 나타나는 빈둥지 현상, 즉 60세 이후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읽어볼 수 있다. 다만, 70세를 정점으로 부부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배우자 사별을 맞이하면서 부부로 살아가던 형태에서 1인 혹은 자녀와 가구를 합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부부가구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년기부터 부부가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30-40대에 한참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시기에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과거(2000년)에 비해 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2-2> 연령별 1세대 부부가구의 분포, 2000, 2015

(단위: 가구수)



자료: KOSIS연도별 데이터 추출

지난 2000년 부부가구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2015년에는 중년기에 부부가구 규모도 크게 늘었고, 40세 이후 부부가구 증가세도 매우 강화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대만 해도,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30대부터 40세 사이에 부부가족의 규모는 1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다가 빈둥지기를 시점으로 늘어나지만, 2015년 통계에서는 한창 자녀를 키울 것으로 예측되는 연령대에서도 부부가구가 10만 가구 이상으로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부부가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2000년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45세 이후 완만히 이루어져서 60-64세에 정점(28만 가구)을 이루지만 2015년 자료에서는 이미 50-54세에 부부가구의 규모가 28만 가구를 넘어섰고, 60-64세 연령대에는 부부가구가 48만 가구에 육박한다.

그럼 65세 이전 시기 부부가구 증가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녀없는 부부(무자녀 가족),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분거가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더 이상 노년기 가구의 전형적 가구라는 편견을 깨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부가구의 약진은 가족이 자녀양육과 출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가족생활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4> 유배우가구 가구주의 다양한 가구유형, 2000, 2015

(단위: 가구수, %)

유배우 가구유형	2000		2015	
가구주+형제자매	4,748	0.04	4,360	0.04
가구주+기타 친인척	3,641	0.03	7,316	0.06
편부+자녀	58,227	0.54	68,302	0.56
편모+자녀	194,690	1.81	389,496	3.22
1인가구	266,936	2.49	585,207	4.83
비혈연가구	16,784	0.16	33,829	0.28

자료: KOSIS연도별 데이터 추출. 유배우가구에서 부부가구와 부부+부모자녀가구, 조부모+손자녀 가구 등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제외하고 제시한 결과임.

부부가구의 증가로 부부관계, 부부의 친밀감이 중요해졌다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혼 가구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식도 깨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배우자가 있지만,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가구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구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경향으로부터 알 수 있다. <표 2-4>에서는 기혼의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다른 가족원들이나 방계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지난 15년 동안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과 2015년 자료에는 기혼 1인가구, 기혼편부모+미혼자녀로 살아가는 형태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혼의 가구주가 미혼의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형태들도 나타난다. 제시된 가구유형은 가구주

를 중심으로 가구주가 기혼인 상황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는 가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말부부가구 혹은 분거가구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수가 매우 작기는 하나, 15년 격차를 두고 모든 형태에서 해당 가구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5년간 유배우 가구 수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배우 가구수를 분모로 개별 가구의 비율을 산출했을 때에도,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편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기혼이지만 1인가구로 살아가는 가구 역시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시도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령별 세대유형의 분포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떠한 가족유형에서 살아가게 될까? 실제 한 사람을 추적 조사하여 살아온 가족유형을 살펴보는 패널자료가 가용하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경험하는 가족유형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대로 현재 살아가는 가족의 세대구성을 0세부터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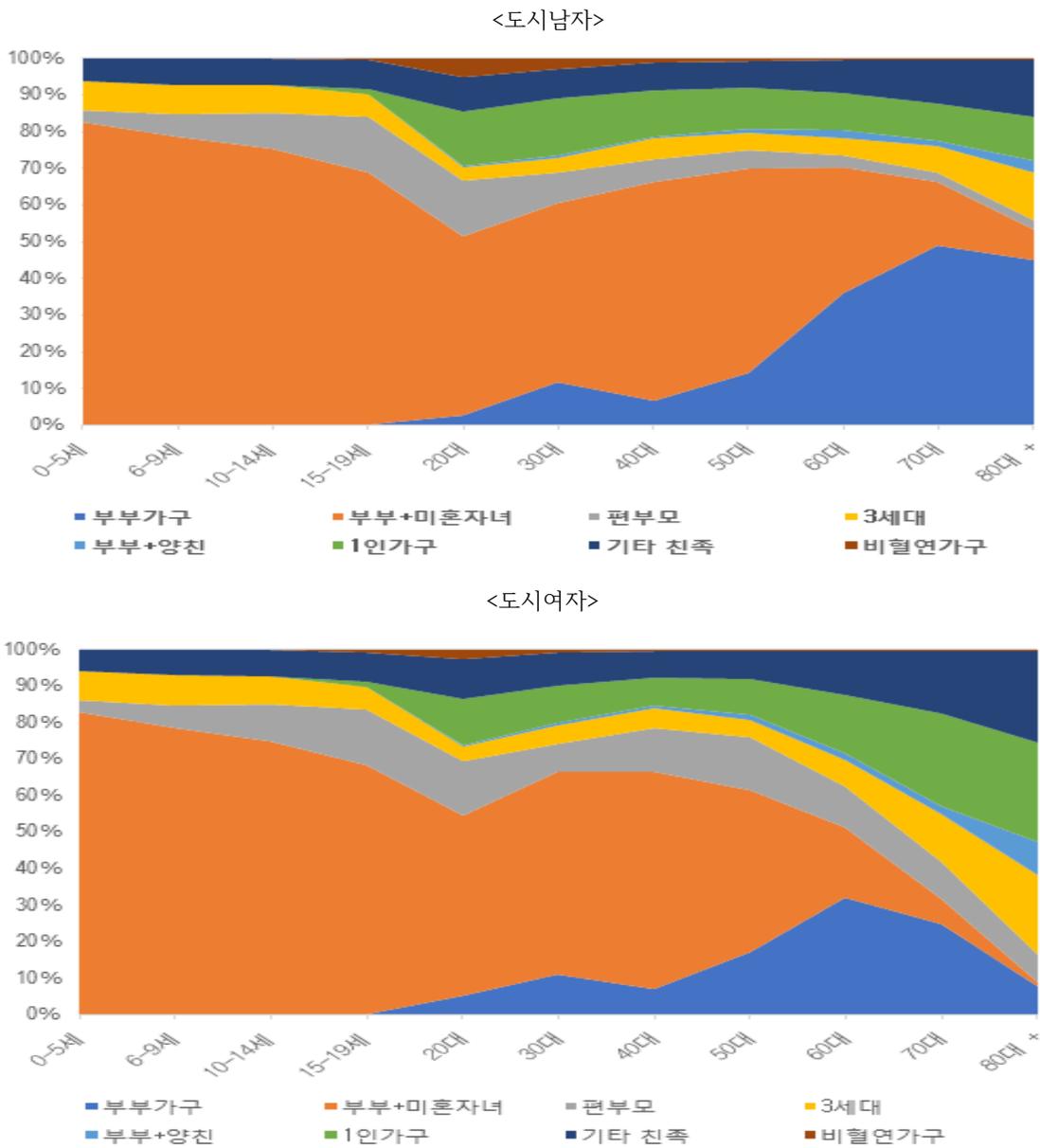
<그림 2-3>은 도시지역에 사는 남성과 여성이 현재 살고 있는 가족구성을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족구성은 부부가구, 부모와 미혼자녀 가구(부모+미혼자녀), 편부모가구(편부+미혼자녀, 편모+미혼자녀), 3세대 가구, 직계가족가구(부부+노부모), 1인가구, 기타친족가구(4세대가구 및 조손가구 등 형제자매가구 등 친족가구), 그리고 비혈연가구의 8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연령별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2-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도시지역이지만, 남성과 여성에 따라 경험하는 가족의 형태와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녀 모두 19세 이전까지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유사하다. 0-18세까지 아동청소년은 주로 부모와 함께 살아간다. 영유아기를 지나 아동기가 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형태가 감소하고, 편부모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기는 하나,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부모, 혹은 3세대 가구, 그리고 친족가구 등 “혈연집단”내에서 양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미혼자녀 핵가족의 형태는 자녀 연령이 청소년기로 들어오면서 예상외로 급격히 감소하는 점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십대 청년기에 가구형태가 한번 급격히 분화하는 모양새다. 부모+미혼자녀 비율이 급감하면서, 그 공백을 1인가구, 결혼 후 부부가구(사실혼 포함), 그리고 비혈연가구가 채우는 양상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가구유형의 비율이 가장 다채로워서, 20대야말로 가장 다양한 가족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연령집단별 살아가는 세대유형 분포, 2015: 도시지역 남성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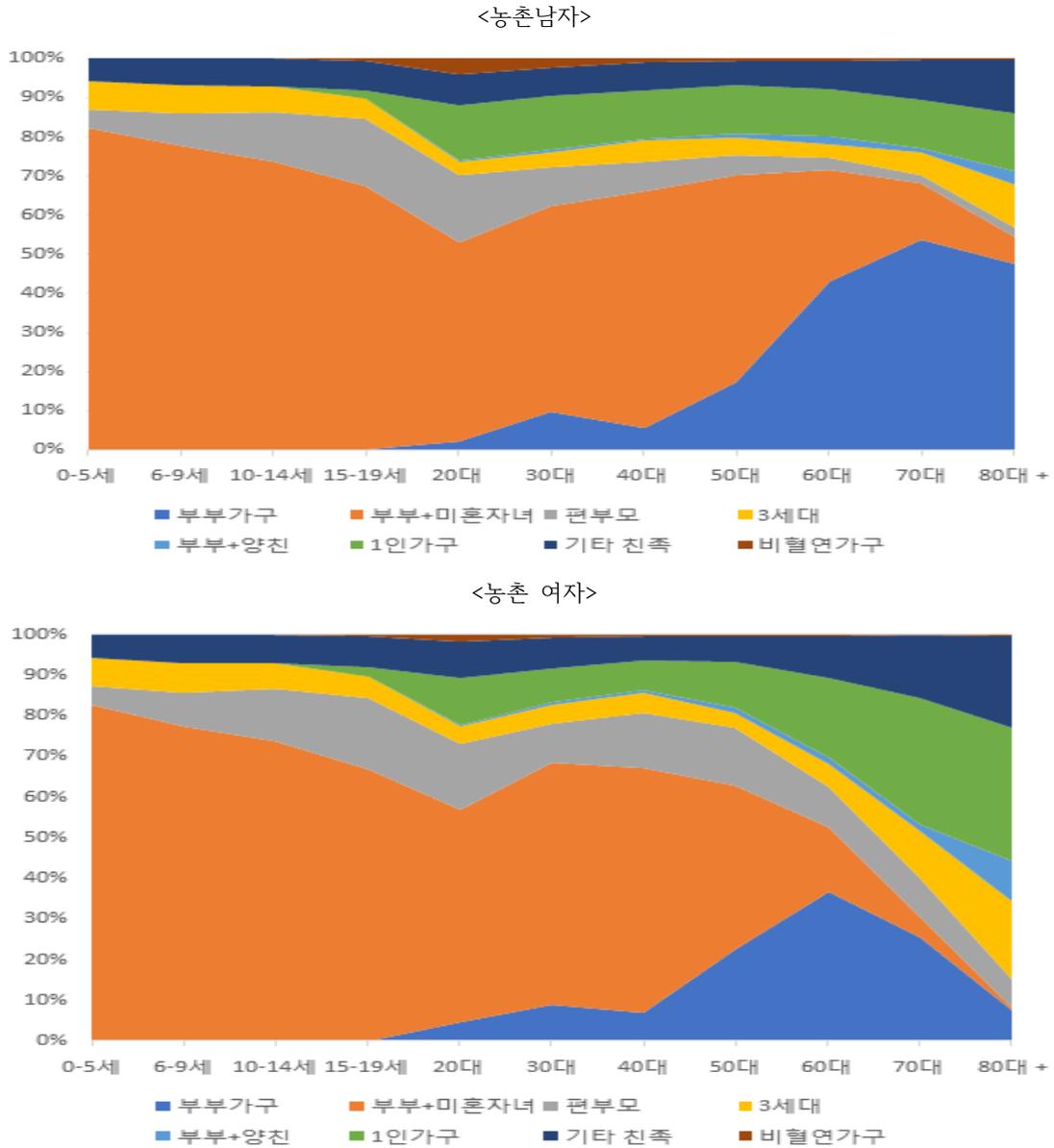
(단위: 백분율)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그림 2-4> 연령집단별 살아가는 세대유형 분포, 2015: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

(단위: 백분율)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중년기는 결혼과 함께 다시 가족구조 내에서 살아가는 형태가 대다수를 이룬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성인은 다시 한번 부모+미혼자녀 형태의 가구에서 살아간다. 다만, 이제는 본인이 부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생애과정 초기의 가구와 차이가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어린시절에는 80%가 넘는 아동이 부모+미혼자녀의 자녀역할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 모든 자녀가 결혼과 출산을 이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년시기 부모+미혼자녀 가구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증가하나, 전체적으로 그 비율은 생애과정 초반의 비율을 따라잡지 못한다. 즉, 성인 중 일부만이 부모+미

혼자녀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0대에는 남녀 모두 가구형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다시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때 부부가 구와 1인가구가 큰 약진을 보이면서 또 한 번 가구형태상 다양한 가족유형이 공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노년기 가구형태에서는 남성의 경우 노년 후반기로 갈수록, 부부가구의 증가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 부부가구 보다는 1인가구, 비친족가구, 3세대 가구에서 살아가는 비율이 매우 높다. 남녀의 기대여명 차이, 부부간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이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남성 노인에 비해 길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를 생애 후반기에 가구형태에서 적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에게 고령 거주 이동의 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도시거주 남녀와 함께 농촌지역의 남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가족구성을 알아보았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유사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한 차이점을 찾자면, 청소년기에 농촌 아동/청소년이 편부모와 살아가게 되는 시기도 더 빠르고, 편부모와 살아가는 비중 역시 도시에 비해 다소 높다.

5) 소결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구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제는 1인이 홀로 가구가 되고 가족을 이룬 사례가 늘었다. 이러한 방향성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1인가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운이 나빠서” 발생한 임시적 상황이 아니라 현대인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고착되면서 우리의 가족은 이제 단출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특히 이러한 소규모 가족, 1인가구가 한창 일과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중년기에도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년의 시기(대체로 35-55세)에 전통적인 핵가족(부부+미혼자녀) 뿐 아니라, 무자녀가족, 떨어져서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1인가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셋째, 가구의 다변화 추세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이다. 부부가 미혼자녀를 돌보는 가구의 규모는 크게 줄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비율도 자녀가 어린시기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다. 그런가하면, 인구고령화 사회에서는 부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크게 늘지 않았다. 부부가 양친 혹은 양친 중 한명을 모시는 직계가족 형태는 최근에 오히려 줄고 있다. 부부가구,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가족은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서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방문

가족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5세 이하 아동은 대체로 부모 혹은 부모와 다른 친족과 함께 살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이미 편부모, 기타친족가구와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20대가 되면 1인가구를 비롯하여 비혈연가구에 이르기까지 20대가 겪는 가족의 구성과 형태는 다양하게 분포하게 된다. 그만큼 20대의 거주안정성, 거주환경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해준다. 남성과 여성은 일생동안 경험하게 되는 가구형태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노년기는 남녀가 꾸려가는 가구형태가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2. 가구와 가족관계의 지형변화

1) 일인가구의 특성과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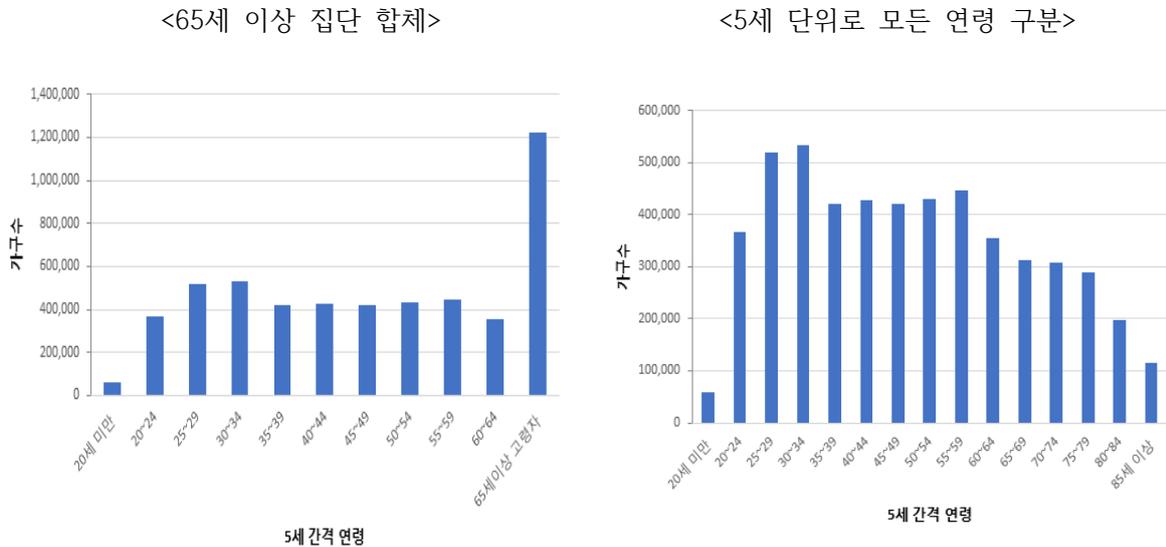
일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동안 한번쯤 1인가구로 살아가는 개연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미혼일 때, 기혼일 때, 그리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유로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되는지, 1인가구로 살아갈 때 거주양상과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한지 각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27%를 차지한다. 이러한 1인가구는 주로 청년층과 노년층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2-5>의 왼쪽 그래프는 65세 이상 인구를 하나의 노인집단으로 인식하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그림 2-3>에서 <그림 2-4>까지 연령별 세대유형을 누적적으로 쌓아 올린 영역 그래프에서는 개별 연령대 내에서 다른 세대유형과 비교한 1인가구의 비중을 알아볼 수 있었다. 청년시기에는 다양한 세대유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1인가구로 살아가는 비중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년시기 역시 1인가구는 뚜렷한 비중이 나타나지만, 역시 부부가족 혹은 부부+미혼자녀 형태로 살아가는 것, 즉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 반면에 노년기에는 1인가구 비중이 전체 세대유형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물론 성별에 따라 1인가구로 살아가는 비율은 다르다.

그런데 <그림 2-5>은 1인가구의 수라는 절대적 수치로 표시했기 때문에, 1인가구 내에서 연령대에 따른 분포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먼저 <그림 2-5>의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65세 노인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했을 때, 노인에서 1인가구가 많이 분포한다. 이 그래프만 살펴보면, 노년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많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림 2-5〉 5세 간격 연령집단별 1인가구 분포, 2015

(단위: 가구수)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가중치적용)

그런데, 연령을 5세단위로 구분하되, 노년시기도 5세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인가구의 수를 표시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림 2-5〉의 오른쪽 그래프는 5세연령 집단별 각 세별 전체집단 대비 1인가구의 분포를 나타낸다. 1인가구가 많이 분포한 연령구간은 20-30대 청년집단이고, 그 다음이 중년집단으로 나타난다. 물론 노년기 집단에서는 5세별 연령간격으로 살펴봤을때, 60대나 70대에서 1인가구의 절대적 수는 청년 혹은 중년 집단보다 오히려 그 수가 작다. 즉, 이러한 5세 연령집단별 1인가구의 수 그래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1인가구로 살아가는 인구규모로 볼 때, 청년과 중년도 노년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1인가구는생애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는 특이한 가구형태가 아니라 전 연령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 중년 1인가구 그리고 노년 1인가구 집단으로 1인가구를 이룬 사람들을 연령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1) 분석대상

우선 전체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를 추출(N=5,211,133)하였고, 1인가구로 사는 가구주의 연령을 중심으로 20-39세, 40-59세, 그리고 65-79세의 세 개 집단으로 나누었다(가구가중치 적용함). 세 개의 연령집단에서 1인가구는 각각에 대해 청년1인가구 집단 (N=1,642,945), 중년1인가

구 집단(N=1,620,456), 그리고 노년1인가구 집단(N=1,104,041)으로 명명하였다. 대체로 청년과 중년은 20세 턱위로 집단을 구축했지만, 노인의 경우 65세-79세로 연령을 한정했는데, 이는 80세 이후 노년층은 건강문제로 거주형태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1인가구의 공간분포: 청년, 중년, 노년집단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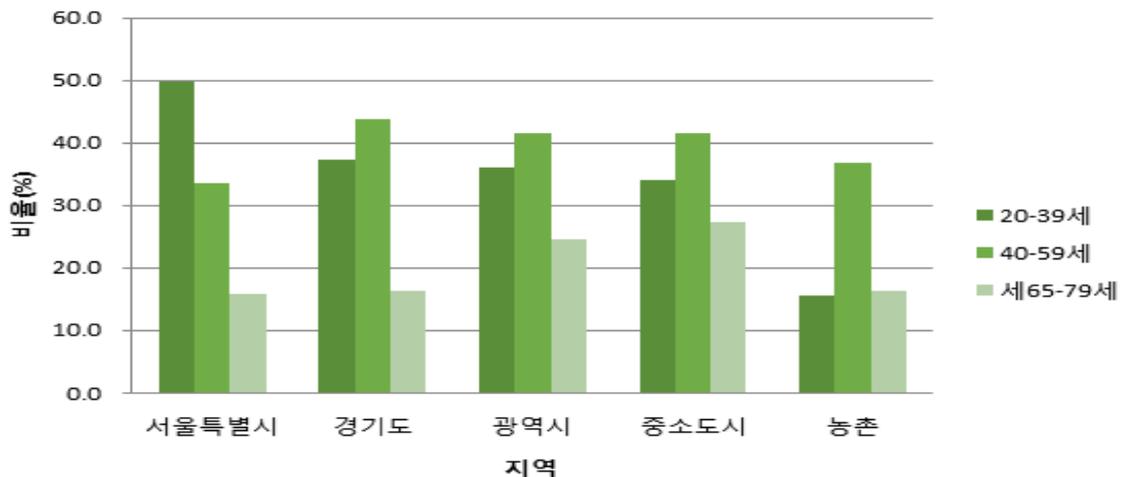
1인가구주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아갈까? 연령별로 1인가구의 분포패턴은 상이한가? 혹은 1인가구는 연령을 불문하고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연령집단별로 전국을 중심으로 한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림 2-6>은 연령집단별로 1인가구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5개 권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광역시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다. 또한 그 외 지역은 각 도 단위에서 시 지역을 “중소도시”로 구분하였고, 군단위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았다.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보면, 노년1인가구는 주로 농촌에 분포하고, 청년1인가구는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청년1인가구는 군단위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경기도, 광역시,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그 수가 큰 차이가 없다. 중년1인가구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 지역 내에서 연령집단별로 1인가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았는데(<표 2-5>에 제시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령집단별로 살아가는 지역이 상이하였다.

<그림 2-6> 1인가구의 지역분포, 2015: 연령집단별 분포

(단위: 백분율)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표 2-5> 1인가구 지역분포 순위(서울특별시 지역 내), 2015: 연령집단별

(단위: 백분율)

구단위 지역	20-39 세	40-59 세	65-79 세	전체
관악구	12.93	6.35	5.03	9.42
강남구	6.77	5.07	3.66	4.82
동작구	6.34	3.46	3.83	3.92
광진구	6.00	4.50	3.20	4.84
마포구	5.81	3.98	3.53	3.66
송파구	4.68	5.53	4.05	4.98
강서구	4.56	5.68	5.39	5.67
성북구	4.52	4.19	5.39	3.63
노원구	2.59	4.29	6.61	4.57
은평구	2.83	4.55	5.52	4.68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 광진구 등은 청년1인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대학이 몰려 있는 신촌일대 즉, 마포구지역은 오히려 청년1인가구 비중이 5위로 밀려나 있다. 그런가하면, 중년1인가구는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그리고 강남구에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1인가구는 청년이나 중년1인가구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살아간다.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가 노년1인가구가 많이 포진한 지역이다. 이러한 양상은 연령집단에 따라 살아가는 지역에 있어 명확한 구별짓기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직 관악구는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1인가구가 그 상대적 분포가 높은 지역이다. 1인가구의 분포 상으로 볼 때, 서울 관악구는 1인가구의 메카이고, 1인가구면에서는 연령통합적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3)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집단별 특성

다음, 각 연령별 1인가구의 가구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내용은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6>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과 중년모두 1인가구를 이루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 그런데, 노년집단에서는 여성1인가구의 비중이 남성1인가구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혼인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청년과 중년 1인가구에서는 주된 1인가구 층이 미혼집단이다. 그러나 노년1인가구는 주로 사별로 이루어졌다. 남녀의 기대여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사별 후 여성이 홀로 남게 되면서 노년1인가구 비중에서 여성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황혼이혼이 신혼기 이혼율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노년1인가구에서 혼인상태 비중에 이혼이 12%로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년의 경우 역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가구를 이루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그 비중이 높다. 혼인상태 비중을 보면, 미혼비중이 38%로 높지만, 이혼한 사람들이 31%, 유배우집단도 21%나 된다. 40대에 여전히 미혼으로 남아 있는 수가 상당수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중년의 시기에 이루어진 이혼 역시 중년층이 혼자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1인가구는 5년 전만해도 현재 주거지 지역에 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나 차지한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 움직인 비중도 37% 수준이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다는 응답은 절반을 약간 넘는다. 즉, 실제 거주지 이동을 해야 했던 비율도 42%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년1인가구의 경우 1년 전과 동일장소에 살고 있다는 비율이 77%이다. 물론 중년1인가구 역시 5년 전에 다른 시군구에 살았다는 응답이 22%나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노년1인가구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1년전부터 살았다는 응답이 92.4%, 5년전에도 거주지 이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74.7%에 이른다. 거주 안정성의 면에서 보면, 노년1인가구가 가장 이동성이 없었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 연령집단별 비교

(단위: 백분율)

		20-39 세	40-59 세	65-79 세
전체 사례수		1,642,945	1,620,456	1,104,041
성별	남자	59.3	57.4	23.2
	여자	40.8	42.6	76.8
교육수준	고졸이하	22.8	65.8	93.7
	대졸이상	77.3	34.2	6.3
취업여부	일함	69.9	71.1	21.4
	일하지 않음	30.1	28.9	78.6
혼인상태	미혼	92.5	38.1	3.6
	유배우	5.0	21.7	7.7
	사별	0.1	9.1	76.2
	이혼	2.4	31.0	12.6
1년전 거주지	살고 있는 집	58.3	77.3	92.4
	같은 시군구내	21.5	13.4	5.4
	다른 시군구_같은시도	19.6	9.1	2.2
	다른 시군구_다른시도	0.6	0.2	0.1
5년전 거주지	살고 있는 집	12.8	40.4	74.7
	같은 시군구내	37.8	36.5	17.9
	다른 시군구_같은시도	48.0	22.5	7.3
	다른 시군구_다른시도	1.4	0.7	0.2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4) 취업한 1인가구주의 특성, 2015: 연령집단별 특성

<표 2-7>에서는 취업한 1인가구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각 연령별 취업자 비율은 청년과 중년, 노년1인가구주가 각각 69%, 71% 그리고 21.4% 수준이었다.

취업한 청년1인가구주의 32%가 전문직 종사자이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직종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장치 및 기계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1인가구주 중 취업한 사람들은 청년집단과 비교해서 다양한 직종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단순노무직종 종사자가 15%로 다른 직종에 비해 다소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중년1인가구는 직업면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다. 일하는 노년1인가구주의 주된 직종은 단순노무직(37%)과 농림어업(30%)이 압도한다. 그 외에 적은 비중으로 서비스직 종사자(10%)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직장인의 통근시간은 응답자의 60% 가량이 30분 이내라고 답했다. 그리고 20%의 비중으로 45분 내외라고 응답하였다. 한 시간 넘는 통근시간을 언급한 응답자는 10% 남짓이고, 이는 세 연령집단 모두 동일하다. 즉 1인가구를 형성한 사람들의 직장은 거주지로부터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인가구를 형성한 이유가 이러한 통근시간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1인가구의 거주 및 주택특성: 연령집단별 특성

<표 2-7> 취업한 1인가구주의 직종과 통근시간, 2015

(단위: 백분율)

		20-39 세	40-59 세	65-79 세
직종 (취업자만 포함)	관리직	0.8	1.7	0.3
	전문직	31.9	14.9	3.6
	사무직	21.1	12.6	2.2
	서비스	11.2	14.8	10.1
	판매직	11.7	11.1	6.8
	농림어업	0.2	2.4	30.9
	기능직	7.2	13.1	3.8
	장치기계	10.5	14.0	4.9
	단순노무	4.7	15.2	37.5
	군인	0.7	0.3	0.0
통근/통학시간	15 분미만	30.6	30.5	45.9
	15-30 분	31.1	29.9	27.0
	35-45 분	23.2	23.9	17.6
	45-60 분	3.9	3.8	2.8
	60-90 분	8.9	9.1	5.2
	90-120 분	1.8	2.1	1.0
	120 분이상	0.6	0.9	0.5
N		1,642,945	1,620,456	1,104,041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표 2-8>에서는 1인가구를 연령별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년1인가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집단에서는 현재 “세든”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전세와 월세비중이 자가소유비중보다 높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월세비율이 높아서 주거비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과 중년1인가구주는 무상이나 관사 거주비중도 일부 발견되는데, 그 비중은 10%를 넘지 못한다. 앞서 청년1인가구의 경우 1년 단위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월세비중이 높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소유여부로 볼 때, 청년과 중년1인가구의 거주지는 “임시”상태임을 말해준다.

최근 1인가구에 관한 대중매체의 관심 중 중요한 부분이 혼밥이다. 1인가구주들이 주거안정성

<표 2-8> 1인가구의 주거지 특성, 2015

(단위: %, 평균)

		20-39 세	40-59 세	65-79 세
전체 사례수		1,642,945	1,620,456	1,104,041
점유형태	자가	10.3	28.8	61.8
	전세	21.3	15.5	12.0
	월세	59.7	46.7	20.9
	기타(사글세포함)	2.3	1.6	1.2
	무상/관사	6.5	7.4	4.1
부엌여부	현대식	99.4	98.6	97.9
	재래식	0.3	1.1	1.9
	없음	0.4	0.3	0.1
부엌사용유형	단독	97.3	97.9	99.2
	공동	2.3	1.8	0.7
식당용 방	없음	90.1	81.8	69.8
	1 개 이상	9.9	18.2	30.2
총방수 (평균)		2.0	2.8	3.3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제대로 밥을 챙겨먹을 여지가 있는지 부엌의 상태와 식당용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실제 대부분의 거주지에는 부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엌은 대체로 현대식 부엌을 갖추고 있다. 다만, 식당용 방이나 공간이 별도로 있는 주거지는 노년1인가구 주거지외에는 거의 없다. 혼밥은 가능하나, 혼밥을 차려 먹는 상황은 열악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간적 열악함은 실제로 평균 총방의 수가 노년1인가구, 중년1인가구, 그리고 청년1인가구 순으로 작게 나타나는 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6) 소결

이상의 결과는 1인가구라 하더라도,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에 겪을 때 상황과 조건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에서부터 실제 살아가는 주택, 취업상황이나 혼인상태까지, 같은 1인가구이지만, 이들은 결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집단이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과정과 1인가구로 살아갈 지속기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의 부담과 문제들 역시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인가구가 대세가구가 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 1인가구 자체가 또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분거가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식이 깨지면서 분거가족의 유형은 기혼가구주가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기혼자가 기타 친척과 사는 경우, 기혼자가 혼자 사는 경우 그리고 기혼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를 “떨어져서 살지만 또한 함께인 가족(Living Apart Together, 이하 LAT가족)”이라고 부른다. 외국에서 LAT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성인이 거주를 따로 한 형태를 말한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나 반 동거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이다. 즉, 결혼이라는 계약은 거부하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결혼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서구에서는 LAT 가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LAT 가족에는 또 다른 부류도 있다. 즉 같이 살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아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직, 동거가 보편적이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LAT를 ‘분거가족’이라고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분거가족 중 1+N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헤어져서 살아가면서 한명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에 초점을 두었다.

분거가구에 있어 가구와 가족의 분리는 숙명이다. 그들은 각각의 가구형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최근 한국가구의 주요 변화의 하나인 중년1인가구 증가, 한부모+미혼자녀만 살아가는 형태를 분거가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분거가구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구를 대상으로 1인과 N명의 가구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에서는 가구에 관한 추적조사자료를 얻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기혼1인가구와 기혼 편부모1인가구를 각각 분거한 가구로 이 연구에서는 파악하였다. 이러한 가구형태별 특성파악을 통해 기혼이면서도 부부가 떨어져 살아가는 가구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분거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추론하였다.

(1) 분석대상

분거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전체가구에서 일반가구를 추출하였고,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 중 혼인상태가 유배우자 가구만 구분해 냈다. 이러한 1인유배우가구를 다시 기혼남성1인가구(N=391,428), 기혼여성1인가구(N=229,580)로 구분하였다(가구가중치 적용함). 일반가구에서 편부모가구 역시 기혼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혼편부(N=75,278), 기혼편모(N=391,147) 가구를 추출하여 앞서 구분한 기혼1인가구와 병렬적으로 비교하였다. 가구의 규모로 보면 기혼남성1인가구와 기혼편모가구가 각각 36%와 35.9%로 두 개가 비등하다. 즉, 분거가구가 1+N으로 쪼개질 때 기혼 남성이 홀로 지내게 되는 부분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기혼편모1인가구는 21% 정도였고, 소수이기는 하나 기혼편부는 전체 LAT 가구 중 6.9%로 나타났다.

(2) 기혼1인가구, 기혼편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2-9>에서는 기혼1인가구 남성과 여성, 기혼편부모가구 각각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기혼1인가구 남성의 평균연령은 52세이고, 기혼편모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46세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기혼편부의 연령은 50세, 기혼1인가구 여성의 평균연령은 54세이다. 이를 통해 기혼1인가구여성의 경우 다른 가구주에 비해 생애과정상 노년기를 바라보는 연령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기 이후 남편과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기혼여성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혼편모는 생애주기상 아직 아이들이 학동기 및 청소년기에 포진하고 있다. 기혼편부의 경우는 기혼편모보다 나이도 많고, 함께 살고 있는 자녀도 성인의 비율이 50%를 육박한다. 즉 이들은 기혼편모와 비교해 볼 때, 나이든 미혼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혼1인가구 남성이나 기혼편부의 교육수준은 큰 차이가 없지만, 기혼1인여성가구주는 기혼편모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평균연령과 연결되는 특성으로서 이 두 가구의 여성들이 서로 세대(generation)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혼1인남성가구와 기혼편부가구와 같이 분거한 남성들은 취업자 비율이 80%를 육박하지만, 분거가구를 이루는 여성(기혼1인여성가구주, 기혼편모가구주)의 취업률은 각각 48%와 46%로 일반적인 30-50대 초반 여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즉, 이들 기혼여성 분거가구는 서로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절반 가까이 생계수단을 떨어져서 사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분거가구의 거주지와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표 2-10>), 모든 가구유형에서 1년 기

<표 2-9> 기혼분거가구의 특성, 2015: 분거유형별 특성

(단위: 백분율)

	1 인가구		편부모	
	기혼남성	기혼여성	기혼편부	기혼편모
전체사례수	391,428	229,580	75,282	391,147
평균연령(평균)	52.3	54.0	50.5	46.4
교육수준	고졸이하	45.6	46.4	51.1
	대졸이상	54.4	33.8	48.9
취업여부	일함	82.9	81.2	53.7
	일하지 않음	17.1	18.8	46.3
직종	전문직/관리직	22.6	20.8	26.9
	그외	77.5	79.3	73.1
생애주기 (막내자녀기준)	자녀연령 0-5 세		12.6	12.6
	자녀연령 6-12 세		13.0	17.9
	자녀연령 13-18 세		18.4	23.7
	모든 자녀 19 세 이상		50.8	40.0
1 년전 거주지	살고 있는 집	68.8	81.4	81.9
	같은 시군구내	11.9	12.1	12.5
	다른 시군구_같은시도	18.7	6.2	5.2
	다른 시군구_다른시도	0.5	0.3	0.4
5 년전 거주지	살고 있는 집	34.0	48.5	46.4
	같은 시군구내	26.3	33.0	35.7
	다른 시군구_같은시도	38.6	17.7	16.7
	다른 시군구_다른시도	1.1	0.8	1.1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표 2-10> 기혼분거가구의 거주지역 및 거주상황특성, 2015

(단위: 백분율)

		기혼 1 인가구	기혼 편부모
지역	서울특별시	15.5	19.4
	경기도	22.1	23.8
	광역시	23.6	29.0
	중소도시	28.8	24.0
	농촌	10.0	3.8
주택점유형태	자가	37.2	53.4
	전세	14.6	18.7
	월세	33.5	21.0
	기타(사글세포함)	1.3	0.7
	무상/관사	13.3	6.3
전체사례수		621,008	466,429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간 내에 거주지 이동을 한 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5년 기간을 두고 보면 거주지 이전 경험을 한 가구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40-50%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동의 거리로 보면, 기혼편부모는 각각 같은 시군구내에서 짧은 이동을 했으나, 기혼1인가구, 특히 기혼1인남성가구는 같은 시도내에서 다른 시군구로 옮겼다는 응답이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5년 전에 살던 지역기반을 떠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중년1인가구가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분포하고 있는 점과도 연결되는 결과인데, 최근 공기업의 지역이전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기혼1인가구와 기혼편부모가구의 지역분포를 보게 되면, 기혼1인가구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광역시, 중소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더러는 농촌지역에도 10%가량 존재한다. 반면, 기혼편부모가구는 농촌거주비율은 3%대에 머무르고 있고,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기혼1인가구의 경우 자가소유 비율은 37%이고, 전세와 월세, 그리고 관사/무상의 비중이 13%로 나타났다. 기혼편부모가구의 경우 자가소유 비율이 53%로 예상보다 높지 않지만, 전세와 월세비율은 기혼1인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분거가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이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N+1로 분거하여 남편이 떠난 경우가 있고, 다른 한 유형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근거지인 농촌거주 가구가 1+N으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간 경우로 보인다. 이 두 경우 모두 결국은 자녀의 학업근거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부부가 따로 사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분거가구 유형별 거주지분포: 전국 시도단위, 서울특별시

그렇다면, 기혼1인가구와 편부모가구는 공간적으로 차별적인 지역에 거주할까? 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분거가구 유형별로 전국분포와 서울특별시 거주분포를 알아보았다.

<표 2-11>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역별 거주인구비율이 반영되어 기혼1인가구나 기혼편부모가구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두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각 유형마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혼1인남성가구는 경남, 경북, 충남, 강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 기혼1인여성주의 경우 부산, 경남지역과 경북지역에 살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다.

기혼편부모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주로 광역시 주변과 경상남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5% 이하 수준이다. 대도시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 기혼편부모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군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세종시나 국제학교가 많이 설립된 제주도의 경우 기혼편부모의 유입이 나타난다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자

료에서는 그러한 지역에서 특정 분거가구의 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기혼편부모가 대도시 주변 특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주변과 같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포진되었다는 것은 기혼편부모가 자녀교육문제로 형성되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분거가구가 많이 분포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분거가구유형의 분포패턴을 알아보았다. <표 2-12>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기혼편부모 가구는 강남구와 송파구, 노원구와 서

<표 2-11> 기혼분거가구의 지역별 분포, 2015: 전국 시군구

(단위: 백분율)

	1 인가구		유배우 편부모	
	기혼남성	기혼여성	기혼편부	기혼편모
서울특별시	14.2	17.4	21.9	19.0
부산광역시	4.8	6.6	5.8	7.3
대구광역시	3.9	4.8	4.9	5.8
인천광역시	4.4	4.6	5.9	5.7
광주광역시	2.6	3.3	3.7	4.4
대전광역시	3.2	3.2	3.3	3.9
울산광역시	2.8	2.3	2.3	1.8
세종자치특별시	0.8	0.7	0.5	0.5
경기도	22.3	21.9	25.6	23.5
강원도	5.3	4.5	2.7	3.3
충청북도	4.0	3.3	2.7	2.8
충청남도	6.0	4.6	3.1	3.4
전라북도	4.3	4.3	3.5	3.9
전라남도	4.9	4.3	3.4	3.2
경상북도	7.1	6.5	4.3	4.6
경상남도	8.0	6.6	5.1	5.8
제주특별자치도	1.4	1.2	1.3	1.0
전체사례수	391,428	229,580	75,282	391,147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초구 순서로 분포하며, 기혼편부모가구 비중이 5%를 넘은 지역으로는 강서구와 양천구 등이 드러난다. 모두 학원가와 교육열기가 높은 구로 유명한 지역들이다.

그에 비해, 기혼1인가구 역시 강남구와 송파구 비중이 높고, 동시에 기혼1인남성가구는 관악구가, 기혼1인여성가구는 성북구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모두 앞서 중년1인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낸 지역들이다.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사는 분거의 경우 대체로 교육문제와 거주지 연관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1인분거의 경우 주택가격, 월세가격등 편의성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소결

LAT 가구라고 불리는, 가구를 분리한 가족은 친밀성과 독립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표 2-12> 기혼분거가구의 지역별 분포, 2015: 서울특별시

(단위: 백분율)

구	기혼남성	기혼여성	기혼편부	기혼편모
종로구	3.07	2.83	1.76	1.62
중구	1.86	1.4	1.02	0.99
용산구	3.21	3.58	3.09	2.2
성동구	2.88	2.96	3.09	2.69
광진구	4.01	3.53	3.51	3.59
동대문구	3.36	2.92	2.91	2.94
중랑구	2.48	2.98	2.6	3.11
성북구	4.86	5.56	4.19	4.37
강북구	3.36	3.75	2.48	3.03
도봉구	1.88	3.22	3.06	3.13
노원구	3.68	4.52	6.63	6.44
은평구	4.13	4.08	4.77	4.68
서대문구	3.09	3.31	3.4	2.96
마포구	4.13	3.64	3.71	3.48
양천구	2.92	3.63	4.35	5.32
강서구	5.74	5.28	6.01	5.7
구로구	4.34	4.16	3.4	3.79
금천구	3.23	2.62	2.35	1.86
영등포구	5.26	5.09	4.72	3.11
동작구	4.47	4.74	4.33	4.29
관악구	6.22	5.47	5.87	4.3
서초구	5.15	4.93	5.54	5.68
강남구	6.94	6.79	6.56	8.42
송파구	5.91	5.94	7.16	7.46
강동구	3.84	3.08	3.51	4.82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한 현대인의 살아가는 전략으로 인식된다. 가족생활을 하되 가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살아가다가, 친밀함이 필요하고, “가족적인 삶”을 원할 때 “방문”하는 형태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직역해서 “걸어다니는 결혼(walking marriage)”이라고도 부른다. 과연 한국의 분거가구도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적 가족인가? 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분거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종의 자유와 독립성을 획득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처음 의도는 자유를 꿈꾸는 삶을 위해 구성된 가족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부양과 자녀양육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형태로 보여진다. 가족분업을 극대화한 형태가 가족분거라는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 초기 기러기가족연구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즉, 개인자유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이 분석결과 확인된다.

3)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가족

앞서 연도에 따른 변화 부분에서 부부가구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두드러진 비율, 즉 대세가구에 편입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는 전형적인 빈둥지 이후의 노년기 부부가구도 크게 증가했지만, 젊은 부부가구의 약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30-50세에서는 자녀양육이 중요한 생애과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한명의 성인이 미혼자녀를 키우는 형태로서 자녀라는 존재가 가구형태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부에서는 부부 단 둘이 살아가는 형태가 관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가구에는 자녀출산을 미루면서 부부만으로 살아가는 가구, 혹은 미혼자녀가 아직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는 않았으나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부부와 함께 살지 않는 분거의 한 형태로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 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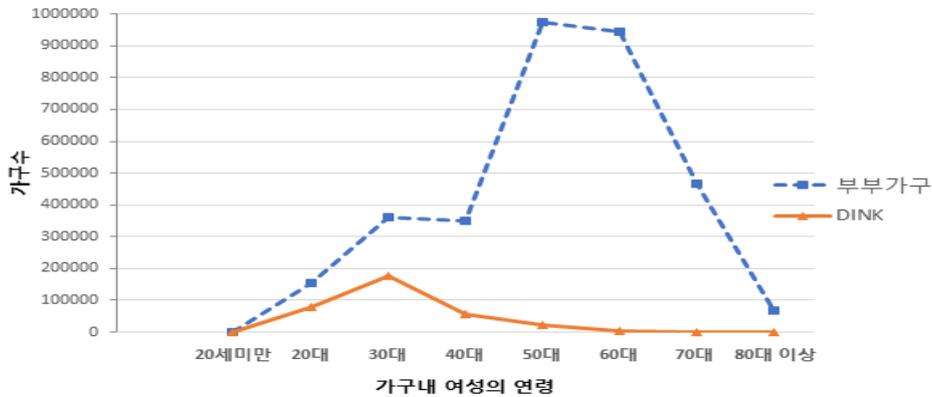
부부가구 가운데 부부 둘 다 취업한 상태에서 출산경험이 전혀 없는 부부를 두고 대중매체들은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 이하 덩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덩크족은 부부가 서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며, 자녀출산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부류로 묘사(그들만의 세상)한다. 화려하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잦은 여행,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부로 기술되고 있다. 덩크족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자녀출산에 대한 기대 등을 통해,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짚어 보았다.

(1) 분석대상가구 추출

이 절에서 살펴보는 덩크가구를 분석하기 위해 대중매체에서 명시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덩크의 정의에서 중요하는 부부가 모두 맞벌이이고, 출산경험이 없는 사례인데, 여기에 추가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동거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일반가구 중 먼저 부부세대가구를 추출하고, 그중 부부 둘 다 취업한 경우를 대상 가구로 삼았다. 그리고 그중 자녀출산이 없는 가구를 분류해 냈다. 이렇게 선택된 덩크 가구는 20% 표본자료에서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그 수는 347,720이다. 부부가 동거하는 맞벌이 가구 중 자녀 출산경험이 없는 가구로 정의되는 덩크가구는 전체 동거하는 유배우 맞벌이 가구의 8.4%, 부부만 살아가는 2인가구 중에서는 10.6% 비중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가구규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7> 부부세대가구와 덩크가구의 연령별 분포, 2015

(단위: 가구수)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1인과 2인가구의 증가를 뽑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인가구 즉 부부만 사는 가구의 증가가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소가족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덩크가구는 그 부부가구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한 번도 출산을 하지 않았고, 또한 부부 둘 다 현재 일을 하는 가구이다. 이 덩크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 부부가구 중 일부 연령에서만 발견되는 규모가 크지 않은 집단이다. 규모는 작지만, 덩크가구로부터 형성되는 이미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무자녀가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들이 이 덩크가구의 특징으로서 부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덩크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이다. 덩크족은 자녀출산을 거부하고, 부부가 서로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녀없는 맞벌이 부부가구의 여성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75%가 자녀계획이 있다고 하였고, 대체로 1-2명의 자녀를 낳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는 덩크가구가 영구적 무자녀로 남기보다는 오히려 잠시 자녀출산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덩크가구 중에서 어떤 가구가 추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가구가 자녀낳기를 포기한 것인가? 출산계획여부에 따라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덩크가구구 주거 상황

<표 2-13> 덩크가구의 지역 및 거주주택 특성, 2015

(단위: 가구수(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특별시	95,515	27.5
	경기도	97,916	28.2
	광역시	78,370	22.5
	중소도시	64,009	18.4
	농촌	11,910	3.4
거주기간	1년미만	131,572	37.8
	1-3년미만	119,448	34.4
	3-5년미만	32,484	9.3
	5-10년미만	42,579	12.3
	10년이상	21,637	6.2
점유형태	자가	137,716	39.6
	전세	123,883	35.6
	월세	74,353	21.4
	기타(사글세포함)	1,604	0.5
	무상/관사	10,164	2.9
총방수 (평균, 표준편차)		3.6	1.1
전체사례수 (가구수)		347,720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출산계획여부에 따른 덩크족의 특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체 덩크가구의 거주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덩크가구는 <표 2-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어서, 농촌에서 덩크가구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부부가구의 상당수는 노인이고, 중년층에서는 대체로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무자녀 부부가구를 이루면서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소수자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덩크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2-3년의 터울로 거주지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주택점유상태로 보면 자가소유 비율이 40% 수준이고, 나머지 60%는 전세나 월세 비중이 전체의 57%를 차지하였고 임대주택이나 관사에 살고 있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서,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임시 거처임을 시사한다.

평균 총방의 수는 잠자는 방과 거실, 부엌과 식당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하는데, 평균 방수가 3.6이라는 것은 거실과 부엌 및 식당용 방을 제외하면 잠자는 방이 1개 정도 있는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표 2-14> 딩크가구 남편과 아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 추가자녀계획여부에 따른 구분

(단위: 백분율)

		추가자녀계획 있는 가구		추가자녀계획 없는 가구	
		딩크남편	딩크 아내	딩크 남편	딩크 아내
평균연령 (mean)		33.7	31.6	39.0	38.1
결혼 당시 연령(mean)		31.4	29.4	31.9	30.3
연령집단	15-19	0.1	0.1	0.1	0.2
	20-24	0.6	2.7	1.3	2.1
	25-29	13.8	29.4	6.4	10.6
	30-34	49.5	46.5	20.0	19.5
	35-39	25.1	16.2	21.3	20.6
	40-44	8.6	4.6	26.8	24.9
	45-49	2.2	0.6	24.2	22.0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0.0	0.3	0.5
	중학교	0.4	0.5	1.7	2.8
	고등학교	15.2	15.3	32.9	35.7
	전문대	20.3	24.1	17.0	18.4
	4년제대학 이상 (대학원포함)	64.1	60.1	48.2	42.6
종교여부	종교있음	36.9	40.5	31.5	36.3
	종교없음	63.1	59.5	68.5	63.7
전체사례수		226,177		121,543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3) 딩크가구 남편과 아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추가출산계획별

<표 2-14>는 딩크가구를 출산계획여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구의 남편과 아내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개별 가구별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자녀계획이 있다는 딩크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은 각각 33세와 31세로 30대 초반이지만,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딩크남편과 아내의 연령은 30대 후반을 나타낸다. 즉, 자녀계획이 없는 딩크부부는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고령출산의 위험을 갖는 부부이다. 흥미로운 점은 두 부부 모두 결혼시 연령은 비슷하게 30대 초반이다. 즉,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딩크부부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딩크부부는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의 부부로 보인다. 실제 연령집단분포에서도 자녀계획이 없는 딩크집단의 주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난다.

추가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딩크부부 남편과 아내의 학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또한 자녀계획이 있다고 밝힌 딩크부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종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다소 우세하다. 같은 딩크부부라도 출산계획을 가진 집단에 고학력자가 많이 속해 있고, 딩크부부 중에서도 특별히 저학력층이 오히려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얼마나 수용하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종교의 유무는 실제 출산여부와 관계 없더라도, 출산자체에 조금 더 호의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종교없음의 비율에서는 추가자녀계획이 없는 집단과 자녀계획이 있는 집단 간 큰 차이가 없다. 즉, 덩크부부내에서 자녀출산의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자녀출산의 상황과 여력의 문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4) 덩크부부의 직업특성

덩크부부는 부부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직업특성은 어떠한지 자녀출산계획여부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2-15>).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덩크가구의 남편은 대체로 임금근로자이고, 직종은 전문사무직종사자가 55%로 매우 우세하다. 그 다음이 판매직과 장치 및 기계관련 종사자로 나타난다. 자녀계획이 있는 덩크가구의 아내 역시 전문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73%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덩크가구의 남편은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42%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직업이 판매직, 기능직 그리고 장치/기계직 종사자 순으로 나타난다. 자녀계획이 없는 덩크가구 아내의 직종에서는 판매서비스직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두 집단간 학력격차가 있던 점과 연관해서 볼 때, 같은 덩크족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직업안정

<표 2-15> 덩크가구 남편과 아내의 직업 특성, 2015: 추가자녀계획여부에 따른 구분

(단위: 백분율)

		추가자녀계획 있는 가구		추가자녀계획 없는 가구	
		DINK 남편	DINK 아내	DINK 남편	DINK 아내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87.1	90.3	76.6	79.4
	고용주	7.3	5.0	14.8	9.8
	소규모 자영업자	5.3	2.6	7.5	4.6
	무급가족종사자	0.3	2.2	1.1	6.2
통근시간	15분미만	14.4	16.7	18.6	22.1
	15-30분	23.2	25.4	23.5	26.3
	35-45분	29.4	29.3	28.7	27.8
	45-60분	6.6	6.6	5.3	5.5
	60-90분	19.5	16.9	17.6	14.1
	90-120분	5.2	3.9	4.6	3.2
	120분이상	1.8	1.1	1.8	0.9
직종	관리직	1.9	0.9	2.0	0.9
	전문직	33.1	42.5	25.5	29.7
	사무직	22.0	31.1	17.6	24.2
	서비스	7.0	7.9	8.8	14.3
	판매직	11.9	10.0	13.1	13.9
	농림어업	0.4	0.2	1.0	1.1
	기능직	8.6	1.6	12.2	3.9
	장치기계	10.5	3.9	12.6	6.6
	단순노무	3.4	1.7	6.6	5.4
	군인	1.2	0.2	0.5	0.1
전체사례수		226,177		121,543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성이 보장되고, 학력수준이 높은 덩크가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또한 이들의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덩크가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덩크보다 대체로 긴 통근시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덩크가구의 경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자녀계획 없는 덩크가구에서 더 다소 우세하게 나타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덩크가구 아내의 직업경력: 자녀출산계획에 따른 차이점

덩크가구의 아내들의 직업경력을 살펴보면,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덩크아내들은 결혼 전에 일을 한 비율이 91%에 이르고,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다(<표 2-16> 참조). 이를 통해 현재 자녀계획이 있는 덩크여성은 결혼전부터 계속 일을 했고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한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하느라 아이를 낳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현재 자녀출산계획은 가지고 있다.

반면에 출산계획이 없다고 밝힌 덩크아내는 오히려 결혼 전에 취업자였다는 비율이 80%로 결혼 전에 일한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자녀계획이 없다고 밝힌 덩크아내 중에는 중간에 경력단절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더 높다.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덩크여성은 오히려 직업경력상 단절도 겪었고, 결혼 전에 취업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취업한 여성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과거 경력단절의 이유가 결혼, 임신과 함께, 가족돌봄(배우자나 부모)부분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덩크여성은 현재 일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취업경력상 다양한 생애사건이 이들의 지속적인 취업을 위협해 온 것

<표 2-16> 덩크가구 남편과 아내의 직업 특성, 2015: 추가자녀계획여부에 따른 구분

(단위: 백분율)

		추가자녀계획 있는 가구		추가자녀계획 없는 가구	
		DINK 아내		DINK 아내	
결혼전 취업여부	일함	91.6		80.1	
	일하지 않음	8.4		19.9	
경력단절여부	경력단절 있음	17.0		26.7	
	경력단절 없음	83.0		73.3	
경력단절이유	결혼	83.7		85.5	
	임신, 출산	8.4		3.1	
	양육	0.3		0.1	
	교육	1.8		1.0	
	가족돌봄	5.8		10.3	
전체사례수		226,177		121,543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으로 추정된다.

(6) 소결

딩크족은 한국사회에서 현재 가시화되는 무자녀가족을 대표하는 가구이다. 부부가 친밀성을 전제로 결혼하기는 하였으나 자녀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애과업보다 직업경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형태로 매스컴에서는 묘사해왔다. 서구에서는 자녀없는 부부가구인 덩크족이 무자녀 childless 가 아니라 자녀로부터의 자유 child free를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를 말하는데, 개념을 확장하면, 돌봄자체를 거부하는 선택으로도 인식된다. 특히 덩크는 두 부부가 자녀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소득면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덩크부부로 추측되는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로 보면 한국 덩크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덩크가구 가운데 75%는 자녀를 원하고 있지만,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의 거주지가 아직은 불안정하고, 통근시간이 길며, 직장생활에 몰입하는 나머지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많고,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녀계획이 있더라도 이러한 직장환경이 양육친화적인지 여부가 출산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덩크의 원래 정의로 보자면, 사실 한국의 젊은 부부가구는 자녀없는 삶, 자유로운 부부관계를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비교해서 같은 덩크라도 자녀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덩크부부도 존재한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구 중 약25% 정도가 이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이 자녀낳기를 거부한 이유는 매스컴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고, 부부 각자의 삶을 존중해서라는 이유를 붙이기에는 상황이 열악하다. 남편과 아내의 직장상황, 주택소유상황이 취약하여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낳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 더 합당한 상황이다. 이는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이 덩크가구와 같이 자녀 없는 가구로 지속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국제결혼가구의 특성

초국적 가족이 본격적으로 통계에 감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5년이 흘렀다. 국제결혼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국제결혼가구를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인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결혼과 출

산, 일과 가족 그리고 거주안정성까지 다각도에서 기술하였다.

(1) 분석대상

인구주택총조사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귀화인 구분이 존재한다.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들 가운데 외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귀화인의 사례도 상당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국제결혼이라고 했을 때 현재 외국국적 및 귀화인을 “외국인 배우자”로 보았다. 전체 가구(일반가구와 외국인가구까지 포함)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를 먼저 추출하고, 그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국적상태가 외국인이나 귀화인이 존재하는 가구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하면 국제결혼 가구는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남편외국인+아내한국인 가구(N=19,495), 남편한국인+아내외국인 가구(N=143,172),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외국인인 가구의 경우이다. 이 절에서 주요 분석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출신 배우자 가구의 대상자들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주요 비교대상은 남편외국인+아내한국인 가구와 남편한국인+아내외국인 가구이다. 이때 배우자의 외국인 국적은 출생시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화자도 포함되어 있다.

(2) 국제결혼가구 유형별 배우자의 국적

외국인 배우자들의 국적상황을 입국시기별로 구분해 본 결과가 <표 2-17>이다. 외국인 남편들은 전체적으로 외국국적자가 귀화자보다 그 비율이 크다. 즉, 본국의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살아가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적상황은 입국시기에 따라 다소 달랐다. 1989년 이전에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비율이 37%에 이른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이러한 귀화자 비율은 줄었고, 특히 2010년 이후 귀화자는 5.9%에 불과하다.

외국인 아내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다. 외국인 아내들은 2010년 이전만 해도 귀화자 비율

<표 2-17> 국제결혼가구유형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상황, 2015

(단위:백분율)

구분		입국시기				
		1989년이전	1990-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5
남편외국인	외국국적자	62.2	81.5	82.3	88.3	94.1
	귀화자	37.8	18.5	17.7	11.7	5.9
아내외국인	외국국적자	47.0	37.5	38.3	55.1	83.6
	귀화자	53.0	62.5	61.7	44.9	16.4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표 2-18> 국제결혼 가구 유형 구분 및 출신국 분포

(단위: 백분율)

유형	N	(%)	출신국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 네시아	베트남	우즈 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기타
남편 외국인	25,715	100.0	5.8	12.6	7.2	27.7	4.4	1.5	0.8	1.4	0.3	0.1	0.6	37.8
아내 외국인	174,705	100.0	10.0	14.2	1.4	3.5	6.9	10.6	0.9	35.3	2.1	4.8	0.8	9.6

자료: 2015년 20% 표본 인구주택총조사(인구가중치 사용함).

이 외국국적을 유지한 비율에 비해 높았다. 특히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결혼이주한 이주여성들은 거의 60%가 본국국적을 두고 한국으로 국적이동을 실행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입국자들은 외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는 비율이 83%에 이른다. 지난 2012년 이후 국적법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후 결혼이주자들의 국적상황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혼이주하여 현재 한국에 살면서 본국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국적으로 귀화를 시도한 사람들이 국적법 변동 이후에는 왜 국적변동에 소극적인지, 그것은 그들의 한국 적응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여전히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어떤 국적 분포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귀화자도 모두 포함하여 출신국을 표시하였다.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로 구분해서 개별 배우자의 출신국을 알아본 결과가 <표 2-18>이다.

외국인 남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기타”항목이다. 전체 37.8%는 기타, 즉 여기 분류에 나타나지 않은 국적을 가진 경우이다. 대체로 유럽지역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경우 이 기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외국인 남편들은 제시된 국가 이외에도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기타 항목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낸 국적은 미국, 한국계 중국인, 그리고 대만과 일본 순서였다. 중국, 한국계중국인 그리고 대만까지 모두 합하면 외국인 남편 가운데 약 25% 가량이 중국계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이보다는 다양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베트남 국적(35.6%)이었고, 그 다음 순위가 한국계 중국인(14.2%), 필리핀(10.6%), 중국(10.0%), 그리고 기타국적(9.6%)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아시아계 배경을 가진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항목 국적자가 9.6%, 미국 국적자가 3.5%를 차지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아내들의 문화적 배경은 주로 동남아시아계, 중국계, 그리고 일본과 약간의 중앙아시아계가 존재한다.

(3) 국제결혼가구 유형별 가구특성

<표 2-19>에서는 국제결혼가구를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로 구분해서 각각의 경우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가구별로 비교해 보았다.

<표 2-19> 국제결혼가구 배우자의 국적상황 및 거주지 특성, 2015

(단위: 백분율)

		남편외국인+아내한국인	남편한국인+아내외국인
현재국적	외국인	83.9	61.0
	귀화인	16.1	39.0
지역	서울특별시	35.4	15.2
	경기도	29.3	26.3
	광역시	21.2	21.1
	중소도시	12.4	24.9
	농촌	1.8	12.5
	점유형태	자가	35.2
	전세	21.4	17.2
	월세	37.9	26.3
	기타	0.5	0.9
	관사/무상	4.9	3.5
전체사례수		19,495	143,172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구가중치 적용)

우선 외국인남편 가구에 비해 외국인아내 가구에서 아내의 한국귀화 비율이 높았다. 귀화를 한다는 것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고 적응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아내외국인의 경우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귀화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남편외국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국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보면 남편외국인 가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과반수이상 몰려있는데, 그에 비해 아내외국인 가구는 경기도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가구비율이 의미 있게 잡힌다. 즉 남편외국인 가구의 주 활동지역은 주로 도시이고, 아내외국인 가구의 소재지는 도시와 농촌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분포한다.

주택점유로 보면, 아내외국인 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남편외국인인 가구는 오히려 전월세 비중이 높다. 같은 국제결혼가구이나 실제 정착과 적응 면에서 남편외국인 가구의 현재 한국생활은 임시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4) 국제결혼가구 남편과 아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2-20>에서는 각 가구별 남편과 아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의 부부간 연령분포를 보면, 남녀 나이차가 아내외국인 가구가 더 크다.

부부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편외국인 가구는 주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룬다. 아내외국인 가구는 아내는 20대, 남편은 40대-50대로 분포하여, 혼인이주 여성과 그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간 학력을 비교해 보면, 남편외국인 가구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 그에 비해 아내외국인 가구는 남편과 아내 모두 고등학교 학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교육수준에서 두 가구는 매우 성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상이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한편, 부부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표 2-21>참조),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에서 아내들의 취업률이 40%초반이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한국인의 여느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구 모두 남편들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다.

남편외국인 가구는 주로 전문직, 사무직, 장치기계종사자가 많고, 그에 비해 아내외국인 가구

<표 2-20> 국제결혼가구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

(단위: 백분율)

	남편외국인+아내한국인가구		남편한국인+아내외국인가구	
	외국인남편	한국인아내	한국인남편	외국인아내
평균연령 (mean)	44.4	42.2	47.2	37.0
연령집단	15-19	0.0	0.0	0.3
	20-14	0.4	1.1	0.1
	25-29	5.7	6.2	1.0
	30-34	16.5	19.0	5.0
	35-39	17.8	21.3	10.5
	40-44	17.8	19.1	21.9
	45-49	14.1	12.1	26.1
	50-54	9.0	7.6	18.5
	55-59	5.8	5.2	9.3
	60-64	4.6	3.7	3.8
	65+	8.3	4.7	3.8
교육수준	초졸이하	2.0	3.0	5.8
	중학교	6.0	6.5	12.2
	고등학교	21.4	25.0	51.2
	전문대	7.9	12.2	10.4
	4년제대학 이상 (대학원 포함)	62.8	53.4	20.4
N	19,495		143,172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의 남편은 주로 장치기계, 기능직,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두 가구의 남편들의 직업 위세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두 가구에서 취업한 아내들도 비슷하다. 남편외국인 아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반영하듯, 전문직, 사무직 그리고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는데, 아내가 외국인인 가구의 취업한 아내들은 장치기계, 서비스직 그리고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아내외국인 가구의 경우 일부 전문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확인되었다.

<표 2-21> 국제결혼가구 부부의 취업 및 직업특성, 2015

(단위: 백분율)

		남편외국인+아내한국인		남편한국인+아내외국인	
		외국인남편	한국인아내	한국인남편	외국인아내
취업여부	일함	78.9	44.2	86.2	41.5
	일하지 않음	21.1	55.8	13.8	58.6
직종	관리직	2.8	1.5	1.1	0.3
	전문직	43.4	39.4	9.6	12.4
	사무직	11.8	18.1	8.8	6.5
	서비스	7.2	13.6	4.9	17.4
	판매직	6.9	9.4	7.3	9.0
	농림어업	0.7	0.9	8.6	8.9
	기능직	8.9	3.2	18.8	8.6
	장치기계	10.2	6.5	25.5	19.9
	단순노무	7.5	7.5	15.4	17.0
	군인	0.7	0.0	0.2	0.0
	전체사례수			19,495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5) 국제결혼가구 아내의 출산상황

<표 2-22>과 같이 각각의 국제결혼 가구에서 아동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편 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에서 평균출생아 수는 각각 1.2명과 1.3명으로 두 가구 모두 출산률은 높지 않다. 아내외국인 가구가 출산율이 약간 높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남편외국인 가구의 아내들은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비율이 30% 가량 된다. 아내외국인 가구에서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아내는 19%에 불과하다. 즉, 아내외국인 가구에서는 아내의 연령이 어리기는 하나 자녀출산이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추가 출산계획을 살펴보면 오히려 남편외국인 가구에서 자녀를 계획하는 비율(24.3%)

이 아내외국인 집단에 비해 높고, 추가자녀 수도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 가량 된다. 아내외국인 가구의 아내들은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수준도 21.5%로 낮은 편이고,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더라도 2명까지 출산을 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아내외국인 가구의 여성들의 추가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2-22> 국제결혼가구 부부의 출산관련 특성

(단위: 백분율)

	남편외국인+아내한국인		남편한국인+아내외국인	
		한국인아내		외국인아내
평균출산아수 (mean)		1.2		1.3
출산아 수	없음	30.3		19.8
	1명	33.5		39.6
	2명	27.5		32.0
	3명	7.1		7.0
	4명이상	1.7		1.7
추가자녀출산계획	있음	24.3		21.5
	없음	75.7		78.5
추가자녀계획 수	1명	65.6		75.1
	2명	30.2		22.0
	3명이상	4.3		2.9

자료: 2015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분석(가중치적용)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가구와 가족의 변화양상은 한국사회의 변화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다. 2000년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가구변화의 시계열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가구와 가족은 거의 180도 변화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더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관찰한 가구와 가족의 변화양상을 다시 정리하면서 앞으로 가구와 가족에 관한 연구의 방향과 정책이 주시할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가구원수가 많을 때에는 가족들은 서로 일상생활을 공유하였다. 하루 24시간, 주 7일의 일상이 가족원과 함께하며 이루어졌다. 가구원수가 2명대로 감소하면서, 하나의 가구에 1세대만 거주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이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대 간 교류는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한다. “방문 가족”의 시대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관계가 되면서 가족들은 무엇을 아쉬워하고, 어떤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친밀함의 관계 지형은 이러한

가구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을까? 가족들은 서로의 친밀감은 어떻게 표현하고 실현하나?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1인가구는 이제 전(全) 생애에 걸쳐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가구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이다. 청년시기에, 중년기에,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언제든 혼자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혼밥을 하고, 혼자 생활을 꾸려가며, 혼자 때로는 낯선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때,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진입지원, 거주기간동안의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떠날 때의 각종 지원이 행정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현재 1인가구가 많은 지역들, 가령 서울의 관악구와 같은 지역부터 행정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셋째, 노년1인가구의 경우 거주안정성은 높은 편이지만, 거주지의 낙후성은 아직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래식 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2%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1인가구가 재래식 부역비율이 0.3%인데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월세 살이를 하는 청년1인가구보다도 거주안정성은 높으나 노년1인가구주의 거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을 말해준다. 대중매체나 지역사회에서 최근 들어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등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한 식품에 대한 소개가 많지만, 실제 이러한 혼밥의 문화나 정보에서 소외되는 노년1인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거주안정성은 앞으로 청년 및 중년1인가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큰 문제점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1인가구가 앞으로 40%에 육박할 때, 이들 1인가구에서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도시 계획시 1인가구를 타겟으로한 공공주택지분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중년1인가구의 상당수가 노년기로 진입할 때, 자가소유 주택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중년1인가구주가 노년으로 진입할 때, 얼마나 열악한 상황으로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지 아직은 추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방안, 특히 단기적, 임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거주상태를 지속해야 할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화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분거가구의 특성과 이들의 거주 지역, 거주 상황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분거가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연 분거가구에서 베이스캠프는 어디인가? 어디를 근거지로 해서 이들 가족이 서로 만나는가? 얼마나 가깝게 만나고, 가깝게 혹은 멀리 위치해 있는가? 분거의 상황이 종료된 후, 즉 직장파견문제가 해결되거나 자녀 학업육구가 종료된 이후에 분거가족들은 어디의 주거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적 문제인가? 아니면, 다양한 지역에 살아본 경험을 삼아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가?

다섯째, 분거의 결과가 별거와 가족해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달리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분거는, 특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분거”는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가족생활에 신선한 자극제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남편 경제적 부양자와 자녀를 돌보는 아내의 형태로 분거가 대세를 이루지만, 일부 기혼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형태, 기혼의 중년 여성이 남편과 자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이는 분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형적인 남성부양자 형태의 가족이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아니라 가족들이 다양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분거를 결정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실제로 스웨덴 사회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을 거부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동기 하에 LAT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도 있어서, 한국사회에서는 과연 누가 중년시기에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지 그 생애행로를 추적해 보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이 연구 결과 자녀없는 무자녀가구 내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대중매체에서는 덩크가구가 고학력, 전문직 배경을 가진 소비지향적 부부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덩크가구는 다양한 학력층과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이나 직업위세가 다소 약한 덩크가구에서는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어서 자녀양육에 관한 선택이 결국은 부부의 경제적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혹은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에서는 아쉽게도 결혼경력을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덩크가구에는 재혼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추가자녀출산을 계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국제결혼가구의 경우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로 구분해 본 결과, 개별 가구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귀화자 비율도 남편외국인 가구는 매우 적고, 주택거주상황 역시 잠시 살다가 떠날 가능성이 높은 임시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그에 비해 아내외국인 가구는 귀화자 비율이 높기는 하나, 이들의 한국 적응은 다양한 면에서 도전이라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교육수준은 열악하고, 이들 남편들의 교육수준, 직업상황도 열악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녀출산은 아직 제한적이고,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진 비율도 낮은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 올수록 국제결혼가구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귀화하는 비율은 줄고 있다. 국적관련 법률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적응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이들의 이주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2)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2. Strohm CQ, Seltzer JA, Cochran SD, Mays VM (2009). "'Living Apart Together'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21: 177-214. doi:10.4054/demres.2009.21.7. PMC 3091814 Freely accessible. PMID 21566723.
3. Wouter van Gils, Gerbert Kraaykamp, 2008. "The Emergence of Dual-Earner Couple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Sociology*, Jg. 23, pp. 345-366.
4. Karlsson SG, Borell K (2005). "A Home of Their Own: Women's Boundary Work in LAT-relationships". *Journal of Aging Studies*. 19: 73-84.

제3장 교육 및 경제활동

최 율 | 한국교원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교육과 경제활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교육과 경제활동은 개인에게는 사회계층과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이며, 사회적으로도 노동인구의 질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및 경제활동 구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삶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및 경제활동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는 자료의 크기와 대표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교육 및 경제활동 구조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descriptive)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1년 신생아수가 30만명대로 떨어졌으며 출산율 역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인구변동은 교육과 경제활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과 경제활동 구조의 본질적 속성을 변화시킬 여지가 많다. 특히, 교육과 경제활동 구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동은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의 속성뿐 아니라 둘 간의 연결 고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교육과 경제활동 구조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 6-21세 학령인구는 1980년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최율 · 김두섭, 2016). 학령인구의 감소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학교와 교사 수에 의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에 의해 머지 않은 시기에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의 차이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각급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 교육에 대한 양적 경쟁의 감소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주요한 교육 구조의 변화라고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경제활동 구조에도 변

화가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결국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과거 은퇴인구였던 고령층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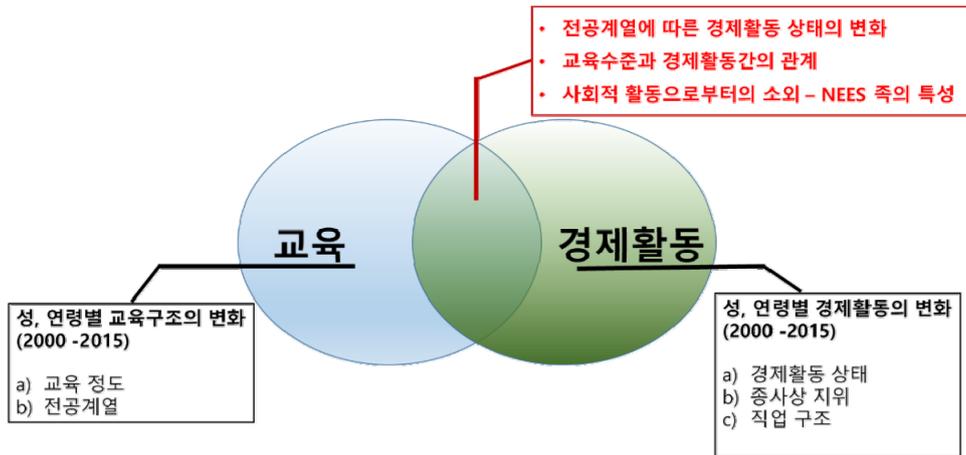
저출산 고령화는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교육과 경제활동 간의 관계에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인구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과잉학력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 결정되는 교육 수준과 노동력의 수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문제이다. 교육 구조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학의 전공과 일자리 간의 부조화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 일자리에서 필요한 전공계열과 기존의 교육체계에서 자리잡은 전공간의 양적 부조화가 생길 경우, 교육과 일자리간의 부조화 현상은 인구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과 함께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교육과 경제활동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 사회의 교육 체계와 경제활동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도래할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교육과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를 두 가지 연구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 및 경제활동 상태 각각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교육구조의 변화는 교육 정도와 전공계열의 변화를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경제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그리고 직업구조의 변화를 성과 연령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이다. 먼저, 전공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와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이 과잉학력화 현상이나, 전공-일자리간 부조화 현상이 실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려 한다.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연구 주제는 니스 (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족의 특성에 대해서다. 본 연구는 니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과 경제활동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종류의 사회 활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현 시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등교육에서의 경쟁 약화나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기 전인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대학입시나 좋은 일 자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보통, 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젊은 층의 인구 중 교육이나 일자리, 또는 직장을 위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본 연구는 니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과도기적 시점에 나타나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를 확인해 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니스족의 비중, 구조, 특징 등을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그림 3-1> 은 본 연구의 연구 주제를 보여준다.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의 구조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동시에 교육구조와 경제활동의 중첩적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연구질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1> 연구 주제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육구조와 경제활동 상태의 시계열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2%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크기 차이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세가지 분석에서도 종단적 양상을 확인할 때 2%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니스족의 특성과 같이 2015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에서는 20%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였으며 통계청이 제공한 인구승수를 적용하였다.

II. 본론

1. 교육구조와 경제활동 상태의 시계열 변화: 2000-2015

이 장에서는 교육구조와 경제활동 상태 각각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육구조의 경우, 교육수준과 전공계열의 변화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적하였으며, 경제활동의 경우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그리고 직업구조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종단적 변화 양상을 성과연령이라는 변수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과 경제활동 양상의 종합적인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1) 교육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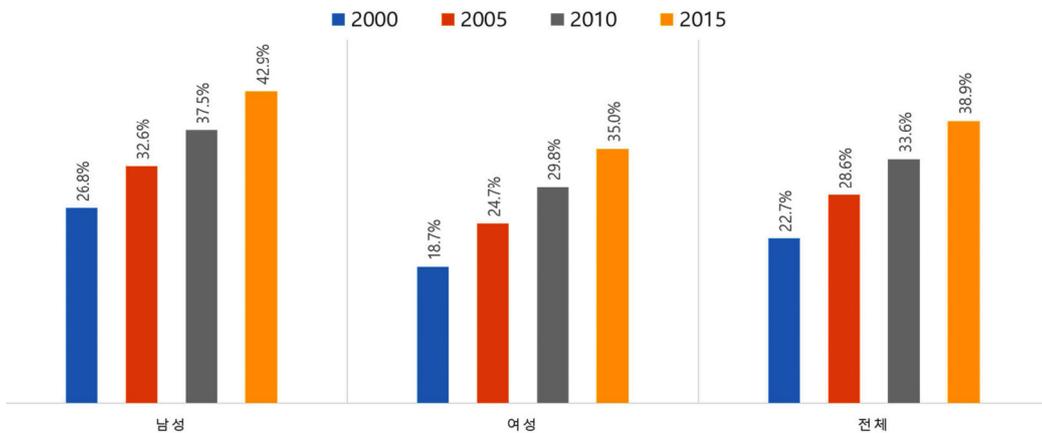
본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수준은 졸업, 수료, 중퇴, 재학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최종적으로 등록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졸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령별 교육 수준 비교에서 20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최종 등록기관을 중심으로 비중 변화를 확인하였다. 졸업자를 중심으로 비교할 경우, 20대의 졸업자 비중이 그 이상 연령대에 비해서 낮게 측정됨으로써 연령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장에서 활용한 모든 교육 수준은 동일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3-1>은 성별 전체 교육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며, <그림 3-2>는 2년제를 포함한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표 3-1> 성별 교육수준의 변화: 2000-2015

	2000			2005			2010			2015		
	남자	여자	전체									
안 받았음 (미취학 포함)	12.4	16.4	14.4	9.7	13.6	11.7	8.1	11.4	9.8	7.4	9.8	8.6
초등학교	16.5	20.0	18.3	15.6	19.1	17.4	13.5	17.5	15.6	10.9	15.3	13.1
중학교	12.1	13.2	12.6	11.6	12.5	12.0	11.1	11.9	11.5	9.5	10.6	10.1
고등학교	32.2	31.6	31.9	30.4	30.2	30.3	29.7	29.3	29.5	29.3	29.3	29.3
대학(4년제 미만)	8.6	7.7	8.2	29.2	23.1	26.1	11.9	11.3	11.6	11.8	11.6	11.7
대학교(4년제 이상)	15.5	10.1	12.8				21.3	16.1	18.6	25.9	20.1	23.0
대학원(석사 과정)	2.1	0.8	1.4	3.4	1.6	2.5	3.4	2.1	2.7	3.9	2.7	3.3
대학원(박사 과정)	0.6	0.1	0.3				1.0	0.4	0.7	1.3	0.5	0.9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2> 2년제 대학 이상 교육 비중 변화: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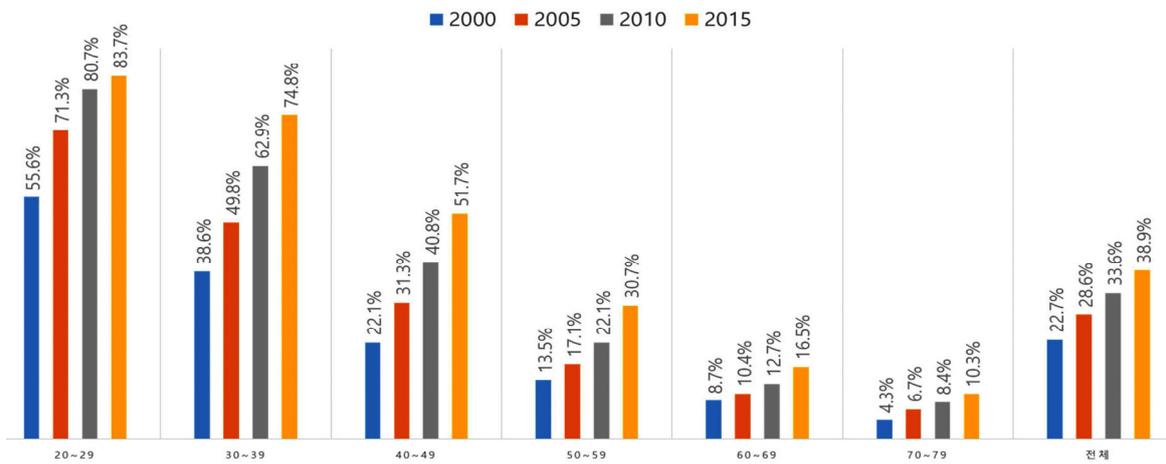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대학 이상 교육수준은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2000년 대략 23%였던 대학교 비중은 2015년 약 39%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며, 증가 속도 역시 남녀의 차가 크지 않다.

<그림 3-3> 은 연령별 교육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이상 교육수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의 경우 2010년 이후 대학이상 교육수준의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대학 교육 팽창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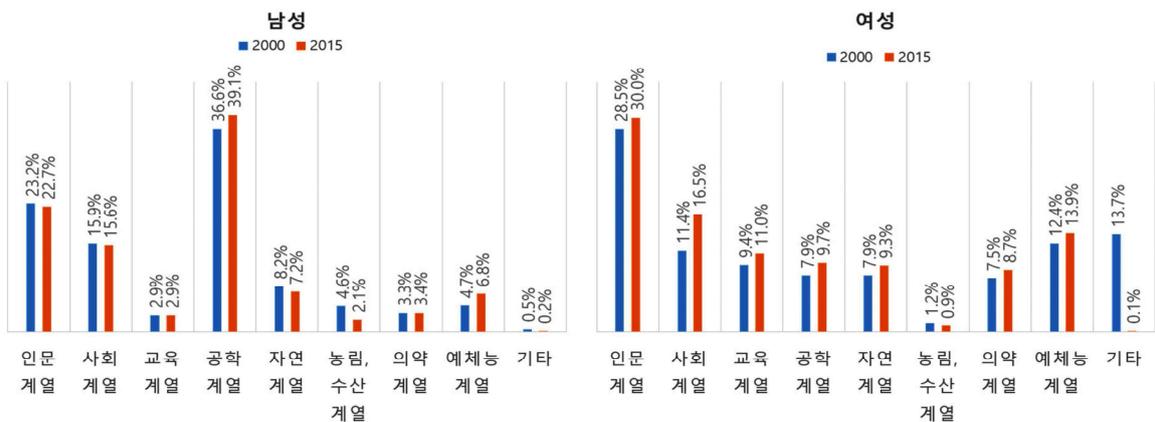
<그림 3-4>는 성별 전공계열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자의 경우 2000년 대비 2015년에 인문,

<그림 3-3> 연령별 교육수준의 변화: 2000-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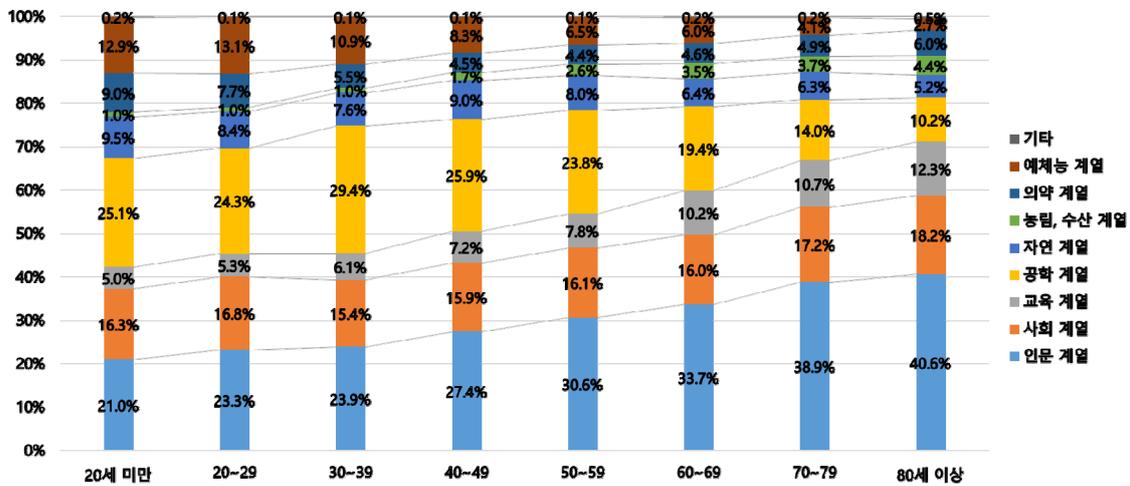
<그림 3-4> 성별 전공계열의 변화, 2000, 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사회, 자연, 농림 수산 계열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공학과 예체능 계열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공학계열의 비중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농림 수산과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2000년 대비 2015년 비중이 증가하였다. 여전히 인문 계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계열은 2000년 대비 2015년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성별 선호 전공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공학, 인문, 사회계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인문, 사회, 예체능, 교육 계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선호 전공의 차이는 지난 15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연령별 전공계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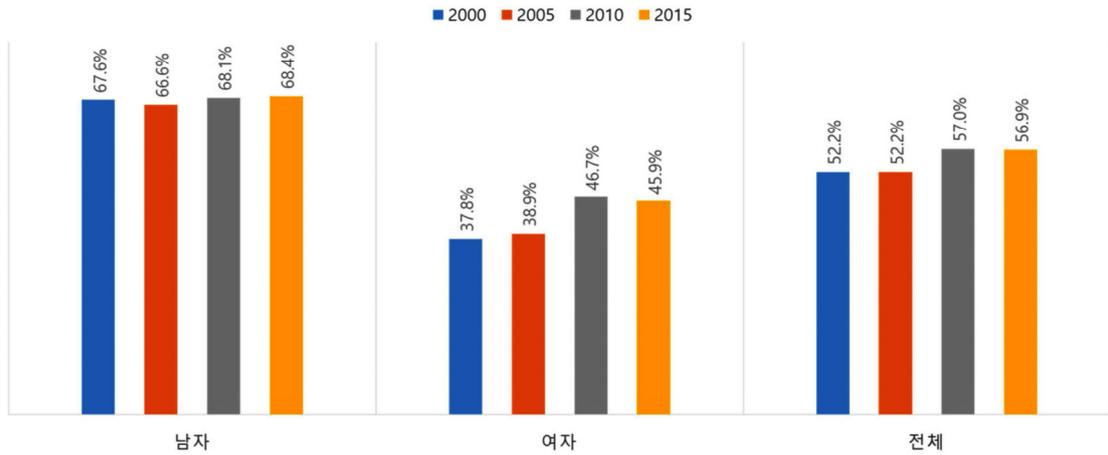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5>는 2015년 연령별 전공계열을 보여준다. 연령별 전공계열의 경우 2000년과 2015년 변화가 크지 않다. 전공계열의 비중은 연령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계열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인문, 사회, 교육, 농림수산 계열의 비중은 줄어든다. 시기에 따른 교육 환경과 노동시장의 전공 수요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 경제활동의 변화

성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취업자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2000년 37.8% 였던 취업자 비중이 2015년 45.9%까지 증가한다. 다만, 2010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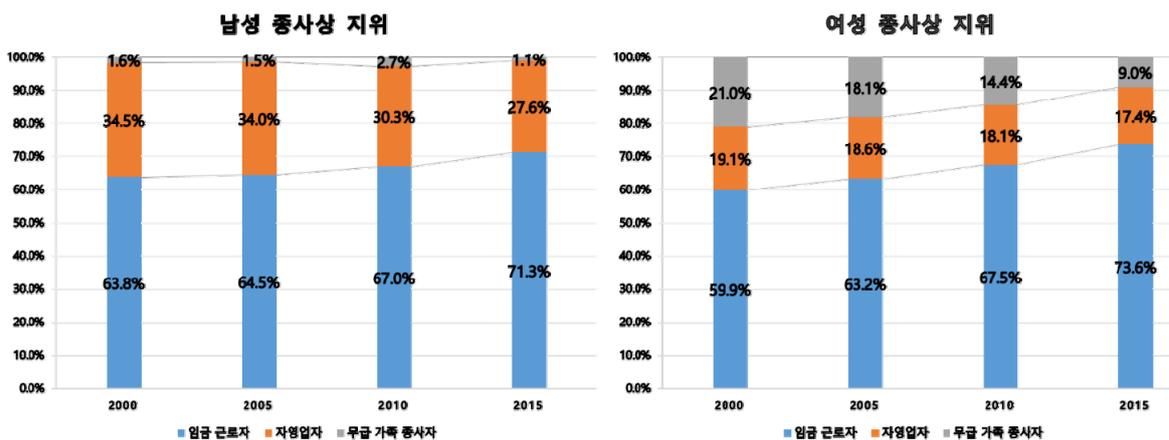
〈그림 3-6〉 성별 취업자 비중: 2000-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성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이 2000년 대비 2015년에 증가하였다. 남성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대비 2015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자영업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는데 반해 여성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성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림 3-7〉 성별 종사상 지위: 2000-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표 3-2>는 성별 직업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 등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사무직, 서비스직과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2010년 대비 2015년에 증가하였고, 관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은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 성별 직업구조의 변화: 2010-2015

직업	2010			직업	2015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관리자	4.0	1.0	2.7	관리자	2.1	0.7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8	20.9	19.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3	24.7	21.0
사무 종사자	15.1	17.0	15.9	사무 종사자	16.1	19.2	17.4
서비스 종사자	5.7	15.5	9.8	서비스 종사자	6.7	16.1	10.6
판매 종사자	10.2	14.5	12.0	판매 종사자	10.4	13.9	1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2	10.0	8.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8	5.4	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4	3.6	8.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2	3.6	9.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9	4.9	11.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8	5.3	12.0
단순노무 종사자	9.0	12.6	10.5	단순노무 종사자	10.8	11.0	10.9
기타	0.7	0.0	0.4	기타	0.8	0.0	0.5
전체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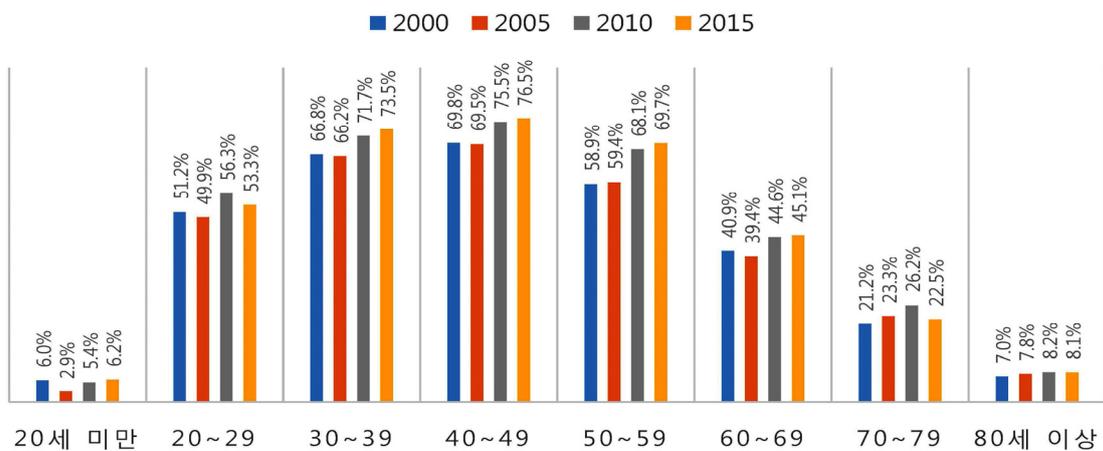
<표 3-3>은 직업별 남녀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서 2010년 대비 2015년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 종사직, 판매 종사직, 농림어업, 단순노무 종사직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관리직이나 전문가, 사무 종사자 등 좋은 직업에서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직업별 남녀 비중의 변화: 2010-2015

직업	2010			직업	2015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관리자	85.0	15.0	100.0	관리자	80.7	19.3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6	46.4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3	48.7	100.0
사무 종사자	54.8	45.2	100.0	사무 종사자	54.4	45.6	100.0
서비스 종사자	33.3	66.7	100.0	서비스 종사자	37.3	62.7	100.0
판매 종사자	48.9	51.1	100.0	판매 종사자	51.7	48.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2.7	47.3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5.6	44.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2.3	17.7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3.7	16.3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2.4	17.6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9	18.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49.3	50.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58.1	41.9	100.0
기타	96.7	3.3	100.0	기타	95.7	4.3	100.0
전체	57.6	42.4	100.0	전체	58.7	41.3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8> 연령별 취업자 비중: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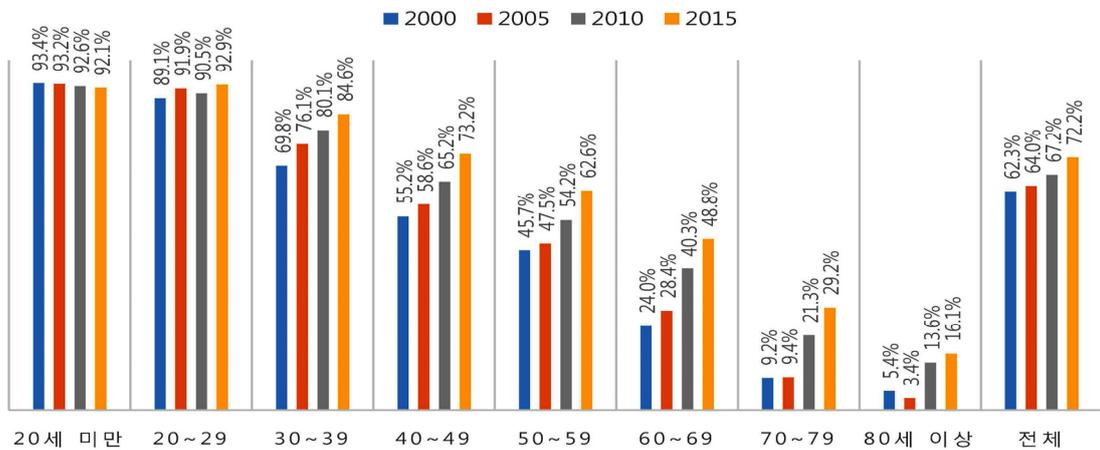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연령별 취업자 비중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2000년 대비 2015년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기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취업자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2010년 대비 2015년의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거나 연령대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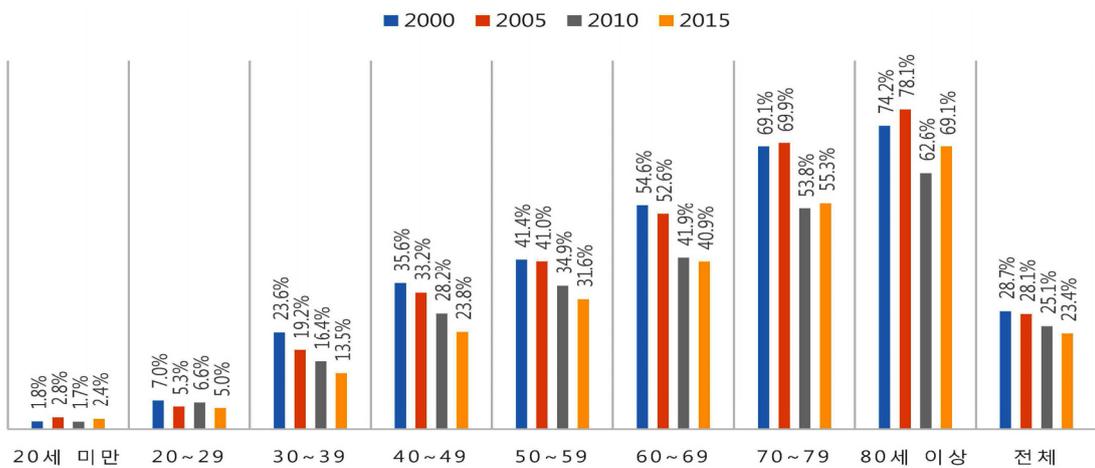
<그림 3-9>와 <그림 3-10>은 연령별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와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 연령별 종사상 지위는 <부록 표 3-1>에 제시한다. 연령별 종사상 지위의 특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진다는 점이다. 연령별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층(60세 이상)에서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2000년 대비 2015년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고령층(60세 이상)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에 자영업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 연령별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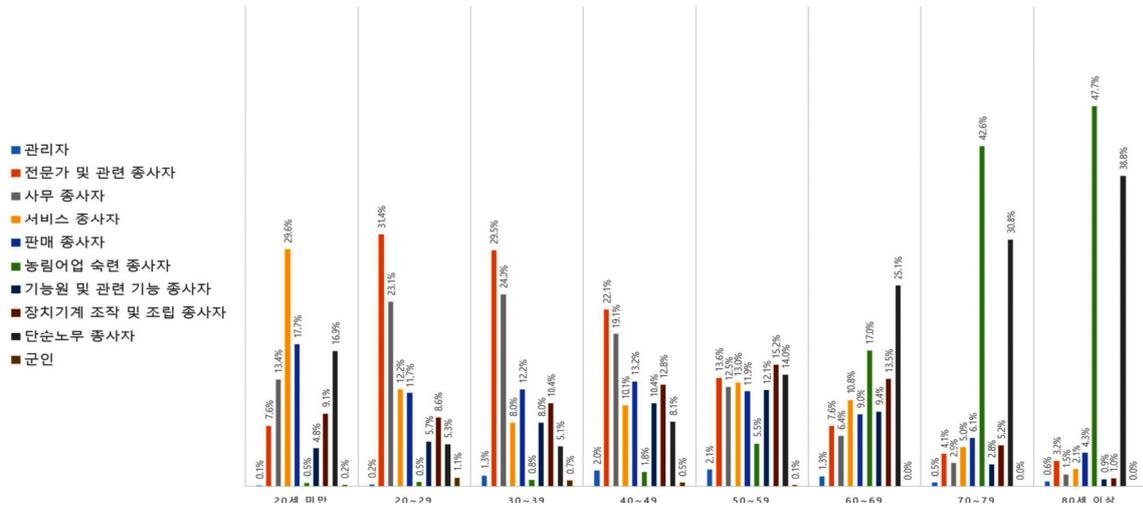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10>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변화: 2000-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11〉 연령별 직업구조, 201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11〉는 2015년 연령별 직업구조를 보여준다. 20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반해, 20-40대까지는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50대는 일종의 조정기로서, 직업 비중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농림어업과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대비 2015년의 직업구조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변화의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 (부록 표 3-2, 3-3 참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농림어업 관련직이 감소하고 서비스,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직 등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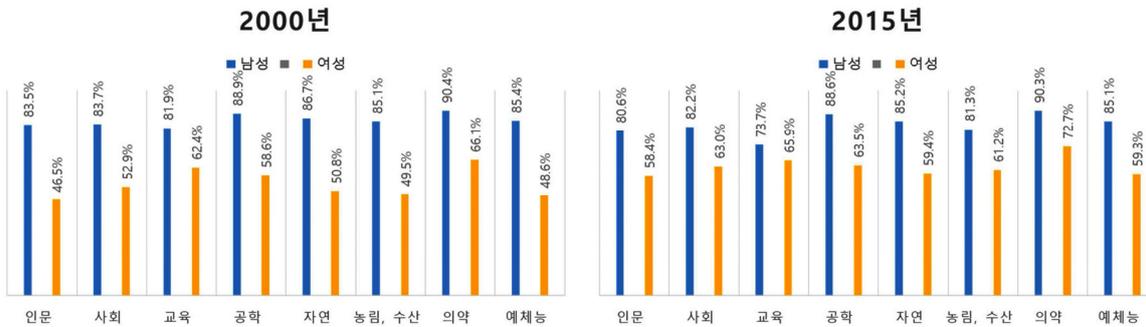
2.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

이 장에서는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첫 번째 주제는 전공계열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이다. 보통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에 남성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은 여성의 집중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는 이러한 전공 계열의 성별 격차가 노동시장의 STEM 전공에 대한 선호로 인해 남녀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Xie · Fang · and Shauman, 2015). 본 장에서는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를 취업자 비중, 종사상 지위, 직업구조 등을 통해서 살펴본다.

1) 전공계열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200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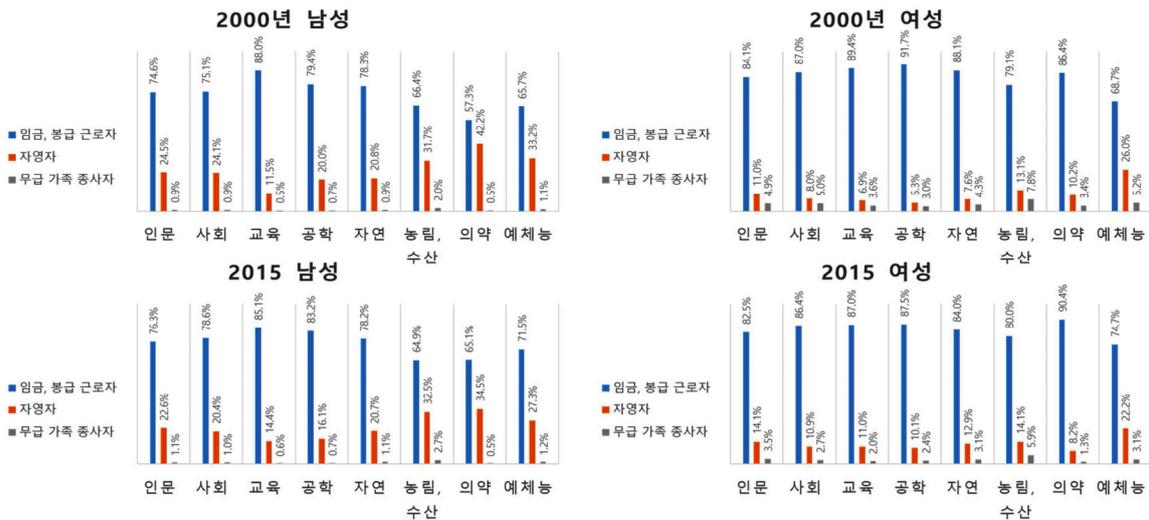
<그림 3-12>는 전공계열별 취업자 비중을 보여준다. 모든 전공에서 남성의 취업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의약과 교육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00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교육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변화폭이 크지 않다. 반면, 여성은 모든 전공계열에서 취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전공계열에서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전반적인 여성 취업률 증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12> 대학 전공계열별 취업자 비중: 2000, 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13> 대학 전공계열별 종사상 지위: 200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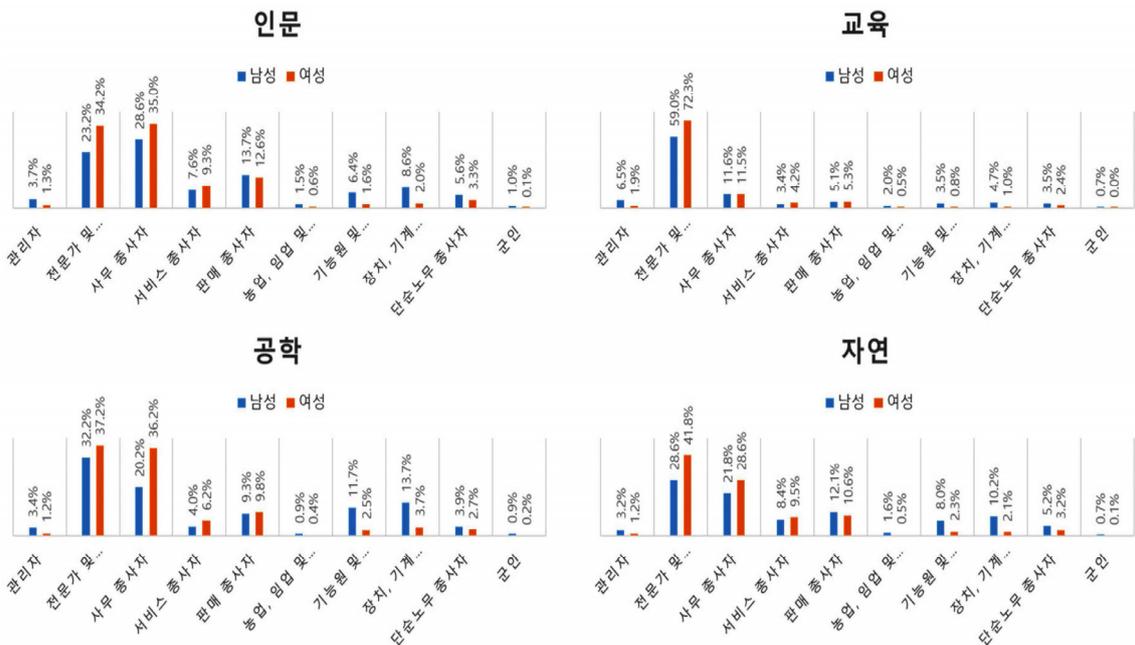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대학 전공 계열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여성은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모든 전공계열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남녀 공통적으로 교육과 공학계열임을 알 수 있다. 의약계열의 경우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인데 반해 여성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으로 확인된다.

<그림 3-14>은 주요 전공의 직업구조를 보여준다. 대학 전공별 직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교육계열의 경우 전문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직업군의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인문, 사회, 자연, 농림수산 계열 등의 전공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학계열의 경우 전문가, 사무종사자 외에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등 공학 관련 직업의 비중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전공과 직업간의 일치 여부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한계상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렵다. 다만,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가 비교적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라고 가정한다면, 공학, 교육, 의약 계열의 전공 일치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농림 수산 등은 상대적으로 전공과 직업간의 일치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남녀

<그림 3-14> 대학 전공계열별 직업 구조: 200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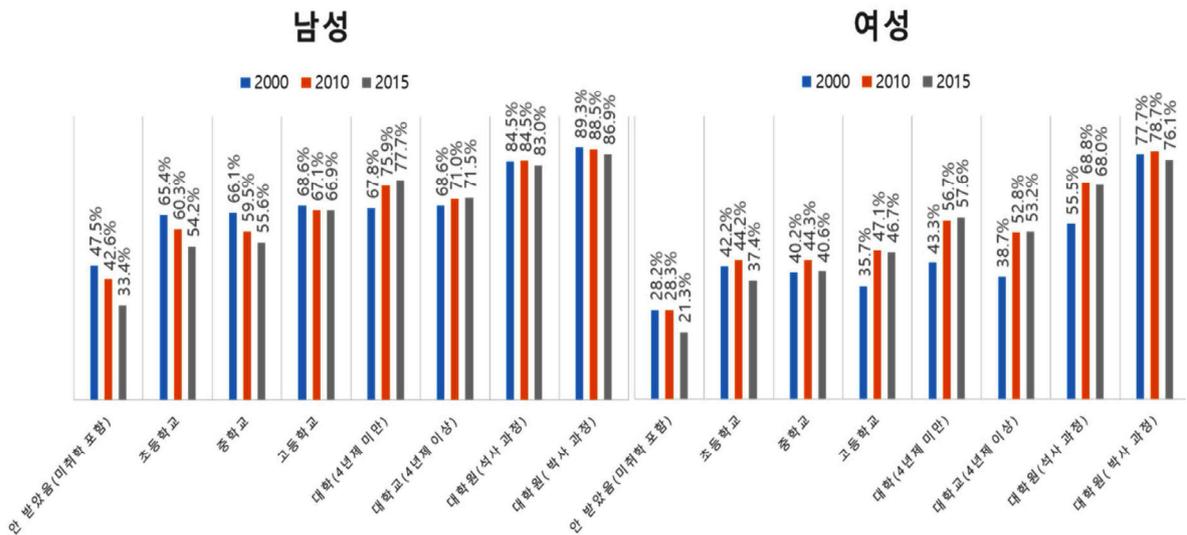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전공에서 여성의 전문가, 사무 종사자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전반적인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대학 졸업 여성의 직업군이 한정적임을 보여준다. 남성들이 진입하는 기능원, 장치기계 관리자, 단순노무직 등에 거의 취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와 사무종사자를 제외하면, 대졸 여성들이 진입하는 직업군은 서비스직과 판매직에 한정되고 있다.

2)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2000 - 2015)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연구 주제는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의 종단적 변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경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전반적인 고학력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을 ·김두섭, 2016:43). 또한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양상을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한다. 특히 본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과잉학력화 양상이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수요와 공급 관계로 해석한다면, 교육수준의 팽창에 따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준(공급)을 초과할 때 노동시장의 과잉학력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15년간의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그림 3-15> 교육수준별 취업여부: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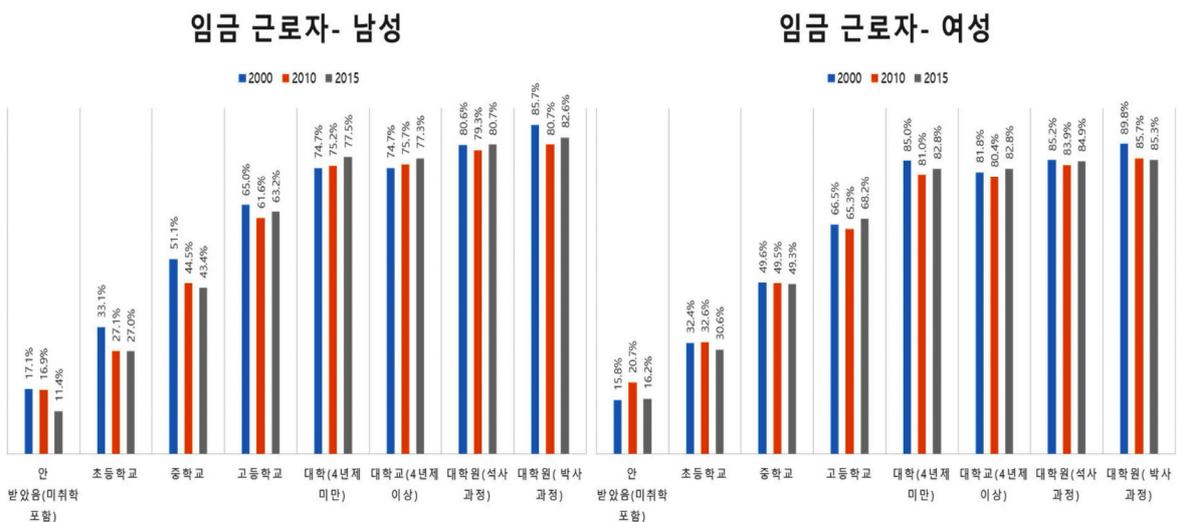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과잉학력화 현상을 확인해 보려 한다.

<그림 3-15>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수준별 취업여부를 보여준다. 2005년의 경우 교육 변수에서 대학교 2년제와 대학원 과정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남성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은 2000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2년제를 포함한 대학교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자 비중이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기 보다는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해서 독립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수준에서 2000년 대비 2010년 취업자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나, 2010년 대비 2015년 취업자 비중은 대학교를 제외하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여성 취업의 증가 추세가 (그림 3-6 참조) 교육수준별 취업자 비중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에 하락한 전체 취업자 비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육수준에서 2015년 취업자 감소 추세가 확인된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유일하게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집단은 대학교이다. 남녀 모두 대학교의 취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 중 종사상 지위를 교육수준별로 확인해보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대학교 (2년제 포함)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나 변화폭이 크지 않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 수준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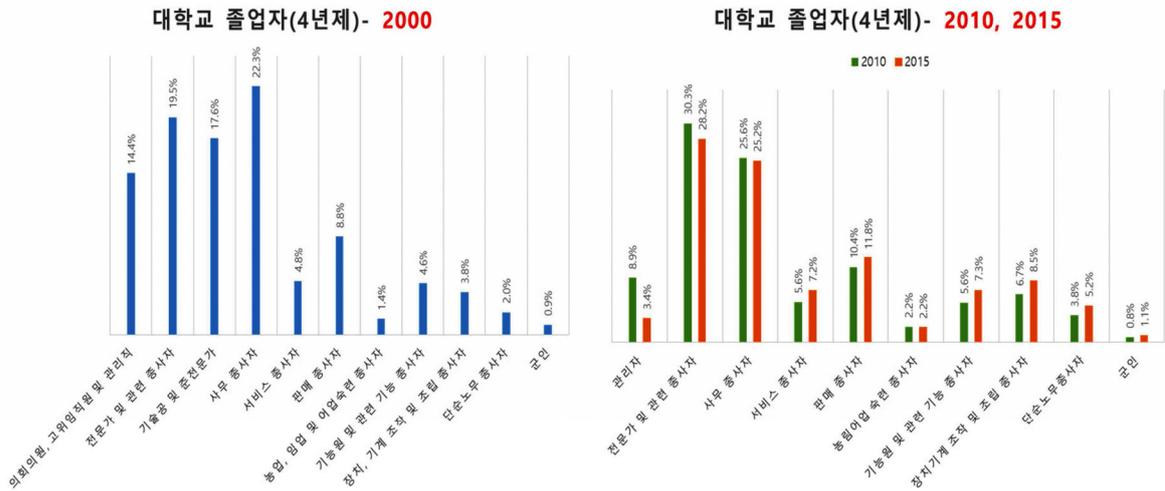
<그림 3-16>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 2000-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나, 실제 변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남녀 모두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는 2000년 대비 2015년의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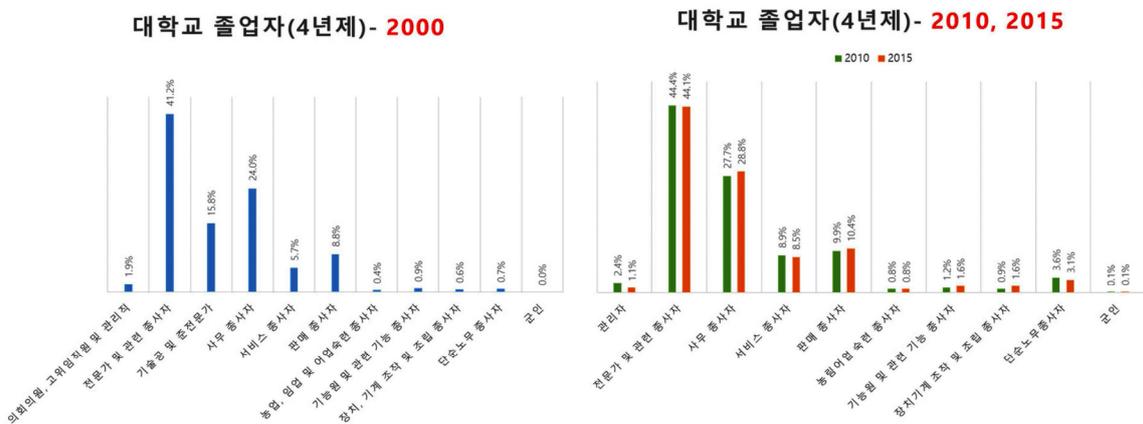
<그림 3-17> 남성 교육수준별 직업구조: 2000-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17> 은 남성 대학교 교육수준의 직업구조를 보여준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된 직업구분이 2010년 이후 조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이나 2015년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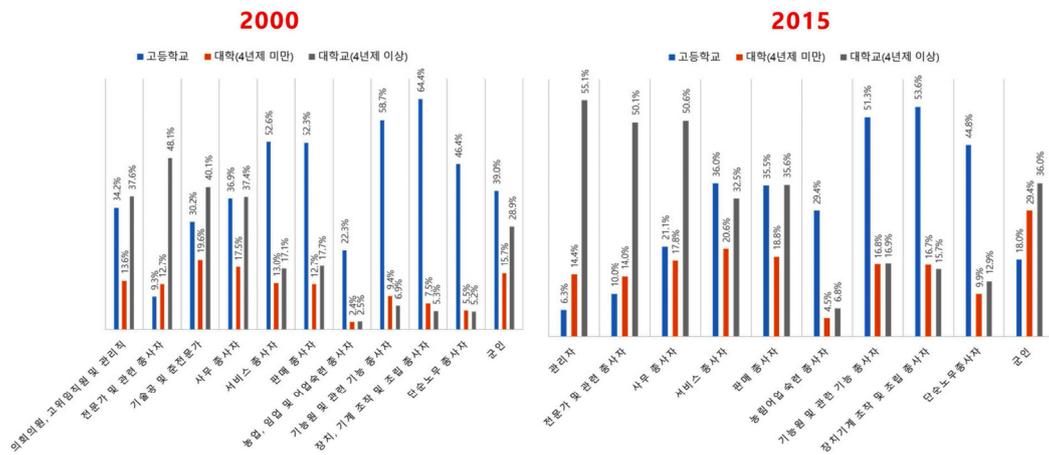
<그림 3-18> 여성 교육수준별 직업구조: 2000-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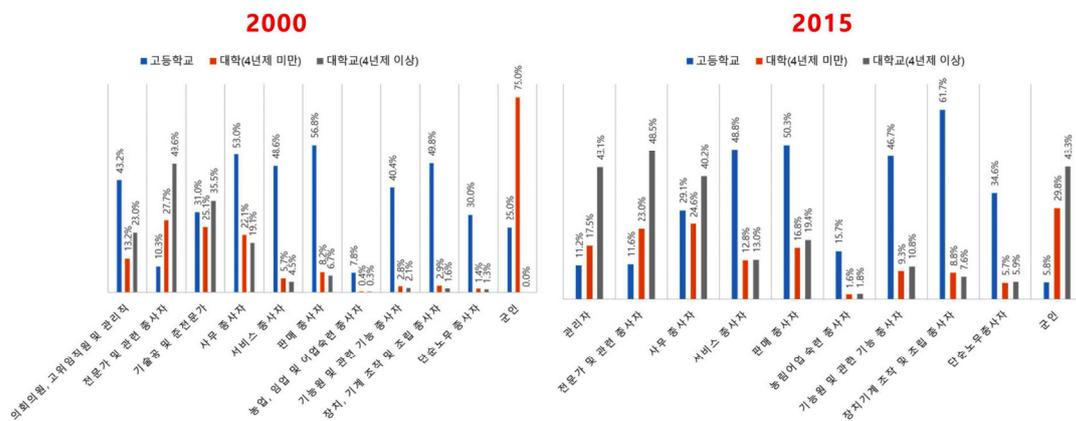
여성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직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졸자들의 진입 직종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2년제 대학 졸업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팽창에 비해 이를 수용할 고학력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겨나는 과잉학력화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의 팽창에 따른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업별 교육수준의 변화를 <그림 3-19>와 <그림 3-20>에서 확인하여 보았다.

<그림 3-19> 남성 직업별 교육수준: 2000-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20> 여성 직업별 교육수준: 2000-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에서 고등학교 비중이 크게 줄고 대학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노무직 등 과거 낮은 교육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여성의 경우 역시 대부분의 직업에서 고학력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이상 교육수준이 거의 진입하지 않았던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직 등에서도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이후 계속된 고등 교육의 확장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이를 충분히 수용할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지 못함으로써 고학력자들이 이전에는 진입하지 않았던 종류의 일 자리에 빠른 속도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학력과잉화 현상이 2000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 니스(NEES) 족의 특성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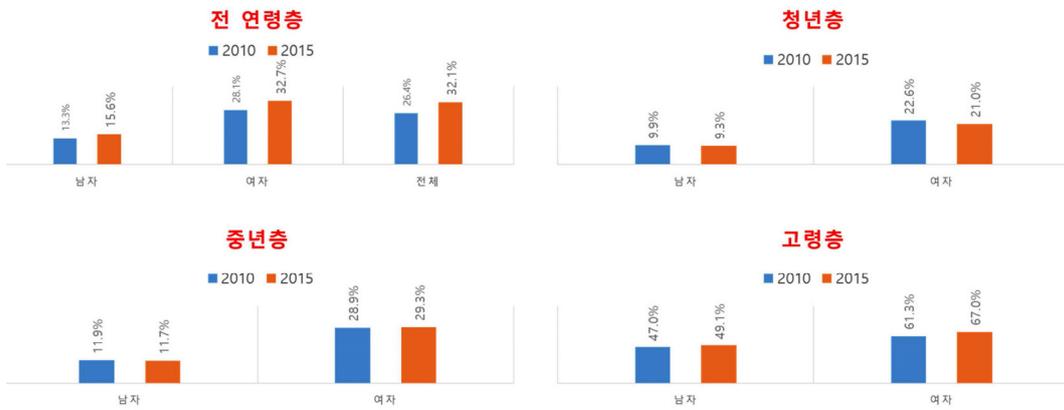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니스(NEES) 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니스 (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의 의미는 교육과 경제활동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위해 새롭게 정의한 용어이다. 보통 청년층을 대상으로 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모든 종류의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니스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니트족이 교육과 직업을 구해야 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니스족의 경우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이나 고령층에게도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니스족의 비중, 구조, 특징 등을 청년층(15-39), 중년층(40-64), 고령층(65+)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니스족의 비중변화와 지역분포를 살펴본 후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특성을 교육수준, 혼인, 가구유형, 출산경험, 도농분포, 생활비 원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1) 니스족의 비중 변화

2010년 대비 2015년 니스족의 비중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의 비중변화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고령층 여성의 비중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고령층 여성 중 61.3%였던 2010년 니스족 비중은 2015년에 67%까지 증가하고 있다. 남녀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니스족 비중이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인 취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교육과 사회활동으로부터의 소외에서도 여성층의 고립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니스족의 비중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은 청년층부터 중년층까지 약 10% 정도의 니스족 비중을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니스족 비중이 청년층 22%, 중년층에 다르면 약 29%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고령층에 오면 남성은 약 49%, 여성은 67%까지 니스족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니스족의 비중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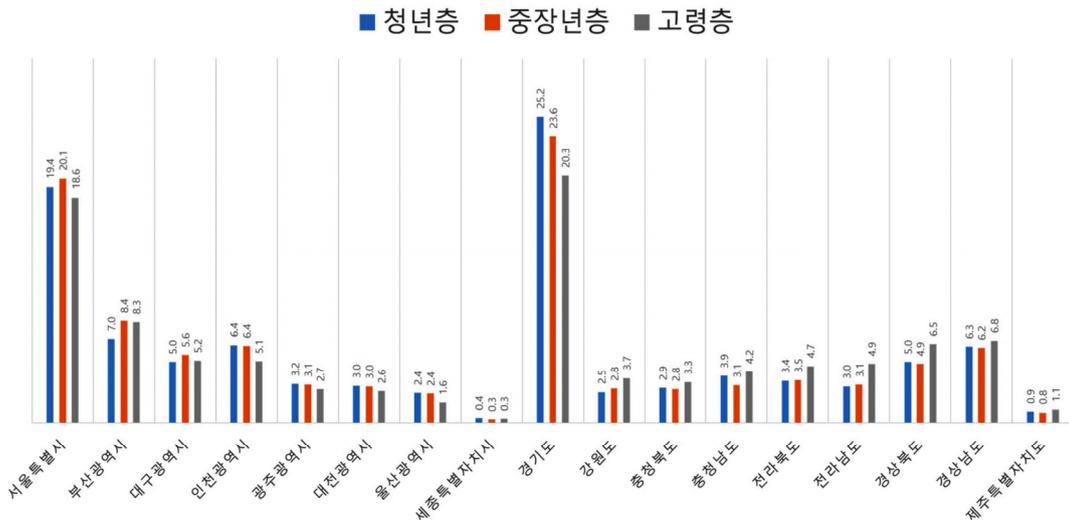
<그림 3-21> 니스족의 비중변화: 2010-2015



자료: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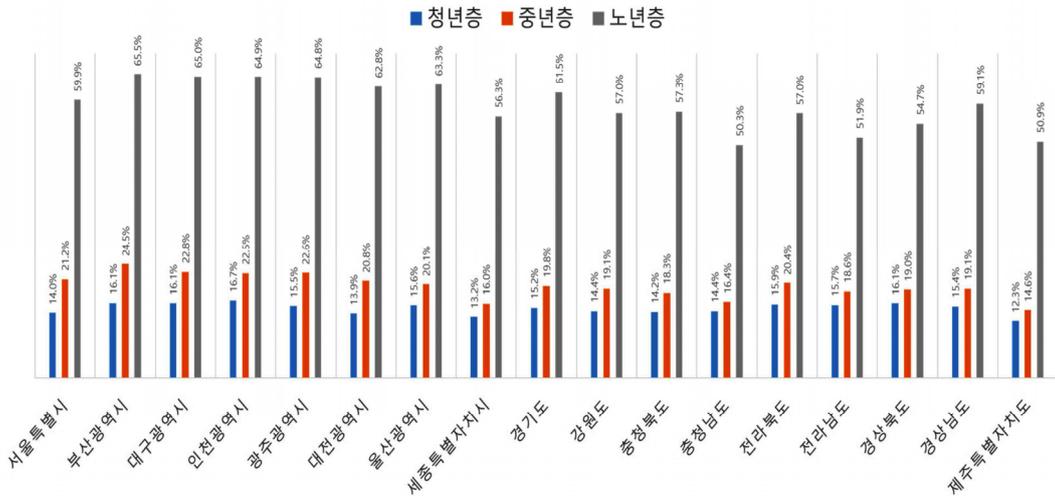
2) 니스족의 지역분포

<그림 3-22> 니스족의 지역분포: 2015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23> 각 지역 연령대별 니스족 비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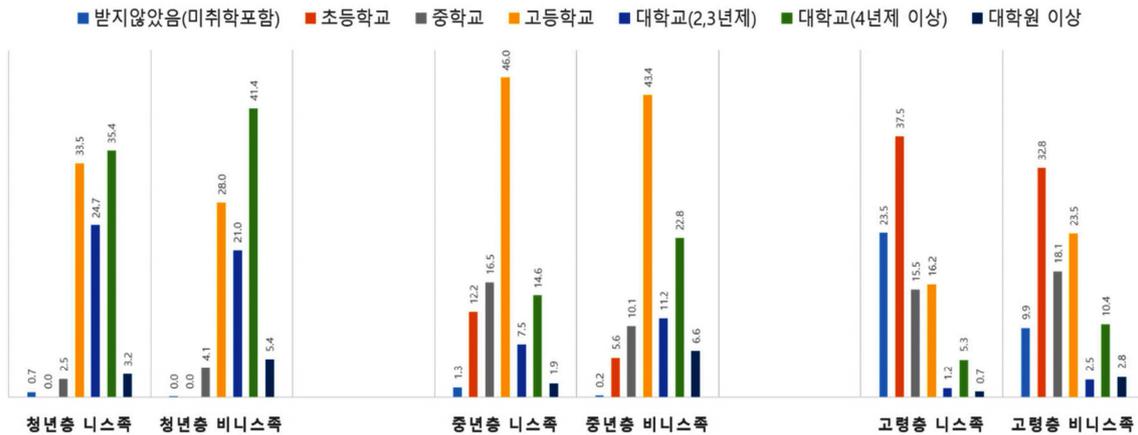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22>와 <그림 3-23>은 니스족의 지역분포와 각 지역 연령대별 니스족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니스족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니스족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40% 이상의 니스족이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 인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순으로 많은 수의 니스족이 분포되어 있다. 니스족의 지역 분포는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포 인구수와 독립적으로 지역별 니스족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 연령대별 니스족 비중을 확인하였다. <그림 3-23>의 각 지역 연령대별 니스족 비중은 앞 선 그림에서 나온 니스족 지역분포에 비해서 훨씬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 분포를 고려하면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니스족 비중이 모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고령층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지방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니스족 비중이 대략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지방의 니스족 비중은 최저 수치를 기록한 50.3%의 충청남도부터 59.1%의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경상남도까지 모두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년층 역시 고령층에 비해 차이가 크진 않으나 대도시 지역의 니스족 비중이 지방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가 더욱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니스족 비중이 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점은 도시환경이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주요 특성 비교

다음으로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3-24>는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교육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3-24> 니스족과 비니스족 특성비교 - 교육수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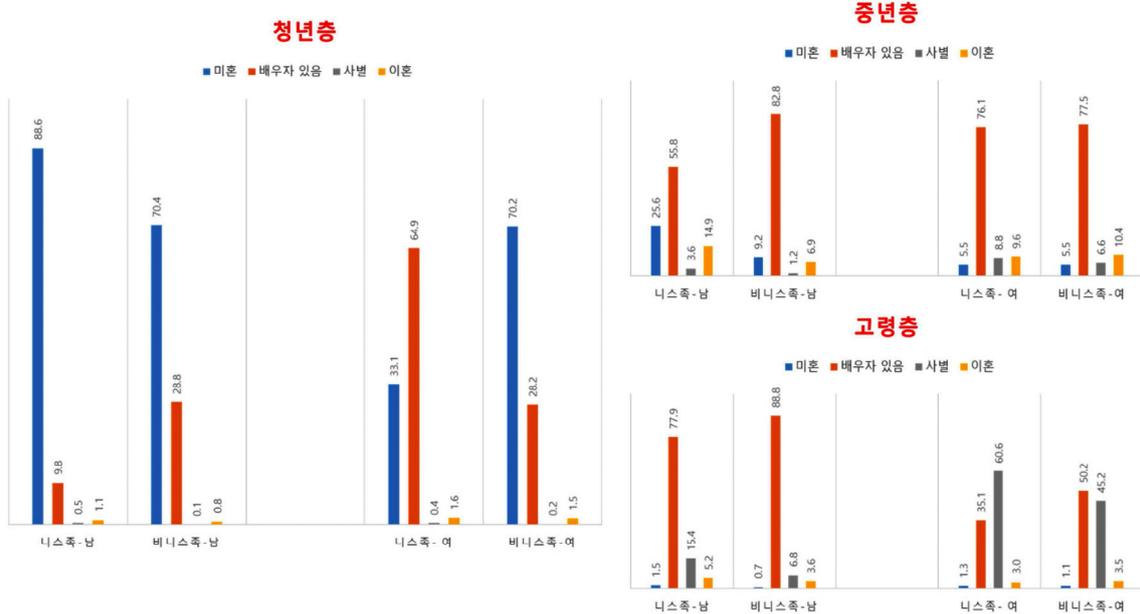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니스족은 비니스족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의 분포를 보여준다. 청년층 니스족의 경우 4년제 대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년층의 경우 고등학교, 고령층은 초등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교육수준 격차가 중년층 이상 남성에게서 여성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3-4 참조). 이는 중년층 이상 여성의 전반적 교육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교육수준의 분산이 작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혼인상태를 비교하였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 남성 니스족의 미혼자 비중이 남성 비니스족의 미혼자 비중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니스족의 유배우자 비율이 비니스족의 유배우자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층 남성의 경우 청년층 남성과 마찬가지로 비니스족의 유배우자 비율이 니스족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반해, 여성은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혼인 상태 구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우 남성은 비니스족의 유배우자 비중이 니스족의 유배우자 비중에 비해 높은데 반해 여성은 니스족의 사별자 비중이 비니스족의 사별자 비중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교차표를 바탕으로 한 기술 통계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엄밀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니스족과 혼인상태간의 관계는 어느 쪽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방향성 역시 명확하지 않다. 즉,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특성이 혼인상태에 영향을 미칠

<그림 3-25> 니스족과 비니스족 특성비교 - 혼인상태: 2015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수도 있으며, 반대로 혼인상태가 니스족과 비니스족이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 <표 3-4>는 혼인상태에 따른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표 3-4> 혼인상태에 따른 니스족 비중: 2015

	청년층 남성 니스족	청년층 여성 니스족	중년층 남성 니스족	중년층 여성 니스족	고령층 남성 니스족	고령층 여성 니스족
미혼	11.4%	11.2%	27.0%	29.2%	67.3%	70.1%
유배우	3.4%	38.0%	8.2%	28.9%	45.9%	58.7%
사별	47.1%	40.2%	29.2%	35.6%	68.6%	73.2%
이혼	13.2%	22.5%	22.2%	27.5%	57.9%	63.9%

주: 혼인상태에 따른 니스족 비중은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층 남성 미혼자 중 니스족 비중은 11.4% 인데 비해, 비니스족은 88.6%가 되는 것이다.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표 3-4>를 보면 청년층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의 니스족 비중이 미혼자나 사별, 이혼 등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년층 여성의 경우 반대로 유배우자의 니스족 비중이 미혼이나 이혼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여성은 미혼의 니스족 비중이 다른 결혼 상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년층 남성 역시 청년층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배우자의 니스족 비중이 다른 혼인상태의 니스족 비중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여성 니스족 비중은 미혼, 유배우, 이혼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표 3-4>의 결과는 가족 구성이 남녀에게 니스족 진입에 다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남성은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데 반해서 여성은 혼인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혼인의 역할은 남녀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 모두 유배우자의 니스족 비중이 미혼, 사별, 이혼 등에 비해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사별은 남녀 모두에게서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혼인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에게는 가족구성이 유지될 경우 비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비해서, 가족이 해체될 경우 남녀 모두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에게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유대 관계가 남녀 모두에게 사회적 활동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3-5> 가구유형에 따른 니스족 비중: 2015

가구유형	청년층 남성 니스족	청년층 여성 니스족	중년층 남성 니스족	중년층 여성 니스족	고령층 남성 니스족	고령층 여성 니스족
1세대 가구	7.2%	24.8%	13.7%	32.4%	45.1%	56.8%
2세대 가구	10.1%	22.6%	9.4%	28.1%	48.1%	69.4%
3세대 가구	9.7%	21.8%	11.3%	30.0%	57.2%	73.5%
4세대 이상	9.2%	32.4%	11.1%	30.1%	50.0%	81.8%
1인 가구	9.1%	12.5%	19.3%	29.2%	59.1%	67.8%

주: 가구유형에 따른 니스족 비중은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층 남성 1세대 가구 중 니스족 비중은 7.2% 인데 비해, 비니스족은 92.8%가 되는 것이다. 니스족/비니스족 구분에 따른 가구 유형 비중은 부록 3-5 에 제시하였다.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표 3-5>는 가구 유형에 따른 니스족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청년층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가구들에 비해 니스족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니스족 비중은 4세대 가구를 제외하면 니스족 비중이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선 혼인유형에 따른 차이와 비슷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남성의 경우 혼인을 통한 가구의 구성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비해 여성은 오히려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세대와 3세대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육아 부담이 일정 부분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은 2세대와 3세대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비슷하며, 1세대 가구에 비해서는 미세하게 낮게 나타난다. 남녀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구 유형은 1인가구이다. 남성은 1인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1세대 가구의 니스족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다른 유형들과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1인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다른 유형의 가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결혼 후 시부모와 동거 등 모든 종류의 가족 구성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중년층의 경우, 남성은 여전히 1인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나머지 가구유형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여전히 가구 구성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비니스족이 가구 구성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높지만 전반적으로 가구 유형에 따른 니스족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우 남성은 여전히 1인가구일 때 니스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역시 1인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1세대 가구에 비해서 높고, 2세대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녀 모두 가족 구성이 해체되는 것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고령층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3세대와 4세대 이상 가구의 니스족 비중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 고령층에게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3세대 가구의 경우 고령층 여성의 73.5%가 니스족이며, 4세대는 81.8%까지 니스족의 비중이 올라간다. 이러한 결과는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구성되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손자 양육 등의 가사일이 여성 고령층에게 집중됨으로써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3-6>은 출산경험에 따른 니스족 비중을 보여준다. 청년층은 중년층이나 고령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청년층 여성의 경우, 출산경험이 있을 경우 니스족의 비중이 출산 경험이 없을 경우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즉, 출산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혼인과 가구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출산은 사회적 생활로부터의 소외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년층 이상에서는 오히려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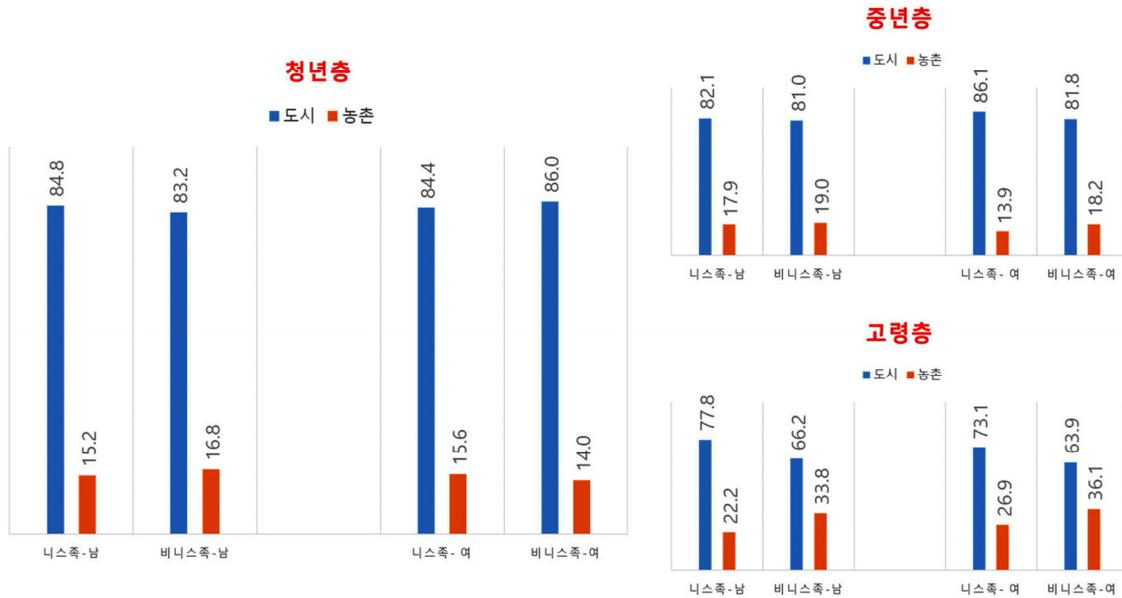
<표 3-6> 출산경험에 따른 니스족 비중: 2015

출산경험	청년층 여성 니스족	중년층 여성 니스족	고령층 여성 니스족
있음	40.3%	28.7%	58.5%
없음	28.6%	35.9%	70.7%

주: 출산경험에 따른 니스족 비중은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출산 경험이 있는 청년층 여성 중 니스족은 40.3%인데 비니스족은 59.7%이다. 이 표와는 반대로 니스족/비니스족 구분에 따른 출산경험 여부는 부록 3-6 에 제시하였다.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3-26〉 니스족과 비니스족 특성비교 - 도농여부: 2015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의 니스족 비중이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의 니스족 비중에 비해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시기와 선택편의의 효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청년층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의 위험(risk)에 노출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출산여부가 사회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중년층 이상의 여성들은 이미 일반적인 출산 시기가 대부분 지난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년층 이상의 여성들이 비교적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를 지나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까지 출산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은 출산여부 외에도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의 니스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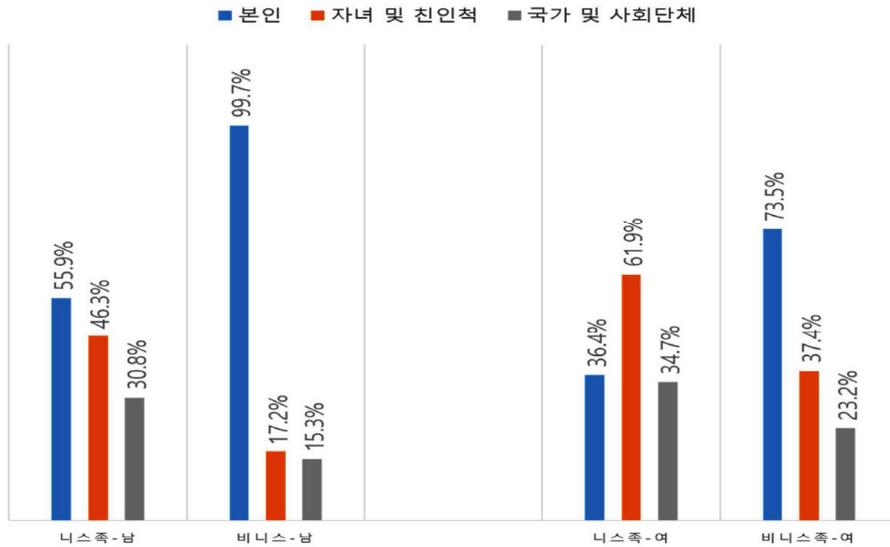
〈그림 3-26〉는 니스족과 비니스족에 따른 도농 분포를 보여준다. 청년층 남녀와 중년층 남성의 경우 니스족과 비니스족에 따른 도농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년층 여성과 고령층 남녀는 니스족의 도시 비중이 비니스족의 도시 비중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실제 도시와 농촌의 환경에 따른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농에 따른 니스족 비중을 <표 3-7>에 제시한다.

<표 3-7>도 앞선 그림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청년층 남녀와 중년층 남성에서는 도농 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중년층 여성과 고령층 남녀에서는 모두 도시의 니스족 비중이 농촌의 니스족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경우 도시 환경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가

농촌에 비해 다양하고 풍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 환경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예상 밖이라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제도적 환경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림 3-27>은 고령층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생활비 원천을 보여준다. 남성 비니스족의 경우

<그림 3-27> 니스족과 비니스족 특성비교 - 생활비 원천: 2015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대다수가 본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 니스족은 본인 소득의 비중이 비니스족에 비해 현격하게 낮으며, 공적, 사적 부조에 대한 의존 역시 비니스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니스족의 사적 부조에 대한 의존성이 남성에게 비해서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고령층에 한정된 결과이긴 하지만, 니스족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비니스족에 비해 열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표 3-7> 도농여부에 따른 니스족 비중: 2015

지역	청년층 남성 니스족	청년층 여성 니스족	중년층 남성 니스족	중년층 여성 니스족	고령층 남성 니스족	고령층 여성 니스족
도시	9.5%	20.7%	11.8%	30.3%	53.2%	70.0%
농촌	8.5%	22.9%	11.1%	24.1%	38.8%	60.2%

주: 도농 여부에 따른 니스족 비중은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남성 중 니스족은 9.5%인데 비니스족은 90.5%이다. 도시는 동 지역이며 농촌은 읍면 지역을 의미한다.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교육 및 경제활동 상태를 세 가지 연구주제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각 연구 주제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2000년 이후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 전공계열의 경우 남성은 공학계열, 여성은 인문계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지난 15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비중이 더욱 높아진 반면, 여성은 사회계열의 비중이 가장 크게 높아졌다. 연령별 전공 구조의 경우, 2000년과 2015년의 변화폭은 크지 않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인문, 사회, 교육, 농림수산 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공학, 의학, 자연, 예체능 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남성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감소가 임금근로자의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빠른 감소가 임금근로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구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능직, 장치기계, 관리자 등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사무직,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전공계열과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계열에 따른 경제활동을 요약하면, 모든 전공에서 남성의 취업자 비중은 여성의 취업자 비중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남성은 공학과 의약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의약과 교육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전공계열별 취업자 비중은 2000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대부분의 전공에서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남녀 공통적으로 공학과 교육계열이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교육, 의약, 공학 등과 같이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전공들에 비해 인문, 사회, 자연계열등의 경우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타 전공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학 이상 여성의 직업군은 남성에 비해 한정적이며 대부분의 여성이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해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하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데 비해 대학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직업구조의 변화는, 남성의 경우 관리자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 역시 대학교의 경우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직업별 교육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직종에서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대졸자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다양한 직종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연구 주제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다룬 니스 (NEES) 족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니스족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니스족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에서 니스족의 분포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스족은 비즈니스족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으며 고령층의 경우 비즈니스족에 비해 사적, 공적 부조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니스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니스족의 혼인상태와 가구유형 분석을 살펴보면, 청장년층 남성과 여성은 혼인이나 가구 유형에 따른 니스족 비중에서 상반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혼인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여성은 혼인이나 2세대, 3세대 가구 구성이 오히려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남녀 모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에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가족 유대감이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세 가지 연구주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descriptive)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활용 가능한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 엄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교육과 경제활동 구조 변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최을 · 김두섭 (2016)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43-49.
2. Xie, Y., Fang, M. and Shauman, K. (2015) “STEM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19): 1-27.

제4장 고령사회의 명(明)과 암(暗)

전 지원 | 옥스퍼드대학교

I. 서론

2006년, 공익광고협의회에서는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라는 제목의 지하철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은 해보셨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라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보셨나요? 2004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50년 노인인구비율이 37.3%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자료: 공익광고협의회(2006)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상상속의 미래로 여겨졌던 고령사회는 현실로 다가왔다. 2000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통계청, 2017).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데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그리고 일본은 24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표 4-1>에서도 드러나듯 인구 고령화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문제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 산업, 돌봄, 의료, 주택, 연금,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는 사회 각 영역의 시스템과 자원을 빠르게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담론에 비해 실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갖는 함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젊은 인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령화가 실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왜 시급하며 향후 고령사회에서 자원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특성은 어떠한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 4-1> 몇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국가	2015	2030
일본	26.4	30.7
독일	21.4	28.2
이탈리아	21.7	26.8
한국	13.0	23.4
프랑스	18.7	23.2
스위스	18.2	21.9
영국	18.1	21.7
미국	14.7	20.1
호주	15.0	19.2
중국	9.5	16.2

자료: Financial Times (2017)

본 장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고령층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5년 65세 이상 고령층이 속한 가구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 한국의 고령층이 어떤 가구 형태로 살고 있으며,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러한 가구 유형이 향후 돌봄 수요/공급 등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어 2005년과 2015년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층의 프로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이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가구, 손자녀와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

구,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제약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분포와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사회를 맞아 특히 어느 부분에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 자료를 사용했으며, 2005년과의 비교시에만 2% 표본 자료를 사용했다.

II. 본론

1. 고령자가구의 유형 및 특성

1) 고령자 가구의 유형 및 분포

통계청(2017)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여기서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구주라는 것은, 연령과 위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구 내 단순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주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한 ‘부양 대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05년 9.5%에서 2015년 13.3%로 3.8% 포인트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는 2005년 전체 가구의 15.3%에서 2015년 21.6%로 6.3% 포인트 증가했다¹⁾.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는 2005년 6.4%에 비해 5.0%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부양 대상’으로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고령층은 약간 줄어든 반면, 가구주로서의 고령층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령자 가구의 유형 및 고령자 가구주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령자 가구의 증가가 고령사회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여부별 가구 분포,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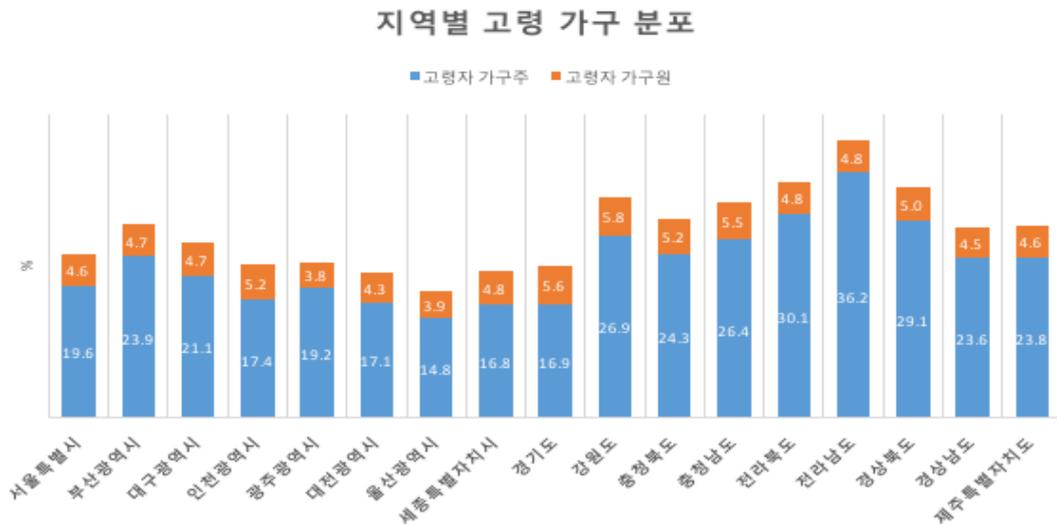
가구유형	가구수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가구	4,118,781	21.6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원인 가구	945,375	5.0
65세 이상 고령자 비포함 가구	14,047,575	73.5
전체	19,111,731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1)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기준에 따라 ‘일반가구’로 분류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등 제외).

<그림 4-1>은 지역별 고령자 가구주 가구 및 고령자 가구원 가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으며, 전북, 경북, 강원, 충남이 뒤를 이었다(부표 4-1). 다만 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재의 비중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005년에 비해 각각 8% 포인트, 9% 포인트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고령자가 가구원인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었으며, 경기, 충남,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를 포함하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대전, 세종,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가 고령가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4-1> 지역별 고령 가구 분포,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실제 65세 이상 고령층이 누구와 함께 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고령 가구를 가구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했다(표 4-3). 가구 유형은 1인가구, 부부로 구성된 부부가구,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고령자와 기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고령자, 기혼 자녀, 그리고 손자녀 3세대로 구성된 가구,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구, 그리고 기타 친인척이 함께 포함된 확대가족과 비친족가구로 나누어 살펴봤다. 특히 고령자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와 고령자와 기혼자녀/혹은 기혼자녀,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를 구분해서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했다.

<표 4-3> 고령가구 가구 유형별 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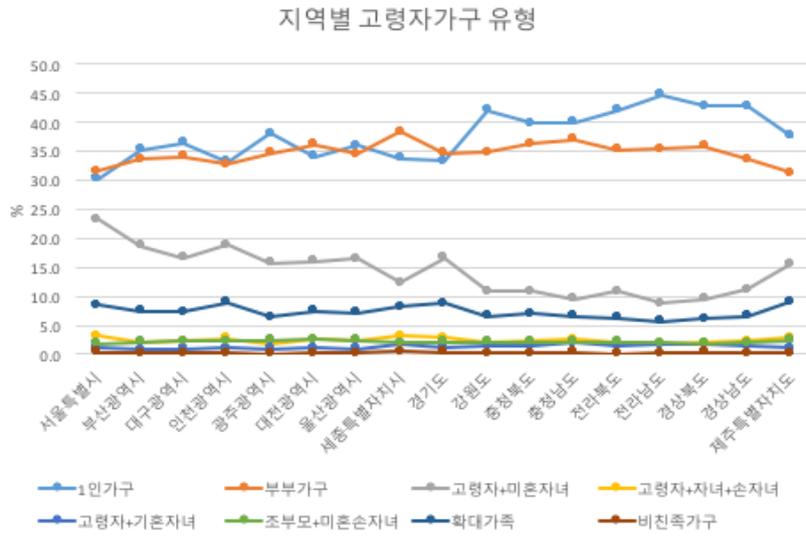
	고령자 가구주	고령자 가구원
1인가구	1,513,738 (36.8%)	0 (0.0%)
부부가구	1,406,872 (34.2%)	34,054 (3.6%)
고령자+미혼자녀	638,201 (15.5%)	165,191 (17.5%)
고령자+자녀+손자녀	102,842 (2.5%)	365,991 (38.7%)
고령자+기혼자녀	52,185 (1.3%)	102,312 (10.8%)
조부모+미혼손자녀	86,433 (2.1%)	7,563 (0.8%)
확대가족(기타친인척)	307,405 (7.5%)	265,085 (28.0%)
비친족가구	11,105 (0.3%)	5,179 (0.6%)
전체	4,118,781 (100.0%)	945,375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표 4-3>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경우, 1인가구와 부부 가구가 각각 36.8%와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5.5%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혼인연령의 증가 및 이혼 등의 증가로 비혼이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가구주 중 자녀/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나, 기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각각 2.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가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인 경우가 비록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고령자가 가구원인 경우 중에서는 자녀/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고령자 자신이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손자녀 양육 등 돌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을 받을 필요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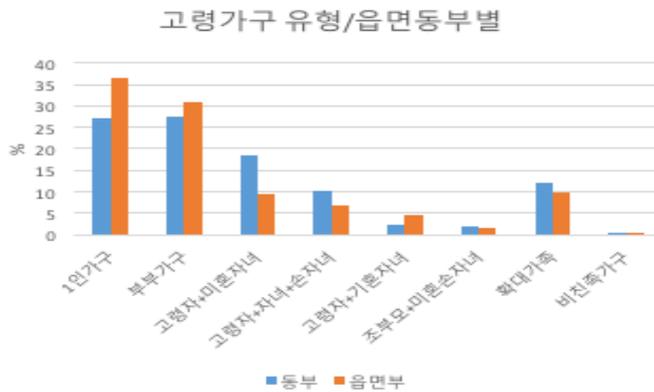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고령자 가구의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4-2). 전반적으로 전남, 경북, 경남, 전북, 강원 등 도 단위 지역(경기도 제외)의 경우 1인가구가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의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경우는 1인가구의 비중과 부부가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부표 4-2). 흥미로운 것은 서울, 부산, 인천 등의 경우 고령자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23%가 고령자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 미혼 자녀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거주하는 것인지, 왜 도시 지역에서의 비중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증가한 비혼/만혼 현상과 연관되어 앞으로 미혼자녀와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더 늘어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지역별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유형 분포 (%),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4-3> 고령가구 유형, 읍면동부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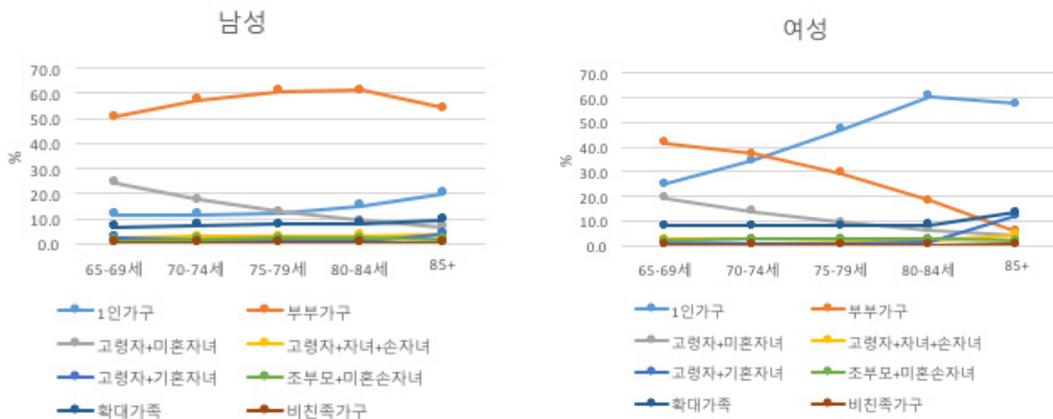
읍면동부별로 분석해 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그림 4-3).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서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고령자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과 고령자, 기혼자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동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고 초고령노인(85세 이상)이 증가할 것 등을 생각할 때, 혼자 거주하거나 부부

만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이 많은 읍면부에서의 돌봄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고령가구주의 특성

그렇다면 고령자 가구주 가구의 구성은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가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성별, 연령별로 분류해 분석해 보았다(그림 4-4).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부부가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비중이 1인가구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75세 이후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고령자 가구 유형 성별, 연령대별 비교,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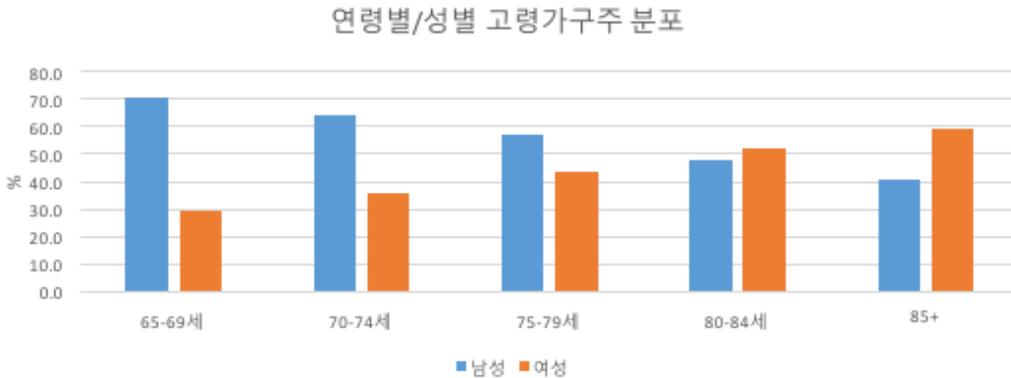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도 나타나는데, 남성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여성 가구주에 비해 높다가, 80대가 되면 여성 고령가구주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그림 4-5). 고령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72.5세, 여성이 74.9세로, 80대에 고령 가구주 성비가 역전되는 이유는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18.2년, 여자가 22.4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4.2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2017). 남성이 주로 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적 상황과 75세 이후 여성 1인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은 남성 배우자 사망 후 1인가구가 되어 가구주

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1인 고령 가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 및 돌봄 필요 등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의 여성 1인 고령 가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5> 연령별, 성별 고령 가구주 분포,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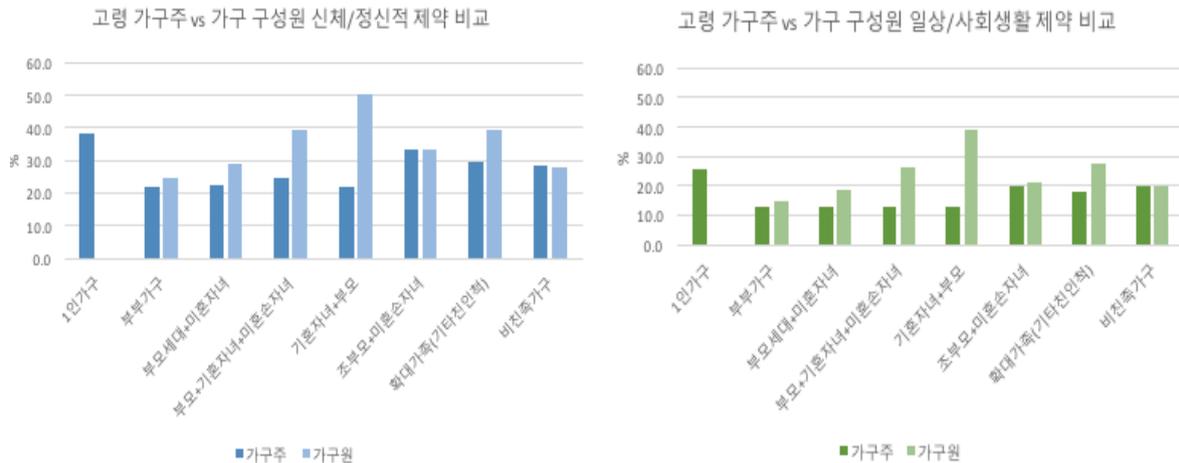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렇다면 고령 가구주의 건강은 어떨까? <그림 4-6>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신체/정신적 제약 항목 8개 및 일상/사회생활 제약 항목 4개에서 각각 하나 이상 제약이 있다고 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와 고령 가구원의 건강 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거의 모든 가구 유형에서, 고령 가구주에 비해 가구원이 신체/정신적 제약이나 일상/사회생활의 제약을 하나 이상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고령 가구주의 경우 제약을 겪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비 가구주 고령자의 경우에는 제약을 겪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고령 가구주의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비혼 등으로 자녀의 독립이 늦어져 함께 살 가능성이 높고, 가구원으로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돌봄 등 부양을 받기 위해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다만 자료 분석에서 드러나듯, 한국 고령층의 경우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신체/정신적, 일상/사회생활의 제약을 경험하는 비율이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가장 돌봄이 부족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겪는 비율 또한 높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1인가구를 구성하는 고령자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현재 중년 1인가구도 늘고 있다는 분석으로 미뤄 볼 때 (2장 가구 관련 분석 참조), 취약계층으로서의 1인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가구유형별 고령 가구주 대 가구원 건강 비교,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전체 인구 중 고령가구(고령자를 포함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특히 가구 형태 중 고령자가구(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자가 가구원으로서 젊은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줄어들었다. 고령자 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인 고령자에 비해 신체적 제약이나 일상 사회 생활의 제약을 덜 겪는 편으로, 고령자가구의 증가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활동의 제약을 겪는 것은 75세 이후이므로,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 부부가구 위주의 현재의 가구 구성은 고령층의 웰빙 및 돌봄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 개발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1인가구, 부부가구 위주의 고령자 가구 형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년의 비혼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비혼과 만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이 생겨날지, 앞으로 미혼 자녀와 거주하는 고령층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령층의 특성 및 변화: 2005년-2015년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도래와 고령층의 증가는 사실 흔히 생각하듯 ‘재앙’이라기보다는 개선된 건강과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누리게 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향후 인구 부양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 참여도 등이 개선된 측면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 보다는, 고령층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고령화 된 인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15년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층의 프로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그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돌봄 필요 등 실질적으로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고령자 취약계층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는 2장 가구 분석에서도 다루지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통계 (통계청, 2017)에서도 집중적으로 분석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65세 이상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노노(老老)가구와 조손가구, 그리고 건강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05년과 2015년 비교 연구에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을 사용했다.

1) 인구구성 및 성비 변화: 고령층의 증가 및 성비 완화

<표 4-4>는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2005년 9.5%였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15년 13.3%로 늘어났다. 참고로 0~9세의 경우, 2005년 12.3%에서 2015년 9.3%로, 10~17세의 경우 2005년 11.5%에서 2015년 8.5%로, 각각 3%포인트씩 감소해 지난 10년간 진행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4> 2005년, 201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비교

연령	2005	2015
65세 미만	40,920,235 (90.5%)	41,930,608 (86.7%)
65세 이상	4,295,369 (9.5%)	6,408,951 (13.3%)
전체	45,215,604 (100.0%)	48,339,559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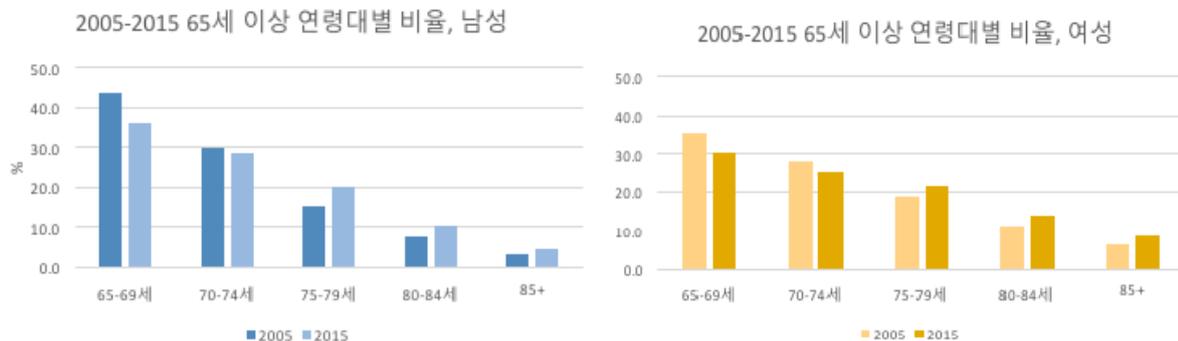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4-5, 그림 4-7). 2005년의 경우, 65-69세의 젊은 노인층이 남성의 경우 43.8%, 여성의 경우 35.4%였는데, 2015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36.3%, 30.2%로 감소했다. 반면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층인 85세 이상 인구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 2005년 3%에서 2015년 4.6%로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2005년 6.3%에서 2015년 8.7%로 증가했다.

<표 4-5> 65세 이상 연령대별 인구 비율 비교, 2005년, 2015년

연령	남성		여성	
	2005	2015	2005	2015
65-69 세	750,913	1,001,569	913,749	1,102,105
%	43.8	36.3	35.4	30.2
70-74 세	511,721	785,449	727,077	933,140
%	29.9	28.5	28.2	25.6
75-79 세	261,931	551,586	486,197	785,741
%	15.3	20.0	18.8	21.5
80-84 세	132,260	291,109	291,326	513,515
%	7.7	10.6	11.3	14.1
85+	56,413	127,879	163,782	316,858
%	3.3	4.6	6.3	8.7
전체	1,713,238	2,757,592	2,582,131	3,651,359
%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그림 4-7> 65세 이상 연령대별 비율, 2005년, 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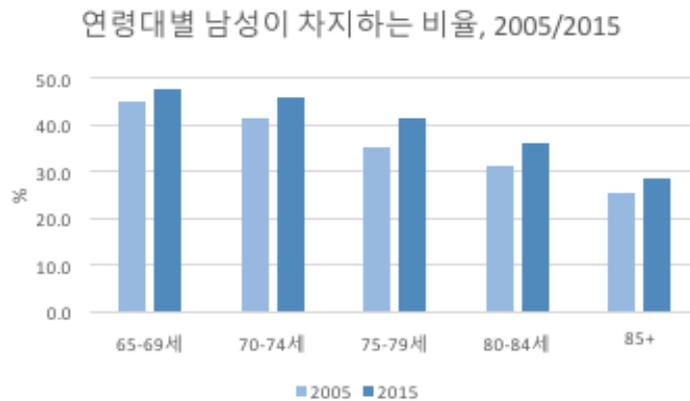
한편, 성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65세 이상 고령층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긴 하지만, 2005년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증가해 남녀 차이가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표 4-6, 그림 4-8). 200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이 39.9%, 여성이 60%로 성비에 큰 차이를 보였다면, 2015년에는 남성이 43%, 여성이 57%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70-74세가 4.4% 포인트, 75-79세가 6.2% 포인트, 80-84세가 5% 포인트 증가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의 남성 비중이 높아진 측면을 보여 남성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평균수명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6> 65세 이상 남녀 비율 비교, 2005년, 2015년

연도	남성	여성	전체
2005	1,713,238 (39.9%)	2,582,131 (60.1%)	4,295,369 (100.0%)
2015	2,757,592 (43.0%)	3,651,359 (57.0%)	6,408,951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그림 4-8> 연령대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비교, 2005년, 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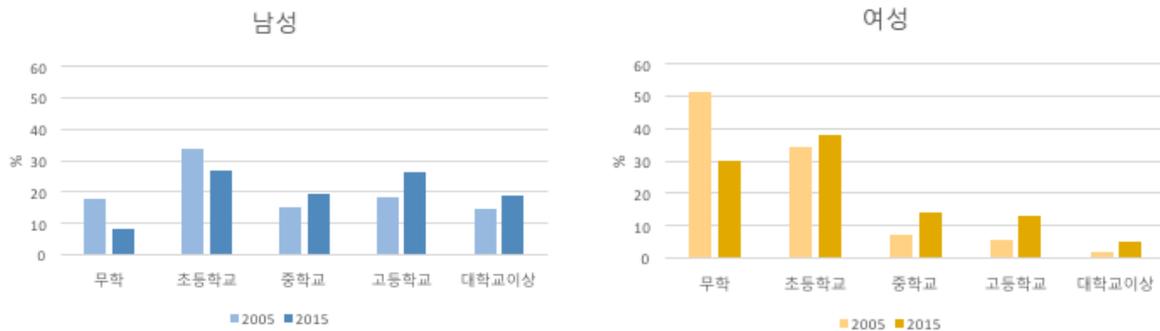
2) 교육수준의 향상

다음으로,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이기도 하지만,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년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관리에 유리한 경향이 있어 고령 인구의 특성을 파악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2005년에 비해 2015년 한국 고령층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그림 4-9, 표 4-7). 우선 남녀 모두 무학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5년 남성의 경우 무학의 비율이 17.8%에서 2015년 8.28%로, 여성의 경우 2005년 51.1%에서 30.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초등학교 학력자는 약간 감소한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가 모두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자가 모두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2015년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5.4%를 차지해,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지 않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65세 이상 여성 고

<그림 4-9> 65세 이상 고령층 교육 수준 비교, 2005년, 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표 4-7> 65세 이상 고령층 교육 수준 비교, 2005년, 2015년

교육수준	남성		여성	
	2005	2015	2005	2015
무학	304,882	228,298	1,319,567	1,103,576
%	17.8	8.3	51.1	30.2
초등학교	581,970	744,294	882,104	1,387,754
%	34.0	27.0	34.2	38.0
중학교	256,126	532,532	180,719	505,627
%	15.0	19.3	7.0	13.9
고등학교	317,008	727,651	149,147	474,897
%	18.5	26.4	5.8	13.0
대학교이상	253,252	524,817	50,594	179,505
%	14.8	19.0	2.0	4.9
전체	1,713,238	2,757,592	2,582,131	3,651,359
%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령층이 2005년 2%에서 2015년 5%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005년에는 고졸 이상이 7.7%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7.9%로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학력 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력 수준의 향상은 향후 한국 고령 사회의 관리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인력의 사회적 활용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이후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도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3) 혼인 상태의 변화: 유배우자 비율 증가

<그림 4-10>은 2005년과 201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혼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령대별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유배우자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유배우자 비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80-84세의 30%만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2015년에는 이 비율이 42%로 증가했다.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에도 유배우자의 비율이 2005년 18%에서 2015년 24%로 6% 포인트 늘어나 85세 이상의 4분의 1 가량이 여전히 부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2015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65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사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70대와 80대의 경우 10~15% 포인트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우

<그림 4-10> 65세 이상 고령 인구 혼인 상태 비교, 2005년, 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자가 있는 경우 사별한 경우에 비해 외로움 경감 및 돌봄 제공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미뤄볼 때 2005년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05년에 비해 2015년 이혼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6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1~4%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60-64세의 경우 2005년 1.6%만이 이혼했다고 응답한 데 비해 2015년 5.8%가 이혼했다고 응답, 향후 이혼한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혼(비혼)의 경우는 아직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최근의 경향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4) 건강상태의 개선: 건강한 고령층의 증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을 통해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언어장애, 4)치매, 5)뇌졸중(중풍), 6)걷기, 계단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육체적 제약, 7)지적, 자폐성 장애, 8)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등 8가지 제약 여부를 조사한다. 이에 더해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에서는 1)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2)웃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3)장보기(쇼핑), 병원 가기, 집 밖 돌아다니기 4)취업 활동 등 4가지 제약 여부를 파악한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육체적/정신적 상태 및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도움 필요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8>에서 보듯, 육체적/정신적 제약 영역과 일상생활/사회활동 제약 영역 모두에서 ‘제약 없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2005년 67.6%에 비해 2015년 6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하나 이상 육체적/정신적 제약을 겪는다는 비중은 2005년 9.1%에 비해 2015년 10.8%로

<표 4-8> 65세 이상 고령층 건강상태 비교, 육체/정신적 제약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여부,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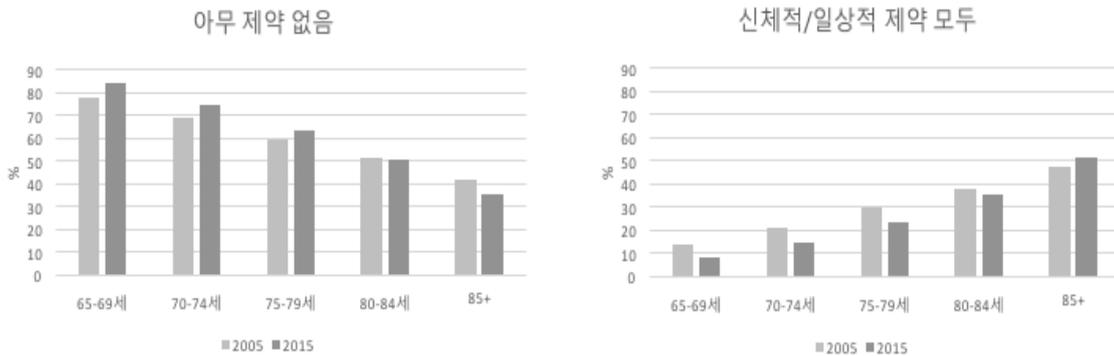
제약 정도	2005	2015
제약없음	2,904,124 (67.6%)	4,470,697 (69.8%)
신체적 제약만	390,504 (9.1%)	692,182 (10.8%)
일상생활제약만	20,719 (0.5%)	884 (0.0%)
신체적/일상적 제약 모두	980,022 (22.8%)	1,245,188 (19.4%)
전체	4,295,369 (100.0%)	6,408,951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증가했지만, 육체적/정신적 제약과 일상생활/사회활동 제약을 모두 경험한다는 비중은 2005년 22.8%에서 2015년 19.4%로 감소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1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약의 정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1>은 신체/정신적 제약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여부를 ‘아무 제약 없음’과 ‘신체적/일상적 제약 모두 경험’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80대 미만의 경우 2015년 모든 연령대에서 아무 제약이 없는, 즉 건강한 상태의 고령층이 2005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그 비

<그림 4-11> 신체/정신적 제약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여부 비교, 연령대별, 2005년, 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 4-9> 신체, 정신적 제약 및 일상, 사회활동 제약 여부 비교, 연령대별, 2005년, 2015년

제약 정도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2005	2015
제약없음	1,297,902	1,766,287	853,901	1,287,179	443,244	850,699	216,283	407,368	92,794	159,164
%	78.0	84.0	68.9	74.9	59.3	63.6	51.1	50.6	42.1	35.8
신체적 제약만	126,451	166,297	118,901	185,440	79,314	171,445	44,417	112,463	21,421	56,537
%	7.6	7.9	9.6	10.8	10.6	12.8	10.5	14.0	9.7	12.7
일상생활제약만	6,695	401	5,576	262	4,468	103	2,432	0	1,548	118
%	0.4	0.0	0.5	0.0	0.6	0.0	0.6	0.0	0.7	0.0
신체적/일상적 제약 모두	233,614	170,689	260,420	245,708	221,102	315,080	160,454	284,793	104,432	228,918
%	14.0	8.1	21.0	14.3	29.6	23.6	37.9	35.4	47.4	51.5
전체	1,664,662	2,103,674	1,238,798	1,718,589	748,128	1,337,327	423,586	804,624	220,195	444,73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율이 2005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됐다. 신체적, 일상적 제약을 모두 경험한 경우 역시 2015년에 2005년보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85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제약을 겪는 경우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최고령층을 제외하고 고령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65-79세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2005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5-69세, 70-74세의 경우 각각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 비해 6% 포인트씩 증가하고, 양쪽 모두 제약을 겪는 비율은 각각 5.9%, 6.7%씩 감소했다. 건강상의 제약이 노년의 독립성 확보와 삶의 질, 그리고 돌봄 수요와 연관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같은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고령층의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

앞 절의 분석에서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10년 전에 비해 교육수준 및 건강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고령층의 사회 참여도와 경제활동 여부,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어떨까? <표 4-10>은 2015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를 보여준다. 사회활동 참여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단체 또는 동호회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온라인 포함)'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결정된다. 본 장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05년에는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 참여도는 2015년, 20% 표본 데이터로만 분석했다. 2015년의 경우, 65-69세의 32.3%, 70-74세의 26.8%가 지난 1년동안 1회 이상 동호회 등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 비중은 80대로 갈수록 낮아졌다. 2005년과 비교가 어려워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단체나 동호회에 친목단체 및 온라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 회수가 연 1회임을 미뤄볼 때 개선된 건강 상태 등과 비교해 고령층의 사회 활동 참여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어떨까? 10년 전에 비해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나아졌으니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비율도 약간 늘어났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4-10> 65세 이상 고령층 사회 활동 참여 여부 (단체, 동호회 등), 2015년

활동 여부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활동 안함	1,436,201	1,282,796	1,047,769	654,077	421,743
%	67.7	73.2	78.7	84.3	89.8
활동함	683,968	468,917	283,817	121,503	48,011
%	32.3	26.8	21.3	15.7	10.2
전체	2,120,169	1,751,713	1,331,586	775,580	469,754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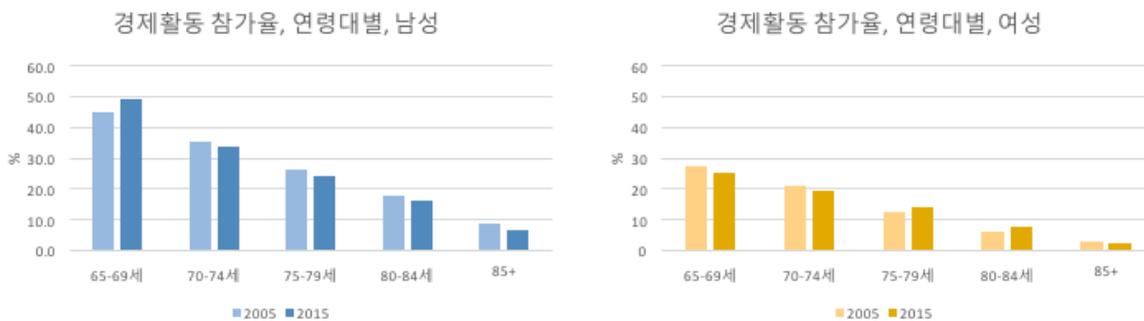
그러나 <표 4-11>에서 나타나듯,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오히려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남성 2005년 64.1%, 2015년 65.6%; 여성 2005년 81.1%, 2015년 83.3%).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65-69세와 여성의 75-79세, 80-84세 집단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5년에 비해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2). 물론 65세 이후에도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자 중 다수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및 무급가족근로의 형태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단순히 증감여부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소득 수준별 분석 등 어떤 계층에서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가나 봉사활동 등 다른 일상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경제활동여부가 고령층의 삶에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해 질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 수준을 갖춘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1>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 여부

경제활동	남성		여성	
	2005	2015	2005	2015
경제활동 비참가	1,098,622	1,809,315	2,093,421	3,040,111
%	64.1	65.6	81.1	83.3
경제활동 참가	614,616	948,277	488,710	611,248
%	35.9	34.4	18.9	16.7
전체	1,713,238	2,757,592	2,582,131	3,651,359
%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그림 4-12> 65세 이상 남녀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2005년, 2015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6) 고령자 생활비 원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따로 소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은 고령자 생활비 원천이 유일하다. <표 4-12>는 2015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상위 10 항목을 순위별로 보여준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가 1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14%),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의 송금(11.4%)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는 65~74세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에서 오는 소득(21%),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14%), 공적연금(11%), 따로 사는 자녀(8%) 순이었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18%), 따로 사는 자녀(15.9%), 따로 사는 자녀+국가보조(12.8%), 함께 사는 자녀(9.6%)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 노후 소득에 있어 연금이 중심이 되는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수혜자가 늘어나고, 개인연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연금 중심의 생활비 마련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혼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 청년 실업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는 비록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방식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4-12>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원천 상위 10 항목, 2015년

생활비 원천	빈도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1,035,329	16.1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902,946	14.0
따로사는자녀	737,867	11.4
공적연금	637,230	9.9
따로사는자녀 + 국가,지방자치단체보조	533,578	8.3
함께사는자녀	462,679	7.2
공적연금+따로사는자녀	310,750	4.8
본인배우자의 일+ 공적연금	230,204	3.6
예금 적금	198,911	3.1
부동산	172,531	2.7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

3. 고령 취약계층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어두운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유배우자 비율이 늘어난 데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고령 가구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를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파악해서 고령층의 증가를 단순히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고령층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 즉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그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취약계층 중 가구 구성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가구, 조부모와 미혼손자녀만으로 이뤄진 조손가구, 그리고 여러 제약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살펴보았다²⁾.

1) 노노(老老)가구의 특성 및 분포

노노(老老)가구는 가구원 전체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지칭한다. 노노(老老)가구는 향후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비록 1인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모두 고령이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0대 고령자가 90대 부모를 돌보는 등 노노(老老)가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홀로 돌보다가 함께 목숨을 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노노(老老)가구와 돌봄 제공의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고령 가구의 20.6%가 노노(老老)가구, 29.9%가 1인가구, 나머지 49.6%가 비노노(非老老)가구로 나타났다(표 4-13). 이는 2005년 노노(老老)가구 1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노노(老老)가구의 96.3%가 부부가구로 나타나, 한국의 노노(老老)가구의 경우 부부로 구성된 경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노노(老老)가구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표 4-14). 향후 이같은 형태가 더 증가할 지는 앞으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 한국의 경우 노노(老老)가구=노인부부가구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65세 이상 고령층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1인가구라고 볼 수 있다. 함께 살면서 마땅히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다, 앞서 언급했듯 1인가구의 경우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제약 및 일상생활 제약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1인가구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분석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통계(통계청, 2017)에서도 자세하게 이뤄졌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2장 가구분석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1인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 4-13>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노노(老老)가구의 분포, 2015년

가구종류	가구수	%
비노노(非老老)가구	2,509,659	49.6
노노(老老)가구	1,040,759	20.6
노인 1인가구	1,513,738	29.9
전체	5,064,156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표 4-14> 노노(老老)가구의 가구유형, 2015년

가구종류	가구수	%
부부가구	1,002,693	96.3
노인세대+미혼자녀	1,512	0.2
부부+부모	12,259	1.2
확대가족(기타친인척)	20,268	2.0
비친족가구	4,027	0.4
전체	1,040,759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노노(老老)가구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노노(老老)가구의 생활비는 다른 고령 가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배우자의 일 및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이 뒤를 이었다. <표 4-15>는 65세 이상 고령층 중 노노(老老) 가구 구성원과 비노노(非老老)가구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제약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드러나듯, 비노노(非老老)가구에 비해 노노(老老)가구의 구성원들이 건강상 제약을 겪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노노(老老)가구와 비노노(非老老)가구의 건강 상태 비교, 2015년, (%)

가구종류	신체/정신적 제약있음	신체/정신적 제약 없음	전체
비노노(非老老)가구	28.9	71.1	100.0
노노(老老)가구	31.3	6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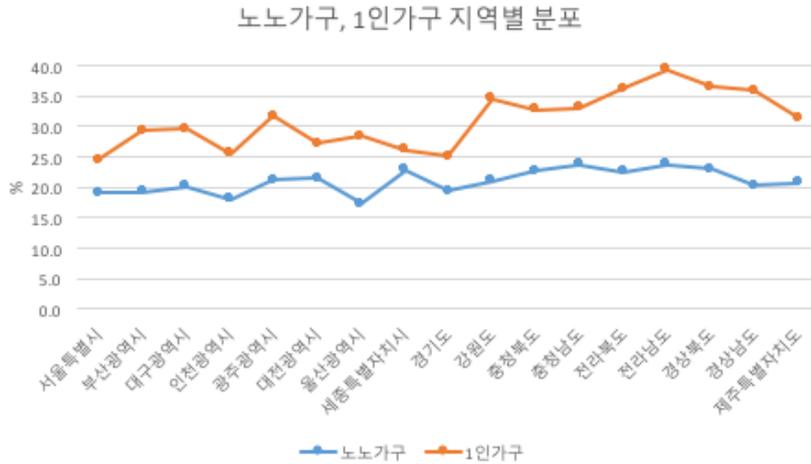
가구종류	일상/사회활동 제약있음	일상활동 제약 없음	전체
비노노(非老老)가구	28.9	71.1	100.0
노노(老老)가구	31.3	68.7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13, 그림 4-14, 부표 4-3).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노노(老老)가구 역시 충남(23.8%), 전남(23.7%), 경북(23%) 등 도 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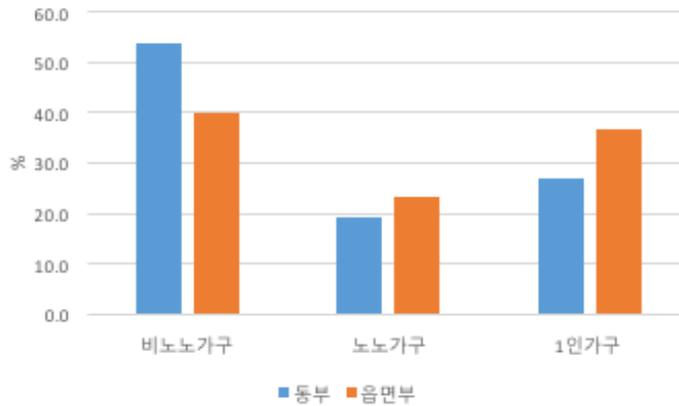
이 높았다. 읍면동부별로도,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서 노노(老老)가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3> 65세 이상 가구 중 노노(老老)가구, 1인가구 지역별 분포,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4-14> 65세 이상 가구 중 노노(老老)가구, 1인가구 읍면동부별 분포,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높지 않고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앞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노(老老)가구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인가구나 노노(老老)가구라 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로 숫자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가족 단위에서의 돌봄이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는 물

론, 고령 부부로 구성된 부부가구의 돌봄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조손가구의 특성 및 분포

다음으로 살펴볼 취약계층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이다. 2015년 조손가구는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통계청, 2012)에 따르면 조손가구의 수는 1995년 35,194세대, 2000년 45,225세대, 2005년 58,101세대였으며 2010년에는 12,184세대로 계속 증가추세였다. 2015년의 경우에는 93,996세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알 수 없으나 절대수의 증가추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조손가구 중 18세 미만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74%가 친손자녀, 25%가 외손자녀로 나타나 친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손가구의 생활비의 경우는 따로 사는 자녀에게서 오는 경우가 1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18.4%), 따로 사는 자녀+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11.6%)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의 부양과 국가의 보조가 주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손가정에서 조부모, 특히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약 9시간 정도로 고령자의 건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이 낮고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앞서 가구 유형별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도(그림 4-6) 조손가구의 경우 건강상 제약을 겪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손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4-16).

<표 4-16> 조손가구의 지역별 분포(고령가구 중 조손가구 비율, 지역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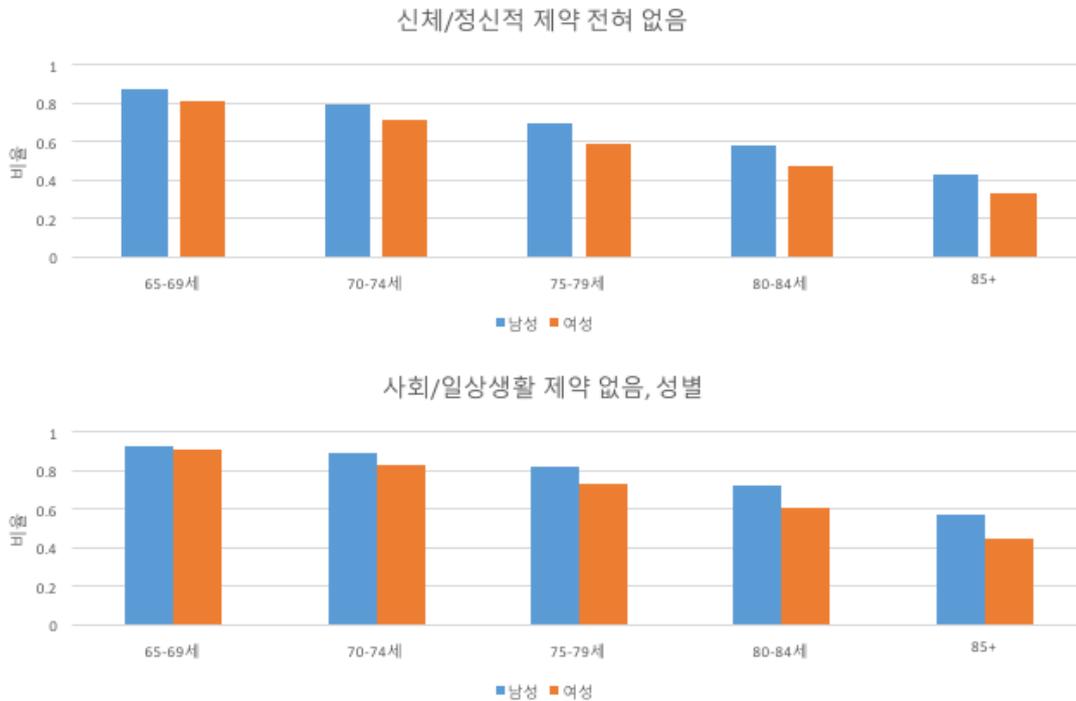
시도	가구수	조손가구 비율 (%)	시도	가구수	조손가구 비율 (%)
서울특별시	15,539	1.7	강원도	3,788	1.9
부산광역시	7,379	1.9	충청북도	3,424	1.9
대구광역시	4,794	2.0	충청남도	4,753	1.9
인천광역시	4,751	2.0	전라북도	4,774	1.9
광주광역시	2,971	2.3	전라남도	5,494	1.9
대전광역시	2,690	2.2	경상북도	5,851	1.6
울산광역시	1,662	2.1	경상남도	6,434	1.8
세종특별자치시	258	1.6	제주특별자치도	1,355	2.2
경기도	18,079	1.8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3) 건강취약계층

이 연구에서는 신체/정신적 제약 여부 및 일상/사회생활 제약 여부 항목을 바탕으로 건강취약계층을 파악해 보았다. 건강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전, 먼저 건강한 고령층을 분석, 그 구성과 분포를 알아봤다. <그림 4-15>는 제약 여부를 연령대별, 성별로 건강한 고령층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65-69세 그룹의 경우 80% 가량이 신체/정신적 제약 8가지 항목 중 아무 것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하는 등, 7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노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노년층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75-79세에 이르러서도 70% 가량이 제약을 전혀 겪지 않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사회생활 관련 제약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관찰됐다. 이는 아마도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선택효과의 작용으로 고령까지 생존한 남성의 경우 건강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우는 75세 무렵 정도부터 건강한 노년층의 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4).

<그림 4-15> 제약 여부를 바탕으로 한 연령별, 성별 건강한 노년층의 분포,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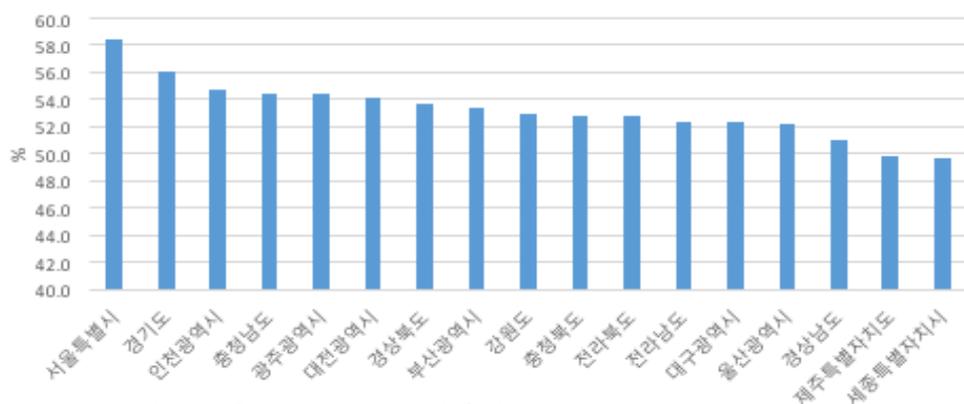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위의 분석을 통해 남녀 모두 70대 중반까지는 일상생활이나 신체적 상태에 있어 특별한 제약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진정한 도전 과

제는 75세 이후, 즉 초고령층(oldest old)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고 취약한 계층을 관리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건강한 고령자와 건강이 취약한 고령자를 구분해 살펴보았다. 신체/정신적 제약, 일상/사회생활 제약의 모든 항목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를 건강한 고령자로, 신체/정신적 제약, 일상/사회생활 제약 영역 모두에서 제약을 경험한다고 밝힌 고령자를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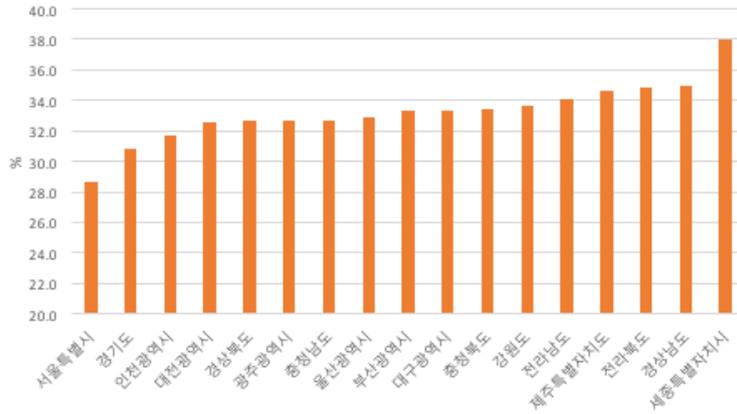
<그림 4-16>은 7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건강한 고령자의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서울의 경우, 건강한 고령자가 전체의 58.4%로 건강한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56%), 인천광역시(54.7%), 충청남도(54.5%)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한 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세종시(49.7%), 제주도(49.8%), 경상남도(51%), 대구광역시(52.3%) 등으로 나타났다. 단 세종시의 경우 건강한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의 경우는 거주하는 고령자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건강취약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4-17), 역시 서울의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28.7%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해 건강취약계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30%), 인천(31.7%) 등이 건강취약계층의 비중이 낮게 조사됐다. 건강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세종시의 건강취약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38%), 앞의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때 세종시에 거주하는 소수의 고령층은 돌봄이 필요하여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35%로 나란히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34%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통제했음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 건강한 노인이 많고 건강취약계층이 적은 현상이 뚜렷한 반면 도 단위 지역에서 건강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은 돌봄 방안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16> 지역별 7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건강한 고령자 비중 분포,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그림 4-17> 지역별 7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건강취약계층 비중 분포, 2015년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표 4-17> 지역별 7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건강한 고령자 및 건강취약계층 비중 분포, 2015년

시도	건강한 고령자	신체/정신적 제약만	일상/사회생활제약만	건강취약계층	전체
서울특별시	247,074	54,672	0	121,166	422,912
%	58.4	12.9	0.0	28.7	100.0
부산광역시	94,573	23,555	0	58,946	177,074
%	53.4	13.3	0.0	33.3	100.0
대구광역시	60,690	16,580	6	38,672	115,948
%	52.3	14.3	0.0	33.4	100.0
인천광역시	62,185	15,525	3	35,995	113,708
%	54.7	13.7	0.0	31.7	100.0
광주광역시	33,403	7,860	0	20,067	61,330
%	54.5	12.8	0.0	32.7	100.0
대전광역시	33,279	8,154	0	19,973	61,406
%	54.2	13.3	0.0	32.5	100.0
울산광역시	18,290	5,239	0	11,520	35,049
%	52.2	15.0	0.0	32.9	100.0
세종특별자치시	4,553	1,122	0	3,482	9,157
%	49.7	12.3	0.0	38.0	100.0
경기도	276,209	64,652	270	152,090	493,221
%	56.0	13.1	0.1	30.8	100.0
강원도	56,821	14,330	13	36,041	107,205
%	53.0	13.4	0.0	33.6	100.0
충청북도	51,821	13,483	2	32,754	98,060
%	52.9	13.8	0.0	33.4	100.0
충청남도	81,753	19,178	21	49,097	150,049
%	54.5	12.8	0.0	32.7	100.0
전라북도	73,563	17,221	3	48,579	139,366
%	52.8	12.4	0.0	34.9	100.0
전라남도	86,573	22,436	0	56,221	165,230
%	52.4	13.6	0.0	34.0	100.0
경상북도	109,736	27,733	0	66,692	204,161
%	53.8	13.6	0.0	32.7	100.0
경상남도	96,289	26,438	11	66,021	188,759
%	51.0	14.0	0.0	35.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7,095	5,308	0	11,882	34,285
%	49.9	15.5	0.0	34.7	100.0
전체	1,403,907	343,486	329	829,198	2,576,920
%	54.5	13.3	0.0	32.2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주: 여기서 건강취약계층은 신체/정신적 제약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두 영역 모두에서 제약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를 의미한다.

끝으로 고령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주로 제약을 겪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성별 분포를 분석했다(표 4-18). 그리고 똑같이 제약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 항목 중 1가지 제약을 겪는 경우와 여러 가지 제약을 중첩적으로 겪는 경우의 어려움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고령자 중 여러 가지 제약을 한꺼번에 겪는 다중제약 경험자의 비중은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았다(표 4-19).

<표 4-18>항목별 제약 경험 비율, 연령대별, 성별, 2015년

제약 종류	성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청각	남성	0.018	0.032	0.053	0.1	0.18
	여성	0.012	0.021	0.042	0.08	0.16
치매	남성	0.0037	0.009	0.02	0.039	0.078
	여성	0.0043	0.012	0.029	0.061	0.13
걸기 무거운 것 운반하기 등	남성	0.092	0.15	0.22	0.32	0.44
	여성	0.16	0.26	0.36	0.46	0.54
배우기 집중하기	남성	0.021	0.038	0.064	0.11	0.19
	여성	0.024	0.047	0.087	0.15	0.26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남성	0.018	0.03	0.049	0.083	0.16
	여성	0.016	0.031	0.059	0.1	0.21
장보기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남성	0.039	0.066	0.11	0.18	0.31
	여성	0.06	0.11	0.19	0.29	0.43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먼저 해당 연령대의 10% 이상이 해당 항목의 제약을 겪는 것을 분석했다. <표 4-18>를 보면, 청각은 남녀 모두에서 80대 이후에 10~18% 정도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 치매는 여성의 경우 85세 이상 그룹에서 13%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의 10% 이상이 제약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이른 연령대인 65-69세부터 나타나는 것은 ‘걸기, 무거운 것 운반하기’로 근력과 이동성에 관련된 항목이었다. 80대 이상이 되면 남성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32~44%, 여성의 경우 46~54%가 걸기, 무거운 것 운반하기 등에 제약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장보기,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등 이동성과 관련된 제약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70대 부터 해당 연령대의 10% 이상이 경험하며, 80대가 되면 30~43% 정도가 외부 이동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65세 고령층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제약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제약의 종류에 따라 이를 경험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연령대가 다를 수 있다. 다만 80대가 되면 확실히 제약을 겪는 고령층의 비중이 각 항목마다 상당히 높아진다. 따라서 고령층 관련 정책을 생각할 때, 각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초고령층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특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19>는 신체/정신적 제약 영역과 일상/사회활동 제약 영역 각각에서 1가지, 2가지, 그

리고 3가지 이상 항목에서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다중제약을 겪는 비중은 70대 중반부터 증가해 80대에는 2가지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2%(80-84세), 14.1%(85세 이상)에 달하고, 3가지 이상의 제약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75-79세는 1.6%, 80-84세는 2.9%, 85세 이상은 6.5%에 이른다. 일상/사회활동 제약의 경우도 2가지 이상의 제약을 겪는 비율은 5.2%(75-79세), 8.6%(80-84세), 13.5%(85세 이상), 3가지 이상의 제약을 겪는 비율은 75-79세의 1%에서 80-84세의 2%, 85세의 5%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실히 75세 이후에 여러 활동의 제약을 겪는 등 본격적인 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중제약을 겪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단순히 고령층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은 잘 맞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오히려 80-84세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신체/정신적 제약 중 한 항목도 해당되지 않고, 85세 이상 초고령층이라고 해도 36% 가량이 아무 제약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일상/사회활동의 경우에도 80대의 절반 이상이 아무 제약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고령층에 대한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표 4-19> 다중제약 여부: 신체/정신적 제약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 연령대별, 2015년

신체/정신적 제약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제약없음	1,779,534	1,306,684	844,034	391,633	168,569
%	83.9	74.6	63.4	50.5	35.9
1 가지 해당	297,992	379,832	401,802	297,684	204,398
%	14.1	21.7	30.2	38.4	43.5
2 가지 해당	33,349	50,116	64,345	63,813	66,246
%	1.6	2.9	4.8	8.2	14.1
3 가지 이상	9,294	15,081	21,405	22,450	30,541
%	0.4	0.9	1.6	2.9	6.5
전체	2,120,169	1,751,713	1,331,586	775,580	469,754
%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상/사회활동 제약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제약없음	1,947,014	1,498,517	1,019,027	501,058	227,308
%	91.8	85.6	76.5	64.6	48.4
1 가지 해당	122,550	172,796	200,517	160,300	113,815
%	5.8	9.9	15.1	20.7	24.2
2 가지 해당	33,096	52,705	69,197	66,915	63,596
%	1.6	3.0	5.2	8.6	13.5
3 가지 해당	11,414	18,438	29,486	31,444	41,549
%	0.5	1.1	2.2	4.1	8.8
4 가지 모두	6,095	9,257	13,359	15,863	23,486
%	0.3	0.5	1.0	2.1	5.0
전체	2,120,169	1,751,713	1,331,586	775,580	469,754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층이 줄어들고 고령층이 증가한 형태의 유사한 인구구조라 하더라도, 그 사회 고령층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및 교육수준, 그리고 적절한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갖는 함의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령층 중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건강과 소득을 갖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면 고령화의 부정적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측면으로 인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사회가 얼마나 돌봄을 적절하게 잘 제공하는가, 취약계층을 얼마나 잘 파악해서 도움을 제공하는가의 여부도 고령화된 인구의 관리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 한국 고령사회의 명(明)과 암(暗)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이 누구와 함께 (혹은 따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구유형별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인구 중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가구(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가구)가 늘어난 반면, 고령자가 가구원인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 중에서는 1인가구와 고령자 부부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자녀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나 막상 돌봄이 필요할 때 제대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건강 등에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고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대체로 75세 이후이므로,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 초고령층이 증가할 경우 현재의 1인가구, 부부가구 위주 가구 유형이 향후 높아질 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보다 열악한 1인가구는 물론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앞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돌봄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돌봄과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노노(老老)가구나 1인가구 등의 경우 현재 자녀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즉, 누가 돌봄을 담당하고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 및 제도적 준비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층의 프로필

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 2005년과 비교해서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은 남성 노인 비중의 증가로 노년의 성비 불균형이 약간 완화됐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 줄어들고 전 연령대에서 유배우자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남성 평균수명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층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관리 및 삶의 질 관리 등 노년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고령사회에 고무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건강상태 역시 비록 신체/정신적 제약 유무 및 일상/사회활동 제약 유무 항목을 통해 추정해 본 간접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2005년에 비해 최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5년과 유사하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참여율 역시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 수준 및 건강 상태 측면에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 역시 아직까지는 연금보다는 국가보조 및 자녀의 도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 자원을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노(老老)가구, 조손가구,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조손가구와 노노(老老)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구성원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활동의 제약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노가구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으로, 1인가구와 함께 향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타겟 집단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를 돌보다가 함께 동반 자살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등장하는 것과 같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관심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취약계층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의 비중이 낮고 주로 도 단위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인구의 비중 자체도 도 단위에서 높을 뿐 아니라 1인가구의 비중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차원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무 제약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고령층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은 70대 중반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80대 이후 초고령층에서도 절반 가량이 제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하나의 계층으로 뭉뚱그려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의 다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제약이 중첩된 건강취약계층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³⁾

고령층이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인 만큼, 단순히 연령을

3) 한국의 경우 노인빈곤도 심각한 상태이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는 소득 관련 정보가 없어서 경제적 상황별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준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필에 기반해 고령사회의 명과 암을 구분하고, 향후 고령화를 어떻게 잘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통계청(2017). “2017 고령자통계”.
2. 통계청(201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 심층분석”.
3. Financial Times (2017). “World will have 13 ‘super-aged’ nations by 2020.”
<online> Available at:
<https://www.ft.com/content/f356f8a0-1d8c-11e4-8f0c-00144feabdc0> <Accessed 10 Dec. 2017>.

제5장 한국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및 출산력

은 기 수 | 서울대학교

I. 서론

초저출산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높아지는 교육수준만큼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망도 커지고 있다. 남성의 변화보다 여성의 변화가 크고, 전 사회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가족생활은 여성의 변화만큼 정비례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직도 직장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여성은 결혼과 출산 등을 경험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혹은 언젠가는 회사를 떠날 사람으로 여기고, 아예 처음부터 여성의 채용을 꺼리거나, 여성이 일하는 동안에도 여성 직원은 끝까지 남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는 문화가 온존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전통적인 이유로 인한 고부갈등이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결혼하는 순간, 남편과 사는 가족생활이면서, 동시에 시집이라는 새로운 거대 가족과 연관을 맺는 그물망 속에 편입된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개인의 자격으로 맺어지는 관계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은 개인간의 결합을 넘어서 가족끼리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즉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여성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유독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루한 기업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도 크게 변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상존하고 있다.

보통 서양의 학자가 성, 사랑, 결혼,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서술한다. “사람들은 미혼 상태로 더 오래 머물고, 결혼은 더 늦게 하며, 이혼은 더 많이 한다. 낙태, 혼외출산, 동거, 이혼, 한부모, 그리고 아마 혼외관계도 모두 증가해왔다. 더 많은 친밀한 관계나 성적 관계 등은 이제 가족 밖에서 추구되고 있다”(Offer, 2006: 303). 한국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가족문화에는 낯선 측면도 많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서양의 성, 사랑, 결혼, 출산 등 가족문화는 사실 개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현상을 많이 공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가족문화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집단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변화에 맞춰, 집단으로서의 남성이나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자녀의 양육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고, 남성은 조력자이며,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인 여성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조사 결과는 점차 출산과 양육은 여성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거나, 국가나 사회가 오히려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와 행위 자체가 태도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도 않다. 그 비극적 결과의 하나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고 나면, 일하던 여성의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자녀양육에 돌입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형태가 소위 M자 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소위 “잘 나간다”던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면, 과거 잘 나가던 시절의 여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한물 간” 여성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일에 대한 열망이 크고, 자신의 꿈을 지키려는 여성들은 이를 악물고, 애를 안 낳거나, 애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고, 그 한 명의 자녀양육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떠나지 않고, 남성 동료들과 끝까지 경쟁한다. 그러나 이런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혼 전에 일을 하던 수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 집에서, 직장에서 쏟아지는 갖은 눈총과 차별, 그리고 자녀양육을 직장과 병행하지 못해 결국 사표를 내고 집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소위 “경단녀”(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가 된다.

국가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교육을 제대로 잘 받고, 남성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손실이다. 자녀를 어느 정도 양육한 다음,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과거에 떠났던 직장 혹은 같은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직장으로서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는 서비스직 등 과거의 직장보다 직업위세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인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 김지영은 2016년 현재 34세의 애엄마이다. 결혼 전에 홍보대행사에 다녔고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했지만, 애를 낳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출산한 후, 결국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애엄마가 된 주인공 김지영이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반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다가 마트 입구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평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지를 보고 담당 점원에게 구인 광고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두 아이의 엄마인 그 점원은 자기도 4년 동안 일하던 이 일에서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만두는 것”¹⁾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선뜻 일하겠다는 말을 뱉지 못하는 주인공 김지영에게 “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라고 뜬금없는 말을 내

1) 한국 사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막연하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결혼 후 출산을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던 많은 한국의 애엄마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7. 12. 11. “구명난 돌봄에 올 신학기만 초등생 엄마 1만5000명 퇴직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91786>).

백는다(조남주, 2016: 159-160). 주인공 김지영은 그 일이 대학졸업자가 할 일인가 생각하지도 못한 찰나, 그 곳에서 일하던 점원은 자신도 대학졸업자인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을 변명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은 후 일을 하는 혹은 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는 과거의 교육수준이나 일한 경험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불행히도, 이런 사실을 한국 여성들은 다 알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애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축복이며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결혼하고 출산하는 순간, 개인으로서 자신의 행복과 꿈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꿈을 망가뜨릴 수 있는 폭탄과 다름없는 위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결혼에 자신이 없다. 출산은 더 자신이 없다. 그래서 결혼을 자꾸 미루고, 결혼을 해도 선뜻 출산을 할 용기가 없어 출산도 미룬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낳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국 무자식으로 남게 되거나, 한 명 정도만 출산을 하고,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결국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자신은 이제 애낳고 양육하는 것이 숙명인 여성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원하더라도 한 명을 더 낳아 두 명의 자녀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싶거나, 남성만 아니라 여성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부부는 남성과 여성 둘 다 일을 포기 못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계속한다. 이런 부부가 두 명 이상 출산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지금까지 간단히 서술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여성의 현재를 담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다 아는 현대 여성들에게 과거의 성역할, 부부관계, 가족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어불성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미 오랫동안 초저출산력을 크나 큰 사회문제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전 일한 경험, 결혼 및 출산을 전후해서 일을 그만두는지 아니면 계속 일을 했는지, 소위 경력단절의 경험, 그리고 출산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결국은 오늘날 초저출산력의 한 원인으로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 경력단절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력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출산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201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커다란 사회쟁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오늘날, 한국 전체 인구의 20%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분석하고, 경력단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가 초저출산력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와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201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물론 2% 표본자료로도 오차의 한계를 감안하여 얼마든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좀더 자세한 분석을 하게 되면, 표본의 절대크기가 줄어들고, 1000케이스 미만 혹은 100케이스 미만의 셀이 존재하거나 심지어는 겨우 수십 사례에 불과한 셀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설혹 우리 주위에서 많이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표본의 절대수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작은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주로 사용한다. 평균과 2원 혹은 3원 교차표 등을 산출하여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결혼 전 일 경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의 여부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의 경험을 파악하고, 출산력과의 관계를 유추한다.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 당시, 모든 응답자의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결혼 전 일 경험, 경력단절 경험을 조사 당시 시점의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와 연결하면 결혼 전 일 경험-경력단절 여부-현재의 경제활동상태를 잇는 연쇄(sequence)가 만들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의 연쇄(work sequence)를 만들고, 이 연쇄에 따른 결혼한 여성들의 분포를 파악한다. 결혼 전에 일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등 두 경우가 있다. 결혼 전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는지 여부 등 두가지의 경우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일을 한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부의 두가지 경우와 각각의 경우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시 두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 여섯가지의 일의 연쇄가 만들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중요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미혼을 제외한 기혼여성(never-married woman)이 분석대상이 된다. 유배우 상태의 여성, 사별한 여성, 그리고 이혼한 여성 등 기혼여성이 분석대상이다.

<표 5-1> 일의 연쇄(work sequence)

결혼전 일 안 했음 - 현재도 일하지 않음
결혼전 일 한 했음 - 현재는 일 함
결혼전 일 했음 - 경력단절 있었음 - 현재도 일하지 않음
결혼전 일 했음 - 경력단절 있었음 - 현재는 일 함
결혼전 일 했음 - 경력단절 없었음 - 현재는 일하지 않음
결혼전 일 했음 - 경력단절 없었음 - 현재도 일 함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한 모든 여성 중 20-59세 여성으로 연령을 한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오늘날 저출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은 이 분석에서 제외한다.

20% 표본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체 인구, 전체 여성의 경우로 논의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산출한 승수(weight)를 적용한다.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를 제공하면서 인구 승수 및 가구승수 등 두가지의 승수를 제공하였다. 개인단위 수준의 분석에는 인구승수를 적용하고, 가구단위의 분석에는 가구승수를 적용하였다.

다음 <표 5-2>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우선 분석대상에서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여성이 제일 많다. 그 다음 나이가 줄어들수록 분석대상의 기혼여성도 줄어들고 있

<표 5-2> 분석대상자인 20-59세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 세별 연령	N	%	교육수준	N	%	시도	N	%
20-24	75,325	0.7	중졸	1,538,340	14.0	서울	2,065,525	18.8
25-29	381,389	3.5	고졸	4,996,470	45.5	부산	728,009	6.6
30-34	1,145,692	10.4	2년제	1,548,860	14.1	대구	543,867	5.0
35-39	1,534,660	14.0	4년제	2,511,664	22.9	인천	655,609	6.0
40-44	1,872,019	17.1	대학원이상	383,817	3.5	광주	323,856	3.0
45-49	2,026,784	18.5	합	10,979,151	100.0	대전	334,280	3.0
50-54	2,021,661	18.4				울산	274,001	2.5
55-59	1,921,621	17.5	동/읍면	N	%	세종	44,330	0.4
합	10,979,151	100.0	동부	9,185,761	83.7	경기	2,812,696	25.6
			읍면부	1,793,390	16.3	강원	313,942	2.9
혼인상태	N	%	합	10,979,151	100.0	충북	332,637	3.0
유배우	9,526,182	86.8				충남	427,118	3.9
사별	444,608	4.1				전북	367,980	3.4
이혼	1,008,361	9.2				전남	354,462	3.2
합	10,979,151	100.0				경북	548,765	5.0
						경남	727,545	6.6
						제주	124,529	1.1
						합	10,979,151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다. 분석대상 여성중 고졸학력이 제일 많다(45.5%). 4년제 대학졸업 기혼여성은 분석대상 여성의 22.9%이다. 혼인상태로는 현재 유배우 여성이 분석대상 여성의 86.8%이고, 이혼한 여성도 9.2%로 높은 편이다. 83.7%의 기혼여성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분석대상 여성의 44%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II. 본론

1. 결혼 전 직장경험과 경력단절 경험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2015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현재 20-59세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는 여성은 73%였다. 27%의 여성만이 결혼 전 직장경험이 없었다. 분석대상 여성 중 거의 4명 중 3명꼴로 결혼 전에 일을 했었다(표 5-3).

<표 5-3> 결혼 전 직장경험

결혼 전 직장경험	N	%
있었다	8,012,020	73.0
없었다	2,967,131	27.0
합	10,979,151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결혼 전에 직장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50세 기혼여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다.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는 비율이 제일 높은 연령층은 30-34세 연령층이다. 이 연령층에 속한 기혼여성 중 86%가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역시 30대인 35-39세 연령층에 속한 기혼여성도 85.7%가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30대 여성들은 결혼 전에 85% 이상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한 것이다. 30대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나이든 세대일수록 결혼 전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을 반영한다. 또한 30대보다 젊은 연령층의 기혼여성도 결혼전 직장경험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하면서 미처 결혼 전에 일을 한 경험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5-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 세 별 연령	N	%	교육수준	N	%	시도	N	%
20-24	37,129	49.3	중졸	737,565	48.0	서울	1,557,597	75.4
25-29	293,113	76.9	고졸	3,554,167	71.1	부산	518,169	71.2
30-34	986,532	86.1	2년제	1,325,410	85.6	대구	388,192	71.4
35-39	1,315,560	85.7	4년제	2,072,505	82.5	인천	497,033	75.8
40-44	1,533,905	81.9	대학원이상	322,373	84.0	광주	228,954	70.7
45-49	1,509,642	74.5	합	8,012,020		대전	250,148	74.8
50-54	1,304,679	64.5				울산	197,359	72.0
55-59	1,031,460	53.7	동/읍면	N	%	세종	34,475	77.8
합	8,012,020		동부	6,854,167	74.6	경기	2,165,537	77.0
			읍면부	1,157,853	64.6	강원	214,116	68.2
혼인상태	N	%	합	8,012,020		충북	234,244	70.4
유배우	7,091,664	74.4				충남	301,252	70.5
사별	246,476	55.4				전북	235,257	63.9
이혼	673,880	66.8				전남	217,121	61.3
합	8,012,020					경북	361,250	65.8
						경남	522,377	71.8
						제주	88,939	71.4
						합	8,012,02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기혼여성들의 결혼 전 직장경험이 85.6%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이 84%,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기혼여성이 82.5%로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여성들의 결혼 전 직장경험이 높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낮고, 고졸 등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대학 등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결혼 전 노동시장참여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상태의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이 74.4%로 가장 높다. 그러나 혼인상태는 연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의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이 75%인데 반해, 농촌지역 기혼 여성은 65%로 약 10% 포인트 차이가 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율이 높다. 반면에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충북 등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또한 연령효과가 개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도시 혹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결혼 전에 일을 한 경험이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보다는 좀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

경력단절	N	%
있었다	6,060,623	75.6
없었다	1,951,397	24.4
합	8,012,020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어 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소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다. 201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결혼 전에 일을 했었다고 응답한 20-59세 기혼여성 중, 75.5%는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다. 결혼 전에 일을 했고,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이다. 결혼 전에 일을 한 기혼여성 4명 중 3명 이상이 결혼, 출산, 양육 혹은 다른 이유로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것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일하는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하고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계속 일하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젊은 연령층으로 올수록 결혼 전에 일을 했고,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이 증가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45%,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지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이 65%로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다른 교육수준의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서 고졸학력의 기혼여성들은 결혼 전에 일을 했더라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83%로 어느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높다. 연령의 효과를 통제해야 더 정확한 현상을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력단절의 경험이 적고,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력단절의 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경력단절의 경험은 혼인상태별로나 도시/농촌별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 5-6>에 나타난 결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수준의 효과는 연령을 통제하면 사라지는 것인지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표5-6>의 결과로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에 연령과 교육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5-6>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결혼 전 직장경험이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

5 세별 연령	N	%	교육수준	N	%	시도	N	%
20-24	24,185	65.1	중졸	584,910	79.3	서울	1,079,901	69.3
25-29	174,104	59.4	고졸	2,947,317	82.9	부산	399,938	77.2
30-34	643,415	65.2	2년제	1,028,576	77.6	대구	300,371	77.4
35-39	960,513	73.0	4년제	1,354,944	65.4	인천	385,983	77.7
40-44	1,197,709	78.1	대학원이상	144,876	44.9	광주	169,262	73.9
45-49	1,203,477	79.7	합	6,060,623		대전	188,443	75.3
50-54	1,037,902	79.6				울산	158,553	80.3
55-59	819,318	79.4	동/읍면	N	%	세종	23,999	69.6
합	6,060,623		동부	5,148,745	75.1	경기	1,662,878	76.8
			읍면부	911,878	78.8	강원	161,894	75.6
혼인상태	N	%	합	6,060,623		충북	181,335	77.4
유배우	5,346,858	75.4				충남	236,483	78.5
사별	193,605	78.6				전북	176,699	75.1
이혼	520,160	77.2				전남	169,386	78.0
합	6,060,623					경북	288,299	79.8
						경남	413,631	79.2
						제주	63,568	71.5
						합	6,060,623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결혼 전 일을 했다카도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무슨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을까? <표 5-7>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59세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 전에 일을 했어도,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경우,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57%로 가장 높다. 절반 이상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고 그만 둔 것이다. 결혼을 했어도 일을 그만 두지는 않았지만, 임신 혹은 출산을 하고나서는 더 이상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

<표 5-7>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

이유	N	%
결혼	3,437,751	56.7
임신,출산	1,858,672	30.7
양육(취학전아동)	452,589	7.5
교육(취학자녀)	129,408	2.1
가족돌봄(부모등)	182,203	3.0
합	6,060,623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고 일을 그만 둔 경우가 31%에 달한다. 즉 기혼여성 100명 중 87명은 결혼,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 결혼 전에 일을 했더라도,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취학전 아동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혹은 취학자녀의 교육 때문에 결국 일을 그만 둔 비율이 기혼여성 10명 중 한 명꼴이다.

<표 5-8>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경력단절 이유를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결혼했다는 이유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비율은 55-59세부터 30-34세까지로 연령계층이 낮아질수록, 줄어든다. 55-5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들은 결혼 전에 일하다가도, 결혼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우가 71%이다. 그러나 30-3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에서는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경우가 43%에 그치고 있다. 요즘 젊은 기혼여성들은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20대이면서 기혼여성인 경우에는 결혼 때문에 결혼 전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52.5%에 이른다.

<표 5-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경력단절 이유

변수	결혼	임신,출산	양육	교육	가족 돌봄
			(취학전아동)	(취학자녀)	(부모등)
연령					
20-24	52.5	42.3	2.3	0.7	2.2
25-29	51.4	42.6	4.3	0.5	1.3
30-34	42.9	47.5	7.8	0.7	1.1
35-39	43.1	43.4	10.3	1.8	1.4
40-44	52.1	34.3	8.7	2.7	2.2
45-49	61.6	25.4	7.2	2.6	3.3
50-54	67.5	19.6	6.1	2.4	4.4
55-59	70.7	16.2	5.1	2.2	5.9
혼인상태					
유배우	55.8	31.4	7.7	2.2	2.8
사별	67.7	20.4	5.1	1.5	5.3
이혼	61.7	27.0	5.6	1.7	3.9
교육수준					
중졸	68.3	19.7	4.4	1.4	6.2
고졸	62.7	26.6	5.7	1.8	3.2
2년제	48.7	38.3	8.9	2.1	2.0
4년제	46.8	37.4	10.8	3.0	2.0
대학원이상	37.0	40.9	14.4	5.0	2.7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과거에는 결혼 때문에 결혼 전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았지만, 젊은층으로 올수록 임신, 출

산 등의 이유로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55-5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이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결국 임신 및 출산을 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경우가 16%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런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및 출산 때문에 결국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경우가 30-34세 연령층에서 47.5%로 증가한다. 35-3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43.1%, 임신 및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43.7%로 실질적으로 똑같다. 그런데 이보다 젊은 30-3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는 43%인데 반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 둔 경우가 47.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현재 기혼여성으로 20대 인 경우는 비교적 결혼을 일찍한 이유로 생각되는데, 임신 및 출산보다는 결혼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20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올수록 결혼보다는 임신 및 출산 등을 경험하면서 결국 일을 그만 둔 경우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30대 초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보다도, 임신 및 출산 때문에 결국 일을 그만 둔 경우가 더 높다. 이 결과를 일반화하면 젊은 연령층의 여성들의 경우, 결혼 전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보다는, 결혼을 한 후에도 일을 하다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다.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그만 두지 않은 여성들이 다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는 자녀돌봄문제에 직면할 때이다.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계속 일을 하기에는 한국의 돌봄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끝까지 일하려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던 여성들도 결국 자녀양육의 어려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 35-39세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일을 했으나 결국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10%의 여성들은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고도 계속 일을 했지만, 결국 자녀양육 문제에 부딪쳐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여성이 35-39세 연령층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 열 명 중 한 명인 셈이다.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직면하여 결국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의 비율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기혼여성들 가운데 취학전 아동의 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은 적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4년제 대학 학력을 지닌 기혼여성의 10.8%,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기혼여성의 14%는 미취학 아동의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학력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도 일을 유지했지만,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맡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성이 있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일을 계속 하다가도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이다.²⁾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상으로는 아직은 일하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계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은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취학자녀의 교육문제는 비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때문이거나, 초중고 자녀들의 교육에 관련되어 그만두게 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신문기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5-9> 지역별 경력단절 이유

변수	결혼	임신·출산	양육 (취학전아동)	교육 (취학자녀)	가족 돌봄 (부모등)
시도					
서울	49.4	34.5	9.8	3.1	3.3
부산	57.9	30.2	6.9	1.9	3.1
대구	59.3	28.7	7.0	2.1	3.0
인천	55.6	32.3	7.0	1.9	3.3
광주	54.6	31.9	7.6	2.6	3.3
대전	58.0	28.9	7.9	2.2	3.0
울산	65.6	24.7	5.4	1.6	2.7
세종	53.5	32.6	8.6	2.7	2.6
경기	53.6	33.0	8.4	2.2	2.9
강원	64.8	24.2	6.2	1.8	3.0
충북	62.8	26.4	6.0	1.7	3.1
충남	63.2	27.0	5.3	1.5	2.9
전북	61.6	28.1	5.4	1.8	3.0
전남	64.4	25.9	5.0	1.9	2.9
경북	66.2	24.8	5.0	1.4	2.6
경남	63.2	26.8	5.6	1.5	2.9
제주	50.1	37.5	7.9	1.5	3.0
동/읍면					
동부	55.3	31.6	7.9	2.3	3.0
읍면부	65.0	25.7	5.0	1.4	2.9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지역별로도 경력단절의 이유에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2) 2017년 신학기만 초등생 엄마 15,000명 퇴직했다는 기사가 최근 보도되었다(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91786#none>). 이 글에서 인용한 조남주(2016)의 소설에서도 마트의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일하던 여성 점원이 일을 그만두는 계기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온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볼 수 없어 결국 일하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을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49%로 가장 낮다. 반면에 경북과 울산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는 제주에서 37.5%로 가장 높다. 그 뒤를 서울(34.5%), 경기(33.0%) 등이 잇고 있다. 서울, 세종, 경기는 취학전 아동을 돌보느라 일을 그만두었다는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주로 서울 및 경기의 수도권과 제주에서 이런 현상이 높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결혼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우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많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 둔 경우도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일의 연쇄 (sequence of work)

이제 결혼 전 일의 경험과 경력단절 여부 등 두 변수만으로 이루어진 일의 연쇄(sequence of work)를 살펴보자. 다음 <표 5-10>은 일의 연쇄(1)를 보여준다.

<표 5-10> 일의 연쇄(1)

일의 연쇄	%	N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다	55.2	6,060,623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다	17.8	1,951,397
결혼 전 일하지 않았다.	27.0	2,967,131
합	100.0	10,979,151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가장 많은 유형의 일의 연쇄는 결혼 전 일했는데, 경력단절이 있었다는 연쇄이다. 전체 연쇄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결혼 전에 일하지 않아, 아예 경력단절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27%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이 없었다는 경우로 18%를 차지한다.

<표 5-11>은 일의 연쇄(1)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표 5-11>은 각 연령별, 혼인상태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세 종류의 일의 연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많은 기혼여성이 결혼 전에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 예컨대 55-59세 연령층에서는 46.3%의 기혼여성들이 결혼 전에 일한 적이 없다. 또 이 연령층의 42.6%의 기혼여성들은 결혼 전에 일을 했지만, 결국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20대를 제외하고, 각 연령층에서 결혼 전에 일을 하지 않은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

율은 감소한다. 그래서 30-3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의 경우 14%만 결혼 전에 일을 한 적이 없고, 56%는 결혼 전에 일을 했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반면에 30%의 기혼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다. 35-3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은 결혼 전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이 14.3%로 역시 낮다. 그런데 이 연령층에서는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64%로 30-34세 연령층의 비율보다 높다. 반면에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도 없었다는 비율은 23%로 30-34세 연령층의 비율보다 낮다.

이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성이 결혼 전에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시 30세 초반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결혼 전에는 일을 했더라도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더 뚜렷한 현상이 보인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들은 결혼 전 일하지 않은 비율도 제일 낮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도 제일 낮다. 반면에 중졸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전 일하지 않은 비율이 제일 높다. 고졸의 경우에는 결혼 전 일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고, 일을 했더라도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일반화해서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전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적고, 동시에 일을 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일의 연쇄를 하나의 변수를 추가해서 새로 만들어본다.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여부,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일의 연쇄(2)가 만들어진다.

<표 5-11> 일의 연쇄(2)

일의 연쇄(2)	%	N
1.결혼 전 일 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13.2	1,445,944
2.결혼 전 일 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13.9	1,521,187
3.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14.3	1,569,639
4.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 안한다	3.5	381,758
5.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27.8	3,049,354
6.결혼 전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27.4	3,011,269
합	100.0	10,979,151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여섯가지 일의 연쇄(2) 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일하는 유형으로 20-59세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2) 중 27.8%를 차지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그 다음은 결혼 전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7.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유형은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도 없었고, 지금도 일하는 유형의 전체 기혼여성의 14.3%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결혼 전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으로 13.9%, 결혼 전 일하지 않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언젠가 일을 그만두어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3.5%만이 이에 해당한다.

<표 5-12>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일의 연쇄(2)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30대 기혼여성들의 일의 연쇄를 살펴보면, 30-34세, 35-3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들에서는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일의 연쇄 유형이 제일 많다. 30-34세 기혼여성의

<표 5-1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의 연쇄(2)

변수	결혼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결혼전 일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없었지만 지금은 일안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전 일했지만 경력단절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연령						
20-24	38.2	12.6	12.3	4.9	6.8	25.3
25-29	13.4	9.7	26.6	4.7	12.2	33.5
30-34	7.7	6.2	25.6	4.4	17.3	38.9
35-39	7.4	6.9	19.6	3.5	25.8	36.8
40-44	8.1	10.0	15.0	3.0	34.7	29.3
45-49	10.6	14.9	12.3	2.8	36.4	23.0
50-54	16.0	19.4	10.0	3.2	30.3	21.0
55-59	24.7	21.7	6.8	4.2	21.0	21.6
혼인상태						
유배우	12.9	12.7	14.8	3.5	26.8	29.3
사별	20.8	23.8	8.5	3.4	28.6	15.0
이혼	12.7	20.5	12.0	3.2	36.6	15.0
교육수준						
중졸	24.9	27.1	6.3	3.6	21.5	16.6
고졸	13.9	15.0	8.9	3.2	32.0	27.0
2년제	7.0	7.4	15.8	3.4	30.8	35.6
4년제	9.4	8.1	24.7	3.9	22.8	31.2
대학원이상	6.4	9.6	42.2	4.1	18.8	19.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39%, 35-39세 여성의 37%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30대라도, 30대 초반과 후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30-34세 연령층의 기혼여성 가운데는 그 다음 일의 연쇄 유형이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일한다는 유형으로 이 연령층 기혼여성의 26%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35-39세 연령층에서는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이 이 연령층 기혼여성의 25.8%를 차지한다. 이 결과로 보면 30대가 할지라도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연령층 사이에 일의 연쇄, 즉 일생에 걸친 일의 경험의 연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40대 기혼여성 가운데는 결혼 전에 일했으나 경력단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의 여성이 제일 많다. 40-44세 연령층에서는 35%, 44-49세 연령층에서는 36%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 다음이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이 각각 29%와 23%로 높다. 반면에 이 연령층에서는 결혼 전에는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의 비율이 각각 10%, 15%로 점차 높아진다.

55-59세 연령층에서는 결혼 전에도 일 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이 25%로 제일 높고, 그 다음 결혼 전에는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이 22%, 결혼 전에 일하고,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이 역시 22%, 결혼 전 일하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이 21%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의 연쇄 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들은 결혼 전에도 일하고, 경력단절도 없었고, 지금도 일하는 유형이 42%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19%)과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19%)이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반면에 4년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들은 결혼 전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이 31%로 제일 높다. 그 다음은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고, 지금도 일한다는 유형이 25%,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이 23%로 나타난다.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없이 지금도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일을 안했는데, 지금은 일을 하거나 지금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고졸 학력의 기혼여성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이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결혼 전 일을 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이 27%로 뒤를 잇는다.

<표 5-13> 지역별 일의 연쇄(2)

지역	결혼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결혼전 일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안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전 일했지만 경력단절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시도						
서울	12.6	12.0	19.1	4.1	25.1	27.2
부산	15.8	13.0	13.1	3.2	26.5	28.5
대구	15.4	13.2	12.9	3.2	27.0	28.2
인천	12.4	11.8	13.1	3.8	29.4	29.5
광주	15.9	13.4	14.9	3.5	26.4	25.8
대전	13.1	12.1	14.8	3.7	27.9	28.5
울산	15.7	12.3	10.6	3.6	24.5	33.4
세종	9.9	12.3	19.5	4.2	25.9	28.3
경기	11.2	11.8	14.2	3.7	29.2	29.9
강원	14.4	17.4	13.6	3.0	29.3	22.3
충북	13.0	16.6	12.9	3.0	30.5	24.0
충남	11.8	17.7	12.2	3.0	30.1	25.2
전북	17.1	19.0	13.0	2.9	26.1	22.0
전남	16.2	22.6	11.0	2.5	26.1	21.7
경북	14.8	19.4	10.5	2.8	27.8	24.8
경남	13.1	15.1	11.8	3.1	29.7	27.1
제주	9.6	19.0	17.6	2.8	33.6	17.5
동/읍면						
동부	13.1	12.3	15.0	3.6	27.5	28.6
읍면부	13.6	21.8	11.0	2.8	29.2	21.6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혼 전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농촌보다 높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고, 지금도 일하는 여성이 농촌지역보다 조금 높다.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결혼 전에는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을 일한다는 경우가 도시지역보다 높다. 이런 점은 여성의 삶이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간단하게 도시/농촌 등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알려준다.

3.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와 일의 연쇄(2)

이 연구에서 우리의 최종 관심은 여성의 일의 경험과 출산력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출산력은 30대와 40대에 집중되고 있다. 20대도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현 시점에서 20대에 결혼하는 경우는 오히려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되고 있고, 이들은 일의 경험이 30대,

40대의 일의 경험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일의 경험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30대 기혼여성과 40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이유 및 일의 연쇄를 살펴보고 한다.

1) 30대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그리고 경력단절 이유

30대 기혼여성은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그리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어떤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을까? 다음 <표 5-14>는 30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를 보여준다.

<표 5-14> 30대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이유

	결혼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험	경력 단절 이유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취학 전 아동)	교육 (취학 자녀)	가족 돌봄 (부모 등)
혼인상태							
유배우	86.4	69.5	42.7	45.3	9.4	1.4	1.3
사별	68.0	75.5	51.3	34.0	8.5	2.3	3.9
이혼	76.4	73.6	51.4	39.1	6.2	1.2	2.1
교육수준							
중졸	50.2	79.3	55.4	35.2	4.8	0.8	3.8
고졸	80.5	80.5	48.8	41.4	6.8	1.3	1.7
2년제	90.5	76.1	41.3	46.7	9.6	1.3	1.1
4년제	88.8	60.2	39.4	47.0	11.2	1.4	1.0
대학원이상	88.1	44.8	31.5	51.1	14.0	2.3	1.1
동/읍면							
동부	86.8	68.5	41.4	46.1	9.8	1.4	1.3
읍면부	81.2	76.5	51.6	39.3	6.7	1.0	1.4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30대 기혼여성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으면 결혼 전 직장경험이 88~90%에 이른다. 같은 30대 기혼여성이라 할지라도 교육수준이 중졸이면 결혼 전 직장경험이 50%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이 농촌지역 여성보다 조금 더 높다.

결혼 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단절의 경험을 교육수준으로 살펴보면, 중졸이나 고졸 학력의 30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이 79~80%로 매우 높다. 2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이 비율이 76%로 낮아지고, 4년제 대학의 학력이면 60%,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이면 45%로 다시 크게 낮아진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경력단절 이유도 같은 30대 기혼여성이라 할지라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으로 인한 경

경력단절의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또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증가한다. 같은 30대라도 이처럼 교육수준에 따라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경력단절의 이유도 매우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 직업의 위세나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의 상이한 이유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30대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30대 기혼여성들 가운데에서 일의 연쇄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사별이나 이혼한 기혼여성들이 유배우 기혼여성들에 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에 관계없이 지금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유배우 기혼여성보다 높다. 사별 혹은 이혼상태의 30대 기혼여성들 가운데는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이 가장 높다. 반면에 30대 유배우 기혼여성들 사이에는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이 제일 많다.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30대 기혼여성들 사이에서는 경력

<표 5-15> 30대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2)

	결혼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결혼전 일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결혼전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안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전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혼인상태						
유배우	7.4	6.2	22.4	3.9	21.3	38.8
사별	16.9	15.0	14.2	2.5	36.7	14.7
이혼	7.9	15.7	17.5	2.7	40.8	15.5
교육수준						
중졸	26.1	23.8	6.8	3.6	18.2	21.6
고졸	10.6	8.9	12.1	3.7	26.1	38.6
2년제	5.0	4.5	18.1	3.5	25.7	43.2
4년제	6.0	5.2	31.1	4.2	17.6	35.8
대학원이상	5.3	6.6	44.2	4.5	15.2	24.3
동/읍면						
동부	7.2	6.0	23.4	4.0	21.5	38.0
읍면부	8.9	9.9	15.8	3.3	26.1	35.9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단절이 없이 계속 일하는 유형이 44.2%로 제일 높다. 그 다음이,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은 일하지 않는 유형으로 24%를 차지한다. 이 두 유형 사이에 20% 포인트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30대 기혼여성은 경력단절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지닌 30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을 경험하여 지금은 일하지 않는 유형이 36%이고, 계속 일하고 있는 유형은 31%로 두 유형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자가 더 많은 특징을 보여, 대학원 이상 학력의 동일한 연령대 기혼여성과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2년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지닌 30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지금은 일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43%로 매우 높고, 경력단절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이 2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을 경험해 지금은 일하지 않는 유형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계속 일하는 유형이 농촌지역보다 높고,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경력단절을 겪었어도 지금은 일하는 유형의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다. 이처럼 30대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에도 도시와 농촌의 지역차이가 존재한다.

3) 40대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이유

다음은 40대 기혼여성의 경험을 살펴보자.

40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2년제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전 일을 한 경우가

<표 5-16> 40대 기혼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이유

	결혼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의 이유				
			결혼	임신,출산	양육 (취학 전 아동)	교육 (취학 자녀)	가족돌봄 (부모 등)
혼인상태							
유배우	79.0	79.0	56.4	30.0	8.2	2.8	2.6
사별	69.7	79.8	63.5	25.2	6.0	1.7	3.6
이혼	72.3	77.8	60.1	28.9	5.8	1.9	3.3
교육수준							
중졸	55.8	78.7	63.1	25.1	4.9	1.4	5.5
고졸	76.1	84.3	62.4	26.8	6.0	1.9	2.9
2년제	85.3	80.9	52.4	33.3	9.1	3.0	2.3
4년제	82.5	71.5	47.7	34.6	11.6	4.0	2.1
대학원이상	83.5	47.5	36.1	37.9	16.5	7.0	2.5
동/읍면							
동부	79.1	78.6	55.4	30.8	8.4	2.8	2.7
읍면부	72.2	81.0	66.2	24.0	5.2	1.8	2.9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매우 많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결혼 전 직장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일단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40대 기혼여성 가운데도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전에 일을 한 경우,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47.5%이다. 그러나 고졸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84%로 두배는 아니지만, 매우 높게 나타난다. 40대 여성들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 둔 비율은 적게 나타나고, 반면에 임신, 출산 그리고 취학전 아동들의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 둔 비율이 점점 더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경력단절의 경험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약간 높다. 경력단절 이 유도 농촌지역에서는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6%인데 반해 도시지역에서는 55%로 거의 10% 포인트 차이가 난다.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둔 경우가 31%인데, 농촌지역에서는 이 경우에 24%로 나타난다. 40대 기혼여성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경력단절, 경력단절의 이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4) 40대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

그러면 40대 기혼여성들의 일의 연쇄는 어떻게 분포하는가? 다음 <표 5-17>은 40대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를 보여준다.

<표 5-17> 40대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2)

	결혼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결혼전 일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안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전 일했지만 경력단절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혼인상태						
유배우	9.5	11.6	13.7	2.9	34.5	27.9
사별	10.5	19.9	12.0	2.0	42.2	13.4
이혼	8.8	18.9	13.3	2.8	42.6	13.7
교육수준						
중졸	18.7	25.6	8.3	3.6	27.4	16.5
고졸	9.8	14.1	9.2	2.8	38.9	25.2
2년제	6.3	8.4	13.5	2.8	39.3	29.7
4년제	8.7	8.8	20.5	3.0	29.6	29.3
대학원이상	6.0	10.5	41.0	2.8	22.7	16.9
동/읍면						
동부	9.4	11.6	14.0	3.0	35.1	27.1
읍면부	9.7	18.1	11.4	2.3	38.5	2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40대 기혼여성 중에도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경력단절 없이 일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30대 여성보다는 약간 낮지만, 41%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은 계속 일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했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비율도 23%로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 여성의 17%에 비해 높다.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지닌 40대 기혼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지금은 일하는 경우가 30%, 지금은 일하지 않는 경우가 29%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여준다. 2년제 혹은 그 이하의 학력으로 내려갈수록 경력단절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40대 기혼여성중 중졸의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전에 일을 안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는 경우가 26%, 지금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19%로 나타난다. 또 경력단절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는 경우가 27%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16.5%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높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40대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 전 일을 했고, 경력단절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비율이 도시지역 35%, 농촌지역 39%로 제일 높다.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지금은 일하지 않는 비율이 27%인데, 농촌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로 좀더 낮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40대 기혼여성들이 일의 연쇄를 떠나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

4. 여성의 결혼 전 일의 경험, 경력단절과 평균 출산아수의 관계

이 절에서는 한국 20-59세 기혼여성들의 출산아에 관해 살펴본다.

1) 사회인구학적 차별출산력

다음 <표 5-18>은 한국 20-59세 기혼여성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평균 출산아수를 보여준다.

먼저 연령별로 평균 출산아수를 살펴보자. 50대는 이미 출산을 완료한 연령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50대 기혼여성들은 평균 1.9-2명의 출산아를 기록하고 있다. 45-49세 연령집단도 거의 출산을 완료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령집단의 평균 출산아수도 역시 1.9명이다. 그런데 역시 출산을 완료한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40-44세 연령집단에서는 평균 출산아수가 1.78명으로 45-49세 연령집단의 평균 출산아수보다 약 0.1명 적다. 아직도 출산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는, 35-39세 연령집단의 평균 출산아수는 1.6명이고, 아직 활발하게 출산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30-34세 집단의 평균 출산아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1.21명이다. 20대는 아직

<표 5-18> 20-59세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평균 출산아수

변수	평균 출산아수	N
연령		
20-24	0.74	16,779
25-29	0.81	67,999
30-34	1.21	193,587
35-39	1.63	254,863
40-44	1.78	311,726
45-49	1.88	339,490
50-54	1.91	360,365
55-59	1.99	358,988
혼인상태		
유배우	1.74	1,662,974
사별	1.92	81,790
이혼	1.64	159,033
교육수준		
중졸	1.97	310,792
고졸	1.81	857,769
2년제	1.63	260,556
4년제	1.55	412,221
대학원이상	1.50	62,459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출산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20대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아수는 0.7~0.8명을 기록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상태의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아수가 1.9명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유배우 기혼여성으로 1.7명, 이혼상태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아수는 1.6명으로 제일 낮다.

교육수준은 차별출산력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20-5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아수의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은 평균 출산아가 1.5명에 불과하다. 4년제 학력의 기혼여성은 평균 1.55명을 출산했고, 2년제 학력의 기혼여성은 1.63명, 고졸은 1.81명, 그리고 중졸 학력의 기혼여성은 평균 1.97명을 출산했다. 이처럼 교육수준과 평균 출산아수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음은 지역별로 평균 출산아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자. 다음 <표 5-19>는 지역별 평균 출산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9> 지역별 평균 출산아수

변수	평균출산아수	N
시도		
서울	1.62	312,268
부산	1.71	118,459
대구	1.76	92,180
인천	1.69	104,336
광주	1.87	54,733
대전	1.79	53,704
울산	1.75	45,477
세종	1.71	10,781
경기	1.68	455,740
강원	1.82	72,163
충북	1.83	64,978
충남	1.82	84,637
전북	1.94	76,461
전남	2.01	82,846
경북	1.81	113,814
경남	1.79	134,857
제주	1.90	26,363
동/읍면		
동부	1.71	1,481,029
읍면부	1.86	422,768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먼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평균 출산아수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의 평균 출산아수가 1.71명인데 반해, 농촌지역은 1.86명으로 아직은 농촌지역에서 더 높은 출산력을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로 나누어보면, 서울지역의 평균 출산아수가 1.62명으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제일 적다. 반면에 전남지역의 평균 출산아수는 2.01명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 1.9명 정도의 평균 출산아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 1.94명, 제주 1.90명이다. 1.8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 1.87명, 충북 1.83명, 강원 1.82명, 경북 1.81명 등으로 나타난다. 경기도는 1.68명, 인천 1.69명 등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평균 출산아수가 전국적으로 제일 낮게 나타난다.

2)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력단절 이유별 평균 출산아수

그러면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이유는 평균 출산아수와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표 5-20>을 중심으로 풀어보자.

<표 5-20>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경력단절 이유별 평균 출산아수

	평균출산아수	N
결혼전 일 여부		
결혼전 일했다	1.71	1,348,917
결혼전 일하지않았다	1.81	554,880
경력단절 여부		
경력단절 있다	1.81	1,023,422
경력단절 없다	1.41	325,495
경력단절 이유		
결혼	1.81	592,581
임신, 출산	1.80	305,925
양육(취학 전 아동)	1.89	73,327
교육(취학 자녀)	1.83	20,962
가족 돌봄(부모 등)	1.72	30,627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결혼 전에 일을 한 여성들은 평균 1.71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반면에 결혼 전 일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1.81명을 출산했다. 어쨌든 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산력이 약간 높은 것이다. 일을 했던 여성들 가운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평균 1.81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반면에 경력단절이 없었다고 보고한 여성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1.41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경력단절이 없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보다 자녀를 더 적게 낳은 것이다. 경력단절 이유와 평균 출산아수 사이에는 별 다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일의 연쇄(2)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5-21> 일의 연쇄(2)별 평균 출산아수

일의 연쇄	평균출산아수	N
1. 결혼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1.77	262,522
2. 결혼전 일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1.84	292,358
3.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1.38	261,891
4.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 안한다	1.51	63,604
5.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1.87	524,290
6. 결혼전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않는다	1.75	499,132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여섯가지의 일의 연쇄 가운데, 가장 출산력이 높은 연쇄는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기혼여성들은 평균 1.87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그 다음은 결혼 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의 여성들은 평균 1.8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전혀 다른 두 유형인데, 이 두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은 매우 비슷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 전에 일하지 않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평균 1.77명의 자녀를 낳았다. 반면에 결혼 전에 일했지만, 경력단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로, 이들도 평균 1.75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 두 유형도 전혀 다른 일의 연쇄 유형인데, 평균 출산자녀의 수는 비슷하다.

평균 출산아수가 가장 적은 유형은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이 없으며, 지금도 일하고 있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평균 1.38명밖에 출산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로 평균 1.51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표 5-22>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일의 연쇄별 평균 출산아수

변수	결혼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결혼전 일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안한다	결혼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전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고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
연령						
20-24	0.87	0.61	0.25	0.68	0.73	0.87
25-29	1.09	0.89	0.33	0.69	0.93	1.02
30-34	1.33	1.18	0.81	0.99	1.39	1.39
35-39	1.60	1.59	1.36	1.33	1.76	1.73
40-44	1.70	1.75	1.58	1.50	1.88	1.83
45-49	1.79	1.86	1.73	1.68	1.96	1.90
50-54	1.85	1.92	1.81	1.77	1.96	1.92
55-59	1.98	2.07	1.87	1.86	1.98	1.97
혼인상태						
유배우	1.78	1.85	1.37	1.50	1.89	1.75
사별	1.89	2.01	1.80	1.84	1.91	1.90
이혼	1.62	1.68	1.43	1.49	1.69	1.66
교육수준						
중졸	1.93	2.06	1.82	1.84	2.00	1.96
고졸	1.75	1.82	1.53	1.58	1.91	1.82
2년제	1.64	1.67	1.25	1.36	1.80	1.66
4년제	1.67	1.63	1.26	1.33	1.74	1.63
대학원이상	1.57	1.53	1.39	1.35	1.66	1.58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종합하면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도 없는 여성들이 제일 출산력이 낮는데, 그 안에서도 다시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도 없었으며, 지금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력이 단연 제일 낮고, 그 다음으로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여성들의 출산력이 낮은 것이다.

따라서 이 현상만을 보면 경력단절이 출산력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결혼 전에도 일을 했고, 경력단절을 피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자녀는 제일 적게 출산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살펴본 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을 막론하고, 여섯가지 일의 연쇄 유형 중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표 5-23> 일의 연쇄별, 직업별 평균 출산아수

일의 연쇄	직업	평균 출산아수
결혼 전 일 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평균 출산아수=1.84)	관리자	1.72
	전문가	1.68
	사무직	1.68
	서비스직	1.84
	판매직	1.83
	농림어업직	2.31
	기능원	1.83
	장치기계조작	1.73
	단순노무	1.90
	군인	1.04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평균 출산아수=1.38)	관리자	1.50
	전문가	1.32
	사무직	1.31
	서비스직	1.49
	판매직	1.42
	농림어업직	2.17
	기능원	1.56
	장치기계조작	1.41
	단순노무	1.65
	군인	1.26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평균 출산아수=1.87)	관리자	1.83
	전문가	1.81
	사무직	1.82
	서비스직	1.88
	판매직	1.88
	농림어업직	2.19
	기능원	1.91
	장치기계조작	1.88
	단순노무	1.93
	군인	1.67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없으며, 지금도 일하는 유형과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이 제일 낮다. 모든 각각의 연령집단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각각의 혼인상태에서도 그러하며, 모든 각각의 교육수준에서도 그러하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두 유형에 속한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연령층, 모든 혼인상태, 모든 교육수준에서도 이 두 유형에 속한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럴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직업 변수를 도입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직업 변수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상태가 “일하는” 여성만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현재 경제활동상태가 “일한다”로 동일하지만, 일의 연쇄로는 세 개의 다른 연쇄인 (1) 결혼 전 일 안했지만 지금은 일한다 (2)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3)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등의 연쇄를 골라, 이 연쇄의 직업별, 교육수준별로 평균 출산아수를 계산해보았다.

위의 표에는 군인이 나오지만, 논의에서는 군인을 제외하고 논의해본다. 결혼 전 일을 안 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평균 1.84명을 출산했다. 그런데 직업별로 나누어보면,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 가운데 직업이 전문가와 사무직인 경우의 출산력이 다른 직업보다 낮게 나타난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출산력과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할지라도, 직업위세가 비교적 높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이 유형 내에서도 출산력이 낮다.

마찬가지로 평균 출산아수가 높은,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다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평균 1.87명을 출산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는 전문가나 사무직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이 다른 직업을 지닌 여성들에 비해 그렇게 크게 낮지 않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출산력을 낮추는데 직업의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출산력이 제일 낮은 유형, 즉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이 없으며, 지금도 일하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평균 1.38명밖에 출산하지 않았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을 직업별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면, 전문가와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각각 1.32명, 1.31명을 출산했다. 반면에 이 유형에 속한 여성이지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평균 출산아수는 1.4~2.2명에 이를 정도로 자녀를 더 많이 출산했다.

즉, 세 유형 혹은 두 유형에서 직업위세가 비교적 높은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직업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속한 여성에 비해 자녀를 덜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직업은 교육수준의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하다. 각 일의 연쇄에 속한 사람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24> 각 일의 연쇄 유형에 속한 기혼여성들의 교육수준 분포

교육수준	결혼 전 일안하고 지금도 일하는 않는다	결혼 전 일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없고, 지금도 일한다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한다	결혼 전 일했지만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 일하는 않는다
(평균 출산아수)	(1.77)	(1.84)	(1.38)	(1.51)	(1.87)	(1.75)
중졸	25.9	26.9	5.8	14.4	10.6	8.4
고졸	48.3	49.1	28.0	42.0	52.4	44.8
2년제	7.6	7.7	15.8	13.8	15.8	18.4
4년제	16.5	13.7	40.0	25.8	18.9	26.0
대학원 이상	1.7	2.5	10.4	4.1	2.4	2.4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표 5-23>에서 현재 일하는 여성들이 들어 있는 세가지 일의 연쇄 유형을 골라 직업별로 평균 출산아수를 비교했을 때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이 없었으며, 지금도 일하는 여성들의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이 가장 뚜렷했다. 즉 이 유형에 속한 여성 중 전문직과 사무직의 여성들이 제일 자녀를 적게 낳았다. 이런 높은 직업위세를 지니는 것은 교육수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표 5-24>에서는 각 일의 연쇄의 교육수준 분포를 구하였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도 없었고, 지금도 일하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이 제일 낮았는데, 이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다른 어느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보다 더 높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40%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비율도 10%가 넘는다. 이 유형에 속한 50% 이상의 여성이 대학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른 유형에 속한 여성의 교육수준과 비교하면 너무도 대비가 된다. 출산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결혼 전 일했고, 경력단절 있었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지닌 여성은 19%이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은 2.4%이다. 대학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비율이 이 유형 내에서는 21%에 불과한 것이다. 역시 출산력 수준이 높은 유형인, 결혼 전에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하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 학력을 지닌 여성의 비율은 14%이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16.5%의 여성만이 대학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경력단절이 저출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의 경험, 현재 일하는지 여부를 연결하여 일의 연쇄를 구성하고, 출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유

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이 제일 낮고, 반면에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각 일의 연쇄 내에서 직업별로 출산력을 구해보니, 출산력이 제일 낮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유형에 속한 여성 중에서도 비교적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지닌 여성들이 자녀를 더 안낳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직업별로 차별적인 출산력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별 차별출산력은 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각 일의 연쇄의 교육수준별 구성을 구해보았다. 그 결과, 자녀를 제일 적게 낳는 일의 연쇄 유형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일의 연쇄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가지고, 여성의 경력단절의 경험이 출산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여부, 경력단절 이유, 그리고 출산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시도 및 도시/농촌의 지역을 통제하면서, 여성의 일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 놀랍게도 결혼 전에도 일했고, 경력단절이 없으며, 지금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과 논의가 없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직업과 교육에 따라 일의 연쇄별 출산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출산력이 제일 낮은 일의 연쇄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경우, 특히 직업위세가 비교적 높은,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각 일의 연쇄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결혼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결혼, 출산을 거치면서도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전문직이나 사무직 등 직업위세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형의 출산력 수준이 제일 낮은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학력에 경력단절도 겪지 않고 계속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력이 제일 낮은가. 우리는 여기에 답할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선행연구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비교적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갖기 쉽다. 직업 위세가 높은 직업은 소득의 측면에서서 비교적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 즉 고학력에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다. 왜 그럴까.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많은 여성이 일하다가도 일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해, 집으로 돌아와 가정주부로 자녀양육을 한다. 중단한 직업이 주는 소득이 크지만, 자녀양육을 위해 그 정도의 소득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종사한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은 소득도 비교적 높다. 만약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해 이런 좋은 직업을 포기한다면, 그 직업을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소득을 포기해야만 한다. 즉 이런 직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높은 것이다.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높으면,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도 망설이고,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쉽사리 직업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여성들은 될 수 있는대로 출산을 피하게 되고, 출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출산을 피하고, 자신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아닌, 타인이나 육아시설을 이용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한다. 그리고 자신은 쉽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회비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연구성과를 원용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일, 경력단절, 그리고 출산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교육과 직업별 분포 및 차별출산력을 구해보면, 우리는 어렵지않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면서도,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출산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경력단절을 겪으면서도 자녀를 계속 출산할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둘째,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제도, 돌봄체계가 갖추어지면, 더 많은 여성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셋째, 고학력의 비교적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을 지닌 여성들의 출산력이 제일 낮다는 사실은 한국의 출산력이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교육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들의 일에 대한 열망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으로 여성들의 진출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도 얼마든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런 여성들은 계속 결혼, 혹은 출산을 계속 회피할 것이고, 이는 한국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계속 최저출산력 수준으로 끌어내

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이런 분석에 기반해 볼 때,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체계의 향상, 여성이 마음놓고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이용한 후, 자신의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업 제도의 확립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공보육체계의 확대 및 완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도적 마련 및 실천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조남주. 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 Offer, Avner. 2006. *The Challenge of Afflu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중앙일보. 2017. 12. 11. “구멍난 돌봄에...올 신입기만 초등생 엄마 1만5000명 퇴직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91786#none>

부록

<부표 3-1> 연령별 종사상 지위: 2005-2015

	2000				2005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20세 미만	93.4	1.8	4.8	100	93.2	2.8	4.0	100
20~29	89.1	7.0	3.9	100	91.9	5.3	2.8	100
30~39	69.8	23.6	6.6	100	76.1	19.2	4.7	100
40~49	55.2	35.6	9.2	100	58.6	33.2	8.1	100
50~59	45.7	41.4	12.9	100	47.5	41.0	11.4	100
60~69	24.0	54.6	21.4	100	28.4	52.6	19.1	100
70~79	9.2	69.1	21.7	100	9.4	69.9	20.7	100
80세 이상	5.4	74.2	20.4	100	3.4	78.1	18.5	100
전체	62.3	28.7	8.9	100	64.0	28.1	7.9	100
	2010				2015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20세 미만	92.6	1.7	5.7	100	92.1	2.4	5.6	100
20~29	90.5	6.6	2.9	100	92.9	5.0	2.1	100
30~39	80.1	16.4	3.5	100	84.6	13.5	1.9	100
40~49	65.2	28.2	6.6	100	73.2	23.8	3.0	100
50~59	54.2	34.9	10.9	100	62.6	31.6	5.7	100
60~69	40.3	41.9	17.8	100	48.8	40.9	10.2	100
70~79	21.3	53.8	24.8	100	29.2	55.3	15.5	100
80세 이상	13.6	62.6	23.8	100	16.1	69.1	14.8	100
전체	67.2	25.1	7.6	100	72.2	23.4	4.4	1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부표 3-2> 연령별 직업 구조: 2010

	2010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전체
관리자	0.1	0.9	2.8	4.0	3.0	1.8	1.0	1.1	2.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7	30.3	27.2	17.3	11.3	6.3	3.0	2.5	19.1
사무 종사자	9.8	24.6	22.4	15.2	9.7	4.2	2.0	1.1	15.9
서비스 종사자	26.2	10.5	7.9	10.8	12.1	7.1	2.5	1.5	9.8
판매 종사자	21.1	12.2	11.7	13.3	12.1	9.4	6.0	4.3	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	1.1	1.7	4.2	11.5	32.8	64.6	77.3	8.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	5.5	8.5	10.8	10.9	5.9	1.6	0.4	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9.1	11.1	14.1	14.5	9.3	2.5	0.5	11.9
단순노무 종사자	18.8	5.1	6.1	9.9	14.7	23.1	16.9	11.4	10.5
기타	0.0	0.6	0.7	0.3	0.2	0.0	0.0	0.0	0.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부표 3-3> 연령별 직업 구조: 2015

	2015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전체
관리자	0.1	0.2	1.3	2.0	2.1	1.3	0.5	0.6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6	31.4	29.5	22.1	13.6	7.6	4.1	3.2	21.0
사무 종사자	13.4	23.1	24.0	19.1	12.5	6.4	2.9	1.5	17.4
서비스 종사자	29.6	12.2	8.0	10.1	13.0	10.8	5.0	2.1	10.6
판매 종사자	17.7	11.7	12.2	13.2	11.9	9.0	6.1	4.3	1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5	0.5	0.8	1.8	5.5	17.0	42.6	47.7	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8	5.7	8.0	10.4	12.1	9.4	2.8	0.9	9.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1	8.6	10.4	12.8	15.2	13.5	5.2	1.0	12.0
단순노무 종사자	16.9	5.3	5.1	8.1	14.0	25.1	30.8	38.8	10.9
기타	0.2	1.1	0.7	0.5	0.1	0.0	0.0	0.0	0.5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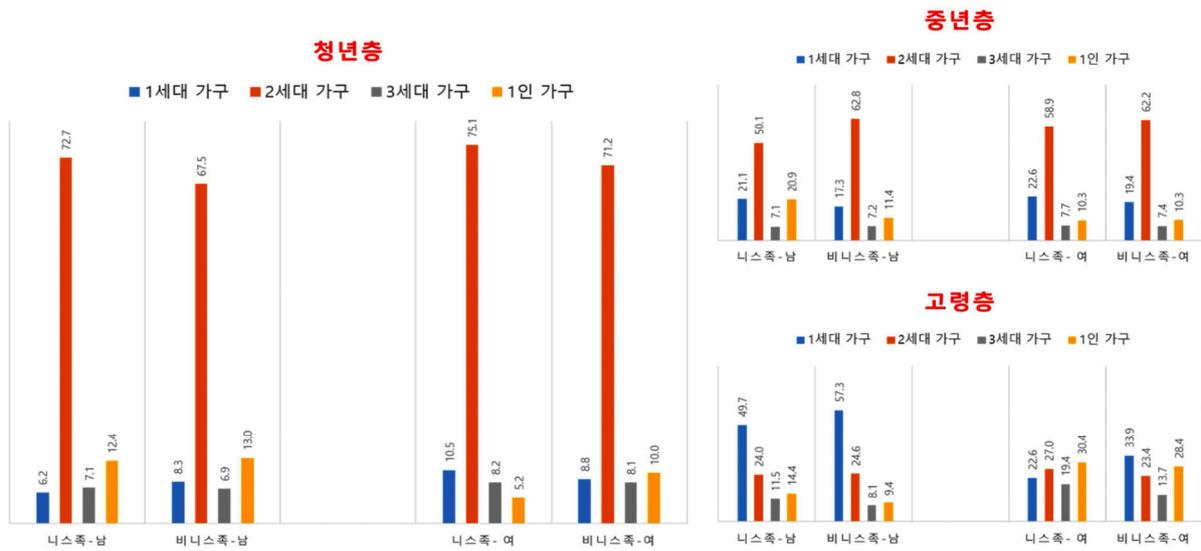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조사 원자료

<부표 3-4>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교육 수준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니스		비니스		니스		비니스		니스		비니스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받지않았음(미취학포함)	74.7	84.4	25.3	15.6	63.8	60.8	36.2	39.2	70.7	79.0	29.3	21.0
초등학교	-	-	-	-	27.6	40.1	72.4	59.9	54.3	66.6	45.7	33.4
중학교	6.6	13.6	93.4	86.4	20.2	36.0	79.8	64.0	49.5	61.9	50.5	38.1
고등학교	11.7	23.9	88.3	76.1	12.5	29.5	87.5	70.5	45.9	57.4	54.1	42.6
대학교(2,3년제)	9.3	24.6	90.7	75.4	7.6	22.8	92.4	77.2	40.0	45.6	60.0	54.4
대학교(4년제 이상)	8.2	18.4	91.8	81.6	7.4	24.0	92.6	76.0	41.4	47.6	58.6	52.4
대학원 이상	4.4	14.5	95.6	85.5	4.2	12.3	95.8	87.7	27.0	32.4	73.0	67.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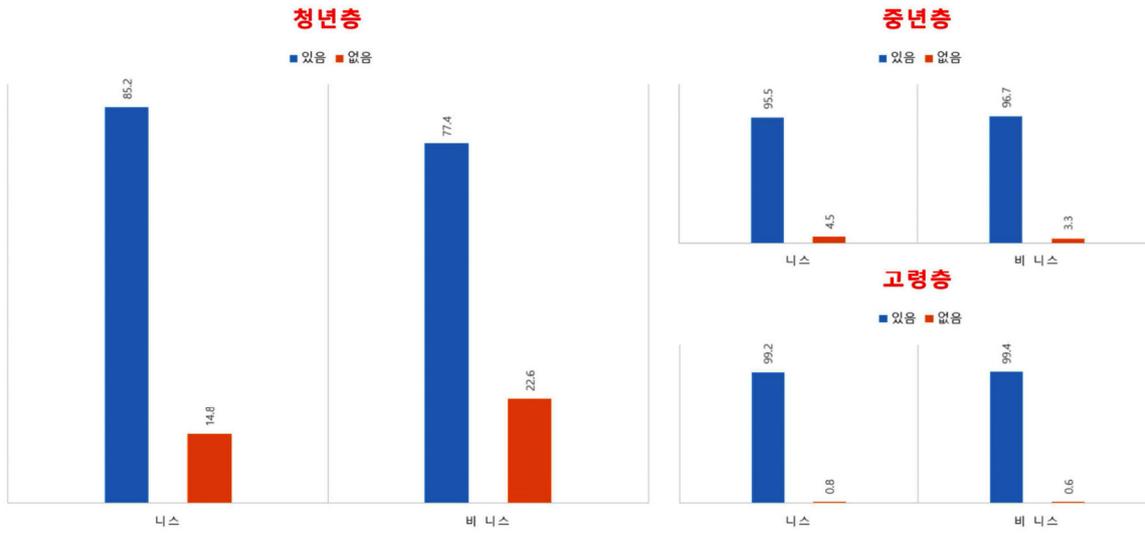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부록 그림 3-1>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주요 특성 비교 - 가구 유형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부록 그림 3-2> 니스족과 비니스족의 주요 특성 비교 -출산경험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부표 4-1> 지역별 고령 가구 분포 (고령자 가구주/가구원/고령자비포함)

	고령자 가구주	고령자 가구원	고령자 비포함 가구	전체
서울특별시	742,050	175,347	2,868,036	3,785,433
%	19.6	4.63	75.77	100.0
부산광역시	318,919	63,313	953,751	1,335,983
%	23.87	4.74	71.39	100.0
대구광역시	195,989	43,934	688,625	928,548
%	21.11	4.73	74.16	100.0
인천광역시	182,004	54,384	809,071	1,045,459
%	17.41	5.2	77.39	100.0
광주광역시	109,143	21,677	436,451	567,271
%	19.24	3.82	76.94	100.0
대전광역시	99,599	25,174	457,880	582,653
%	17.09	4.32	78.59	100.0
울산광역시	62,680	16,429	344,293	423,402
%	14.8	3.88	81.32	100.0
세종특별자치시	12,651	3,626	58,940	75,217
%	16.82	4.82	78.36	100.0
경기도	740,403	243,434	3,400,468	4,384,305
%	16.89	5.55	77.56	100.0
강원도	163,183	34,974	407,970	606,127
%	26.92	5.77	67.31	100.0
충청북도	146,109	31,198	424,437	601,744
%	24.28	5.18	70.53	100.0
충청남도	210,061	43,529	542,519	796,109
%	26.39	5.47	68.15	100.0
전라북도	215,980	34,631	466,855	717,466
%	30.1	4.83	65.07	100.0
전라남도	261,092	34,685	424,967	720,744
%	36.23	4.81	58.96	100.0
경상북도	309,202	52,769	700,712	1,062,683
%	29.1	4.97	65.94	100.0
경상남도	297,328	56,131	904,784	1,258,243
%	23.63	4.46	71.91	100.0
제주특별자치도	52,388	10,140	157,816	220,344
%	23.78	4.6	71.62	100.0
Total	4,118,781	945,375	14,047,575	19,111,731
%	21.55	4.95	73.5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부표 4-2> 지역별 고령자 가구 유형 분포

	1인가구	부부가구	고령자+미혼자녀	고령자+자녀+손자녀	고령자+기혼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확대가족	비친족가구	Total
서울특별시	224,364	233,938	173,024	23,463	7,791	13,868	63,062	2,540	742,050
%	30.2	31.5	23.3	3.2	1.1	1.9	8.5	0.3	100.0
부산광역시	112,294	106,968	59,502	6,471	2,511	6,934	23,606	633	318,919
%	35.2	33.5	18.7	2.0	0.8	2.2	7.4	0.2	100.0
대구광역시	71,208	66,568	32,639	4,602	1,912	4,404	14,295	361	195,989
%	36.3	34.0	16.7	2.4	1.0	2.3	7.3	0.2	100.0
인천광역시	60,357	59,624	34,226	4,886	1,876	4,257	16,288	490	182,004
%	33.2	32.8	18.8	2.7	1.0	2.3	9.0	0.3	100.0
광주광역시	41,476	37,788	17,103	1,946	975	2,706	7,050	99	109,143
%	38.0	34.6	15.7	1.8	0.9	2.5	6.5	0.1	100.0
대전광역시	33,915	36,005	15,886	2,528	1,069	2,531	7,440	225	99,599
%	34.1	36.2	16.0	2.5	1.1	2.5	7.5	0.2	100.0
울산광역시	22,538	21,659	10,358	1,444	588	1,492	4,467	134	62,680
%	36.0	34.6	16.5	2.3	0.9	2.4	7.1	0.2	100.0
세종특별자치시	4,259	4,850	1,552	395	233	256	1,043	63	12,651
%	33.7	38.3	12.3	3.1	1.8	2.0	8.2	0.5	100.0
경기도	246,601	256,815	122,996	21,671	9,144	16,098	64,503	2,575	740,403
%	33.3	34.7	16.6	2.9	1.2	2.2	8.7	0.4	100.0
강원도	68,479	56,637	17,730	3,331	2,426	3,573	10,609	398	163,183
%	42.0	34.7	10.9	2.0	1.5	2.2	6.5	0.2	100.0
충청북도	58,113	52,872	15,774	3,428	2,116	3,123	10,312	371	146,109
%	39.8	36.2	10.8	2.4	1.5	2.1	7.1	0.3	100.0
충청남도	83,777	77,787	20,032	5,511	4,152	4,467	13,711	624	210,061
%	39.9	37.0	9.5	2.6	2.0	2.1	6.5	0.3	100.0
전라북도	90,863	75,953	23,459	4,314	3,118	4,523	13,450	300	215,980
%	42.1	35.2	10.9	2.0	1.4	2.1	6.2	0.1	100.0
전라남도	116,715	92,154	22,878	4,584	4,389	5,252	14,674	446	261,092
%	44.7	35.3	8.8	1.8	1.7	2.0	5.6	0.2	100.0
경상북도	131,983	110,821	29,628	6,149	5,376	5,578	18,730	937	309,202
%	42.7	35.8	9.6	2.0	1.7	1.8	6.1	0.3	100.0
경상남도	127,113	100,058	33,283	6,637	3,956	6,082	19,420	779	297,328
%	42.8	33.7	11.2	2.2	1.3	2.1	6.5	0.3	100.0
제주특별자치도	19,683	16,375	8,131	1,482	553	1,289	4,745	130	52,388
%	37.6	31.3	15.5	2.8	1.1	2.5	9.1	0.3	100.0
Total	1,513,738	1,406,872	638,201	102,842	52,185	86,433	307,405	11,105	4,118,781
%	36.8	34.2	15.5	2.5	1.3	2.1	7.5	0.3	100.0

<부표 4-3> 노노(老老)가구 지역별 분포, 2015

	비노노가구	노노가구	1인가구	전체
서울특별시	517,470	175,563	224,364	917,397
%	56.4	19.1	24.5	100.0
부산광역시	196,070	73,868	112,294	382,232
%	51.3	19.3	29.4	100.0
대구광역시	120,266	48,449	71,208	239,923
%	50.1	20.2	29.7	100.0
인천광역시	133,400	42,631	60,357	236,388
%	56.4	18.0	25.5	100.0
광주광역시	61,617	27,727	41,476	130,820
%	47.1	21.19	31.7	100.0
대전광역시	64,017	26,841	33,915	124,773
%	51.3	21.5	27.2	100.0
울산광역시	42,829	13,742	22,538	79,109
%	54.1	17.4	28.5	100.0
세종특별자치시	8,307	3,711	4,259	16,277
%	51.0	22.8	26.2	100.0
경기도	545,849	191,387	246,601	983,837
%	55.5	19.5	25.1	100.0
강원도	87,904	41,774	68,479	198,157
%	44.4	21.1	34.6	100.0
충청북도	79,024	40,170	58,113	177,307
%	44.6	22.7	32.8	100.0
충청남도	109,453	60,360	83,777	253,590
%	43.2	23.8	33.0	100.0
전라북도	103,089	56,659	90,863	250,611
%	41.1	22.6	36.3	100.0
전라남도	108,951	70,111	116,715	295,777
%	36.8	23.7	39.5	100.0
경상북도	146,861	83,127	131,983	361,971
%	40.6	23.0	36.5	100.0
경상남도	154,661	71,685	127,113	353,459
%	43.8	20.3	36.0	100.0
제주특별자치도	29,891	12,954	19,683	62,528
%	47.8	20.7	31.5	100.0
Total	2,509,659	1,040,759	1,513,738	5,064,156
%	49.6	20.6	29.9	100.0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부표 4-4> 제약 여부를 바탕으로 한 연령별, 성별 건강한 노년층의 분포, 2015년

신체/정신적 제약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남성	비율	0.87	0.79	0.7	0.58	0.43
	N	1,016,097	786,755	542,332	267,138	125,071
여성	비율	0.81	0.71	0.59	0.47	0.33
	N	1,104,072	964,958	789,254	508,442	344,683

일상/사회 생활 제약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남성	비율	0.93	0.89	0.82	0.72	0.57
	N	1,016,097	786,755	542,332	267,138	125,071
여성	비율	0.91	0.83	0.73	0.61	0.45
	N	1,104,072	964,958	789,254	508,442	344,683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세부과제 2

등록센서스 패널 구축 방안 연구

- I. 인총패널
 - II.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
 - III. 인총패널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출 방안
 - IV. 2015년 기반 등록센서스 2% 자료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I. 인총패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인총)는 이전의 가구 방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자료와 등록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총조사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5년 주기의 총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총 자료를 패널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의 연구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015년 등록센서스 방식에서의 전환은 인구 및 가구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5년 주기의 가구 방문 조사로 실시되었던 기존의 인총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생애과정에 대한 종단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행정자료에 바탕을 둔 등록센서스로의 전환은 개인의 생애과정 혹은 가구단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종단적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위해 획기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구패널(혹은 가구패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인구(혹은 가구)패널을 구축을 위한 패널 설계 방안을 연구해 인구(혹은 가구)패널을 구축해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제공된 패널 분석을 위한 가중치 산출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시범적으로 가능한 패널 분석을 수행하여 패널자료의 활용성 증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의 방식에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대규모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는 등록센서스로 전환이후 매년 행정자료 및 등록자료 기반의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등록센서스 자료의 표본을 구축하여 이 자료를 매년 공표한다면 과학적, 정책적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등록센서스 패널 자료의 구축을 위해서 다음에 중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패널 작성 규칙, 변경·추적관리 방안 연구
- 패널 구축 규모 산정 및 가중치 산출방안 등 연구
- 2% 패널에 대한 시범 분석 연구
-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주제,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연구

3. 연구 방법

2015년 인총자료 기반의 인총 패널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인총 패널 구축을 위해 사례를 검토하여 인총패널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에서는 외국의 인구패널 및 국내 대표적인 패널조사 사례인 한국노동패널의 사례를 찾아보고, 국내외 패널조사의 패널 구축,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인총 패널 구축을 표본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총 패널 구축을 위한 크기 결정 및 지역별 배분의 패널 규모 결정, 패널 추출방안 등 패널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패널 설계에서 원가구원 및 비원가구원의 유입 등 패널조사에서의 패널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적절한 가중치 산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 인구(혹은 가구)패널 자료를 통해 시범적으로 가능한 패널 분석을 수행해 본다.

넷째, 인구패널 구축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중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한 사항 및 인총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주제,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방안을 찾아 제안한다.

4. 기대효과

2015년 인총 패널 구축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등록센서스 자료에 대한 표본 자료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인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

대부분의 패널조사는 직업 이동 및 고용의 변화, 복지 변동, 소비자 행동 및 태도 변화 등 특정한 목적 하에서 고정된 패널을 장기간 추적하여 조사 결과의 변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패널조사에서는 패널의 고유한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항에 대해 장기간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패널 특성의 변화가 특정 문항의 결과 변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패널조사에서는 고정된 패널을 추적하고, 동일한 문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패널 관리 및 측정 문항의 조사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는 장기적인 조사 기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의 탈락, 거부 및 추적 실패 등의 이유로 인한 패널 마모가 발생되고, 모집단 커버리지의 개선, 특정 계층이나 그룹의 모집단 변화 반영 및 표본크기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표본을 조정(refresh)하거나 추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 패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패널이다. 패널에 제공되는 정보는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등의 가구특성과 성, 연령 등의 개인 특성 자료이다. 등록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품질이 확보된 자료이다. 인구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설계뿐만 아니라 인구 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인구 패널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다른 자료에서의 분석을 위한 배경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축 방안보다는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를 찾아 패널 구축 방안, 패널 관리 및 추적 방안, 그리고 패널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인구 패널과 같이 등록 자료 기반의 패널 사례나 가구 및 인구 정보만을 제공하는 패널 사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인구 패널 구축에 필요한 방안과 활용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인구패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국내외 패널 조사 사례를 검토하여 패널 구축 방안, 패널 관리 및 추적 원칙, 패널 활용 방안 등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총조사 자료의 패널화 사례 및 패널조사 사례 검토를 기초로 하여 추가적으로 패널 규모의 적절성 검토 및 패널 구축 방안, 모수 추정을 위한 패널 가중치 산출 방안, 201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패널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하게 된다.

1. 인구주택총조사 종단자료 구축 및 활용 사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모집단의 가구, 가구원, 주택에 대한 전수 자료를 제공한다. 총조사 자료는 일반적인 표본조사처럼 목적성 조사 자료라기보다는 모집단에 대한 기본 특성을 위주로 수집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총조사 자료는 국가 차원의 기본 정보 및 다른 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되는 정도로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조사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집된 총조사 자료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종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널리 수행되고 있다. 종단 연구를 위해 고정된 패널을 추출하여 장기적 추적을 통해 종단 자료를 수집해 표본 특성 변화에 기초한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는 상황이다. 횡단 연구에서는 결과 변수의 변동만을 주된 연구 주제로 설정하지만 종단 연구에서는 표본 특성 변화 및 결과 변화에 대한 미치는 종단적 전이 효과 및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 및 표본을 대상으로 종단 자료 수집을 위한 패널조사가 널리 수행되고 있다.

총조사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행되므로 총조사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모집단에 대한 5년 주기의 모집단 특성 변화에 대한 자료를 종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2015년부터 행정자료기반의 등록센서스로 자료수집방법을 변경하면서 1년 주기의 종단 자료 생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조사 자료 연계 및 1년 주기의 자료 연계를 통해 총조사 자료에 대한 종단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집단 전체를 패널화하면 활용도가 높아지겠지만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 종단 자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통계청에서는 모집단 일부(현재 2% 정도)를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인구 패널의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종단 자료를 패널화하여 제공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호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총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종단화하여 모집단 변화에 대한 부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다른 조사 자료나 행정 자료와 연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총조사 자료를 연계해하여 모집단 전체를 패널화한 종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조사나 행정 자료와 연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 영국

영국 통계청은 총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974년부터 총조사 자료의 연계 방안

을 검토한다. 총조사 자료의 연계뿐만 아니라 총조사 자료와 여성 출산 및 영아 사망, 암등록여부, 배우자의 사망 여부 등의 생애 사건(vital event) 자료와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총조사는 10년 주기이고, 생애 사건 자료는 1년 혹은 6개월 주기로 자료를 수집한다. 생애 사건 자료는 사망, 이민, 군복무 등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출생, 영아 및 배우자의 사망, 암 등록 여부는 사건 발생 즉시 자료를 수집해 관리되는 자료이다.

영국 통계청은 1971년 실시된 총조사 자료로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 중 1%를 추출하여 패널화한다. 1971년 총조사 자료에서 1년 중 특정한 4일(예: 1.1, 4.1, 7.1, 10.1)에 출생한 사람(약, 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해당)을 선택하여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종단자료를 생성을 위해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 등록자료의 개인식별번호(8자리)를 사용하여 총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종단 자료를 생성한다. 이 때, NHS의 개인식별번호가 없으면 종단 자료를 생성하지 않는다. 1976년 시점에서 보면, 1971년 총조사로부터 추출된 패널의 96.8%가 연계되었다.

이후 1971-1981년, 1981-1991년 총조사 연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패널화하여 종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에는 특정 4일에 출생한 가구원이나 개인이 포함된 가구를 패널 가구로 추출한다. 패널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과 개인에 대한 NHS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된 사람에게 한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총조사 자료와 NHS 등록자료를 연계하여 종단 자료를 구축한다. 1971년 이후 출생자와 이민자는 신규 NHS 등록자로 처리해 기존 종단자료에 추가된다. 연계 결과는 정확연계 비율이 1971-1981년은 91%, 1981-1991년은 90%이다. 정확연계를 위해 사용한 변수는 이름, 주소, 생일, 성별 및 지역코드 등이다.

영국은 1971년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특정 4일 출생한 사람이 속한 가구 및 가구원을 패널로 구축하여 10년 주기의 총조사 자료 연계 및 1년 주기의 생애 사건 자료를 연계한 총조사 패널을 구축하여 종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호주

호주 통계청은 2006년 종단 총조사 자료(statistical longitudinal census dataset)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2011년 총조사 자료와 통계적 연계 방법을 통한 연계 자료를 구축하여 총조사의 종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총조사 자료의 연계를 위해 2005년 시험조사와 2006년 총조사 자료의 연계를 위한 시범 작업을 수행하여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름, 주소 및 나이 등 항목 표준화 과정을 통해 연계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계 과정에서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및 나

이의 비교 횟수 증가 등 연계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성별을 블록화 변수로 우선 설정하여 자료를 연계하였다. 또한 주소는 개별 주소대신 30~60개의 거처로 생성한 약 30만개의 메쉬 블록(mesh block)을 연계 변수로 사용하였다.

호주 통계청의 총조사 연계 결과는 2006년 총조사 자료에 대한 시범 연계에서 2006년 979,661명을 2006-2011년 총조사 자료와 연계한 결과 800,759명이 연계되어 연계율이 81.7%이고, 정확 연계율은 77%라고 한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 통계청은 2012년에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종단 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교육과 고용 및 직업 활동의 패턴에 대한 연계를 통한 고용 및 직업의 결정 요인 분석, 세대간 전이 효과 분석, 인구학적 특성인 출생, 사망 자료와의 연계, 이주 자료와의 연계를 위해 총조사 자료를 패널화하여 종단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서는 매 5년 주기의 총조사 자료에 대해 2006년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01년, 1996년 및 1991년 총조사 자료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연계 방법은 호주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확연계와 확률적 연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연계해 종단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정확 연계를 위한 변수로는 생일(출생일자), 성별, 5년전 거주지의 변수를 사용하였고, 정확 연계가 되지 않는 자료는 생일, 성별 및 5년전 거주지 항목에 대한 확률적 연계를 통한 대체 자료로 종단 자료를 생성한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총조사 자료 연계 결과는 2006-2001년의 정확 연계가 70.3%, 2006-1996년의 정확 연계가 54.5%, 2006-1991년의 정확 연계가 45.4%, 2006-1985년의 정확 연계가 38.6%이다. 2006년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기간이 오래 경과될수록 총조사 사이의 자료 연계에 대한 정확연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시사점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실시된 총조사 자료의 연계를 통한 종단 자료 생성 결과를 보면,

첫째, 총조사 기반의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종단 자료 생성 및 다른 행정 자료 및 조사 자료와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종단 자료 생성을 주된 목적으로 총조사 기반의 패널 종단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총조사 패널 활성화 증대를 위해 총조사 기반의 패널화보다는 다른 조사와의 추가적인 연계를 통해 총조사 자료 기반의 종단 자료를 생성하여 총조사 패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패널에 대한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자료만을 종단 자료로 생성하기 보다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패널)에 대해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후, 다른 행정 자료나 조사 자료를 연계한 2차적인 추가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총조사 자료의 패널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총조사 패널화의 주된 목표는 모집단에서의 인구학적, 주거 지역 및 형태 등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집단 자체에 대한 총조사 패널의 종단 자료라기보다는 다른 행정 자료 및 조사 자료의 종단 자료 구축에 연계가 가능한 인구학적, 거주지 및 가구 변화 특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패널을 추출하여 총조사 자료 기반의 종단 자료를 생성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모집단 2% 크기의 표본을 패널로 추출해 총조사 항목 중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및 5년 전 거주지 특성 등 매우 제한적인 총조사 항목만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수준에서 인구 패널화 구축 및 종단 자료를 생성해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국가별 통계청에서 구축한 총조사 기반의 종단 자료 구축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통계청에서 검토하는 인구 패널에 대한 패널 대상 선정 기준, 패널 구축 목적, 종단 자료 생성 방안 및 패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및 5년 전 거주지 특성을 종단 자료로 생성하기 보다는 패널 활용성 증대를 높이기 위해 총조사 기반의 종단 자료와 경제 활동, 고용 및 직업 활동, 건강보험자료 등 다른 행정 자료나 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패널조사 사례¹⁾

2-1. 국내 사례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 KLIPS의 조사 개요

현재 수행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998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2009년(1998표본 12차조사)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

1)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는 연구자들이 이미 수행한 패널조사 연구 과제(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에서 검토한 국내사례(노동패널조사)와 해외 패널조사 사례 부분을 인용함.

다. 통합 패널은 장기간 추적조사를 수행함에 따른 패널 탈락, 참여 거부 증가 및 추적 실패 등의 표본마모를 보완하고, 변화된 모집단 구조 반영하기 위해 2009년에 표본을 증가한 것이다. 패널 관리 원칙을 보면, 패널의 해외 이주 및 섬지역으로의 이사 등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패널 가구의 이사, 패널 가구원에 의한 분가 및 합가 등 모든 조건에서 추적하고, 또한 패널 가구원의 결혼, 패널 가구원의 결혼에 의한 출생과 사망도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패널 가구원과 비패널 가구원을 관리하는 등 패널 가구를 기준으로 패널을 관리한다.

KLIPS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위해 종단면 및 횡단면 패널 가구원 및 패널 가구 가중치를 부여한다. 종단면 가중치는 패널 가구원을 기준으로 패널 구축 시점(원패널과 통합패널)의 모집단을 기준으로 패널의 탈락 및 무응답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횡단면 가중치는 패널 가구원뿐만 아니라 비패널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의 모집단(추계 가구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출한다.

KLIPS는 기본적으로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소비와 개인의 노동시장 활동을 장기간, 그리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 노동시장, 고용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1) 1998표본의 설계 개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998년 당시 도시거주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정된 표본을 추출하여 시작한 조사이다. 목표모집단은 1998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으로 정의하고, 대상 모집단과 표본틀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개 조사구 중 제주도와 군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19,025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 조사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1단계에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각 조사구 내에서는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대상 가구 중 5가구를 무작위 추출하는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원표본가구를 추출하고, 표본가구내 15세 이상의 가구원과 동거인 전체를 표본개인으로 추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예산상의 제약문제로 1997년 통계청이 수행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가구가 선정되도록 매칭하였다. 1차 조사에서 조사에 동의한 5,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원표본 가구로 정의한다. 표본가구내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은 13,321명이다.

(2) 2009 추가표본의 설계 개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원표본내 원표본가구원의 독립, 원가구원의 일부 이주 및 분가 등

에 관계없이 추적이 가능하면 계속 추적조사하는 것을 추적 원칙으로 설정하고, 또한 원가구원에 의한 출생 및 원가구원의 사망 등도 반영함으로써 모집단 규모 및 구조 변화를 고려해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표본은 도시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패널이 농촌지역으로의 이주하고, 또한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체 모집단에 대한 분석 요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장기간 관리된 원표본에 대한 추적 실패 및 참여 거부 등 패널 이탈로 인한 표본마모가 발생하여 표본 구조와 모집단 구조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본 추가가 요구되었다.

<표 1-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차수별 표본 현황

조사 차수	전체 표본			1998 표본						통합표본					
	조사 대상 가구	조사 성공	가구원자 수	조사 대상 원가구-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1)	원표본 가구수 2)	원표본 유효율 3)	분가 가구	가구원자 수 4)	조사 대상-원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5)	원표본 가구수 6)	원표본 유효율 7)	분가 가구	가구원자 수 8)
1 차('98)	5,000			5,000	5,000	5,000	100.0	-	13,321						
2 차('99)	5,000			5,000	4,507	4,378	87.6	129	12,037						
3 차('00)	5,256			5,000	4,266	4,044	80.9	222	11,205						
4 차('01)	5,435			5,000	4,248	3,866	77.3	382	11,051						
5 차('02)	5,634			5,000	4,298	3,798	76.0	500	10,966						
6 차('03)	5,839			5,000	4,592	3,862	77.2	730	11,541						
7 차('04)	6,055			4,949	4,761	3,862	77.2	899	11,661						
8 차('05)	6,262			4,935	4,849	3,822	76.4	1,027	11,580						
9 차('06)	6,472			4,914	5,001	3,820	76.4	1,181	11,756						
10 차('07)	6,730			4,899	5,069	3,775	75.5	1,294	11,855						
11 차('08)	6,936			4,862	5,116	3,709	74.2	1,407	11,734						
12 차('09)	8,602	6,721	14,489	4,832	5,306	3,657	73.1	1,649	11,739	6,721	6,721	6,721	100.0	-	14,489
13 차('10)	8,763	6,683	14,118	4,802	5,379	3,606	72.1	1,773	11,582	6,694	6,398	6,232	92.7	166	13,641
14 차('11)	9,059	6,686	13,900	4,786	5,404	3,528	70.6	1,876	11,377	6,676	6,388	6,082	90.5	306	13,410
15 차('12)	9,228	6,753	14,000	4,770	5,469	3,517	70.3	1,952	11,444	6,641	6,434	6,016	89.5	418	13,427
16 차('13)	9,389	6,785	13,888	4,741	5,501	3,472	69.4	2,029	11,331	6,597	6,457	5,904	87.8	553	13,303
17 차('14)	9,600	6,838	13,169	4,741	5,552	3,451	69.0	2,101	10,757	6,589	6,493	5,840	86.9	653	12,595
18 차('15)	9,692	6,934	14,013	4,701	5,632	3,421	68.4	2,211	11,446	6,530	6,577	5,793	86.2	784	13,373

- 주 : 1) '조사성공가구' 는 1998표본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 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 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임.
 3) '원표본유효율' 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 비율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5) '조사성공가구' 는 통합표본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 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6) '원표본가구' 는 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7) '원표본유효율' 은 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8) 통합표본 중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그리하여 12차(2009년) 조사시점에서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게 된다. 추가표본을 위한 모집단은 기본적으로 98 원표본과 동일하게 정의하면서 지역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토(제주도 포함) 내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개인으로 정의하고, 표본추출틀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로 설정한다. 추가 표본 규모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과 KLIPS 표본의 동부와 읍면부의 분포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동부에서 900가구, 읍면부에서 600가구 등 모두 1500가구를 추가표본 규모로 결정해 1,415가구를 표본으로 추가한다.

2009 추가 표본은 동부와 읍면부별로 추출 과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동부에서는 기존 자료의 가구원수 분포와 주택유형별 분포가 총조사의 분포와 차이가 나므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먼저 모집단에서 조사구를 추출할 때 동부는 2005년 센서스 자료의 1-2인 가구수 및 단독주택 가구수 등 조사구별 특성치에 비례하도록, 읍면부는 조사구별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추출(Probability Proportionate Sampling)방법으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다. 추출된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각 조사구당 5개의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1,415가구를 추가표본으로 확정된 후 원표본과 결합하여 통합표본(the integrated sample)을 구축한다. 2009년에 추가표본을 추출하여 통합표본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1998표본은 1998표본의 원표본여부에 관계없이 2009년에 조사한 모든 가구 및 가구원을 통합표본의 원표본으로 추가한다. 2009년 조사에서는 1998표본은 12차(2009년)조사로, 통합표본은 1차 조사로 구분하는 데, 통합표본의 원표본은 6721가구, 가구원 14,489명이다.

따라서 2009 통합표본은 1998원표본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만 2009 통합표본은 기본적으로 1998표본을 전국으로 확대한 표본이기에 1998표본의 조사설계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표본의 가중치는 1998표본과 동일한 방식과 과정을 적용하는 데, 2009년부터는 1998표본 가중치와 통합표본 가중치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한다.

(3) 표본(패널) 현황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1998표본은 18차 시점이고, 09통합표본은 7차 시점이다. <표 1-1>은 2015년까지의 표본 현황을 요약한 표이다. 2015년 조사에서 소멸가구를 제외한 조사대상 가구는 모두 9,692가구(1998표본 8,157가구, 추가표본 1,535가구)이며,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6,934가구이고, 가구원은 모두 13,373명이다.

2015년 조사의 표본 현황을 지역별(<표 1-2>)로 보면, ① 1998표본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2015년(18차) 조사에서 68.4%를 유지하고 있으며, ② 09통합표본의 원표본가구(2009년에 응답한 모든 가구: 1998표본의 원가구/분가가구 + 09 추가표본의 원가구)의 유지율은 86.2%이다.

2015년 조사 결과로부터 나타난 패널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KILPS의 표본은 약 6,500가구, 13,000여명의 가구원으로 관리되지만 이를 성별, 연령대별 및 청년, 여성(특히 경력 단절 여성 등), 비정규직 등 세분화된 특정 계층의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크기가 부족하다. 즉,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1인 가구의 청년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석하더라도 작은 표본규모로 인해 표본오차가 증가하므로 작은 오차를 갖는 추정 및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 약 1,300여명 가량 사례수가 발견되는데 이들의 노동시장이행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하거나, 비정규직 유형(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별로 분석을 할 경우 해당 사례 수가 적어 추정오차가 커지게 되기에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노동 및 고용 관련하여 가구 및 가구원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동패널의 표본규모로는 지역별 분석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표 1-2>에서 보듯이 1998표본은 설계 시점에서 100가구 이상의 응답 표본가구로 시작하였으나 이사 및 표본 마모 등으로 인한 패널의 이탈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

<표 1-2> 지역별 1998표본 원표본가구의 유지율

(단위 : %, 가구)

지역	원 표본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10 차	11 차	12 차	13 차	14 차	15 차	16 차	17 차	표본 수
전체	5,000	87.6	80.9	77.3	76	77.2	77.3	76.4	76.4	75.5	74.2	73.1	72.1	70.6	70.3	69.4	69.0	3,451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	72.9	72.4	72	71.8	71.4	69.5	69	66.7	66.5	65.9	65.7	889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2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71.2	71.4	347
대구	314	84.1	72	67.5	71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65.9	65.9	207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	64.7	66.0	64.1	98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4.8	75.2	77.2	75.5	74.5	73.5	73.8	220
광주	158	78.5	69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67.1	66.5	105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	72.4	72.4	70.7	70.7	82
경기	856	90.2	8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3.9	71.6	71.9	70.7	69.7	68.5	586
강원	130	87.7	86.2	73.8	65.4	63.8	67.7	71.5	73.8	75.4	75.4	72.3	70	71.5	70	65.4	66.9	87
충북	113	87.6	75.2	77	75.2	70.8	69.9	67.3	70.8	68.1	69	68.1	70.8	68.1	70.8	71.7	70.8	80
충남	131	91.6	87.8	84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77.1	75.6	99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9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72.4	71.9	143
전남	127	92.1	89.8	89.8	89	84.3	89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80.3	80.3	102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71.2	69.3	190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	75.7	74.3	75	73.3	74.0	216

역별 표본규모가 작아서 지역별 분석 및 통계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표본 이탈이 심해 해당 지역의 표본 크기가 100개 미만으로 작아 지역통계 생산이 불가능하다.

셋째, <표 1-1>에서 보듯이 패널의 장기화에 따른 표본이탈 및 마모의 문제, 분가가구의 추적 어려움 등으로 표본의 구조가 변화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대표본의 검토가 필요하다. 20대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분가한 경우는 추적이 어려움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표본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어 모집단 구조와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대표성 유지를 위해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2015년 기준) 모집단의 가구 및 인구 특성이 09 통합표본의 모집단인 2009년 모집단과 2016년 모집단을 비교해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게 되며, 또한 출생아 수 감소 및 청년층이 감소하는 등 모집단의 구조가 매우 많이 변화되었으며, 또한 추출틀로 사용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가장 최신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되는 현행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2-2. 해외 사례

1) 미국의 PSID

미국의 PSID(Panel Survey of Income Dynamics)는 미국의 일반 가구(가족)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와 빈곤의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68년부터 시작된 가구 단위의 패널조사로 가장 오래된 패널조사이다. PSID의 표본은 1966/1967년에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조사(SEO: 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에 근거하여 약 2천 가구의 저소득층 SEO가구를 부표본으로 추출하고, 또한 미국 전체 가구를 포함하는 표본틀로부터 횡단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표본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미국의 전체 가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원표본을 구성한다. 그 후, 매년 가구 분리로 인해 월가구원이 이동하더라도 원표본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추적하고, 표본가구에서 출생자는 적격 대상 연령이 되면 표본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PSID의 표본은 시간 경과에 대해서도 미국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미국 가족에 대한 부와 빈곤의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추출한 국가적인 확률표본인 PSID의 원표본은 독립적인 두 프레임을 사용하여 추출된 표본을 결합하여 구성한다. PSID의 원표본은 SEO 표본가구로부터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여 구성한 1872가구(SEO표본)와 미국

일반 가구의 추출틀로부터 추출한 2930가구(SRC표본)를 결합하여 구성한다. 1차 조사에서의 가구원(개인) 표본 규모는 SRC 가구원이 9,481명, SEO 가구원이 8,749명으로 모두 18,230명이다. 1차 조사에서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이유는 1960대 후반 주된 저소득계층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의 표본 규모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PSID의 개인을 추적하는 기준은 횡단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 변화에 따라서도 미국 전체 가구(가족)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PSID의 개인(가구원) 원표본은 1차 조사 시점인 1968년도 조사에 PSID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과 표본 가구원에 의해 출생 혹은 입양한 가구원도 포함하며, 개인 원표본이 가구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추적조사를 한다. 또한 가구에 대해 추적한 결과로부터 매년 변화된 가구 표본 및 인구의 가족 구성 활동(family-building activity)을 통한 분가 가구를 구성하여 표본으로 포함한다. PSID에는 비원가구원표본도 포함하는데, 1968년 이후 결혼한 원가구원의 배우자로 구성하며, 원가구원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만 추적한다. 1992년 조사에서는 1991년 이전 무응답 원가구원은 재접촉하여 접촉된 원가구원으로 포함하였고, 1993년 이전에는 18세 이하 가구원은 원가구 혹은 원가구원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구원은 추적하지 않았으나 1993년 이후에는 청년 가구원으로 추적하도록 한다. 이 때, 18세 이하의 원가구원과 함께 생활하는 비원가구원 중 성인은 동거하는 기간에는 조사하여 PSID의 표본으로 추가해 별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PSID의 최초 조사설계에서는 1968년 이후 변화된 가구 및 가구원 모집단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매 조사시점마다 출생 코호트 표본을 추가하도록 하였지만 1968년 이후 변화된 가구 및 가구원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1968년 이후 이주한 이민자 중 PSID의 원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이민자는 추적되지만 표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민자는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1968년 이후 이주한 이민자 그룹을 표본으로 추가하기 위해 1990년에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및 쿠바 등 라틴계 가구를 2043가구를 표본으로 추가해 확대한다. 이 표본 확대는 가장 많이 이민을 오는 3개국의 이민자에 대한 대표성은 확보하였지만 1968년 이후 이주한 모든 이민자에 대한 대표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이 표본은 1995년도에 중지한다. 참고로 1995년도 중지하는 시점에서 1,834가구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1997/1999년에 1968년 이후 1997년까지의 이민자그룹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가하기 위해 약 500가구(가족)를 추출하였으나 조사에 참여한 441가구를 표본에 추가하여 PSID표본을 갱신한다. 이 표본에는 1968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1969년 이후 출생한 아동, 1968년 1차 조사 시점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표본을 1997 PSID 이민자 표본(1997 PSID Immigrant Refresher Samples)이라고 부른다. 즉, 1997년도에

1968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가 증가하고, 비원가구원이 원가구로 유입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미국 가구의 구성 및 1968년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최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유입 및 이민자 표본을 추가한 것이다. 1997 이민자표본의 원가구원에 대해서도 PSID의 추적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가된 이민자 가구의 원가구원은 계속 추적하여 표본에 추가한다.

세 번째는 자녀의 결혼, 이혼 등 원가구 및 원가구원의 분가로 인해 원가구가 약 5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조사비용이 증가하고 추적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SRC와 SEO의 원가구를 1996년 8511가구에서 1997년 6303가구로 축소한다. 실제로 SEO 표본은 분가로 인한 가구의 자연적인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표본 가구는 주로 SEO표본을 감소하는 데 3964가구에서 1714가구로 2250가구를 감소한다. SEO 표본은 주로 저소득층인 아프리카 미국계 가구이므로 경제적 전이, 빈곤 및 건강 등 다른 요인에 대한 불공정한 차이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다.

PSID의 현재(2013년 기준) 표본 규모를 보면, 가구는 SRC 표본이 5,450가구, SEO 표본이 2,932가구, 이민자 표본이 681가구로 모두 9,063가구이고, 가구원(개인)은 SRC 표본이 14,562명, SEO 표본이 8,099명, 이민자 표본이 2,291명으로 모두 24,952명이다.

2) 영국 BHPS와 UKHLS

(1) BHPS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는 1991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현재는 일반 가구를 대표하도록 추출된 표본가구의 성인(16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BHPS의 표본추출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이다. BHPS의 주된 목적은 영국 내 가구 및 개인(가구원)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변화, 원인 및 결과에 대해 식별하고, 모형화하고, 예측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장래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다양한 영역과의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표준의 BHPS 표본 관리 규칙은 1998년 제정하였으며, 현재의 표본 관리 및 추적 조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조사에서 가구원(개인)의 면접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된 가구에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성인이 있는 경우는 개인 표본으로 관리하여 추적조사를 수행하는데, 2차 조사 이후 조사된 시

점에서 새로운 개인(가구원)의 유입으로 간주한다.

둘째, 독립, 이혼 등의 사유로 원가구로부터 분가한 가구가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는 새로운 가구의 모든 성인을 신규 유입된 개인 표본으로 추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함께 거주해야 한다.

셋째, 원가구원으로부터 출생하거나 혹은 신규 유입된 가구원 중 16세 미만의 아동은 16세부터 표본으로 추가한다. 참고로, 4차~7차에 11-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BYP)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각 시점에는 원표본가구원, 원가구의 식구 진입 가구원, 그리고 새로 유입된 성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BHPS의 표본은 1990년대 이후 변화한 영국의 인구(개인)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BHPS의 표본 규모는 1차 조사에서는 영국(Britain)의 250개 지역으로부터 추출된 약 5,500가구의 10,300명의 가구원(개인)이다. 1차 조사이후 모집단 대표성 확보를 위한 BHPS의 표본 추가 및 확대에 대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7차 조사)에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부표본을 위한 저소득층 표본을 추가하여 운영하다가 2001년(11차 조사)에 중지하였고,

둘째, 1999년(9차 조사)에 지역별 개별 분석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상대적으로 표본 규모가 작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표본에서 각각 1,500가구를 추가하였고,

<표 2-1> BHPS의 표본 추가 현황과 규모

년도	추가 사유	특징
1991	잉글랜드지역	최초 패널
1997	저소득층 패널 추가	UK ECHP의 부표본 (2001년 ECHP 중지)
1998	표준 BHPS 규칙 확정	
1999	스코틀랜드(칼레도니아의 북부와 서부) /웨일즈 표본 추가	과대표집/지역간 비교 (목표 표본 : 각각 1500 가구)
2001	노던 아일랜드 확대 패널(NIHPS)	별도 패널관리/전국 대표성 확보 (목표 표본 : 2000 가구)
2009	UKHLS 1차 조사 실시	UK 가구 종단 조사 실시
2010	UKHLS 2차 조사에 BHPS를 포함	BHPS 원표본 중 동의 표본만 포함

셋째, 2001년(11차 조사)에는 영국 전역(UK-wide)로 확대하기 위해 북부아일랜드 표본을 2000가구 추가하여 영국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북부아일랜드 표본은 BHPS에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의 패널조사로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BHPS는 2009년 새로이 계획된 영국 가구 종단조사(UKHLS)의 2차 조사(2010-2011년)에 포함되어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이 때 BHPS 18차 조사에 참여한 표본 중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노던아일랜드 지역에서 원가구원으로 구축한 개인 원표본과 그 자녀 중 UKHLS에 동의한 표본만을 UKHLS에 포함하였다.

(2) UKHLS

UKHLS(UK Household Longitudinal Survey)는 사회 및 경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패널조사 중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

UKHLS는 2009년 1월 처음 시작해 원가구의 가구원(개인)을 매년 추적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조사기간은 24개월이고, 각 개인으로부터 매년 자료를 수집한다. UKHLS는 영국의 모든 유형의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함으로써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전망적(prospective) 관점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장기적인 직업의 선택과 이동에 영향을 주는 건강, 웰빙, 제정 환경 및 개인적인 관계 등 사회, 건강 및 생명 과학을 연계하는 다양하고 많은 영역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특히, UKHLS에서는 다양한 사회에서 유전자 구성과 관련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2만 명의 생의학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기도 하였다(2차 및 3차 조사).

UKHLS의 표본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일반 가구 및 가구원(개인)을 대표하도록 추출되어 관리하고 있다. 표본 규모는 약 4만 가구, 10만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표본(OSM: Original Samples Members)은 5가지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설계 시점(2009-2010년, 1차 조사)에서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노던 아일랜드)의 일반가구 및 가구원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추출한 신규 대규모 표본(GPS: General Population Samples)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은 47,520 표본, 노던아일랜드는 2,395표본으로 모두 49,915표본이며, 이를 UKHLS의 1차 조사에서 구성한 원표본구성원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 모집단(GPS)과 비교를 위한 표본(GPC: General Population Comparison Samples)으로 GPS의 2640개 psu(sector로 사용)중 40%에 해당하는 psu에서 하나의 표본을 확률 추출한 GPS의 부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GPC표본은 GPS표본에 포함되어 분석되는 표본이다. 비교 표본에는 출생코호트 비교 연구를 위해 16세 미만의 개인이 1.3만명, 바이오뱅크와 비교연구를 위한 40-69세 개인이 3.5만명, ELSA와 비교 연구 연구를 위한 1.5만명의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UKHLS에는 민족성을 포함해 소수민족에 대한 부스터표본(일종의 과대표집)으로 최소 1천명 이상의 성인을 포함한 영국 최초의 종단조사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인도계, 파키스탄계, 방글라데시계, 캐리비안계 및 아프리카계(다른 소수 민족 일부 포함) 등 5개의 소수민족을 고려해 표본(EMB: Ethnic Minority Booster samples)을 별도로 관리하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원표본구성원(OSM)의 표본으로 본다. EMB의 표본추출과정은 OSM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표본은 2001 센서스와 매년 수행되는 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에 근거하여 표본 규모를 조정한다. EMB의 표본 추출을 위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3145개 psu(5개 소수민족 인구의 82%~93% 포함된 것으로 추정)를 소수민족의 인구수에 따라 4개 층으로 층화하여 최소 3가구 이상 포함된 층에서는 추출률을 1/4, 1/8, 1/16 등으로 하여 표본 psu를 추출한다. 이 때 표본가구는 psu내에서 적격 가구가 최소 2가구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여 771개 psu를 추출하였는데, 스코틀랜드 6개, 웨일즈 7개, 잉글랜드 758개 이다. 잉글랜드 중 런던은 412개로 제한하였다. 5개 소수민족별 표본은 통계적 효율을 고려하여 소수민족별 목표 표본규모를 결정하였으며, GPS의 psu와 마찬가지로 계통추출로 psu를 추출하였다.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추출 과정은 1) 표본 psu마다 추출률을 이용하여 추출된 표본가구마다 목표 민족그룹의 가구원(개인)이 거주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2) 민족 그룹별 목표 표본크기의 표본가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추출(인도혼혈계, 방글라데시계, 캐리비안혼혈계, 스리랑카계, 중국계, 터키계)하거나 적절한 확률적 매카니즘을 이용하여 목표 비율만큼 표본추출(인도계, 파키스탄계, 캐리비안계, 아프리카계, 극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계)하여 소수민족을 위한 표본(EMB)구축하였다. 3) 추출된 표본가구에서 목표 소수민족의 모든 가구원은 EMB표본으로 선정하지만 다른 소수민족의 개인은 EMS 표본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EMB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에 한하여 임시 표본(TSM: Temporary Sample Members)으로 관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UKHLS 2차 조사(2010-2011년)에 포함된 BHPS의 18차 조사에 참여한 적격 원표본 중 UKHLS에 동의한 표본이다. BHPS 중 UKHLS에 포함된 표본은 잉글랜드(1991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부스터 표본(1999년), 노던아일랜드(2001년)지역의 표본만 포함하고 있다. BHPS는 UKHLS에 포함된 시점에서는 각 지역마다 BHPS의 표본에 추가된 시점 이후 원가구원인 부모로부터 출생된 자녀도 포함하지만 2차 이후는 모로부터 출생된 자녀만 포함하고 있다. UKHLS에 포함된 BHPS의 규모는 2차 조사(2010-2011년)에서 약 8,000가구 중 6,700가구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UKHLS의 본조사에 앞서 해마다 새로운 문항의 질 평가, 응답률 개선 방법, 모드 효과와 같이 조사방법론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리하는 혁신패널(Innovation Panel)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 패널은 1500가구이다.

결론적으로 UKHLS의 표본은 원표본구성원 표본(OSM), 임시 표본(TSM), 영구 표본(PSM:

Permanent Samples Member) 3가지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원표본구성원 표본(OSM)에는 GPS, GPC, EMB, BHPS 등 원표본 가구원과 그 자녀들이 포함되고, 임시 표본(TSM)에는 EMB 표본에 속하지 않는 개인, OSM 및 PSM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OSM 표본이 아닌 신규 유입 가구원 등이 포함되고, 영구 표본(PSM)은 OSM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임시 표본이다. OSM은 매년 추적하지만 TSM과 PSM은 OSM 가구에 함께 거주하거나 적격한 대상으로 포함될 때만 추적한다.

3) 독일의 SOEP

독일의 SOEP(Social-Economic Panel Survey)는 독일의 전체 거주자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모집단은 독일 전 지역의 일반가구(the private household)에 거주하는 거주자 모집단(the residential population)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를 추출단위로 하여 표본 가구내에서는 16세 이상 가구원(거주자) 전체가 대상이다. SOEP의 주된 목적은 가구 구성, 직업, 고용, 소득, 건강 및 생활 만족도 등 많은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패널조사 자료와도 공유하고 있다.

(1) SOEP의 표본 확대

SOEP는 독일 통일 전 1984년도에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표본(표본 A)과 당시 외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을 과대표집하여 한 외국인 표본(표본 B)을 추출하여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다. 외국인 표본 추출을 위한 국가는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및 유고이다. 1990년 통일 후 독일 경계가 변경(1990년)되고, 이민, 입양 등으로 거주자 모집단의 변화되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본을 추가해 확대 개편하게 되는데, 표본을 추가할 때 최초 설계 틀을 유지하도록 표본추출구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부 표본 그룹에 대해서는 통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대표집으로 추가해 확대 표본을 구축하고 있다. 그 후 SOEP는 오랜 기간동안 변화하는 거주자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표본을 확대 개편하고 있는 데, 효과적인 표본 관리를 위해 SOEP 표본 구성 및 개편 시점을 구분하여 A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한다.

<표 2-2> SOEP 표본유형별 추가 표본 규모

유형	Year	가구	개인	거주자 (응답자)	아동	
A	서독 거주자	1984	4,528	11,422	9,076	2,290
B	외국인	1984	1,393	4,830	3,169	1,638
C	동독거주자	1990	2,179	6,131	4,453	1,591
D1	이민자	1994	236	733	471	248
D1/D2	이민자	1995	531	1,668	1,078	517
E	확대표본 1	1998	1,067	2,446	1,923	466
F	확대표본 2 (가구추출)	2000	6,043	14,510	10,880	2,991
G	고소득자	2002	1,224	3,538	2,671	693
H	확대표본 3	2006	1,506	3,407	2,616	623
I	혁신 (인센티브)	2009	1,531 (1,495)	3,428	2,509 (2,432)	620
J	확대표본 4	2011	3,136	6,873	5,161	1,147
K	확대표본 5	2012	1,526	3,286	2,473	563
L1	가족패널 FiD1	2010	2,074	7,939	3,770	3,900
L2	가족패널 FiD2	2010	2,500	9,063	4,227	4,611
L3	가족패널 FiD3	2011	924	3,645	1,487	2,092
M1	이민자 고용표본 1 (IAB-SOEP)	2013	2,723	8,522	4,964	2,481
M2	이민자 고용표본 2 (IAB-SOEP)	2015	1,096	3,048	1,711	927

주) <http://about.paneldata.org/soep/dtc/sample.html>

SOEP 표본의 개편 내용과 규모를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1990년 6월 통일이 되어 독일의 경계가 동독 지역을 포함하게 되므로 SOEP는 독일 전 지역 거주자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독 지역의 거주자를 추출하여 표본을 확대한다(표본 C). 추가된 표본 규모는 2179가구, 4453명의 거주자이다.

② 1994/1995년에는 1984년 이후 독일로 이주한 이민자가 증가하는데, 특히 소비에트 국가로부터 이주한 게르만계를 고려하기 위해 이민자 표본을 확대를 한다. 이민자 표본은 1994년에 1차로 표본(표본 D1 : 236가구, 471명의 거주자)을 확대하고, 1995년에 2차로 표본(표본 D2 : 295가구, 607명 거주자)을 확대해 1994/1995년에 이민자 표본을 추가해 확대 개편한다. 1994/95년에 확대된 이민자 표본의 확대 규모(D1/D2)는 모두 531가구, 1,078명의 거주자이다.

③ 장기간의 조사로 인한 표본 마모와 변화된 모집단 특성을 반영해 전체 거주자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크기를 증가시키는 개편을 1998년(표본 E : 1067가구, 1923명 거주자)과 2000년(표본 F)에 수행한다. 특히, 2000년에는 표본 가구를 기존 표본과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16세 이상 모든 거주자를 표본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한다. 2000년에 추가된 표본 규모는 6043가구, 10880명의 거주자이다.

④ 2002년에 월 가구소득이 7500DM이상인 가구를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사전 스크리닝 과정으로 고소득층 표본을 과대표집하여 표본(표본 G)을 확대한다. 2003년에는 가구 소득을 4500유로 이상인 가구로 기준을 변경한다. 2002년에 추가된 고소득층의 표본규모는 1,224가구, 2671명의 거주자이다.

⑤ 2006년에 변화된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거주자 가구(all residential household)를 포함하도록 표본을 확대한다(표본 H). 2006년 확대된 표본 규모는 1,506가구, 2616명의 거주자이다.

⑥ 2009년에도 모집단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 SOEP표본과는 독립적으로 1531가구(2509명 거주자)를 추가하여 표본을 확대한다(표본 I). 2009년에 자료수집방법의 개선, 새로운 조사 문항 개발 및 패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혁신 표본(인센티브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012년에 2012년의 자료 분포를 고려해 표본 I로부터 추출한 부표본으로 SOEP 혁신 표본(SOEP-IS)을 구축한다. 2012년에 구축한 SOEP 혁신 표본(SOEP-IS)의 규모는 1,040가구(2,113명 거주자)이다.

⑦ 2011년과 2012년에 변화된 독일 거주자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또한 SOEP의 전체 표본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표본을 추가한다. 2011년에 확대된 표본 규모(표본 J)는 3,136가구, 5,161명의 거주자이고, 2012년에 확대된 표본 규모(표본 K)는 1,526가구, 1,473명의 거주자이다.

⑧ 2013년과 2015년에는 이민자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다. 2013년에는 연방 고용부에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2,723명을 추출하여 추출된 표본의 가구와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4,964명의 거주자를 표본으로 추가한다(표본 M1). 2015년에도 이민자가 증가하여 모집단이 변화함에 따라 2013년 추출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1,096가구, 1,711명의 거주자를 추가한다(표본 M2). 2013년과 2015년의 확대 표본은 IAB-SEOP표본으로 관리한다.

⑨ 2014년에는 독일의 가족을 포괄하고, 가족 연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SOEP와 별도로 수행되는 가족 패널을 SOEP 표본으로 병합하여 표본을 확대한다(표본 L). 가족표본(FiD)은 가족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SOEP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조사로 2010년 처음 시작한 조사이다. 2010년 설계 시점에서 2,074가구, 3,770명의 가구원을 표본(표본 L1)으로 구성하였으나 조사 완료 후 2010년에 다시 2,500가구 4,227명의 가구원을 추가(표본 L2)하게 되고, 2011년에 다시 924가구, 1,487명의 가구원을 추가(표본 L3)해 가족 표본을 확대한다.

(2) SOEP-IS의 표본 확대

SOEP의 혁신 패널(SOEP-IS)은 2009년에 SOEP 패널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의 개선, 새로운

조사 문항 개발 및 패널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혁신(혹은 인센티브) 표본을 구축한다. SOEP-IS는 연구자들에게 단기간의 실험, 특별한 주제에 대한 설문이나 SOEP의 핵심 연구와는 별도의 주제에 대한 장기간의 설문을 검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본이다.

SOEP-IS의 구축 및 확대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8년 이전에는 1998년에 구축한 표본 E로부터 373가구(963명 거주자)를 추출하여 혁신 표본을 구축하고,

② 2009년에는 SOEP의 표본 I로부터 1495가구(3,052거주자)를 추출하여 혁신 표본을 확대하는 데, 2009년에 추출된 혁신 패널은 2010년과 2011년의 처음 2년간은 주요한 자료 분포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1년에 조사한 1,040가구(2,113명 거주자)를 SOEP 혁신 표본(SOEP-IS)으로 명칭을 부여해 관리한다.

<표 2-3> SOEP 혁신 표본(SOEP-IS) 표본규모

	1998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표본 E	373(963) SOEP	447(934) SOEP	453(936) SOEP	464(944) SOEP	339(642) SOEP-IS	310(599) SOEP-IS	295(580) SOEP-IS
표본 I		1495(3052) SOEP	1175(2450) SOEP	1040(2113) SOEP-IS	928(1826) SOEP-IS	864(1728) SOEP-IS	797(1596) SOEP-IS
2012 표본					1010(2005) SOEP-IS	833(1688) SOEP-IS	772(1611) SOEP-IS
2013 표본						1166(2141) SOEP-IS	928(1870) SOEP-IS
2014 표본							924(1665) SOEP-IS
계: 가구 (개인)	373 (963)	1622 (3986)	1628 (3386)	1504 (3057)	2277 (4473)	3173 (6163)	3716 (7322)

③ 2012년, 2013년, 2014년에도 계속하여 추가하여 SOEP 혁신 표본(SOEP-IS)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의 SOEP 혁신 표본(SOEP-IS) 규모는 3,716가구, 7,322명의 거주자(개인)로 운영된다.

4) 호주의 HILDA

(1) 조사 개요 및 특징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조사는 2001년부터 시행된 가구단위의 패널 조사이다. 주요한 목적은 소득 변화, 노동시장 변화 및 가족 변화 등 3

가지 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측정 자료는 가구 및 가족 관계, 아동 보호, 고용, 교육, 소득, 소비, 건강과 웰빙, 다양한 주제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사건과 경험 등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을 포함한 호주 내 일반 사람들의 삶 전반에 대한 자료 등이다. HILDA는 빈곤의 발생과 지속, 은퇴 전환기의 자산과 수입, 신체와 정신 건강의 관계 및 생애주기별 변화의 영향, 부와 행복의 국제간 비교 연구 등 경제,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의 국내외 연구에 폭 넓게 활용된다.

대상 모집단은 호주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가구원)으로 정의하고, 호주에서 근무하는 외국 외교인력,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개인, 조사 및 접촉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호주 내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개인)이다.

HILDA 표본은 지역기반의 층화 3단계 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주 및 대도시 등의 층에서 1996년 총조사의 센서스조사구(Census Collection Districts : CCD)를 psu로 하여 주거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을 계통추출하고, 주택내에서 최대 3가구 이하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 참여여부에 대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1차 조사의 표본을 구축한다. 1차 조사에서 패널 구축을 위해 추출된 적격표본가구는 모두 11,693가구이며, 조사 참여에 동의한 7682가구를 원 표본가구로 구축한다. HILDA는 호주내 일반주택내 가구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확대표본의 가중치는 1차 조사부터 시행한 원표본은 원표본가중치를 부여하고, 2011년에 추가된 추가표본은 원표본의 가중치 산출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가표본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원표본과 추가표본을 결합한 확대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한다.

HILDA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1) 경제, 주관적 웰빙, 노동 시장의 변화, 가족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2) 각 시점마다 부, 은퇴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설문 모듈을 채택하고, 3) 1차 조사에서 7682가구의 1991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조사를 수행하다가 2011년(11차)에 2153가구, 5477명의 표본을 추가해 패널을 확대하고, 4)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데 표본 가구의 15세 미만 아동은 15세 이후 표본으로 포함하며, 표본으로 포함된 개인은 계속 추적조사한다.

HILDA 자료는 한국,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스위스, 러시아 및 미국의 인구 패널 자료를 통합한 국가별 횡단 파일(the Cross-National Equivalent File : CNEF)에 제공된다.

(2) 2011년의 추가표본 개요

2011년에는 2001년 이후 이민자 증가, 출생 및 사망, 가구의 분가 및 통합 등 가구 및 개인 단위의 모집단이 변화하고, 동시에 1차 조사이후 원표본에서도 조사거부로 인한 이탈, 추적실

패, 해외이주 등 표본마모가 발생하여 원표본의 구조도 모집단 구조와 차이를 보이므로 표본을 추가하여 확대한다. 특히, 마모되는 표본은 유지 표본과 체계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비확률 변동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HILDA는 2011년에 추가표본을 1차 조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표본 설계를 하여 3117적격가구를 추출하고, 조사참여에 동의한 2,153가구를 확대표본으로 추가한다.

<표 2-4> HILDA 11차(2011년)의 표본특성별 표본 규모(가구와 개인)

가구	원표본(PSM)		추가표본
	2001	2011	2011
대상 가구수	12,252	10,526	3,250
적격 가구수	11,693	10,440	3,117
응답 가구수	7,682	7,390	2,153

개인	원표본(PSM)		추가표본
	2001	2011	2011
총 규모	19,914	29,489	5,451
PSM 규모	19,914	19,914	5,451
+ PSM 규모		3,482	
TSM		2,529	
TSM(제외)		3,564	
적격 개인	15,127	14,352	4,280
응답자	13,969	13,603	4,009
무응답자	1,158	749	271
아동	4,787	3,601	

2011년 추가표본 설계와 2001년 원표본 설계에 대한 차이를 요약하면, 1) 2006년 총조사 지역을 기준하고, 2) psu 추출을 위한 주택수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3) 추가 표본규모가 작으므로 층화 추출하지 않고 주, 지역 등의 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한 점이 다르다. 두 설계에서 설계 가중치가 약간 다르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가구 기준의 패널조사에서 가구 및 분가 가구를 추적조사함으로써 가구원 분가와 독립, 해외 이주, 사망과 출생 등 가구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모집단의 변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된다. HILDA 조사는 기본적으로 원표본(개인: Permanent Sample Member: PSM)은 해외 이주, 사망 등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으면 계속 추적할 뿐만 아니라 1) 원표본에 의한 출생과 입양된 개인, 2) 원표본 개인의 출생과 입양아동의 비원가구원인 부모, 3) 2001년 이후 호주에 이주한 개인은 원표본의 유입표본(Convert PSM)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계속 추적한다. 이들 개인을 제외한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은 원표본과 거주하는 동안만 조사하는 임시표본(Temporary Sample Member: TSM)으로 관리한다.

3. 시사점(소결)

본 장에서는 인구 패널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패널조사를 사례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행정 등록자료 기반으로 가구 및 인구 특성의 자료만을 제공하는 유사 패널조사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 자료 기반의 국내외 대표적인 패널조사 사례를 검토하여 패널 구축 방안, 패널 관리 및 추적 원칙, 패널 활용 방안 등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검토한 패널 사례는 국가별 통계 작성 정부부처에서 고용 활동 등과 관련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자료 기반의 목적성 패널조사이다. 인구패널과 같이 인구 및 가구 변화만을 파악하는 패널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인구 및 가구 특성은 분석을 위한 기초 변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및 가구 변화 특성만을 제공하는 패널의 활용 방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인구학적으로는 중장기적 인구 및 가구의 동태적 변화 연구를 위한 패널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매우 제한적이므로 패널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패널 조사 사례를 통해 인구 패널 조사의 패널 구축 방안, 패널 관리 및 추적 원칙, 패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구축 및 자료의 관리는 등록된 행정자료에 기반하므로 패널의 해외 이주 및 사망 등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표본 마모 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 패널에서는 인구 특성 변수에 대한 작은 수의 행정 정보만을 패널자료로 제공하므로 활용측면에서는 활용 가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인구 패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패널 가구로의 가구원 유입 및 유출되는 변화를 통해 모집단 가구 변화에 대한 특성 및 가구원 특성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패널 구축은 가구원(개인)보다는 가구 단위 관점에서 모집단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을 구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가구 특성과 연계된 가구원 특성을 분석한다면, 가구 및 부모 특성이 가구원의 이동 및 가구원 특성에 미치는 세대간 전이 특성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2차 이후 발생하는 패널 가구의 분가 및 합가로 인한 패널 가구원의 유입과 유출, 패널 가구에서의 출생과 사망, 비패널 가구원의 유입과 유출 등 패널 운영을 위한 기준과 더불어 패널 가구원의 유입 기준 및 추적 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가중치 산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패널 가구 및 가구원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패널 가구의 분가, 패널 가구의 해외 이주 등 패널 가구 관리 원칙과 비가구원 및 신규 가구원의 출생 등 개인 단위에 대한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한 비가구원의 유입, 그로 인한 출생 등이 발생하므로 패널 및

비패널 가구원의 유입 기준, 패널 운영 및 추적 기준 마련은 필요하고, 또한 추정을 위한 종단면 혹은 횡단면 가구 및 가중치 산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패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가구원에 대한 직업 및 고용 활동 자료, 소득 관련 자료, 건강 자료 등 가구 및 인구 특성 자료이외에 사회적 및 경제적, 건강 관점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자료를 연계한다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세대간 전이 효과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연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다른 목적성 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되기 위해 가구 및 인구 특성 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료(doner-data)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와 인구패널의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 변화에 미치는 가구 및 가구원 특성 변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 이외에도 건강 및 보건분야의 자료, 이민 자료, 직업 및 고용 자료, 생활시간 자료 등과 연계를 통해 가구 및 가구원 특성 변화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지므로 다른 조사의 연계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패널 자료와 연계하는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현재 구축을 검토하는 패널은 일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패널이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변화하는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패널의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구 패널, 소년소녀 가장 패널, 1인 가구 패널, 노인 가구 패널 등 특정 목적의 가구 및 인구 변화 특성에 근거한 패널을 구축하여 특정 패널 내에서의 변화 연구 자료 및 다른 조사의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Ⅲ. 인총패널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출 방안

1. 개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총)는 매 5년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혼합한 방식으로 2010년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는 일부 조사항목은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나머지 조사항목은 표본조사를 이용하는 혼합형 조사방법인 등록센서스로 전환되었다. 행정자료가 매년 갱신됨으로 등록센서스의 결과 또한 매년 공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한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등록센서스 자료 중 약 2% (인구 100만) 수준의 대규모 패널자료 (이후 인총패널)를 구축하여 가구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인총패널의 시작년도 기초표본을 구축하는 표본설계방안 및 횡단면 가중치 산출과 패널화에 따른 종단면 가중치 산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과에서 인총패널 연구를 위해 고려한 2015년 기준의 인총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표본설계 원칙 및 인총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할당 등에 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패널가중치의 산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2. 인총자료 검토

1) 제공자료

인총패널의 시작년도 기초표본의 구축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된 모집단 정보는 2015년 인총자료의 특성 조합별 가구수 자료만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3-1>은 가구수를 포함한 총 6가지 특성변수들에 대한 분류수 및 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예로, 시군구 4자리 코드, 동·읍면 구분자, 거처종류, 가구원수, 세대구성 및 가구주 연령대 등이다.

제공된 자료는 <그림 3-1>의 형태로 이루어진 총 73,267개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조합 분류별 가구수를 합하면 총 19,111,030개의 가구에 해당한다. 약 2%-표본추출 하에 가구기준으로 예상되는 표본규모는 약 382,200가구가 된다.

<표 3-1> 2015 인총 자료 내 제공 변수 및 코드

변수	분류수	코드
시군구	-	4 자리코드 (앞 2 자리는 시도, 뒷 2 자리는 동읍면)
동읍면	2	01 (읍면부), 02 (동부)
거처종류	2	1 (아파트 이외 거처), A (아파트)
가구원수	5	1~5 (1-4, 5 인이상)
세대구성	5	1~3 (1,2,3 세대), B (비혈연가구), C (1인 가구)
가구주연령	12	01 (20 세 미만), 02~11 (20 세~70 세미만/5 세 간격) 12 (70 세 이상)
가구수	-	빈도수

<그림 3-1> 2015 인총 자료 제공 파일 예시

시군	동읍면	거처종류	가구원수	세대구분	가구주연령	가구수
1101	02	1	1	C	01	380
1101	02	1	1	C	02	2277
:	:	:	:	:	:	:

2) 자료분석

인총패널 표본설계방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제공된 가구수 기준의 인총자료에 대해 함께 제시된 6가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조합별 가구수의 분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기본적 특성 혹은 조합별 가구수 혹은 구성비를 살펴보고 적절한 분류 재구성을 선택하여 표본분석이 안정적일 수 있는 표본설계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표 3-2>는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 분포를 정리하고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날 수록 차지하는 가구구성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인 가구는 27.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26.1%, 3인 및 4인 가구는 각각 21.5%와 18.8%이며, 5인 이상 가구는 6.4%로 매우 낮은 규모를 보였다.

<표 3-2>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가구원수	가중빈도	구성비
1명	5,203,440	27.2%
2명	4,993,818	26.1%
3명	4,100,979	21.5%
4명	3,588,931	18.8%
5명이상	1,223,862	6.4%
합계	19,111,030	100.0%

<표 3-3>는 세대구분에 따른 가구 분포를 나타낸다. 2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인 48.8%이고 1세대가 17.4%이며, 3세대와 비혈연은 각각 5.4%와 1.1%로 매우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 세대구분에 따른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세대구성	가중빈도	구성비
1 세대	3,324,418	17.4%
2 세대	9,328,293	48.8%
3 세대	1,040,458	5.4%
비혈연	214,421	1.1%
1 인	5,203,440	27.2%
합계	19,111,030	100.0%

<표 3-4>는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 분포는 나타낸다.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성비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29세 이하는 7.1%로 매우 낮고, 그 다음으로 30-39세 가구주 가구는 약 17.2%로 낮은 편에 속한다.

<표 3-4>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연령대	가구수	구성비
29 이하	1,351,543	7.1%
30-39	3,278,826	17.2%
40-49	4,552,466	23.8%
50-59	4,606,021	24.1%
60 이상	5,322,174	27.8%
합계	19,111,030	100.0%

<표 3-5>는 시도별 가구수 분포를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22.9%와 19.8%의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2%와 0.4%의 낮은 구성비를 나타낸다.

<표 3-5> 시도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시도	빈도	비중
서울	3,784,490	19.8%
부산	1,335,900	7.0%
대구	928,528	4.9%
인천	1,045,417	5.5%
광주	567,157	3.0%
대전	582,504	3.0%
울산	423,412	2.2%
세종	75,219	0.4%
경기	4,384,742	22.9%
강원	606,117	3.2%
충북	601,856	3.1%
충남	796,185	4.2%
전북	717,311	3.8%
전남	720,612	3.8%
경북	1,062,724	5.6%
경남	1,258,487	6.6%
제주	220,369	1.2%
전국	19,111,030	100.0%

<표 3-6>은 시도 내 시군부별 가구수 및 비율 분포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시, 제주도는 각각 시부만으로 이루어졌고,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들은 주로 시부로 구성되지만 울산은 군부가 18.4%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도지역도 시부가 대부분 72~84%으로 매우 높지만 전남은 군부가 45.7%로 매우 높았다.

<표 3-6> 시도 내 시군부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시도	가구수(개)			비율(%)		
	시부	군부	전체	시부	군부	전체
서울	3,784,490	-	3,784,490	100.0%	0.0%	100.0%
부산	1,281,894	54,006	1,335,900	96.0%	4.0%	100.0%
대구	862,069	66,459	928,528	92.8%	7.2%	100.0%
인천	1,011,279	34,138	1,045,417	96.7%	3.3%	100.0%
광주	567,157	-	567,157	100.0%	0.0%	100.0%
대전	582,504	-	582,504	100.0%	0.0%	100.0%
울산	345,357	78,055	423,412	81.6%	18.4%	100.0%
세종	75,219	-	75,219	100.0%	0.0%	100.0%
경기	4,304,785	79,957	4,384,742	98.2%	1.8%	100.0%

시도	가구수(개)			비율(%)		
	시부	군부	전체	시부	군부	전체
강원	438,517	167,600	606,117	72.3%	27.7%	100.0%
충북	443,135	158,721	601,856	73.6%	26.4%	100.0%
충남	614,912	181,273	796,185	77.2%	22.8%	100.0%
전북	583,802	133,509	717,311	81.4%	18.6%	100.0%
전남	391,100	329,512	720,612	54.3%	45.7%	100.0%
경북	840,222	222,502	1,062,724	79.1%	20.9%	100.0%
경남	1,055,580	202,907	1,258,487	83.9%	16.1%	100.0%
제주	220,369	-	220,369	100.0%	0.0%	100.0%
전국	17,402,391	1,708,639	19,111,030	91.1%	8.9%	100.0%

<표 3-7>은 시도 내 동·읍면 구분별 가구 및 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광주, 대전은 동부만 존재하며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동지역 가구 비율은 41.2%에서 73.1%의 범위를 갖는다.

<표 3-7> 시도 내 동읍면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개)

시도	가구(가구수)			비율(%)		
	동부	읍면부	전체	동부	읍면부	전체
서울	3,784,490	-	3,784,490	100.0%	0.0%	100.0%
부산	1,281,894	54,006	1,335,900	96.0%	4.0%	100.0%
대구	862,069	66,459	928,528	92.8%	7.2%	100.0%
인천	1,011,279	34,138	1,045,417	96.7%	3.3%	100.0%
광주	567,157	-	567,157	100.0%	0.0%	100.0%
대전	582,504	-	582,504	100.0%	0.0%	100.0%
울산	345,357	78,055	423,412	81.6%	18.4%	100.0%
세종	34,919	40,300	75,219	46.4%	53.6%	100.0%
경기	3,640,067	744,675	4,384,742	83.0%	17.0%	100.0%
강원	361,671	244,446	606,117	59.7%	40.3%	100.0%
충북	352,646	249,210	601,856	58.6%	41.4%	100.0%
충남	349,263	446,922	796,185	43.9%	56.1%	100.0%
전북	493,420	223,891	717,311	68.8%	31.2%	100.0%
전남	297,136	423,476	720,612	41.2%	58.8%	100.0%
경북	553,228	509,496	1,062,724	52.1%	47.9%	100.0%
경남	809,718	448,769	1,258,487	64.3%	35.7%	100.0%
제주	161,083	59,286	220,369	73.1%	26.9%	100.0%
전국	15,487,901	3,623,129	19,111,030	81.0%	19.0%	100.0%

<표 3-8>은 시도 내 거처별 가구분포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6개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는 50% 이상의 가구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시와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62.4%와 62.7%이고 제주도, 전남, 경북은 각각 25.4%, 36.3%, 37.8%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3-8> 시도 내 거처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시도	가구(가구수)			비율(%)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서울	1,586,400	2,198,090	3,784,490	41.9%	58.1%	100.0%
부산	691,595	644,305	1,335,900	51.8%	48.2%	100.0%
대구	486,653	441,875	928,528	52.4%	47.6%	100.0%
인천	555,329	490,088	1,045,417	53.1%	46.9%	100.0%
광주	355,697	211,460	567,157	62.7%	37.3%	100.0%
대전	318,020	264,484	582,504	54.6%	45.4%	100.0%
울산	237,732	185,680	423,412	56.1%	43.9%	100.0%
세종	46,921	28,298	75,219	62.4%	37.6%	100.0%
경기	2,410,360	1,974,382	4,384,742	55.0%	45.0%	100.0%
강원	261,233	344,884	606,117	43.1%	56.9%	100.0%
충북	274,002	327,854	601,856	45.5%	54.5%	100.0%
충남	338,990	457,195	796,185	42.6%	57.4%	100.0%
전북	327,120	390,191	717,311	45.6%	54.4%	100.0%
전남	261,576	459,036	720,612	36.3%	63.7%	100.0%
경북	401,582	661,142	1,062,724	37.8%	62.2%	100.0%
경남	587,673	670,814	1,258,487	46.7%	53.3%	100.0%
제주	55,886	164,483	220,369	25.4%	74.6%	100.0%
전국	9,196,769	9,914,261	19,111,030	48.1%	51.9%	100.0%

<표 3-9>와 <표 3-10>는 시도 내 시군부 및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및 비율 분포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는 시부내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는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경우는 39세 이하가 36.2%로 다른 시도와는 비교하여 큰 비중을 보이는 반면에 50대 가구주 비중은 17.7%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다. 군부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 부산의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성비가 유사하여 분포하지만 기타 시도의 군부는 39세 이하와 40대는 10%대의 낮은 구성비와 60대 이상은 40-50%의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표 3-11>과 <표 3-12>는 시도 내 시군부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 및 비율 분포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수는 시도와 시군부 교차분류에 따른 차이는 많지 않지만 인천광역시의 군부의 경우에는 1인과 2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시도, 시군부,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개)

시도	시부					군부				
	39 세이하	40 대	50 대	60 대이상	소계	39 세이하	40 대	50 대	60 대이상	소계
서울	1,072,812	854,476	867,096	990,106	3,784,490	-	-	-	-	-
부산	259,982	266,567	331,296	424,049	1,281,894	14,596	13,500	10,920	14,990	54,006
대구	182,656	211,636	222,864	244,913	862,069	15,330	17,159	16,969	17,001	66,459
인천	247,671	264,016	269,293	230,299	1,011,279	4,540	5,013	8,157	16,428	34,138
광주	154,597	147,093	130,462	135,005	567,157	-	-	-	-	-
대전	167,556	142,588	136,825	135,535	582,504	-	-	-	-	-
울산	87,876	89,764	95,182	72,535	345,357	16,860	21,016	19,871	20,308	78,055
세종	27,242	19,194	13,310	15,473	75,219	-	-	-	-	-
경기	1,092,790	1,184,311	1,072,123	955,561	4,304,785	11,732	14,339	20,542	33,344	79,957
강원	97,669	99,959	106,956	133,933	438,517	30,932	27,021	40,402	69,245	167,600
충북	113,041	107,490	106,633	115,971	443,135	26,335	28,600	37,540	66,246	158,721
충남	173,630	143,159	133,061	165,062	614,912	23,953	27,660	39,863	89,797	181,273
전북	130,252	132,477	133,065	188,008	583,802	17,723	20,590	27,128	68,068	133,509
전남	84,292	92,981	93,152	120,675	391,100	39,015	49,945	66,634	173,918	329,512
경북	188,353	181,396	198,804	271,669	840,222	29,897	33,630	48,539	110,436	222,502
경남	250,160	268,994	262,371	274,055	1,055,580	20,871	30,559	44,001	107,476	202,907
제주	48,006	57,333	52,962	62,068	220,369	-	-	-	-	-
전국	4,378,585	4,263,434	4,225,455	4,534,917	17,402,391	251,784	289,032	380,566	787,257	1,708,639

<표 3-10> 시도, 시군부,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

시도	시부					군부				
	39 세이하	40 대	50 대	60 대이상	소계	39 세이하	40 대	50 대	60 대이상	소계
서울	28.3%	22.6%	22.9%	26.2%	100.0%	0.0%	0.0%	0.0%	0.0%	100.0%
부산	20.3%	20.8%	25.8%	33.1%	100.0%	27.0%	25.0%	20.2%	27.8%	100.0%
대구	21.2%	24.5%	25.9%	28.4%	100.0%	23.1%	25.8%	25.5%	25.6%	100.0%
인천	24.5%	26.1%	26.6%	22.8%	100.0%	13.3%	14.7%	23.9%	48.1%	100.0%
광주	27.3%	25.9%	23.0%	23.8%	100.0%	0.0%	0.0%	0.0%	0.0%	100.0%
대전	28.8%	24.5%	23.5%	23.3%	100.0%	0.0%	0.0%	0.0%	0.0%	100.0%
울산	25.4%	26.0%	27.6%	21.0%	100.0%	21.6%	26.9%	25.5%	26.0%	100.0%
세종	36.2%	25.5%	17.7%	20.6%	100.0%	0.0%	0.0%	0.0%	0.0%	100.0%
경기	25.4%	27.5%	24.9%	22.2%	100.0%	14.7%	17.9%	25.7%	41.7%	100.0%
강원	22.3%	22.8%	24.4%	30.5%	100.0%	18.5%	16.1%	24.1%	41.3%	100.0%
충북	25.5%	24.3%	24.1%	26.2%	100.0%	16.6%	18.0%	23.7%	41.7%	100.0%
충남	28.2%	23.3%	21.6%	26.8%	100.0%	13.2%	15.3%	22.0%	49.5%	100.0%
전북	22.3%	22.7%	22.8%	32.2%	100.0%	13.3%	15.4%	20.3%	51.0%	100.0%
전남	21.6%	23.8%	23.8%	30.9%	100.0%	11.8%	15.2%	20.2%	52.8%	100.0%
경북	22.4%	21.6%	23.7%	32.3%	100.0%	13.4%	15.1%	21.8%	49.6%	100.0%
경남	23.7%	25.5%	24.9%	26.0%	100.0%	10.3%	15.1%	21.7%	53.0%	100.0%
제주	21.8%	26.0%	24.0%	28.2%	100.0%	0.0%	0.0%	0.0%	0.0%	100.0%
전국	25.2%	24.5%	24.3%	26.1%	100.0%	14.7%	16.9%	22.3%	46.1%	100.0%

<표 3-11> 시도, 시군부,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시도	시부					군부				
	1명	2명	3명	4명이상	소계	1명	2명	3명	4명이상	소계
서울	1,115,744	930,467	817,440	920,839	3,784,490	-	-	-	-	-
부산	349,929	350,939	284,091	296,935	1,281,894	11,820	15,109	12,651	14,426	54,006
대구	225,255	222,156	193,386	221,272	862,069	14,262	17,668	15,409	19,120	66,459
인천	232,704	252,809	239,430	286,336	1,011,279	10,974	12,270	5,705	5,189	34,138
광주	163,577	137,662	115,701	150,217	567,157	-	-	-	-	-
대전	169,391	140,603	122,088	150,422	582,504	-	-	-	-	-
울산	84,587	83,685	82,672	94,413	345,357	18,964	20,416	17,558	21,117	78,055
세종	21,889	18,010	15,219	20,101	75,219	-	-	-	-	-
경기	1,002,665	1,036,460	990,720	1,274,940	4,304,785	23,806	25,762	14,610	15,779	79,957
강원	132,779	124,660	87,331	93,747	438,517	56,600	53,810	29,053	28,137	167,600
충북	124,328	115,302	92,464	111,041	443,135	49,270	51,844	28,170	29,437	158,721
충남	179,654	163,346	122,025	149,887	614,912	54,859	63,312	31,560	31,542	181,273
전북	171,146	162,975	113,799	135,882	583,802	42,604	46,033	22,057	22,815	133,509
전남	107,560	113,437	79,110	90,993	391,100	111,304	114,538	52,344	51,326	329,512
경북	249,158	242,184	170,267	178,613	840,222	73,411	78,314	37,128	33,649	222,502
경남	277,638	271,981	232,562	273,399	1,055,580	69,116	69,764	32,565	31,462	202,907
제주	58,446	58,302	43,864	59,757	220,369	-	-	-	-	-
전국	4,666,450	4,424,978	3,802,169	4,508,794	17,402,391	536,990	568,840	298,810	303,999	1,708,639

<표 3-12> 시도, 시군부,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단위: %)

시도	시부					군부				
	1명	2명	3명	4명이상	소계	1명	2명	3명	4명이상	소계
서울	29.5%	24.6%	21.6%	24.3%	100.0%	0.0%	0.0%	0.0%	0.0%	100.0%
부산	27.3%	27.4%	22.2%	23.2%	100.0%	21.9%	28.0%	23.4%	26.7%	100.0%
대구	26.1%	25.8%	22.4%	25.7%	100.0%	21.5%	26.6%	23.2%	28.8%	100.0%
인천	23.0%	25.0%	23.7%	28.3%	100.0%	32.1%	35.9%	16.7%	15.2%	100.0%
광주	28.8%	24.3%	20.4%	26.5%	100.0%	0.0%	0.0%	0.0%	0.0%	100.0%
대전	29.1%	24.1%	21.0%	25.8%	100.0%	0.0%	0.0%	0.0%	0.0%	100.0%
울산	24.5%	24.2%	23.9%	27.3%	100.0%	24.3%	26.2%	22.5%	27.1%	100.0%
세종	29.1%	23.9%	20.2%	26.7%	100.0%	0.0%	0.0%	0.0%	0.0%	100.0%
경기	23.3%	24.1%	23.0%	29.6%	100.0%	29.8%	32.2%	18.3%	19.7%	100.0%
강원	30.3%	28.4%	19.9%	21.4%	100.0%	33.8%	32.1%	17.3%	16.8%	100.0%
충북	28.1%	26.0%	20.9%	25.1%	100.0%	31.0%	32.7%	17.7%	18.5%	100.0%
충남	29.2%	26.6%	19.8%	24.4%	100.0%	30.3%	34.9%	17.4%	17.4%	100.0%
전북	29.3%	27.9%	19.5%	23.3%	100.0%	31.9%	34.5%	16.5%	17.1%	100.0%
전남	27.5%	29.0%	20.2%	23.3%	100.0%	33.8%	34.8%	15.9%	15.6%	100.0%
경북	29.7%	28.8%	20.3%	21.3%	100.0%	33.0%	35.2%	16.7%	15.1%	100.0%
경남	26.3%	25.8%	22.0%	25.9%	100.0%	34.1%	34.4%	16.0%	15.5%	100.0%
제주	26.5%	26.5%	19.9%	27.1%	100.0%	0.0%	0.0%	0.0%	0.0%	100.0%
전국	26.8%	25.4%	21.8%	25.9%	100.0%	31.4%	33.3%	17.5%	17.8%	100.0%

<표 3-13> 시도, 시군부, 세대구성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시도	시부					군부				
	1 세대	2 세대	1 인가구	기타	소계	1 세대	2 세대	1 인가구	기타	소계
서울	608,625	1,825,210	1,115,744	234,911	3,784,490	-	-	-	-	-
부산	230,218	621,517	349,929	80,230	1,281,894	9,972	28,594	11,820	3,620	54,006
대구	144,746	440,406	225,255	51,662	862,069	12,307	35,640	14,262	4,250	66,459
인천	157,518	551,786	232,704	69,271	1,011,279	9,267	11,177	10,974	2,720	34,138
광주	86,787	285,170	163,577	31,623	567,157	-	-	-	-	-
대전	92,363	286,007	169,391	34,743	582,504	-	-	-	-	-
울산	57,661	184,488	84,587	18,621	345,357	14,040	40,171	18,964	4,880	78,055
세종	12,435	35,728	21,889	5,167	75,219	-	-	-	-	-
경기	678,013	2,325,476	1,002,665	298,631	4,304,785	18,334	30,972	23,806	6,845	79,957
강원	82,994	193,501	132,779	29,243	438,517	38,849	58,983	56,600	13,168	167,600
충북	76,399	212,813	124,328	29,595	443,135	37,571	59,721	49,270	12,159	158,721
충남	110,697	280,238	179,654	44,323	614,912	47,748	64,711	54,859	13,955	181,273
전북	108,986	266,780	171,146	36,890	583,802	33,187	47,544	42,604	10,174	133,509
전남	76,170	182,346	107,560	25,024	391,100	81,977	111,657	111,304	24,574	329,512
경북	168,573	368,035	249,158	54,456	840,222	57,795	75,784	73,411	15,512	222,502
경남	183,398	529,121	277,638	65,423	1,055,580	50,675	68,510	69,116	14,606	202,907
제주	37,113	106,207	58,446	18,603	220,369	-	-	-	-	-
전국	2,912,696	8,694,829	4,666,450	1,128,416	17,402,391	411,722	633,464	536,990	126,463	1,708,639

<표 3-14> 시도, 시군부, 세대구성별 가구 분포

(단위: %)

시도	시부					군부				
	1 세대	2 세대	1 인가구	기타	소계	1 세대	2 세대	1 인가구	기타	소계
서울	16.1%	48.2%	29.5%	6.2%	100.0%	0.0%	0.0%	0.0%	0.0%	100.0%
부산	18.0%	48.5%	27.3%	6.3%	100.0%	18.5%	52.9%	21.9%	6.7%	100.0%
대구	16.8%	51.1%	26.1%	6.0%	100.0%	18.5%	53.6%	21.5%	6.4%	100.0%
인천	15.6%	54.6%	23.0%	6.8%	100.0%	27.1%	32.7%	32.1%	8.0%	100.0%
광주	15.3%	50.3%	28.8%	5.6%	100.0%	0.0%	0.0%	0.0%	0.0%	100.0%
대전	15.9%	49.1%	29.1%	6.0%	100.0%	0.0%	0.0%	0.0%	0.0%	100.0%
울산	16.7%	53.4%	24.5%	5.4%	100.0%	18.0%	51.5%	24.3%	6.3%	100.0%
세종	16.5%	47.5%	29.1%	6.9%	100.0%	0.0%	0.0%	0.0%	0.0%	100.0%
경기	15.8%	54.0%	23.3%	6.9%	100.0%	22.9%	38.7%	29.8%	8.6%	100.0%
강원	18.9%	44.1%	30.3%	6.7%	100.0%	23.2%	35.2%	33.8%	7.9%	100.0%
충북	17.2%	48.0%	28.1%	6.7%	100.0%	23.7%	37.6%	31.0%	7.7%	100.0%
충남	18.0%	45.6%	29.2%	7.2%	100.0%	26.3%	35.7%	30.3%	7.7%	100.0%
전북	18.7%	45.7%	29.3%	6.3%	100.0%	24.9%	35.6%	31.9%	7.6%	100.0%
전남	19.5%	46.6%	27.5%	6.4%	100.0%	24.9%	33.9%	33.8%	7.5%	100.0%
경북	20.1%	43.8%	29.7%	6.5%	100.0%	26.0%	34.1%	33.0%	7.0%	100.0%
경남	17.4%	50.1%	26.3%	6.2%	100.0%	25.0%	33.8%	34.1%	7.2%	100.0%
제주	16.8%	48.2%	26.5%	8.4%	100.0%	0.0%	0.0%	0.0%	0.0%	100.0%
전국	16.7%	50.0%	26.8%	6.5%	100.0%	24.1%	37.1%	31.4%	7.4%	100.0%

<표 3-13>과 <표 3-14>는 시도 내 시군부 및 세대구성별 가구수 및 비율 분포를 각각 정리하고 있다. 시도내 시부와 군부의 구성비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다른 시도와는 달리 부산, 대구 및 울산광역시들의 군부내 세대별 구성은 2세대가 50%대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표 3-15> 시도, 시군부, 동읍면별 가구 분포

(단위: 개)

시도	시부			군부			총계
	동부	읍면부	소계	동부	읍면부	소계	
서울	3,784,490	-	3,784,490	-	-	-	3,784,490
부산	1,281,894	-	1,281,894	-	54,006	54,006	1,335,900
대구	862,069	-	862,069	-	66,459	66,459	928,528
인천	1,011,279	-	1,011,279	-	34,138	34,138	1,045,417
광주	567,157	-	567,157	-	-	-	567,157
대전	582,504	-	582,504	-	-	-	582,504
울산	345,357	-	345,357	-	78,055	78,055	423,412
세종	34,919	40,300	75,219	-	-	-	75,219
경기	3,640,067	664,718	4,304,785	-	79,957	79,957	4,384,742
강원	361,671	76,846	438,517	-	167,600	167,600	606,117
충북	352,646	90,489	443,135	-	158,721	158,721	601,856
충남	349,263	265,649	614,912	-	181,273	181,273	796,185
전북	493,420	90,382	583,802	-	133,509	133,509	717,311
전남	297,136	93,964	391,100	-	329,512	329,512	720,612
경북	553,228	286,994	840,222	-	222,502	222,502	1,062,724
경남	809,718	245,862	1,055,580	-	202,907	202,907	1,258,487
제주	161,083	59,286	220,369	-	-	-	220,369
전국	15,487,901	1,914,490	17,402,391	-	1,708,639	1,708,639	19,111,030

<표 3-16> 시도, 시군부, 동읍면별 가구 분포

(단위: %)

시도	시부			군부		
	동부	읍면부	소계	동부	읍면부	소계
서울	100.0%	0.0%	100.0%	0.0%	0.0%	100.0%
부산	100.0%	0.0%	100.0%	0.0%	100.0%	100.0%
대구	100.0%	0.0%	100.0%	0.0%	100.0%	100.0%
인천	100.0%	0.0%	100.0%	0.0%	100.0%	100.0%
광주	100.0%	0.0%	100.0%	0.0%	0.0%	100.0%
대전	100.0%	0.0%	100.0%	0.0%	0.0%	100.0%
울산	100.0%	0.0%	100.0%	0.0%	100.0%	100.0%
세종	46.4%	53.6%	100.0%	0.0%	0.0%	100.0%
경기	84.6%	15.4%	100.0%	0.0%	100.0%	100.0%
강원	82.5%	17.5%	100.0%	0.0%	100.0%	100.0%
충북	79.6%	20.4%	100.0%	0.0%	100.0%	100.0%
충남	56.8%	43.2%	100.0%	0.0%	100.0%	100.0%
전북	84.5%	15.5%	100.0%	0.0%	100.0%	100.0%
전남	76.0%	24.0%	100.0%	0.0%	100.0%	100.0%
경북	65.8%	34.2%	100.0%	0.0%	100.0%	100.0%
경남	76.7%	23.3%	100.0%	0.0%	100.0%	100.0%
제주	73.1%	26.9%	100.0%	0.0%	0.0%	100.0%
전국	89.0%	11.0%	100.0%	0.0%	100.0%	100.0%

<표 3-15>와 <표 3-16>은 시도 내 시군부 및 동읍면 구분별 가구수 및 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광역시 내 시부는 동부로만 이루어졌으며 세종 및 도지역내 시부는 동부와 읍면부로 구성되며 세종시와 충남에서 시부 내 읍면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군부는 모든 시도지역에서 읍면부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시도, 시군부, 거처별 가구 분포

(단위: 개)

시도	시부			군부			총계
	아파트	비아파트	소계	아파트	비아파트	소계	
서울	1,586,400	2,198,090	3,784,490	-	-	-	3,784,490
부산	655,380	626,514	1,281,894	36,215	17,791	54,006	1,335,900
대구	444,299	417,770	862,069	42,354	24,105	66,459	928,528
인천	553,017	458,262	1,011,279	2,312	31,826	34,138	1,045,417
광주	355,697	211,460	567,157	-	-	-	567,157
대전	318,020	264,484	582,504	-	-	-	582,504
울산	195,621	149,736	345,357	42,111	35,944	78,055	423,412
세종	46,921	28,298	75,219	-	-	-	75,219
경기	2,397,145	1,907,640	4,304,785	13,215	66,742	79,957	4,384,742
강원	227,885	210,632	438,517	33,348	134,252	167,600	606,117
충북	229,776	213,359	443,135	44,226	114,495	158,721	601,856
충남	305,147	309,765	614,912	33,843	147,430	181,273	796,185
전북	302,044	281,758	583,802	25,076	108,433	133,509	717,311
전남	212,556	178,544	391,100	49,020	280,492	329,512	720,612
경북	365,476	474,746	840,222	36,106	186,396	222,502	1,062,724
경남	555,429	500,151	1,055,580	32,244	170,663	202,907	1,258,487
제주	55,886	164,483	220,369	-	-	-	220,369
전국	8,806,699	8,595,692	17,402,391	390,070	1,318,569	1,708,639	19,111,030

<표 3-18> 시도, 시군부, 거처별 가구비율 분포

(단위: %)

시도	시부			군부		
	아파트	비아파트	소계	아파트	비아파트	소계
서울	41.9%	58.1%	100.0%	0.0%	0.0%	100.0%
부산	51.1%	48.9%	100.0%	67.1%	32.9%	100.0%
대구	51.5%	48.5%	100.0%	63.7%	36.3%	100.0%
인천	54.7%	45.3%	100.0%	6.8%	93.2%	100.0%
광주	62.7%	37.3%	100.0%	0.0%	0.0%	100.0%
대전	54.6%	45.4%	100.0%	0.0%	0.0%	100.0%
울산	56.6%	43.4%	100.0%	54.0%	46.0%	100.0%
세종	62.4%	37.6%	100.0%	0.0%	0.0%	100.0%
경기	55.7%	44.3%	100.0%	16.5%	83.5%	100.0%
강원	52.0%	48.0%	100.0%	19.9%	80.1%	100.0%
충북	51.9%	48.1%	100.0%	27.9%	72.1%	100.0%
충남	49.6%	50.4%	100.0%	18.7%	81.3%	100.0%
전북	51.7%	48.3%	100.0%	18.8%	81.2%	100.0%
전남	54.3%	45.7%	100.0%	14.9%	85.1%	100.0%
경북	43.5%	56.5%	100.0%	16.2%	83.8%	100.0%
경남	52.6%	47.4%	100.0%	15.9%	84.1%	100.0%
제주	25.4%	74.6%	100.0%	0.0%	0.0%	100.0%
전국	50.6%	49.4%	100.0%	22.8%	77.2%	100.0%

<표 3-17>과 <표 3-18>은 시도 내 시군부 및 거처형태 구분별 가구수 및 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시부의 경우는 시도별로 구성이 서로 다른 경향이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아파트 거처의 비중이 74.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군부의 경우에는 인천시의 비아파트 거처의 비중이 93.2%로 매우 높았다.

앞서 여섯 가지의 주요특성 및 조합별 가구수 및 비중 분포를 보았을 때, 가구수가 적은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특성분류는 모집단 규모를 작게 만들어 특별한 층화구분 혹은 표본할당을 고려하지 않고는 시도내 특성 조합별 분석이 매우 불안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이주율 통계

인총자료의 패널화는 인구와 가구의 구조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 3-1>에 나열된 제한적 특성을 통해 분석 가능한 구조변화와 더불어 지역내 및 지역간 이주율에 대한 분석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은 KOSIS를 통해 인구수준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연도별 또한 시도 및 시군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3-19>와 <표 3-20>은 2015년 기준의 시도내 시부 및 군부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간전입, 시도간 전출 및 인구수를 정리하고 있다. 총전입과 총전출 규모에 비해 시도간 전입과 전출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순이동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군부의 경우에는 시도별 해당지역 인구수가 작아 이주특성별 인구수도 작게 형성된다. 상대적 크기인 인구대비 이주특성별 비율은 시도간 시부와 군부별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신규이주에 따른 총전입과 순이동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총패널 구축을 통한 이주율 변동의 분석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표 3-19>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도 (예, 세종시와 제주도)들에 대해서는 표본수가 많이 확보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일반적 특성은 물론 이주율 변동에 대한 패널분석의 관점에서 표본설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9> 시도, 시군부, 이주특성별별 인구 분포

(단위: 명)

시도	시부						군부						총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간전입	시도간 전출	인구수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인구수	
서울	1,589,431	1,726,687	-137,256	459,902	597,158	9,907,155	-	-	-	-	-	-	9,907,155
부산	482,339	503,090	-20,751	122,128	137,386	3,330,658	24,692	17,501	7,191	8,558	6,860	148,154	3,478,812
대구	321,335	341,198	-19,863	84,557	98,046	2,283,280	30,089	23,166	6,923	7,682	7,133	187,902	2,471,182
인천	461,486	453,187	8,299	152,488	143,529	2,798,943	11,737	10,498	1,239	6,113	5,534	87,599	2,886,542
광주	224,603	233,875	-9,272	73,826	83,098	1,465,091	-	-	-	-	-	-	1,465,091
대전	220,774	241,390	-20,616	81,165	101,781	1,514,390	-	-	-	-	-	-	1,514,390
울산	140,171	144,365	-4,194	42,833	42,968	947,481	30,222	26,108	4,114	11,429	11,374	215,865	1,163,346
세종	83,994	30,950	53,044	70,004	16,960	182,610	-	-	-	-	-	-	182,610
경기	1,962,844	1,872,517	90,327	632,575	540,773	12,125,639	30,236	25,795	4,441	14,241	11,275	211,850	12,337,489
강원	172,994	170,855	2,139	54,803	54,609	1,108,517	54,131	51,497	2,634	32,304	27,725	424,844	1,533,360
충북	163,607	169,223	-5,616	53,207	57,783	1,169,543	51,019	43,965	7,054	28,155	22,141	401,579	1,571,122
충남	243,063	235,850	7,213	101,245	93,968	1,602,927	46,889	43,830	3,059	25,211	22,216	452,916	2,055,843
전북	216,914	225,109	-8,195	51,580	55,827	1,515,168	44,918	39,553	5,365	17,176	15,759	343,184	1,858,352
전남	159,310	152,899	6,411	51,529	46,622	1,048,178	90,794	93,269	-2,475	50,872	51,843	846,025	1,894,203
경북	288,539	289,012	-473	104,914	105,902	2,138,761	56,191	56,295	-104	30,707	30,296	545,329	2,684,090
경남	403,287	400,041	3,246	121,900	117,769	2,837,948	52,097	50,238	1,859	21,776	20,802	498,851	3,336,799
제주	97,580	83,323	14,257	38,544	24,287	611,338	-	-	-	-	-	-	611,338
전국	7,232,271	7,273,571	-41,300	2,297,200	2,318,466	46,587,623	523,015	481,715	41,300	254,224	232,958	4,364,097	50,951,719

<표 3-20> 시도, 시군부, 이주특성별 인구비율 분포

(단위: %)

시도	시부						군부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인구수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인구수
서울	16.0%	17.4%	-1.4%	4.6%	6.0%	100.0%	0.0%	0.0%	0.0%	0.0%	0.0%	100.0%
부산	14.5%	15.1%	-0.6%	3.7%	4.1%	100.0%	16.7%	11.8%	4.9%	5.8%	4.6%	100.0%
대구	14.1%	14.9%	-0.9%	3.7%	4.3%	100.0%	16.0%	12.3%	3.7%	4.1%	3.8%	100.0%
인천	16.5%	16.2%	0.3%	5.4%	5.1%	100.0%	13.4%	12.0%	1.4%	7.0%	6.3%	100.0%
광주	15.3%	16.0%	-0.6%	5.0%	5.7%	100.0%	0.0%	0.0%	0.0%	0.0%	0.0%	100.0%
대전	14.6%	15.9%	-1.4%	5.4%	6.7%	100.0%	0.0%	0.0%	0.0%	0.0%	0.0%	100.0%
울산	14.8%	15.2%	-0.4%	4.5%	4.5%	100.0%	14.0%	12.1%	1.9%	5.3%	5.3%	100.0%
세종	46.0%	16.9%	29.0%	38.3%	9.3%	100.0%	0.0%	0.0%	0.0%	0.0%	0.0%	100.0%
경기	16.2%	15.4%	0.7%	5.2%	4.5%	100.0%	14.3%	12.2%	2.1%	6.7%	5.3%	100.0%
강원	15.6%	15.4%	0.2%	4.9%	4.9%	100.0%	12.7%	12.1%	0.6%	7.6%	6.5%	100.0%
충북	14.0%	14.5%	-0.5%	4.5%	4.9%	100.0%	12.7%	10.9%	1.8%	7.0%	5.5%	100.0%
충남	15.2%	14.7%	0.4%	6.3%	5.9%	100.0%	10.4%	9.7%	0.7%	5.6%	4.9%	100.0%
전북	14.3%	14.9%	-0.5%	3.4%	3.7%	100.0%	13.1%	11.5%	1.6%	5.0%	4.6%	100.0%
전남	15.2%	14.6%	0.6%	4.9%	4.4%	100.0%	10.7%	11.0%	-0.3%	6.0%	6.1%	100.0%
경북	13.5%	13.5%	0.0%	4.9%	5.0%	100.0%	10.3%	10.3%	0.0%	5.6%	5.6%	100.0%
경남	14.2%	14.1%	0.1%	4.3%	4.1%	100.0%	10.4%	10.1%	0.4%	4.4%	4.2%	100.0%
제주	16.0%	13.6%	2.3%	6.3%	4.0%	100.0%	0.0%	0.0%	0.0%	0.0%	0.0%	100.0%
전국	15.5%	15.6%	-0.1%	4.9%	5.0%	100.0%	12.0%	11.0%	0.9%	5.8%	5.3%	100.0%

3. 표본설계안

1) 표본설계 원칙

인총패널의 (잠정적) 목적은 가구 및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인총패널은 일반적인 가구패널과는 달리 조사로 진행하지 않고 등록센서스로 구축된 자료간 연계를 통해 구성되므로 전통적인 표본설계에 따른 비용함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인총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는 기본적으로 비용적 고려없이 주요 분석영역별로 횡단면 분석과 종단면 분석이 안정적일 수 있는 적절한 표본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인총패널에 제공될 변수의 수가 많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행정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 고려될 수 있는 예상 관심특성은 앞 절에서 살펴본 일반적 특성과 지역별 가구 및 인구 이동변화 정도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특성을 <표 3-2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가구원수는 5가지 분류에서 1명, 2명, 3명, 4명 이상의 4가지 분류, 가구주 연령은 12가지 분류에서 30세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의 4가지 분류, 세대구성은 5가지 분류에서 1세대, 2세대, 1인 가구, 기타의 4가지 분류로 각각 재구성하였다. 또한 통계청 이주율 통계의 분류가 시도 및 시군부로 나뉘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통계의 안정적 추정이 가능할 수 있는 표본할당을 고려하였다.

<표 3-21> 2015 인총자료 특성 재구성

변수	분류수	분류
시군구	2	시부, 군부
동읍면	2	동부, 읍면부
거처종류	2	1 (아파트 이외 거처), A (아파트)
가구원수	4	1~3명, 4명 이상
세대구성	4	1세대, 2세대, 1인 가구, 기타
가구주연령	4	39세 이하 / 40대 / 50대 / 60대 이상

2) 모집단 층화

층화기준으로는 17개 광역시도와 시도내 시·군부 분류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통계청의 이주율 통계가 작성되는 기본적 분류이기 때문이다. 가구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시도, 동읍

면, 거처형태(아파트 유무) 등이 함께 주로 사용되지만 인총패널의 주요통계로 이주율 변동분석이 예상되므로 시도내 시·군부 분류만을 고려하였다.

3) 표집방법

인총패널은 자료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선택된 표본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적 가구조사에서 채택하는 행정구역이나 조사구 등과 같은 지역단위를 추출하는 지역표집(area sampling)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앞서 정의한 모집단 층별로 가구단위를 추출하는 층화추출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한 균형적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특성을 고려한 내재적 층화, 즉 정렬을 고려할 수 있다:

시군구,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세대원수, 거처유형.

4) 표본크기, 표본할당, 정도평가

인총패널은 총 19,111,030개 가구 중 약 2% 규모인 가구표본, 즉 $n = 382,220$ 개 가구를 선택하며 가구내 가구원은 모두 패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본할당은 전국수준은 물론 시도내 시·군부 수준의 추정량이 갖는 정도수준이 적절할 수 있는 표본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절충적 할당방식은 흔히 제곱근할당(square-root allocation)과 키쉬할당(Kish allocation)이 고려된다.

제곱근할당은 층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표본수를 결정하는 다음의 방식이다.

$$n_h \propto \sqrt{W_h} \quad (3-1)$$

여기서 $W_h = N_h/N$ 은 층의 상대크기, N_h 와 N 는 각각 층과 전체크기를 나타낸다. 제곱근비례 할당은 층별 평균추정량의 표본오차를 서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키쉬할당은 층별 추정량의 정도수준은 물론 전국 수준의 추정량 정도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다음의 절충적 기준으로 표본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n_h \propto \sqrt{W_h^2 + \frac{1}{H^2}} \quad (3-2)$$

여기서 H 는 층수를 나타낸다. 키쉬할당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층에서 층별 할당규모를 유사하게 조정하지만 아주 작거나 큰 표본층에 대해서는 많은 표본수를 할당할 수도 있게 된다.

<표 3-22>는 시도 및 시·군부 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총 29개 표본층들에 대해 층 크기와 두 가지 절충할당인 키쉬할당과 제공근비례할당이 주는 층별 표본크기에 대한 기술통계를 요약하고 있다. 키쉬할당이 주는 층별 표본수는 8,304개에서 54,803개의 범위를 갖는 반면, 제공근비례할당은 3,583개에서 40,231개의 범위를 갖는다. 키쉬할당의 최소 및 최대 표본할당수가 제공근비례할당에 비해 모두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23>은 시도 및 시·군부 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총 29개 표본층들에 대해 표본수와 표본추출률을 정리하여 주고 있다. 층규모가 가장 큰 경기-시부와 서울-시부는 키쉬할당은 각각 54,803가구와 48,341가구인 반면 제공근할당은 각각 40,231가구와 37,721가구로 작게 할당되었다. 충남-군부 및 이보다 작은 규모의 층들에서도 키쉬할당이 제공근비례할당에 비해 큰 표본수를 할당하고 있다. 기타 중간층들에서는 모두 키쉬할당에 비해 제공근할당의 표본수가 더 크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표본할당방식에 따른 층별 표본크기 분포 (단위: 개, %)

표본할당	층수	평균	표준편차	CV(%)	min	Q1	Q2	Q3	max
키쉬	29	13,180	10,972	83.2%	8,304	8,530	9,363	11,342	54,803
제공근비례	29	13,180	8,758	66.5%	3,583	7,725	11,395	15,205	40,231

<표 3-23> 표본층별 표본할당 방안 비교

표본층		층크기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부	N_h	W_h	n_h	f_h	n_h	f_h
서울	시부	3,784,490	0.198	48,341	0.013	37,721	0.010
	부산	1,281,894	0.067	18,138	0.014	21,954	0.017
부산	시부	54,006	0.003	8,321	0.154	4,506	0.083
	군부	862,069	0.045	13,655	0.016	18,003	0.021
대구	시부	66,459	0.003	8,335	0.125	4,999	0.075
	군부	1,011,279	0.053	15,190	0.015	19,499	0.019
인천	시부	34,138	0.002	8,304	0.243	3,583	0.105
	군부	567,157	0.030	10,941	0.019	14,603	0.026
광주	시부	582,504	0.030	11,068	0.019	14,799	0.025
대전	시부						

표본층		총크기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부	N_h	W_h	n_h	f_h	n_h	f_h
울산	시부	345,357	0.018	9,363	0.027	11,395	0.033
	군부	78,055	0.004	8,351	0.107	5,417	0.069
세종	시부	75,219	0.004	8,347	0.111	5,318	0.071
경기	시부	4,304,785	0.225	54,803	0.013	40,231	0.009
	군부	79,957	0.004	8,354	0.104	5,483	0.069
강원	시부	438,517	0.023	9,961	0.023	12,840	0.029
	군부	167,600	0.009	8,557	0.051	7,938	0.047
충북	시부	443,135	0.023	9,993	0.023	12,908	0.029
	군부	158,721	0.008	8,530	0.054	7,725	0.049
충남	시부	614,912	0.032	11,342	0.018	15,205	0.025
	군부	181,273	0.009	8,601	0.047	8,256	0.046
전북	시부	583,802	0.031	11,079	0.019	14,816	0.025
	군부	133,509	0.007	8,461	0.063	7,085	0.053
전남	시부	391,100	0.020	9,643	0.025	12,126	0.031
	군부	329,512	0.017	9,272	0.028	11,131	0.034
경북	시부	840,222	0.044	13,438	0.016	17,774	0.021
	군부	222,502	0.012	8,753	0.039	9,146	0.041
경남	시부	1,055,580	0.055	15,660	0.015	19,922	0.019
	군부	202,907	0.011	8,677	0.043	8,734	0.043
제주	시부	220,369	0.012	8,744	0.040	9,102	0.041
전국		19,111,030	1.000	382,221	0.020	382,221	0.020

층화추출 하에서 층별 이주율의 표본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CV)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E(\hat{p}_h) = \sqrt{p_h(1-p_h) \left(\frac{1}{n_h} - \frac{1}{N_h} \right)}$$

$$CV(\hat{p}_h) = \frac{SE(\hat{p}_h)}{p_h} = \sqrt{\frac{1-p_h}{p_h} \left(\frac{1}{n_h} - \frac{1}{N_h} \right)} \quad (3-3)$$

<표 3-24>~<표 3-27>은 각각 표본층별로 키쉬할당과 제공근비례할당에 따른 4가지 이주율인 총전입률, 총전출률, 시도간전입률, 시도간전출률을 차례로 정리하여 주고 있다. 이주율 추정량의 오차한계와 상대표준오차(CV)는 키쉬할당과 제공근비례할당에서 모두 매우 안정적이다.

예를 들면, 총전입률 추정량의 오차한계는 키쉬할당에서 전국수준 0.001이고 층 수준으로 0.003~0.010의 작은 값을 갖는다. 제공근비례할당에서도 전국수준 0.001이고 층 수준으로 0.004~0.011의 범위를 갖는다. 반면, 상대표준오차는 키쉬할당이 제공근비례할당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데 3.18%를 넘지 않는다.

<표 3-24> 표본층별 표본할당에 따른 총전입률 추정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

표본층		총전입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	p_h	오차한계	CV(%)	오차한계	CV(%)
서울	시부	0.167	0.003	1.01%	0.004	1.15%
부산	시부	0.148	0.005	1.78%	0.005	1.62%
	군부	0.142	0.008	2.69%	0.010	3.66%
대구	시부	0.145	0.006	2.08%	0.005	1.81%
	군부	0.142	0.008	2.70%	0.010	3.48%
인천	시부	0.163	0.006	1.84%	0.005	1.62%
	군부	0.127	0.007	2.88%	0.011	4.38%
광주	시부	0.156	0.007	2.22%	0.006	1.92%
대전	시부	0.153	0.007	2.24%	0.006	1.94%
울산	시부	0.150	0.007	2.46%	0.007	2.23%
	군부	0.130	0.007	2.82%	0.009	3.51%
세종	시부	0.315	0.010	1.62%	0.013	2.02%
경기	시부	0.158	0.003	0.99%	0.004	1.15%
	군부	0.132	0.007	2.80%	0.009	3.46%
강원	시부	0.155	0.007	2.34%	0.006	2.06%
	군부	0.124	0.007	2.87%	0.007	2.98%
충북	시부	0.142	0.007	2.46%	0.006	2.16%
	군부	0.118	0.007	2.96%	0.007	3.11%
충남	시부	0.149	0.007	2.24%	0.006	1.94%
	군부	0.100	0.006	3.23%	0.007	3.30%
전북	시부	0.146	0.007	2.30%	0.006	1.99%
	군부	0.123	0.007	2.90%	0.008	3.17%
전남	시부	0.149	0.007	2.43%	0.006	2.17%
	군부	0.109	0.006	2.97%	0.006	2.71%
경북	시부	0.135	0.006	2.18%	0.005	1.90%
	군부	0.103	0.007	3.15%	0.006	3.08%
경남	시부	0.142	0.006	1.97%	0.005	1.74%
	군부	0.103	0.007	3.18%	0.006	3.16%
제주	시부	0.148	0.008	2.57%	0.007	2.52%
전국		0.152	0.001	0.38%	0.001	0.38%

총전출률, 시도간 전입률 및 전출률도 유사한 형태의 오차한계와 상대표준오차값을 갖는다. 다만 비율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비율추정량의 함수형태로 정의되므로 적절치 못한 측도가 될 수도 있어 해석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대구-군부의 시도간 전출률은 제공근비례할당 하에서 7.12%의 높은 상대표준오차값을 갖는데 이는 비율추정량이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단순확률추출의 표본설계 하에서 식 (3-3)의 상대표준오차는 모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성질을 갖는다.

<표 3-25> 표본층별 표본할당에 따른 총전출률 추정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

표본층		총전출률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	p_h	오차한계	CV(%)	오차한계	CV(%)
서울	시부	0.053	0.002	1.92%	0.002	2.17%
부산	시부	0.039	0.003	3.69%	0.003	3.35%
	군부	0.052	0.005	4.68%	0.007	6.36%
대구	시부	0.040	0.003	4.19%	0.003	3.65%
	군부	0.039	0.004	5.41%	0.006	6.98%
인천	시부	0.053	0.004	3.43%	0.003	3.03%
	군부	0.066	0.005	4.11%	0.008	6.26%
광주	시부	0.054	0.004	4.02%	0.004	3.48%
대전	시부	0.060	0.005	3.75%	0.004	3.24%
울산	시부	0.045	0.004	4.75%	0.004	4.30%
	군부	0.053	0.005	4.63%	0.006	5.75%
세종	시부	0.238	0.009	1.96%	0.012	2.45%
경기	시부	0.048	0.002	1.89%	0.002	2.21%
	군부	0.060	0.005	4.32%	0.006	5.33%
강원	시부	0.049	0.004	4.40%	0.004	3.87%
	군부	0.071	0.006	3.92%	0.006	4.07%
충북	시부	0.047	0.004	4.48%	0.004	3.94%
	군부	0.063	0.005	4.19%	0.006	4.40%
충남	시부	0.061	0.004	3.69%	0.004	3.18%
	군부	0.052	0.005	4.59%	0.005	4.68%
전북	시부	0.035	0.004	4.96%	0.003	4.29%
	군부	0.048	0.005	4.84%	0.005	5.29%
전남	시부	0.047	0.004	4.59%	0.004	4.10%
	군부	0.061	0.005	4.09%	0.005	3.73%
경북	시부	0.049	0.004	3.79%	0.003	3.29%
	군부	0.056	0.005	4.39%	0.005	4.30%
경남	시부	0.042	0.003	3.81%	0.003	3.37%
	군부	0.043	0.004	5.08%	0.004	5.07%
제주	시부	0.051	0.005	4.59%	0.005	4.50%
전국		0.050	0.001	0.70%	0.001	0.70%

<표 3-28>은 키쉬할당과 제공근비례할당 하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예상되는 표본가구수를 정리하고 있다. 일반 특성은 물론 이주율 특성들에 대해서도 키쉬할당에서 제공근비례할당에 비해 안정적인 표본수를 기대할 수 있다. 예로, 시도간 전입가구와 전출가구수²⁾는 키쉬할당은 최소값으로 387~417가구로 예상되는 반면, 제공근비례할당에서는 190~204가구로 적게 예상된다.

2) 통계청의 이주율 통계는 개인기준으로 제공된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한 인총자료는 가구수 기준 자료임으로 현 논의에서는 이주율 비율은 가구수준으로 해석하였다.

<표 3-26> 표본층별 표본할당에 따른 시도간전입률 추정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

표본층		시도간 총전입률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	p_h	오차한계	CV(%)	오차한계	CV(%)
서울	시부	0.046	0.002	2.06%	0.002	2.33%
부산	시부	0.037	0.003	3.81%	0.003	3.46%
	군부	0.058	0.005	4.43%	0.007	6.02%
대구	시부	0.037	0.003	4.36%	0.003	3.80%
	군부	0.041	0.004	5.31%	0.006	6.85%
인천	시부	0.054	0.004	3.38%	0.003	2.98%
	군부	0.070	0.006	4.01%	0.009	6.10%
광주	시부	0.050	0.004	4.15%	0.004	3.59%
대전	시부	0.054	0.004	3.99%	0.004	3.45%
울산	시부	0.045	0.004	4.75%	0.004	4.31%
	군부	0.053	0.005	4.63%	0.006	5.75%
세종	시부	0.383	0.011	1.39%	0.013	1.74%
경기	시부	0.052	0.002	1.82%	0.002	2.13%
	군부	0.067	0.005	4.08%	0.007	5.03%
강원	시부	0.049	0.004	4.39%	0.004	3.87%
	군부	0.076	0.006	3.77%	0.006	3.91%
충북	시부	0.045	0.004	4.58%	0.004	4.03%
	군부	0.070	0.006	3.94%	0.006	4.14%
충남	시부	0.063	0.005	3.62%	0.004	3.12%
	군부	0.056	0.005	4.44%	0.005	4.53%
전북	시부	0.034	0.003	5.06%	0.003	4.38%
	군부	0.050	0.005	4.74%	0.005	5.18%
전남	시부	0.049	0.004	4.48%	0.004	3.99%
	군부	0.060	0.005	4.11%	0.005	3.75%
경북	시부	0.049	0.004	3.80%	0.003	3.30%
	군부	0.056	0.005	4.38%	0.005	4.28%
경남	시부	0.043	0.003	3.77%	0.003	3.34%
	군부	0.044	0.004	5.02%	0.004	5.01%
제주	시부	0.063	0.005	4.12%	0.005	4.04%
전국		0.050	0.001	0.70%	0.001	0.70%

<표 3-27> 표본층별 표본할당에 따른 시도간전출률 추정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

표본층		시도간 총전출률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	p_h	오차한계	CV(%)	오차한계	CV(%)
서울	시부	0.060	0.002	1.80%	0.002	2.03%
부산	시부	0.041	0.003	3.58%	0.003	3.25%
	군부	0.046	0.005	4.98%	0.006	6.76%
대구	시부	0.043	0.003	4.04%	0.003	3.52%
	군부	0.038	0.004	5.51%	0.005	7.12%
인천	시부	0.051	0.004	3.49%	0.003	3.08%
	군부	0.063	0.005	4.23%	0.008	6.43%
광주	시부	0.057	0.004	3.90%	0.004	3.37%
대전	시부	0.067	0.005	3.54%	0.004	3.06%
울산	시부	0.045	0.004	4.74%	0.004	4.30%
	군부	0.053	0.005	4.64%	0.006	5.76%

표본층		시도간 총전출률	키쉬할당		제공근비례할당	
시도	시·군	p_h	오차한계	CV(%)	오차한계	CV(%)
세종	시부	0.093	0.006	3.42%	0.008	4.29%
경기	시부	0.045	0.002	1.98%	0.002	2.31%
	군부	0.053	0.005	4.61%	0.006	5.70%
강원	시부	0.049	0.004	4.40%	0.004	3.88%
	군부	0.065	0.005	4.09%	0.006	4.25%
충북	시부	0.049	0.004	4.39%	0.004	3.86%
	군부	0.055	0.005	4.48%	0.005	4.71%
충남	시부	0.059	0.004	3.76%	0.004	3.25%
	군부	0.049	0.005	4.75%	0.005	4.85%
전북	시부	0.037	0.004	4.86%	0.003	4.20%
	군부	0.046	0.005	4.96%	0.005	5.42%
전남	시부	0.044	0.004	4.72%	0.004	4.21%
	군부	0.061	0.005	4.06%	0.005	3.71%
경북	시부	0.050	0.004	3.78%	0.003	3.29%
	군부	0.056	0.005	4.41%	0.005	4.31%
경남	시부	0.041	0.003	3.84%	0.003	3.41%
	군부	0.042	0.004	5.15%	0.004	5.13%
제주	시부	0.040	0.004	5.26%	0.004	5.15%
전국		0.050	0.001	0.70%	0.001	0.70%

<표 3-28> 할당방식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예상표본가구수

할당법	특성	총수	평균	표준편차	min	Q1	Q2	Q3	max
키쉬할당 인구	가구원수_1명	29	3716.7	1046.8	2,190	3,207	3,679	3,916	7,446
	가구원수_2명	29	3699.1	878.1	2,458	3,222	3,585	3,871	6,427
	가구원수_3명	29	2687.3	1038.2	1,667	1,912	2,483	2,874	6,143
	가구원수_4명	29	3077.0	1361.5	1,516	2,009	2,936	3,447	7,906
	가구주연령구분_39세이하	29	2905.7	1428.2	1,144	1,798	2,796	3,616	7,160
	가구주연령구분_40대	29	2937.7	1260.2	1,465	1,847	2,919	3,268	7,344
	가구주연령구분_50대	29	3117.4	1053.3	1,817	2,454	2,924	3,309	6,648
	가구주연령구분_60대	29	4219.2	1236.7	2,112	3,165	4,198	5,438	6,608
	거처유형_비아파트	29	7472.1	2477.1	3,333	6,029	7,434	8,726	14,669
	거처유형_아파트	29	5707.9	3239.7	676	2,167	6,522	7,288	14,865
	세대구성_1세대	29	2531.3	582.4	1,697	2,117	2,481	2,778	4,204
	세대구성_1인가구	29	3716.7	1046.8	2,190	3,207	3,679	3,916	7,446
	세대구성_2세대	29	6038.6	2480.0	3,266	4,037	5,539	6,555	14,400
	세대구성_기타	29	893.8	253.9	643	786	840	948	1,852
	시도간(전입, 전출)평균률	29	736.9	388.2	402	575	629	723	2,445
	시도간전입률	29	798.0	635.7	417	572	669	720	3,936
	시도간전출률	29	675.9	234.9	387	542	625	730	1,522
	총(전입, 전출)평균률	29	1918.6	805.9	1,100	1,342	1,803	2,076	4,227
	총전입률	29	1997.0	902.4	1,137	1,396	1,793	2,051	4,722
	총전출률	29	1839.9	803.9	1,063	1,244	1,791	2,118	4,402
제공근비례할당	가구원수_1명	29	3684.0	2281.8	986	2,398	3,335	4,442	11,121
	가구원수_2명	29	3605.2	2064.1	1,261	2,443	3,359	4,136	9,686
	가구원수_3명	29	2734.8	2038.2	599	1,371	2,453	3,102	9,259
	가구원수_4명	29	3156.1	2508.1	545	1,421	2,745	3,822	11,915
	가구주연령구분_39세이하	29	3003.8	2482.3	476	1,218	2,614	3,984	10,693

할당법	특성	층수	평균	표준편차	min	Q1	Q2	Q3	max
	가구주연령구분_40대	29	3010.7	2332.5	526	1,315	2,883	3,787	11,068
	가구주연령구분_50대	29	3145.0	2173.6	856	1,815	2,888	3,476	10,020
	가구주연령구분_60대	29	4020.6	2114.9	1,094	2,564	3,742	4,771	9,869
	거처유형_비아파트	29	7197.6	4297.8	1,484	5,445	6,714	8,725	21,909
	거처유형_아파트	29	5982.5	5042.3	243	1,656	6,455	8,080	22,403
	세대구성_1세대	29	2439.4	1329.1	832	1,761	2,235	2,769	6,336
	세대구성_1인가구	29	3684.0	2281.8	986	2,398	3,335	4,442	11,121
	세대구성_2세대	29	6178.0	4720.9	1,173	2,794	5,654	7,342	21,733
	세대구성_기타	29	878.7	560.7	285	592	776	1,079	2,791
	시도간(전입, 전출)평균률	29	694.3	440.1	197	432	568	855	2,012
	시도간전입률	29	722.3	481.9	204	460	596	805	2,099
	시도간전출률	29	666.4	453.8	190	364	539	828	2,274
	총(전입, 전출)평균률	29	1936.9	1459.4	455	896	1,711	2,285	6,363
	총전입률	29	1971.6	1431.4	480	927	1,806	2,398	6,512
	총전출률	29	1902.0	1504.2	429	846	1,736	2,359	6,574

4. 인총패널 가중치 산출 방안

1) 패널모형 개요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개체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변동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인 패널의 구성방식은 연구나 조사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전체 기간에 걸쳐 동일한 개체만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고정패널조사(fixed panel survey), 차수(wave)별로 조사개체 중 일부만을 교체하는 연동패널조사(rotation panel survey), 패널조사와 반복조사를 혼용하는 분리패널조사(split panel survey) 등 다양한 종류의 패널 운영방식이 있다. 여기서 반복조사는 동일한 모집단을 대표하여 선택된 표본개체들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반복조사는 패널조사와는 달리 시점간 개체별 응답 추적보다는 표본 전체의 응답을 주로 고려한다. 조사목적에 대한 패널설계의 상세한 특성은 정미옥·백지선(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인총패널은 조사대상을 접촉하여 조사하는 일반적 패널조사와는 달리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와 인구(즉, 가구내 가구원)에 대해 매년 갱신되는 등록센서스 자료와 연계하여 추적하는 자료연계(record linkage)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인총패널에서는 일반 패널조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무응답과 이에 따른 표본탈락 및 가중치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패널개체의 시점간 정확한 자료연계의 실패는 무응답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 연계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과 같이 조사대상(혹은 연계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널 마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조사대상 중 2016년에 해당 사유로 제외되는 인구수는 약 0.6%로, 인총패널의 인구 규모가 약 100만명일 때 예상되는 관련된 인구수는 약 6000명 정도이다. 따라서 패널추가를 고려하기에는 패널마모의 규모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유입이 발생하여 모집단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패널 연구를 위한 모형선택에 따라 앞서 논의한 모집단 변화에 대한 반영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총패널을 위한 가중치 산출은 패널구성의 방식에 따라 달리 정의되므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후 논의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고정패널모형을 가정한다.

2) 가중치 산출 개요

패널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 산출의 기본적인 목적은 패널이 구성된 시점에서 추출된 표본이 대표하는 모집단과 이후 모집단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정패널모형의 가정 하에서 인총패널이 대표하는 모집단이란 패널표본의 구축을 위해 사용한 최초년(2015년) 인총에서 파악한 가구와 인구(가구원)이고 이들의 변동이 2차년 이후 자료연계를 통해 파악할 대상이 된다.

모집단 변화는 패널표본에서 누락되거나 신규유입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로, 가구원이 사망,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출생, 결혼 등의 이유로 신규유입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단면 분석의 관점에서는 다양 이유로 인한 가구의 재구성이 발생하여 가구의 개념은 매우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문제로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나 독일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의 선행적 해외 연구에서는 종단면 가구가중치의 산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강석훈, 2003).

3) 횡단면 가중치 산출

일반적인 횡단면조사에서 고려하는 가중치 산출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반영한다.

- ① 표본설계에 따른 개체별 불균등한 포함확률을 반영
- ② 단위무응답에 대한 보정
- ③ 보조정보를 이용한 표본과 모집단 구성 비율의 조정

하지만 횡단면 조사의 특성들에 따라 위의 3가지를 모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상치 조정 등과 같은 추가적 요소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인총패널은 최초년 패널표본의 구축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 내역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만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인총패널이 대규모 표본이므로 세 번째 요소의 적용은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총패널의 최초년 패널표본의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는 다음의 2단계에 걸쳐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1: 표본추출확률을 반영한 가구 설계가중치

- 표본설계에 따른 개체별로 불균등한 표본추출확률을 조정하여 그 역수를 설계가중치로 사용한다.
- 가구추출은 3절에 기술된 것처럼 층별로 계통추출로 이루어지므로 가구 설계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_{hi}^{t_0} = N_{hi}/n_{hi}.$$

단계 2: 가구내 개인추출확률을 반영한 개인 설계가중치

- 가구내 가구원은 모두 패널표본에 포함되므로 개인 설계가중치는 가구 설계가중치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d_{hik}^{t_0} = d_{hi}^{t_0} \quad (3-4)$$

단계 3: (선택적 적용) 통합적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적용한 가구 및 개인 가중치

- 인구패널은 가구와 가구내 가구원을 모두 포함하므로 가구내 가구원들이 식 (3-4)의 설계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가구내 가구원의 칼리브레이션 가중치가 모두 같아지도록 아래의 옵션을 사용한 통합적 칼리브레이션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sum_{k=1}^{N_i} w_k = N_i w_i$$

여기서 w_i 와 w_k 는 각각 i 번째 가구와 가구 내 k 번째 가구원의 칼리브레이션 조정 가중치를 나타내며, N_i 는 i 번째 가구의 총 가구원수이다.

- 위의 통합적 조정방식은 보조정보를 이용한 최종 개인가중치의 평균을 가구가중치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식 (3-4)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가중치와 관련된 논의는 Estevao and Särndal (2006)을 참고할 수 있다.

4) 종단면 가중치 산출

인총패널의 종단면 가중치 산출은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계 1: 기초가중치 산출

- 최초년 패널구축의 표본설계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종단면 가중치의 기초가중치로 사용한다. 이때, 개인가중치는 가구가중치와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단계 2: 개인가중치 산출

- 2차 연계 이후부터는 가구원들의 상이한 (패널)연계율을 이용하여 개인가중치를 조정한다. 정확연계가 불가능할 때 다음과 같은 조정을 고려한다:
 - (i) 통계적 연계를 통한 조정 혹은
 - (ii) 응답성향분석을 통한 무응답 조정
- 일반적 가구조사에서는 가구와 가구원 정보를 모두 사용한 응답성향(예, 로지스틱모형에 의한 응답성향점수)을 파악하여 응답확률의 역수를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t 차 연계 가중치를 산출한다.
- 이때 2차 연계에는 존재하지만 최초 패널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표본가구원이나 1차 패널자료 이후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는 개인 연계실패 조정과정에서는 제외한다.

단계 3: 가구가중치 산출

- 2차 연계에서 산출된 개인가중치의 가구내 평균을 이용하여 2차연계의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 이때 초기년도 패널표본의 가구원과 결혼 혹은 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유입된 신규가구원의 경우에는 가중치 값을 0으로 정한다.
- 당해연도 새롭게 태어난 가구원(신생아, 혼인 혹은 동거인)은 앞서의 평균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IV. 2015년 기반 등록센서스 2% 자료 분석

1. 패널데이터³⁾ 분석

패널데이터는 2015년 등록센서스 결과로부터 2%를 추출한 가구 및 가구원 통합 데이터로서 통계청에서 본 연구를 위해 제공한 데이터이다. 기본적으로 2% 자료는 여러 인구 및 가구 구성의 기본적 변수 측면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되었다. 패널데이터는 자료 수집 시기에 따라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데이터로 구분된다. 2015년 데이터는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2%의 가구를 추출한 후 가구에 속해있는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며 2015년 가구 및 가구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16년 데이터는 2015년 2%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을 연계한 후 양 시점에 모두 관측된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및 이에 속한 전체 가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패널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등록센서스를 통해 취합되는 정보로써 기준년도, 행정구역 분류코드, 가구키, 가구주 성별코드, 가구주 만연령, 가구유형 코드, 가구구분, 가구원수, 세대유형, 세대가구유형, 주택형태, 단독주택유형, 가구원키, 인구구분코드, 가구주 관계코드, 성별코드, 만연령, 국적코드, 입국연도, 1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행정구역이다

본 장에서는 제공된 패널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술한다. 이를 통해서 패널의 구성방안에 대한 여러 방법 중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 특성 변수와 가구원 단위 특성 변수의 분포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3) 본 보고서에서 패널데이터는 2015년 등록센서스 결과에서 추출된 2% 자료를 의미함.

1) 지역별 가구 분포

<표 4-1>은 2015년 및 2016년 가구의 지역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시점의 지역 별 가구 분포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가구의 수는 382,211이며 대응되는 2016년 가구의 수는 411,200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던 가구원들이 2016년에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면서 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가구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 인천, 경기 즉 수도권지역에 2015년에는 47.95%가 2016년에는 46.55%가 분포되어 있다.

<표 4-1> 등록센서스 데이터 지역별 가구 분포

지역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서울	75,689	19.80	79,590	19.36
부산	25,826	6.76	28,377	6.90
대구	18,570	4.86	19,730	4.80
인천	20,587	5.39	22,654	5.51
광주	11,343	2.97	12,197	2.97
대전	11,650	3.05	12,440	3.03
울산	8,468	2.22	9,061	2.20
세종	1,147	0.30	1,983	0.48
경기	86,991	22.76	89,142	21.68
강원	12,122	3.17	13,108	3.19
충북	12,036	3.15	13,081	3.18
충남	15,923	4.17	17,329	4.21
전북	14,346	3.75	15,411	3.75
전남	14,412	3.77	15,595	3.79
경북	21,231	5.55	22,873	5.56
경남	25,101	6.57	27,026	6.57
제주	4,407	1.15	4,955	1.21
결측값	2,362	0.62	6,648	1.62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2) 지역별 가구원 분포

<표 4-2>는 2015년 및 2016년 지역별 가구원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데이터의 분포 역시 지역 별 가구분포와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다. 2015년 가구원 수는 966,959명이고 2016년 가구원의 수는 1,057,152명이다. 이는 2015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던 가구원들이 2016년에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6년 데이터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가구원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 인천, 경기 즉 수도권지역에 2015년에는 49.16%가 2016년에는 47.70%가 분포되어 있다.

<표 4-2> 등록센서스 데이터 지역별 가구원 분포

지역	2015 년		2016 년	
	가구원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서울	187,980	19.44	201,267	19.04
부산	64,362	6.66	71,565	6.77
대구	47,642	4.93	51,086	4.83
인천	54,238	5.61	60,653	5.74
광주	28,713	2.97	31,490	2.98
대전	29,348	3.04	31,624	2.99
울산	22,131	2.29	24,034	2.27
세종	2,739	0.28	5,295	0.50
경기	233,096	24.11	242,257	22.92
강원	28,560	2.95	31,704	3.00
충북	29,707	3.07	32,714	3.09
충남	38,861	4.02	42,899	4.06
전북	34,798	3.60	38,213	3.61
전남	34,065	3.52	37,673	3.56
경북	50,149	5.19	54,993	5.20
경남	62,739	6.49	68,482	6.48
제주	11,520	1.19	13,243	1.25
결측값	6,311	0.65	17,960	1.70
계	966,959	100.00	1,057,152	100.00

3) 가구주 성별 분포

<표 4-3>은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데이터의 가구주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로서 두 시점에 조사된 데이터의 분포는 대동소이하다. 남자와 여자의 가구주 비율이 약 7:3 이다.

<표 4-3>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주 성별 분포

성별	2015년		2016년	
	가구주수	백분율(%)	가구주수	백분율(%)
남자	268,973	70.37	287,738	69.98
여자	113,238	29.63	123,462	30.02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4) 가구원 성별 분포

<표 4-4>는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데이터의 가구주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로서 가구원의 성별 비율은 약 49:51 로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표 4-4>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원 성별 분포

성별	2015년		2016년	
	가구원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남자	476,293	49.26	520,476	49.23
여자	490,666	50.74	536,676	50.77
계	966,959	100.00	1,057,152	100.00

5) 가구주 연령별 분포

<표 4-5>는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데이터의 가구주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로서 가구주 연령은 50대, 40대, 30대, 60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5>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주 연령별 분포

연령	2015 년		2016 년	
	가구주수	백분율(%)	가구주수	백분율(%)
10~19 세	1,295	0.34	1,149	0.28
20~29 세	25,781	6.75	26,561	6.46
30~39 세	65,511	17.14	70,443	17.13
40~49 세	91,042	23.82	94,610	23.01
50~59 세	92,133	24.11	100,164	24.36
60~69 세	56,326	14.74	63,790	15.51
70 세 이상	50,123	13.11	54,483	13.25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6) 가구원 연령별 분포

<표 4-6>는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데이터의 가구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로서 가구원의 연령은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6>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원 연령별 분포

연령	2015 년		2016 년	
	가구원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9 세	90,138	9.32	97,541	9.23
10~19 세	105,207	10.88	106,620	10.09
20~29 세	114,176	11.81	128,607	12.17
30~39 세	146,781	15.18	161,022	15.23
40~49 세	168,880	17.47	180,190	17.04
50~59 세	158,774	16.42	175,698	16.62
60~69 세	96,659	10.00	111,081	10.51
70 세 이상	86,344	8.93	96,393	9.12
계	966,959	100.00	1,057,152	100.00

7) 가구구분 분포

<표 4-7>은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데이터의 가구구분 분포로써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인 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7>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별 가구구분 분포

가구구분 ⁴⁾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	271,991	71.16	295,551	71.88
2	1,867	0.49	2,664	0.65
3	104,057	27.23	104,498	25.41
4	4,296	1.12	8,487	2.06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8) 가구별 가구원수 분포

가구별 가구원수 분포는 2015년에는 1인가구가, 2016년에는 2인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가구원수가 5인 이하인 가구의 분포가 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4-8>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별 가구원수 분포

가구원수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	104,057	27.23	104,498	25.41
2	99,873	26.13	110,380	26.84
3	82,019	21.46	91,041	22.14
4	71,772	18.78	77,022	18.73
5	18,706	4.89	21,116	5.14
6	4,425	1.16	5,438	1.32
7	1,055	0.28	1,308	0.32
8	225	0.06	297	0.07
9	54	0.01	70	0.02
10 인이상	25	0.01	30	0.01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9) 가구별 세대가구유형 분포

가구별 세대가구유형은 두 해 모두 세대유형가구,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4) 1: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2: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3:1인 가구, 4: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5: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9:기타(외국인가구, 집단시설가구)

<표 4-9>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별 세대가구유형 분포

세대가구 유형 ⁵⁾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A	273,858	71.65	298,215	72.52
B	4,296	1.12	8,487	2.06
C	104,057	27.23	104,498	25.41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10) 가구별 세대유형 분포

가구별 세대유형은 두 해 모두 부부+미혼자녀, 부부, 모+미혼자녀, 기타, 모+미혼자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별 세대유형 분포

세대유형 ⁶⁾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1	59,617	21.77	63,171	21.18
12	351	0.13	467	0.16
13	94	0.03	148	0.05
14	3,984	1.45	4,140	1.39
15	351	0.13	392	0.13
19	2,091	0.76	2,737	0.92
21	122,703	44.81	130,370	43.72
22	10,922	3.99	11,233	3.77
23	30,381	11.09	31,340	10.51
24	380	0.14	524	0.18
25	2,477	0.90	2,928	0.98
26	1,549	0.57	1,817	0.61
27	895	0.33	1,066	0.36
28	1,340	0.49	1,537	0.52
29	15,920	5.81	21,397	7.18
31	2,242	0.82	2,741	0.92
32	1,471	0.54	1,816	0.61
33	7,851	2.87	9,208	3.09
39	8,985	3.28	10,876	3.65
49	254	0.09	307	0.10
계	273,858	100.00	298,215	100.00

5) A:세대유형가구, B:비혈연가구, C:1인가구

11) 가구별 주택형태 분포

가구별 주택형태를 보면 전체가구의 50% 가량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016년 데이터에 7,8,9,10에 대한 가구는 없으며 99라는 레이아웃에 없는 데이터 값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4-11>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별 주택형태 분포

주택형태 ⁷⁾	2015년		2016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	134,649	35.23	139,749	33.99
2	183,923	48.12	201,152	48.92
3	8,453	2.21	9,312	2.26
4	34,201	8.95	38,554	9.38
5	6,567	1.72	6,678	1.62
6	6,466	1.69	7,706	1.87
7	587	0.15		
8	555	0.15		
9	213	0.06		
10	6,597	1.73		
99			8,049	1.96
계	382,211	100.00	411,200	100.00

12) 단독주택유형 분포

주택 형태 중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가구를 세분류할 경우에 다가구 단독주택, 일반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순으로 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등록센서스 데이터 단독주택유형 분포

단독주택 유형 ⁸⁾	2015년		2016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	53,004	39.36	55,693	39.85
2	61,932	46.00	62,473	44.70
3	19,713	14.64	21,583	15.44
계	134,649	100.00	139,749	100.00

6) 11:부부, 21:부부+미혼자녀, 22:부+미혼자녀, 23:모+미혼자녀, 29:기타

7) 1:단독주택, 2:아파트, 3:연립주택, 4:다세대주택, 5:비거주용건물내 주택, 6:오피스텔, 7:호텔,여관등 숙박업소의 객실, 8: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9:판잣집 비닐하우스, 10:기타

13) 가구원 인구구분 분포

가구원의 인구구분은 내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국인도 0.3~0.4%를 차지한다.

<표 4-13>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원 인구구분 분포

인구구분 ⁹⁾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	963,651	99.66	1,052,993	99.61
2	3,308	0.34	4,159	0.39
계	966,959	100.00	1,057,152	100.00

14) 가구원 가구주 관계 분포

각 가구 내 가구주와 관계에 대한 가구원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 자녀, 배우자, 가구주의 순으로 그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원 가구주 관계 분포

가구주와의 관계 ¹⁰⁾	2015 년		2016 년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수	백분율(%)
1	382,211	39.53	411,200	38.90
2	208,724	21.59	226,803	21.45
3	300,791	31.11	324,107	30.66
4	4,693	0.49	5,785	0.55
5	25,397	2.63	29,934	2.83
6	4,879	0.50	6,228	0.59
7	8,868	0.92	9,867	0.93
8	3,472	0.36	4,579	0.43
9	79	0.01	84	0.01
10	851	0.09	1,058	0.10
11	15,240	1.58	18,162	1.72
12	3,193	0.33	4,279	0.40
13	395	0.04	529	0.05
14	1,091	0.11	1,512	0.14
15	7,075	0.73	13,025	1.23
계	966,959	100.00	1,057,152	100.00

8) 1:일반단독주택, 2:다가구단독주택, 3:영업겸용단독주택

9) 1:내국인, 2:외국인

10) 1:가구주, 2:배우자, 3:자녀, 5:가구주의 부, 11:형제자매, 그 배우자

2. 등록센서스 인구패널 데이터 분석

등록센서스 인구패널 데이터는 2015년 데이터와 2016년의 데이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 943,284명을 추출하여 생성하였다.¹¹⁾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별 분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패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행정구역분류코드, 가구키, 가구구분 등 앞에서 분석한 등록센서스 데이터와 동일하다.

1) 지역별 가구원 분포 변화

<표 4-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 패널 구성원 중 2015년 서울에서 2016년 경기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5,758명이고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3,32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2016년 자료에서 지역변수의 결측값이 16,208이고, 특히 2015년 경기에서 2016년 결측으로 나타난 가구원은 15,368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6년 7월 기준 행정분류코드를 활용하여 매칭을 시켰으며, 데이터 입력 상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세대가구유형 분포 변화

<표 4-15>를 통해 세대가구유형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세대유형가구에 속해 있다가 2016년 1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수는 21,17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에서 세대유형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수는 16,820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대유형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88.4%에서 87.8%로 줄어들었고, 1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10.7%에서 11.1%로 증가하였다.

<표 4-15> 인구패널 데이터 세대가구유형 분포 변화

세대가구유형	A	B	C	합계	백분율(%)
A	809,386	3,019	21,179	833,584	88.4
B	1,743	4,537	2,666	8,946	0.9
C	16,820	3,281	80,653	100,754	10.7
합계	827,949	10,837	104,498	943,284	100.0
백분율(%)	87.8	1.1	11.1	100.0	

11) 인구패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인 패널의 의미를 감안하여 분석을 위한 인구패널을 정의하여 구성함.

3) 세대유형 분포 변화

<표 4-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세대유형이 부부였다가 2016년 부부+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10,948명이고 부부+미혼자녀에서 부부로 세대유형이 변화된 가구원수는 12,157명이다. 한편 부부+미혼자녀에서 부+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2,873명, 모+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5,853명이다.

4) 가구구분 분포 변화

<표 4-16>를 통해 가구 구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속해 있다가 2016년 1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수는 20,67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에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수는 16,469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87.7%에서 87.1%로 줄어들었고, 1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10.7%에서 11.1%로 증가하였다.

<표 4-16> 인구패널 데이터 가구구분 분포 변화

가구 구분		2016년				합계	백분율(%)
		1	2	3	4		
2015년	1	800,376	3,182	20,679	2,620	826,857	87.7
	2	2,879	2,949	500	399	6,727	0.7
	3	16,469	351	80,653	3,281	100,754	10.7
	4	1,576	167	2,666	4,537	8,946	0.9
합계		821,300	6,649	104,498	10,837	943,284	100.0
백분율(%)		87.1	0.7	11.1	1.1	100.0	

<표 4-17> 인구패널 데이터 지역별 가구원 분포 변화

2016 20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결측	합계	백분율
서울	173,348	238	160	668	155	253	85	118	5,758	390	243	337	242	210	274	207	169	432	183,287	19.4%
부산	266	60,869	74	41	14	43	133	19	226	26	19	49	32	43	156	814	40	4	62,868	6.7%
대구	174	79	45,079	32	3	37	53	13	193	37	37	52	15	16	681	102	23	6	46,632	4.9%
인천	499	29	24	50,673	42	50	22	30	861	96	80	129	59	72	65	33	50	208	53,022	5.6%
광주	193	14	7	43	26,810	32	2	15	177	16	18	24	88	546	17	34	17	2	28,055	3.0%
대전	233	31	30	44	20	27,057	10	367	260	30	121	254	70	20	51	45	11	19	28,673	3.0%
울산	95	163	45	19	6	13	20,865	3	68	21	17	9	9	10	120	123	6	6	21,598	2.3%
세종	47	5	8	9	2	30	2	2,433	32	4	19	40	7	2	5	9	1	3	2,658	0.3%
경기	3,321	214	128	1,001	127	261	75	133	204,469	463	368	596	241	250	286	212	146	15,368	227,659	24.1%
강원	282	27	35	86	8	30	12	20	385	26,635	77	60	14	16	52	37	10	25	27,811	2.9%
충북	217	27	24	51	8	110	5	103	272	54	27,817	99	25	23	43	35	12	20	28,945	3.1%
충남	268	34	33	117	22	250	34	120	476	65	122	36,050	91	45	42	48	16	44	37,877	4.0%
전북	235	23	22	62	71	66	19	43	252	20	63	109	32,672	99	32	29	15	22	33,854	3.6%
전남	237	40	14	55	577	21	21	15	240	17	29	56	83	31,452	32	70	23	12	32,994	3.5%
경북	268	134	628	54	10	65	119	11	257	81	95	53	28	30	46,741	162	23	20	48,779	5.2%
경남	302	704	129	68	17	42	138	15	231	29	50	63	33	58	119	59,081	32	6	61,117	6.5%
제주	85	34	22	17	15	6	3	5	79	16	8	17	11	7	18	27	10,898	7	11,275	1.2%
결측	67	2,056	8	974	3	36	9	998	1,743	10	16	17	10	6	56	159	8	4	6,180	0.7%
합계	180,137	64,721	46,470	54,014	27,910	28,402	21,607	4,461	215,979	28,010	29,199	38,014	33,730	32,905	48,790	61,227	11,500	16,208	943,284	100.0%
백분율	19.1%	6.9%	4.9%	5.7%	3.0%	3.0%	2.3%	0.5%	22.9%	3.0%	3.1%	4.0%	3.6%	3.5%	5.2%	6.5%	1.2%	1.7%	100.0%	

<표 4-18> 인구패널 데이터 세대유형 분포 변화

세대 유형	2016년																				합계	%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9	49			
2015년	11	95,406	121	82	21	11	727	10,948	220	472	203	602	49	384	37	2,661	590	114	329	787	37	113,801	14.1
	12	118	607	0	12	2	29	62	3	3	2	4	95	0	1	38	0	0	3	5	0	984	0.1
	13	61	2	144	0	6	0	12	1	8	0	2	0	0	0	18	2	4	2	6	0	268	0.0
	14	169	54	0	5,161	5	225	400	131	335	0	8	38	5	34	162	5	3	12	34	0	6,781	0.8
	15	11	0	8	9	419	14	25	6	22	0	0	1	1	0	45	0	1	4	19	0	585	0.1
	19	742	21	0	68	9	2,794	190	24	51	1	13	2	11	0	434	9	4	31	57	2	4,463	0.6
	21	12,157	45	23	461	26	182	392,486	2,873	5,853	171	161	976	100	101	7,763	957	889	3,219	1,967	55	430,465	53.2
	22	291	4	2	188	6	29	3,205	18,318	240	6	41	27	21	23	795	28	41	84	543	10	23,902	3.0
	23	750	13	9	428	9	68	6,082	222	56,953	15	114	84	17	41	2,105	65	32	267	1,027	12	68,313	8.4
	24	178	0	2	0	0	2	49	1	4	707	65	0	6	1	133	270	13	11	20	0	1,462	0.2
	25	887	0	2	0	1	21	146	7	19	15	4,414	0	2	6	366	13	119	722	130	33	6,903	0.9
	26	42	75	1	16	2	11	1,296	15	64	1	3	4,834	2	0	317	16	16	25	121	3	6,860	0.8
	27	358	0	0	7	0	3	84	18	27	9	2	4	1,811	78	57	31	4	8	233	1	2,735	0.3
	28	35	0	0	42	0	3	55	31	48	3	13	3	33	1,834	104	0	7	69	234	7	2,521	0.3
	29	2,428	62	20	197	61	505	5,349	490	1,367	166	361	255	42	64	32,059	230	95	384	1,916	29	46,080	5.7
	31	552	0	0	6	0	12	1,144	28	65	134	18	4	42	1	122	8,974	178	471	732	34	12,517	1.5
	32	73	0	0	4	0	2	1,130	32	45	1	103	8	0	3	60	75	4,700	31	272	0	6,539	0.8
	33	305	3	4	20	6	15	3,962	64	232	2	855	8	2	67	336	94	18	27,199	1,555	75	34,822	4.3
	39	843	11	4	58	2	80	2,705	573	1,230	12	168	151	312	333	2,018	890	312	1,692	26,403	160	37,957	4.7
49	24	0	0	1	0	0	126	12	33	0	54	0	3	5	40	76	10	51	208	785	1,428	0.2	
합계	115,430	1,018	301	6,699	565	4,722	429,456	23,069	67,071	1,448	7,001	6,539	2,794	2,629	49,633	12,325	6,560	34,614	36,269	1,243	809,386	100	
백분율	14.3	0.1	0.0	0.8	0.1	0.6	53.1	2.9	8.3	0.2	0.9	0.8	0.3	0.3	6.1	1.5	0.8	4.3	4.5	0.2	100		

5) 주택형태 분포 변화

<표 4-19>를 통해 주택형태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단독주택에서 2016년 아파트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20,700명이고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16,478명이다.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29.5%에서 28.7%로 감소하였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55.1%에서 55.6%로 증가하였다.

<표 4-19> 인구패널 데이터 주택형태 분포 변화

주택 형태	2016년								합계	백분율 (%)
	1	2	3	4	5	6	99			
2015년	1	242,435	20,700	1,562	7,798	1,862	1,611	2,640	278,608	29.5
	2	16,478	490,122	1,647	6,014	1,108	2,303	1,692	519,364	55.1
	3	1,114	1,751	18,293	743	69	114	96	22,180	2.4
	4	5,035	6,424	570	71,612	334	731	414	85,120	9.0
	5	2,193	1,276	105	530	9,903	146	243	14,396	1.5
	6	1,006	2,152	91	662	77	6,437	122	10,547	1.1
	7	115	87	2	25	18	7	588	842	0.1
	8	118	133	2	28	5	17	383	686	0.1
	9	86	55	11	17	3	1	241	414	0.0
	10	2,067	2,065	121	476	207	194	5,997	11,127	1.2
합계	270,647	524,765	22,404	87,905	13,586	11,561	12,416	943,284	100.0	
백분율(%)	28.7	55.6	2.4	9.3	1.4	1.2	1.3	100.0		

6) 단독주택형태 분포 변화

<표 4-20>을 통해 단독주택형태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에서 다가구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원 수는 3,251명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일반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3,068명이다.

<표 4-20> 인구패널 데이터 단독주택형태 분포 변화

단독주택 형태	2016년			합계	백분율(%)	
	1	2	3			
2015년	1	100,708	3,251	1,613	105,572	43.5
	2	3,068	97,136	2,995	103,199	42.6
	3	1,396	2,349	29,919	33,664	13.9
합계	105,172	102,736	34,527	242,435	100.0	
백분율(%)	43.4	42.4	14.2	100.0		

7) 인구구분 분포

인구패널데이터는 내국인은 99.8%, 외국인은 0.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1> 인구패널 데이터 인구구분 분포

인구구분		2016년		합계	백분율(%)
		1	2		
2015년	1	941,001	0	941,001	99.8
	2	0	2,283	2,283	0.2
합계		941,001	2,283	943,284	100.0
백분율(%)		99.8	0.2	100.0	

8) 성별 분포

인구패널 데이터는 남자는 49%, 여자는 5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2> 인구패널 데이터 성별 분포

성별		2016년		합계	백분율(%)
		1	2		
2015년	남자	461,882	0	461,882	49.0
	여자	0	481,402	481,402	51.0
합계		461,882	481,402	943,284	100.0
백분율(%)		49.0	51.0	100.0	

9) 가구원수 분포변화

<표 4-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구원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인에서 2인가구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10,846명, 2인 가구에서 1인가구로는 11,849명, 3인가구로는 23,267명이다. 3인 가구에서 4인가구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30,021명이고 4인 가구에서 3인가구로 이동한 가구원수는 32,630명이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10.7%에서 11.1%로 증가하였고 2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도 20.7%에서 21.1%로 증가하였으나 4인가구는 29.7%에서 29.3%로 감소하였다.

<표 4-23> 인구패널 데이터 가구원수 분포 변화

가구원수(명)		2016년										합계	백분율 (%)
		1	2	3	4	5	6	7	8	9	10인 이상		
2015년	1	80,653	10,846	4,735	2,964	1,127	332	75	14	7	1	100,754	10.7
	2	11,849	152,561	23,267	5,128	1,659	714	202	27	8	5	195,420	20.7
	3	5,759	25,624	175,099	30,021	2,864	724	220	70	15	3	240,399	25.5
	4	4,239	6,915	32,630	220,856	13,393	1,658	280	96	12	0	280,079	29.7
	5	1,485	2,000	3,700	14,679	64,507	4,091	477	90	20	5	91,054	9.7
	6	382	716	883	1,838	4,419	16,290	1,190	147	35	6	25,906	2.7
	7	103	219	263	443	567	1,396	3,915	253	21	12	7,192	0.8
	8	20	41	68	75	118	119	330	884	72	32	1,759	0.2
	9	6	8	15	55	31	37	21	72	214	9	468	0.0
	10인 이상	2	4	3	16	8	6	9	15	25	165	253	0.0
합계		104,498	198,934	240,663	276,075	88,693	25,367	6,719	1,668	429	238	943,284	100.0
백분율(%)		11.1	21.1	25.5	29.3	9.4	2.7	0.7	0.2	0.0	0.0	100.0	

3. 등록센서스 가구패널 데이터 분석

등록센서스 가구패널 데이터는 2015년 등록센서스 데이터와 2016년 등록센서스 데이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351,875가구를 추출하여 생성하였다.¹²⁾ 2015년 등록센서스 데이터에는 382,211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2016년 등록센서스 데이터에는 411,200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즉, 2015년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6년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소멸가구)는 30,336가구이며, 2015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6년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추가가구)는 59,325가구이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별 분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패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행정구역분류코드, 가구키, 가구구분 등 앞에서 분석한 등록센서스 데이터와 동일하다.

1) 지역별 가구 분포 변화

<표 4-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서울에서 2016년 경기로 이동한 가구는 1,676가구이고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가구는 820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2016년 자료에서 지역변수의 결측값이 5,785가구이고, 특히 2015년 경기에서 2016년 결측으로 나타난 가구는 5,540가구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6년 7월 기준 행정분류코드를 활용하여 매칭을 시켰으며, 데이터 입력상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가구 구분 분포 변화

가구 구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2016년 1인 가구로 변한 가구의 수는 7,358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에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변한 가구의 수는 7,271가구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가구 구분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표 4-24>를 통해 알 수 있다.

12) 일반적인 가구 패널의 경우에는 신규가구를 횡단면 분석을 위해 포함시키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구 분포의 변동을 알기 위하여 분석대상 가구를 두 해 모두 관측된 가구로 제한하였음.

<표 4-24> 가구패널 데이터 가구 구분 분포 변화

가구 구분	2016년				합계	백분율(%)	
	1	2	3	4			
2015년	1	248,438	878	7,358	359	257,033	73.0
	2	791	733	88	57	1,669	0.5
	3	7,271	69	80,653	1,759	89,752	25.5
	4	265	40	1,315	1,801	3,421	1.0
합계	256,765	1,720	89,414	3,976	351,875	100.0	
백분율(%)	73.0	0.5	25.4	1.1	100.0		

3) 가구원수 분포 변화

<표 4-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구원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인에서 2인 가구로 이동한 가구 수는 6,915가구,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는 6,691가구, 3인 가구로는 9,497가구가 이동하였다.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는 9,670가구, 4인 가구로 이동한 가구 수는 8,929가구이고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이동한 가구 수는 9,307가구이다. 2, 3인 가구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1, 4, 5인 가구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15년과 2016년의 가구원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표 4-25>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표 4-25> 가구패널 데이터 가구원수 분포 변화

가구원수 (명)	2016년										합계	백분율 (%)	
	1	2	3	4	5	6	7	8	9	10인 이상			
2015년	1	80,653	6,915	1,457	556	132	31	5	1	2	0	89,752	25.5
	2	6,691	73,587	9,497	1,399	271	99	20	0	0	0	91,564	26.0
	3	1,272	9,670	57,277	8,929	655	117	27	6	1	0	77,954	22.2
	4	626	1,616	9,307	54,276	2,992	287	40	10	1	0	69,155	19.7
	5	140	329	793	3,188	12,671	764	73	12	4	1	17,975	5.1
	6	25	101	138	289	795	2,651	182	19	4	0	4,204	1.2
	7	6	28	41	52	74	210	540	35	3	1	990	0.3
	8	1	3	7	6	16	15	38	109	7	4	206	0.1
	9	0	1	1	5	3	5	2	9	23	1	50	0.0
	10인 이상	0	1	1	0	0	1	1	2	3	16	25	0.0
합계	89,414	92,251	78,519	68,700	17,609	4,180	928	203	48	23	351,875	100.0	
백분율(%)	25.4	26.2	22.3	19.5	5.0	1.2	0.3	0.1	0.0	0.0	100.0		

<표 4-26> 가구패널 데이터 지역별 가구 분포 변화

2016 20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결측	합계	백분율
서울	66,382	63	41	206	48	85	18	32	1,676	111	61	86	66	45	59	55	52	145	69,231	19.7%
부산	72	23,402	17	15	3	10	29	4	51	8	3	10	7	9	35	223	11	1	23,910	6.8%
대구	39	23	16,911	5	2	12	13	5	44	8	6	12	4	2	177	20	12	1	17,296	4.9%
인천	116	5	3	18,426	9	10	8	6	221	30	20	37	11	16	19	7	14	66	19,024	5.4%
광주	36	4	2	11	10,136	8	0	1	49	7	4	3	15	140	5	6	9	0	10,436	3.0%
대전	61	8	8	9	2	10,315	2	108	50	7	28	70	21	4	14	11	1	2	10,721	3.0%
울산	20	37	9	5	1	4	7,715	0	14	3	4	2	1	4	34	45	1	0	7,899	2.2%
세종	15	2	3	1	1	10	0	936	7	1	3	11	4	0	3	0	1	0	998	0.3%
경기	820	50	36	268	33	80	23	42	73,036	115	92	159	63	68	81	60	37	5,540	80,603	22.9%
강원	56	6	9	20	0	9	2	6	89	10,721	19	13	3	4	11	14	5	5	10,992	3.1%
충북	51	3	7	13	3	28	2	22	55	16	10,780	27	7	6	14	8	6	3	11,051	3.1%
충남	55	10	9	35	6	61	14	27	117	18	31	14,145	18	13	7	11	5	10	14,592	4.1%
전북	48	2	5	12	14	20	5	11	56	3	15	27	12,861	26	10	8	5	4	13,132	3.7%
전남	42	7	4	10	118	9	3	6	37	3	7	8	19	12,808	9	18	6	2	13,116	3.7%
경북	45	24	146	12	2	15	23	5	55	18	22	11	7	7	18,997	41	8	3	19,441	5.5%
경남	57	147	25	15	9	13	35	5	44	7	13	18	11	15	18	22,781	8	1	23,222	6.6%
제주	20	10	3	3	3	1	0	2	21	4	2	4	4	2	4	9	3,925	1	4,018	1.1%
결측	18	806	1	298	1	8	2	316	634	5	3	6	2	1	22	66	3	1	2,193	0.6%
합계	67,953	24,609	17,239	19,364	10,391	10,698	7,894	1,534	76,256	11,085	11,113	14,649	13,124	13,170	19,519	23,383	4,109	5,785	351,875	100.0%
백분율	19.3%	7.0%	4.9%	5.5%	3.0%	3.0%	2.2%	0.4%	21.7%	3.2%	3.2%	4.2%	3.7%	3.7%	5.5%	6.6%	1.2%	1.6%	100.0%	0.0%

4) 세대가구유형 분포 변화

세대가구유형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세대유형가구였다가 2016년 1인 가구로 변한 가구의 수는 7,446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에서 세대유형가구로 변한 가구의 수는 7,340가구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년과 2016년의 세대가구유형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표 4-27>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표 4-27> 가구패널 데이터 세대가구유형 분포변화

세대가구유형	A	B	C	합계	백분율(%)
A	250,840	416	7,446	258,702	73.5
B	305	1,801	1,315	3,421	1.0
C	7,340	1,759	80,653	89,752	25.5
합계	258,485	3,976	89,414	351,875	100.0
백분율(%)	73.5	1.1	25.4	100.0	

5) 세대유형 분포 변화

<표 4-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세대유형이 부부였다가 2016년 부부+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 수는 5,110가구이고 부부+미혼자녀에서 부부로 세대유형이 변화된 가구원수는 4,981가구이다. 한편 부부+미혼자녀에서 부+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 수는 1,077가구, 모+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 수는 466가구이며, 부+미혼자녀에서 부부+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 수는 1,175가구, 모+미혼자녀에서 부부+미혼자녀로 이동한 가구 수는 937가구이다.

<표 4-28> 가구패널 데이터 세대유형 분포 변화

세대 유형	2016년																				합계	%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9	49			
2015년	11	46,607	58	35	11	0	306	5,110	127	113	57	234	23	183	11	934	111	19	55	206	2	54,202	21.6
	12	54	200	0	3	0	7	24	0	0	0	1	30	0	0	10	0	0	0	1	0	330	0.1
	13	26	1	47	0	2	0	1	0	0	0	1	0	0	0	3	0	0	0	1	0	82	0.0
	14	41	18	0	2,348	1	83	28	14	54	0	0	11	0	9	35	0	0	1	0	0	2,643	1.1
	15	4	0	4	2	180	6	1	2	2	0	0	0	0	0	11	0	0	0	3	0	215	0.1
	19	307	5	0	18	3	1,041	44	7	9	0	2	0	4	0	106	1	1	1	4	0	1,553	0.6
	21	4,981	6	2	12	2	30	107,734	1,077	466	42	49	253	5	0	1,871	176	212	795	345	7	118,065	47.1
	22	101	0	0	14	2	4	1,175	7,572	2	0	13	5	0	3	266	5	12	22	140	1	9,337	3.7
	23	136	0	0	37	0	8	937	3	23,490	1	35	6	0	5	719	4	4	35	264	1	25,685	10.2
	24	49	0	0	0	0	1	7	1	0	170	8	0	2	0	35	64	4	1	4	0	346	0.1
	25	384	0	0	0	0	7	54	2	1	3	1,447	0	1	0	109	3	37	223	35	11	2,317	0.9
	26	5	25	0	3	0	1	337	4	2	0	0	1,028	0	0	56	2	4	7	19	0	1,493	0.6
	27	168	0	0	0	0	1	1	0	0	3	0	0	557	15	18	7	1	0	53	0	824	0.3
	28	14	0	0	12	0	0	1	1	4	0	1	0	5	799	32	0	1	6	53	0	929	0.4
	29	837	15	5	42	14	142	1,198	152	414	39	115	39	12	17	9,931	38	18	81	459	5	13,573	5.4
	31	154	0	0	0	0	0	138	3	1	33	3	1	13	0	24	1,511	35	69	117	5	2,107	0.8
	32	13	0	0	0	0	1	266	8	0	0	31	1	0	0	12	13	984	6	53	0	1,388	0.6
	33	50	0	0	0	1	1	972	20	6	0	273	1	0	5	59	18	5	5,744	310	13	7,478	3.0
	39	225	1	1	1	0	10	367	145	275	3	47	23	84	63	532	149	62	328	5,697	27	8,040	3.2
	49	3	0	0	0	0	0	9	0	1	0	15	0	1	1	8	14	2	11	41	127	233	0.1
합계	54,159	329	94	2,503	205	1,649	118,404	9,138	24,840	351	2,275	1,421	867	928	14,771	2,116	1,401	7,385	7,805	199	250,840	100.0	
백분율	21.6	0.1	0.0	1.0	0.1	0.7	47.2	3.6	9.9	0.1	0.9	0.6	0.3	0.4	5.9	0.8	0.6	2.9	3.1	0.1	100.0		

6) 주택형태 분포 변화

주택형태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단독주택에서 2016년 아파트로 이동한 가구 수는 6,073가구이고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 수는 4,347가구이다. 전반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34.4%에서 33.4%로 감소하였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49.3%에서 50.0%로 증가하였다.

<표 4-29> 가구패널 데이터 주택형태 분포 변화

주택 형태	2016년								합계	백분율 (%)
	1	2	3	4	5	6	99			
2015 년	1	108,693	6,073	509	2,841	759	781	1,353	121,009	34.4
	2	4,347	165,390	495	1,676	287	764	655	173,614	49.3
	3	321	485	6,733	233	16	40	39	7,867	2.2
	4	1,759	1,876	197	27,041	124	325	192	31,514	9.0
	5	893	372	30	202	4,082	72	124	5,775	1.6
	6	460	805	33	326	45	3,785	76	5,530	1.6
	7	62	44	1	10	9	4	382	512	0.1
	8	60	47	0	12	1	9	248	377	0.1
	9	36	17	4	5	3	1	118	184	0.1
	10	963	705	50	194	87	108	3,386	5,493	1.6
합계	117,594	175,814	8,052	32,540	5,413	5,889	6,573	351,875	100.0	
백분율(%)	33.4	50.0	2.3	9.2	1.5	1.7	1.9	100.0		

7) 단독주택형태 분포 변화

단독주택형태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에서 다가구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 수는 1,105가구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일반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 수는 1,147가구, 영업겸용단독주택으로 이동한 가구 수는 1,543가구이다.

<표 4-30> 가구패널 데이터 단독주택형태 분포 변화

단독주택 형태	2016년			합계	백분율(%)	
	1	2	3			
2015년	1	43,223	1,105	596	44,924	41.3
	2	1,147	45,824	1,543	48,514	44.6
	3	545	1,185	13,525	15,255	14.0
합계	44,915	48,114	15,664	108,693	100.0	
백분율(%)	41.3	44.3	14.4	100.0		

4. 2016년 추가가구 데이터 분석

2016년 추가가구 데이터는 2015년 등록센서스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6년 등록센서스 데이터에 추가된 59,32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가구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1) 지역별 추가가구 분포

지역별 2016년 추가가구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가구가 추가되었고 세종과 제주에서 가장 적은 비율의 가구가 추가되었다. 전반적으로 등록센서스 데이터의 지역별 가구 분포와 큰 차이는 없다.

<표 4-31> 지역별 2016년 추가가구 분포

지역	가구수	백분율(%)	지역	가구수	백분율(%)
서울	11,637	19.62	충북	1,968	3.32
부산	3,768	6.35	충남	2,680	4.52
대구	2,491	4.20	전북	2,287	3.86
인천	3,290	5.55	전남	2,425	4.09
광주	1,806	3.04	경북	3,354	5.65
대전	1,742	2.94	경남	3,643	6.14
울산	1,167	1.97	제주	846	1.43
세종	449	0.76	결측값	863	1.45
경기	12,886	21.72	계	59,325	100.00
강원	2,023	3.41			

2) 가구주 성별 분포

남자와 여자의 가구주 비율이 약 6:4로 등록센서스 데이터 가구주 비율(7:3)과 상이하다.

<표 4-32> 추가가구 데이터 가구주 성별 분포

성별	가구주수	백분율(%)
남자	34,953	58.92
여자	24,372	41.08
계	59,325	100.00

3) 가구주 연령별 분포

가구주 연령은 30대, 50대, 40대, 20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33> 추가가구 데이터 가구주 연령별 분포

연령	가구주수	백분율(%)
10~19 세	914	1.54
20~29 세	9,761	16.45
30~39 세	14,185	23.91
40~49 세	10,781	18.17
50~59 세	11,732	19.78
60~69 세	6,706	11.3
70 세 이상	5,246	8.84
계	59,325	100.00

4) 가구구분 분포

가구구분 분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인 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34> 추가가구 데이터 가구구분 분포

가구구분	가구수	백분율(%)
1	38,786	65.38
2	944	1.59
3	15,084	25.43
4	4,511	7.60
계	59,325	100.00

5) 가구별 가구원수 분포

가구별 가구원수 분포는 2인 가구, 1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가구원수가 5인 이하인 가구의 분포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4-35> 추가가구 데이터 가구원수 분포

가구원수	가구수	백분율(%)
1	15,084	25.43
2	18,129	30.56
3	12,522	21.11
4	8,322	14.03
5	3,507	5.91
6	1,258	2.12
7	380	0.64
8	94	0.16
9	22	0.04
10 인이상	7	0.01
계	59,325	100.00

6) 가구별 세대가구유형 분포

가구별 세대가구유형은 세대유형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36> 추가가구 데이터 세대가구유형 분포

세대가구유형	가구수	백분율(%)
A	39,730	66.97
B	4,511	7.60
C	15,084	25.43
계	59,325	100.00

7) 가구별 세대유형 분포

가구별 세대유형은 부부+미혼자녀, 부부, 모+미혼자녀, 기타, 모+미혼자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37> 추가가구 데이터 세대유형 분포

세대유형	2015년	
	가구수	백분율(%)
11	6,798	17.11
12	129	0.32
13	51	0.13
14	1,213	3.05
15	132	0.33
19	861	2.17
21	10,669	26.85
22	1,435	3.61
23	5,192	13.07
24	169	0.43
25	601	1.51
26	385	0.97
27	189	0.48
28	456	1.15
29	5,668	14.27
31	615	1.55
32	405	1.02
33	1,731	4.36
39	2,923	7.36
49	108	0.27
계	39,730	100.00

8) 가구별 주택형태 분포

가구별 주택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4-38> 추가가구 데이터 주택형태 분포

주택형태	가구수	백분율(%)
1	22,155	37.35
2	25,338	42.71
3	1,260	2.12
4	6,014	10.14
5	1,265	2.13
6	1,817	3.06
99	1,476	2.49
계	59,325	100.00

9) 단독주택유형 분포

단독주택유형은 다가구 다독주택, 일반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4-39> 추가가구 데이터 단독주택유형 분포

단독주택유형	가구 수	백분율(%)
1	7,998	36.10
2	10,369	46.80
3	3,788	17.10
계	22,155	100.00

5. 소결

등록센서스 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패널 구성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위하여 2015년과 2016년 등록센서스 자료 중 2%를 추출하여 등록센서스를 통해서 취합된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5년과 2016년의 두해에 걸친 분포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구패널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주거지역, 주거형태 그리고 가구구성과 같은 동태적 변수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 분석의 중요한 목적인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패널 구성 시점의 모집단 및 그 모집단의 변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이 추출되어야 하며 각 시점에 제공되는 가중치 역시 목적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공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2016년 신규 가구로 판단되는 가구의 성별과 같은 가구원 특성의 분포가 2016년 전체 혹은 2015년 분포와 상당히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개인 기준 패널 구성에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센서스에서 제공되는 변수 이외에 실제 분석을 위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어진 자료의 정보의 양은 패널 분석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매칭이나 자료 연결을 통해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패널의 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본 연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의 구축 시 적용된 인구패널의 형식, 즉 양 시점에 조사된 개인이 속한 가구와 이에 대응하는 가구원을 패널로 구성하는 형식, 보다는 가구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패널 구성 시점에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 내 가구원을 가구 혹은 가구원 패널로 구성한 후에 이 후 시점에는 신규 가구 및 가구원을 추적하는 형태의 패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패널의 유지 및 가중치 산출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과제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연구의 제2과제로 인총패널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총패널화 방안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연계를 통한 종단 자료 생성 결과를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종단 자료 생성 및 다른 행정 자료 및 조사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종단 자료 생성을 주된 목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의 패널 종단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패널 활성화 증대를 위해 다른 조사와의 추가적인 연계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기반의 종단 자료를 생성하여 인구주택총조사 패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패널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자료만을 종단 자료로 생성하기 보다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패널)에 대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후, 다른 행정 자료나 조사 자료를 연계한 2차적인 추가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패널화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현재 고려하는 인총패널은 패널 구축 및 자료의 관리가 등록된 행정자료에 기반하므로 패널의 해외 이주 및 사망 등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표본 마모 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패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가구원에 대한 직업 및 고용 활동 자료, 소득 관련 자료, 건강 자료 등 가구 및 인구 특성 자료이외에 사회적 및 경제적, 건강 관점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 및 행정자료와의 연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다른 목적성 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되기 위해 가구 및 인구 특성 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료(doner-data)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분야의 자료, 이민 자료, 직업 및 고용 자료, 생활시간 자료 등과 연계를 통해 가구 및 가구원 특성 변화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지므로 다른 조사의 연계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패널 자료와 연계하는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본 과제에서는 인총패널화 방안에 대한 가구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총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시군부로 모집단을 층화하였고, 균형적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세대원수, 거쳐유형을 내재적 층화변수(정렬순)로 고려하였다. 인총 가구패널의 표본규모는 총 19,111,030개 가구 중 약 2% 규모인 가구표본, 즉 $n=382,220$ 개 가구로 결정하였고, 표본(패널) 가구내 가구원은 모두 패널대

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본배분은 전국수준은 물론 시도내 시·군부 수준의 추정량이 갖는 정도수준이 적절할 수 있는 표본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제곱근할당(square-root allocation)과 키쉬할당(Kish allocation)과 같은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였다. 인총 가구패널의 표본배분에 대한 표본층별로 키쉬할당과 제곱근비례할당에 따른 4가지 이주율인 총전입률, 총전출률, 시도간전입률, 시도간전출률에 대한 예상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를 확인해 볼 결과, 이주율 추정량의 오차한계와 상대표준오차(CV)는 키쉬할당과 제곱근비례할당에서 모두 매우 안정적이고, 총전출률, 시도간 전입률 및 전출률도 유사한 형태의 오차한계와 상대표준오차값을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실제로 인총 가구패널은 조사대상을 접촉하여 조사하는 일반적 패널조사와는 달리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와 인구(즉, 패널가구내 가구원)에 대해 매년 갱신되는 등록센서스 자료와 연계하여 추적하는 자료연계(record linkage)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인총 가구패널에서는 일반 패널조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무응답과 이에 따른 표본탈락 및 가중치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패널 개체의 시점간 정확한 자료연계의 실패는 무응답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 연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과 같이 조사대상(혹은 연계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널 마모가 발생하지만 패널 추가를 고려하기에는 패널마모의 규모가 매우 작아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패널 가구원에 의한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유입이 발생하여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총 가구패널을 위한 가중치 산출은 패널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초 패널을 고정한 고정패널모형을 가정하여 패널 가구와 가구원, 비가구원에 대해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 산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횡단면 가중치는 가구 및 가구원 가중치, 캘리브레이션 가중치로 가중치를 산출하고, 종단면 가중치는 원패널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개인(가구원) 가중치 및 가구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패널 가구와 가구원, 원패널 가구원에 의한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은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모두 산출하지만 비원가구원 유입 시 기본적으로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부여하도록 한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록센서스 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등록센서스 자료 중 2%를 추출하여 등록센서스를 통해서 패널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2015년과 2016년의 두해에 걸친 분포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구패널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주거지역, 주거형태 그리고 가구구성과 같은 동태적 변수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검토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2016년 신규 가구로 판단되는 가구의 성별과 같은 가구원 특성의 분포가 2016년 전체 혹은 2015년 분포와 상당히 차이를 발견하였고, 제한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패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센서스에서 제공되는 변수 이외에 실제 분석을 위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사례 검토에서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인총 패널에서 주어진 정보의 양은 패널 분석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매칭이나 자료 연결을 통해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제공된 인구패널의 형식, 즉 양 시점에 조사된 개인이 속한 가구와 이에 대응하는 가구원을 패널로 구성하는 형식보다는 가구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패널 구성 시점 시에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 내 가구원을 가구 혹은 가구원 패널로 구성한 후에 이 후 시점에는 신규 가구 및 가구원을 추적하는 형태의 패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패널의 유지 및 가중치 산출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인총패널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언한다면,

첫째, 현재 구축을 검토하는 개인 기준의 인구패널보다는 일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인총 가구패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총 패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패널 가구의 가구원 유입 및 유출되는 변화를 통해 모집단 가구 변화에 대한 특성 및 가구원 특성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패널 구축은 가구원(개인)보다는 가구 단위 관점에서 모집단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을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인구패널보다는 가구 특성과 연계된 가구원 특성을 분석한다면, 가구 및 부모 특성이 가구원의 이동 및 가구원 특성에 미치는 세대 간 전이 특성 효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총 가구패널 구축을 위해 패널 가구의 분가 및 합가로 인한 패널 가구원의 유입과 유출, 패널 가구에서의 출생과 사망, 비패널 가구원의 유입과 유출 등 패널 운영을 위한 기준과 더불어 패널 가구원의 유입 기준 및 추적 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가중치 산출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 연구에서는 패널 가구의 분가, 패널 가구의 해외 이주 등 패널 가구 관리 원칙과 비가구원 및 신규 가구원의 출생 등 개인 단위에 대한 관리 원칙과 결혼으로 인한 비가구원의 유입, 그로 인한 출생 등이 발생하므로 패널 및 비패널 가구원의 유입 기준, 패널 운영 및 추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추적 원칙에 근거해 가구 및 가구원, 비가구원 등에 대한 종단면 혹은 횡단면 가구 및 가중치 산출 방안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변화하는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패널의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구 패널, 소년소녀 가장 패널, 1인 가구 패널, 노인 가구 패널 등 특정 목적의 가구 및 인구 변화 특성에 근거한 패널을 구축하여 특정 패널 가구 내에서의 변화 연구 및 다른 조사와의 연계가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박민규, 김영원, 변종석. 2013. “한국노동패널 가중치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조사연구학회.
2. 변종석, 박민규. 2016. “한국노동패널표본추가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조사연구학회.
3. 강석훈. 2003.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4.
4. 정미옥, 백지선. 2011. 《가계금융조사를 위한 가구패널 설계 연구》, 2011년 상반기 연구 보고서, 제 1권, 186-239, 통계개발원.
5. Estevao V. M. and Sarndal, C-E. 2006. “Survey Estimates by Calibration on Complex Auxiliary Information,”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74: 127-147.
6. Sandra Gerstorf, Jürgen Schupp (Editors). 2014. SOEP wave report, DIW Berlin, Germany.
7. PSID Main Interview User Manual: Release. 2015.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June, 2015.
8. Watson, N. 2012.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weighting methodology for the HILDA Survey. HILDA Technical Paper Series, 2(12).
9. Lohr, S. L. & Rao, J. N. K. 2000. Inference from dual frame survey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5(449), 271-280.
10. Lynn, P. 2009. Methods for longitudinal surveys. In P. Lynn(Ed.), *Methodology of Longitudinal Surveys*.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11. <http://about.paneldata.org/soep/dtc/sample.html>

세부과제 3

중장기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센서스 구조

제3장 해외사례

제4장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중장기 인구주택총조사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최근 십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회조사와 관련된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센서스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조사환경과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문항의 구성과 조사주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센서스 조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사주제 및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 센서스의 개선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크게 1) 주요자료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2)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며, 3) 한국의 센서스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문항들에 대해 외국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4) 최근의 사회변화를 크게 위해 신규조사 항목을 제안하고, 5) 마지막으로 기존의 조사 항목 중 질문 방식이나 선택지 제시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배경¹⁾

현 시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장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조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등록자료 혹은 행정자료의 신뢰성과 가용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조사환경에 유리한 측면의 변화도 있지만, 반면 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이 점차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조사환경에 불리한 측면의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센서스는 상당히 오래된 조사이며, 근대에 들어서는 많은 국가에서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센서스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국가별로 전통적인 전수방문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센서스를 수행하는 기법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공식적인 인구등록자료나 다른 행정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방문조사 정보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정부의 공식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방문조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1)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3 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행정통계가 상당히 정확해져 방문센서스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자료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자료의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자료들이 이미 센서스에서 산출하고 있는 정보 중 다양한 정보들을 산출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점점 예민해지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비전통적인 형태의 가구구조의 증가(예: 1인 가구, 별거가구의 증가)²⁾, 근무형태의 다양화, 활발한 사회이동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에 접근하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빈곤층, 장애인, 이주민, 실업자 등 적절한 사회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센서스 자료 수집의 주요 목적인 효과적인 사회, 경제정책의 수립과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정확한 기초 자료 제공이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센서스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5년 혹은 10년 주기로 센서스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주기는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현대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시의적절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센서스 자료의 수집주기가 보다 짧아져야 할 필요성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센서스 조사비용 때문에 시의적절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예산은 지난 2000년 834억에서, 2005년 1,290억으로, 2010년 조사는 1,808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센서스 조사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주민등록 정보와 같은 개인과 가구의 등록자료(base registers)와 각종 조사를 통해 수집된 행정자료(administrative sources)를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자료를 이용해 센서스 자료를 산출하는 방식도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정도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센서스 역시 1925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전통적 방문조사 방식을 중단하고,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조사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우선 이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인구와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전수조사(short form)와 더불어 추출된 10%의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표본조사(long form)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는 전수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조사

2) 1인 가구 수는 2000년 15.5%에서 2005년 조사에서는 20.0%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서는 23.9%에 이르렀다.

를 통해 수집되었던 전수조사 자료는 행정통계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표본조사는 그 비율을 전체 가구의 20%로 늘려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센서스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되어왔던 자료를 보다 시의적절하고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 표본조사 항목을 다양화 하고, 조사항목을 다양한 주기와 방식으로 조사하여 5년마다 대규모의 조사를 일시에 실시하는 전통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센서스조사방식

등록센서스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전반적인 센서스의 자료수집 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세계 각국은 일괄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센서스를 시행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조사상황, 행정자료의 가용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센서스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비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센서스를 시행하더라도 여기서 수집되는 자료의 질과 정보의 수준은 이전의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혹은 시행 가능한 센서스의 종류를 방법론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 표에서 가로축은 자료수집 시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세로축은 자료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 1).

<표 1> 센서스 자료수집 방식 분류

		센서스 자료의 원천		
		등록자료 이용하지 않음 (방문조사 자료 이용)	등록 자료 이용 (개인, 가구, 거주 등)	통합행정자료 (세금, 교육, 고용 등)
자료 수집 방식	전체방문조사	전체 방문 조사를 이용하여 센서스 자료 구축 (전통적 방식)	등록자료와 전체방문조사를 이용	행정자료와 전체방문조사를 이용
	순환센서스	전체 방문 조사와 순환센서스 병행	-	-
		순환센서스만 시행		
	추가설문조사	-	등록자료와 추가 표본조사	행정자료와 추가표본조사
	기존설문조사	-	등록자료와 기존표본조사자료	행정자료와 기존 표본조사자료
설문조사 미시행 (등록자료 이용)	-	-	완전 등록센서스	

출처: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3 p18. Table 1을 재구성

이를 살펴보면, 우선 센서스 자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 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통합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자료 수집 방식을 보면, 전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전체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조사하는 경우, 등록자료나 행정자료를 근간으로 이용하고 추가 표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등록자료나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기존의 표본조사자료를 통합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조사를 이용하지 않고 행정자료만으로 자료를 산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우선 전체 인구와 가구를 방문조사 하거나 이와 함께 순환센서스를 병행하는 방식은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2010년까지 시행되었던 조사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와 가구에 관한 정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로부터 직접 수집하게 되며, 자료 수집 방식은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설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화설문, 우편, 인터넷 조사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과 병행하기도 한다. 가구방문조사와 더불어 일정 비율의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보다 자세한 질문이 담겨 있는 설문지(long-form)를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동일한 시점으로 조사하게 된다. 물론 표본조사 설문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 역시 센서스 자료로 간주된다.
2. 순환센서스는 인구와 가구에 대한 자료를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 수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표본조사와는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순환센서스에서는 조사의 주기와 각 조사별 표본의 크기가 조사의 성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3. 두 개 이상의 자료원천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센서스 자료를 산출하는 방식도 있다. 이때 한국의 주민등록 정보와 같은 거주지 등록정보는 가구 방문을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직접 센서스 자료로 수집되게 된다. 실제로 거주지 등록정보는 전수조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표본조사가 진행되는 데 이는 등록자료가 센서스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자료의 질이 낮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서스 자료수집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위의 방법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등록자료를 이용하고, 다른 표본조사나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충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방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센서스와 센서스 사이에 조사되는 여러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자료를 보충하게 된다.

5. 마지막으로 인구와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각종 행정자료의 통합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자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개인 수준에서 구분 가능하도록 통합, 연결하여 자료를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흔히 사용되는 자료는 조세자료, 교육자료, 고용자료 등을 사용하게 된다.

2010년까지 한국은 전통적인 전수 방문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1번 형태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등록 센서스 시행을 기점으로 등록센서스와 추가적인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3번 방식을 채택하거나, 나아가 추가로 필요한 문항을 기존의 표본조사에 부가하여 설문하는 4번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센서스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2) 등록센서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센서스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등록정보와 통합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센서스 자료를 구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인 센서스 조사비용의 상승과 등록자료 및 행정정보의 신뢰성과 가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등록센서스의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등록센서스의 장점으로는 전통적인 전수조사에 비해 조사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이 있다. 이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같은 비용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문항을 조사하거나, 훨씬 더 자주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정보의 유용성, 그리고 특히 자료의 시의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응답자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무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등록센서스는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하여 자료를 산출하는 경우 자료 간 정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자료 전체의 신뢰성이 증가하며, 하나의 자료에서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다른 자료를 통해 정보를 보충 할 수 있어 전체적인 자료의 질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료의 이용자 측면에서도 여러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어 혼란의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자료를 산출하는 경우 정부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게 되므로 정보의 산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지며, 여러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은 확보되지만, 자료의 근본적인 정확도를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 방식의 센서스 특히 등록센서스 방식을 사용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우선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다양한 등록자료, 행정자료, 서베이 자료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정보들이 하나의 기준변수(key variable)를 통해 연

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는 부정확한 자료나 모순되는 정보들이 정확한 방식으로 제거 혹은 수정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에 이용되는 자료들은 개인에 대한 고유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 혼인상태, 가족구조, 경제활동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 및 가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주민등록정보가 다른 조사자료와 통합 가능하도록 개인의 정보와 가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등록센서스가 가능하다. 행정정보의 경우에는 조세정보,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 실업, 교육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다른 행정 자료들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센서스

센서스는 국가기관이 사회, 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학문공동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 등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센서스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센서스의 문항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개선방향은 시기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UN에서 주도하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2016년~2030년 국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이전에 추진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이에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MDGs의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WG)에서는 17개의 SDGs 초안을 제안하여, 2015년 초부터 정부 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개발목표에 반영되었다. 17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와 관련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그림 1>, <표 2> 참조).

SDG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서스 및 통계자료는 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필수적일 뿐 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정책의 수정 및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센서스 자료가 각각의 목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앞

으로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그림 1> 지속가능발전목표



<표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관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	키워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불평등, 빈곤, 분배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빈곤, 농업, 삶의 질, 식량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건강, 웰빙, 삶의 질, 행복, 의료, 의료보장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교육, 평생교육, 교육제도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성평등, 여성, 양성평등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식수, 안전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고용, 일자리, 경제활동, 경제성장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산업화, 일자리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불평등
11. 포용적·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주거환경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윤리적 소비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 환경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 천연자연, 자연환경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환경, 토지, 자연환경, 공기, 수질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사법제도, 공정성, 신뢰, 거버넌스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글로벌라이제이션

2) 연구의 필요성

위와 같은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센서스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가 요구된다.

(1) 센서스 표본조사 조사항목 및 질문지 개발

우선 센서스 표본조사가 포함해야할 조사항목 및 질문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 특히 행정자료나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이 보다 손쉽게 수집되어 가공 및 저장 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수집하기 어려웠던 항목이나 대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졌으며, 조사항목과 응답지가 보다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문항은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사주기가 실제 정책수립이나 연구활동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어떤 변수가 어떤 주기로 수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센서스와 표본조사와 기존연구의 공동조사 방안

다른 한편으로는 센서스와 같은 대단위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왔으며, 조사 불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센서스 조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타 사회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는 사회조사로 인해 응답자가 느끼게 되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사회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들을 연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의 증가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추정)
총조사 예산(억원)	539	834	1,290	1,808	2,712

제2장 한국의 센서스 구조

이 장에서는 우선 한국의 센서스의 연혁과 현재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이후 장에서 외국의 센서스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센서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탐색한다는 의의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인구와 관련된 성명, 성별, 생년월, 혼인상태, 본적(또는 국적)의 5개 항목 조사를 시작으로, 1955년까지는 인구 부분의 항목 위주의 전수 조사로 시행되었다. 1960년 조사에서는 인구 부분에 더하여 가구와 주택 부분을 통합하여 시행하였으며, 1962년 국가통계작성승인을 받은 이후 1966년부터는 인구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이외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조사명칭을 ‘인구주택총조사’로 확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4>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연혁

구분	조사기준일	조사명칭	주요 특징
1	1925.10.1	간이국세조사	최초의 인구주택총조사
2	1949. 5.1	총인구조사	최초로 인구이동 사항 포함
3	1955. 9.1	간이총인구조사	가구항목 처음 조사
4	1960.12.1	인구주택 국세조사	-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의 20% 표본집계 - 노동력 개념 설정 - 최초로 주택에 관한 조사 실시
5	1966.10.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및 출산력)
6	1970.10.1	총인구 및 주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7	1980.11.1	인구 및 주택센서스	5%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8	1985.11.1	상동	- 전 항목 전수조사 - 성씨, 본관 및 종교에 관한 조사 실시
9	1990.11.1	인구주택총조사	- 10% 표본조사 병행 (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통근통학 및 일부 가구에 관한 사항)
10	1995.11.1	상동	- 10% 표본조사 병행 (경제활동, 통근통학, 인구이동 및 일부 가구에 관한 사항) - 빈집조사표를 이용한 빈집조사 실시
11	2000.11.1	상동	- 10% 표본조사 병행 (경제활동, 인구이동, 고령자, 정보화 및 일부 가구에 관한 사항) - 아파트 전수조사구에 대한 응답자기입방식도입
12	2005.11.1	상동	- 10% 표본조사 병행 (경제활동, 인구이동, 출산력, 고령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조사방식 최초 도입
13	2010.11.1	상동	- 10% 표본조사 병행 (경제활동, 인구이동, 출산력, 고령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조사방식 확대
14	2015.11.1	상동	- 전수조사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최초 전환 표본조사 확대(10% → 20%) - 인터넷 조사방식 적용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전수조사 부문에서 UN의 권고안인 등록센서스 방식을 차용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등록센서스와 관련해서 통계청은 2008년부터 등록센서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에는 2010년 기준의 등록센서스를 시범 생산하였으며, 이후 등록센서스의 방법론이나 제공항목 및 시산자료의 검토 등 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는 등록센서스 방식, 즉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항목의 통계를 생산하였다.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센서스를 도입한 2015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인구주택총조사 비교: 2010년과 2015년

	2010 년	2015 년
조사방식	2010. 11. 1.	2015. 11. 1.
조사방식	현장조사 기반	행정자료 + 표본조사
기본항목	전수조사(100%)	등록센서스(현장조사 없음)
심층항목	표본조사(10%)	표본조사(20%)
조사대상	전 국민(100%)	전 국민의 20%

본 장에서는 1960년 이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 가구, 주택 부문별로 조사항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본 후, 2015년의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 항목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조사항목 연혁

(1) 인구

인구부분은 조사항목에 따라 크게 기본 항목(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인구이동(출생지, 1년전/5년전 거주지, 통근여부 등), 출산력(초혼연령, 총출생아수 등), 경제활동(경제활동상태, 비구직 이유, 주로한 일 등), 활동제약·고령·기타(활동제약, 고령자생활비원천, 자녀거주장소 등) 항목으로 구분된다.

① 기본 항목

인구의 기본 항목의 대부분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

령, 교육정도(졸업여부), 혼인상태 등은 2015년까지 계속 조사되고 있으며, 본관은 1985년 이후 15년마다, 종교는 1985년 이후 10년마다 조사되고 있다. 국적과 입국연월을 2010년과 2015년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의 경우 2005년에만 조사되었다. 국적, 입국연월, 남북이산가족 항목의 경우,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등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현재 국적 이외에 출생시 국적을 함께 조사하였으며, 출생 시와 현재 중 하나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입국한 시기를 추가로 질의하였다(박주언 외, 2017, 5p).

교육수준은 2010년까지는 전수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2015년에는 등록센서스가 시행되면서 행정자료로 전환된다는 한계로 표본만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학여부는 2010년까지만 조사되었으며, 전공학과의 경우 1980년, 2000년, 2015년에 비정기적으로 조사되었다(이후 표에서 음영처리된 항목은 조사된 적이 있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항목).

<표 6> 인구의 기본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성명	●	●	●	●	●	●	●	●	●	●	●	●
본관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	●	●
성별	●	●	●	●	●	●	●	●	●	●	●	●
연령(생년월일)	●	●	●	●	●	●	●	●	●	●	●	●
교육정도		●	●	●	●	●	●	●	●	●	●	◎
-졸업여부		●	●	●	●	●	●	●	●	●	●	◎
-취학여부		●	●	●	●	●	●	●	●	●	●	
-수학년수	●											
-전공학과					◎				◎			◎
-문맹여부	●	●	●									
혼인상태	●	●	●	●	●	●	●	●	●	●	●	◎
종교						●		●		●		◎
국적	●										●	●
남북이산가족										●		
입국연월											●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②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출생지, 1년전/5년전 거주지, 통근 여부, 통근지, 통근 시간, 이용교통 수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이동의 경우 1960년 출생지 항목을 시작으로 1970년부터는 주로 표본조사를 통해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인구이동과 관련된 항목들은 조사에 포함된 시기부터 대

부분의 항목이 조사되고 있다. 2010년과 2015년에는 모든 항목이 표본조사로 실시되었다.

<표 7> 인구이동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출생지	●		◎		◎	●	●	◎	●		◎	◎
1년전 거주지					◎	●	◎		◎		◎	◎
5년전 거주지			◎	◎	◎	●	◎	◎	◎	◎	◎	◎
통근(학) 여부					◎		●	◎	◎	◎	◎	◎
통근(학)지					◎		●	◎	◎	◎	◎	◎
통근(학) 시간							●	◎	◎	◎	◎	◎
이용교통수단					◎		●	◎	◎	◎	◎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③ 출산력

초혼연령, 총출생아수, 생존자녀수, 추가계획자녀수, 지난1년간 출생아수, 자녀 출산시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출산력은 1960년과 1985년을 제외하고 모두 표본조사로 실시되었다. 1966년에만 포함된 지난 1년간 출생아수의 경우 당시 인구 인구동태통계의 부실로 인해 출산력을 간접 추정하기 위해 포함되었다(박주언 외, 2017, 6p). 총출생아수와 관련하여, 동거자녀수와 별거자녀수는 1980년과 2005년에만, 생존자녀수는 1985년과 1990년에만 각각 포함되었다. 한편, 추가계획 자녀수와 자녀출산시기는 각각 2005년과 2015년부터 신규항목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출산력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초혼연령				◎	◎		◎			◎	◎	◎
총출생아수	●	◎	◎		◎	●	◎		◎	◎	◎	◎
- 사망자녀수				◎	◎	●	◎			◎	◎	◎
- 동거자녀수					◎					◎		
- 별거자녀수					◎					◎		
생존자녀수						●	◎					
추가계획자녀수										◎	◎	◎
지난 1년간 출생아수		◎										
자녀 출산시기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④ 경제활동

경제활동과 관련된 항목들은 경제활동상태, 비구직이유, 주로 한 일, 조금이라도 한 일, 근로장소, 취업형태, 취업시간/(개월), 추가취업희망,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개인소득, 현 직업 근무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과 198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표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등은 대부분의 해에서 조사되었다. 다만, 비구직이유, 주로 한 일, 조금이라도 한일의 경우 1960년 한 해에만 조사되었으며, 취업은 형태는 1975년과 1980년에, 취업시간과 추가취업희망, 개인소득은 1975년에, 취업시간(개월)은 1970년에만 포함되었다.

<표 9> 경제활동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경제활동상태			◎	◎	◎	●	◎	◎	◎	◎	◎	◎
- 취업여부		◎	◎	◎	◎	●	◎	◎	◎	◎	◎	◎
- 구직(활동)여부	●			◎	◎		◎	◎	◎	◎	◎	
- 취업가능성									◎	◎	◎	
비구직이유	●											
주요한일	●											
조금이라도 한일	●											
근로장소										◎	◎	◎
취업형태				◎	◎							
취업시간				◎								
취업시간(개월)			◎									
추가취업희망				◎								
종사상지위	●	◎	◎	◎	◎		◎	◎	◎	◎	◎	◎
산업	●	◎	◎	◎	◎	●	◎	◎	◎	◎	◎	◎
직업	●	◎	◎	◎	◎	●	◎	◎	◎	◎	◎	◎
개인소득				◎								
현직업무근무년수								◎			◎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⑤ 활동제약·고령·기타

활동제약·고령·기타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활동제약, 고령자생활비원천,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여부, 아동보육, 컴퓨터활용실태, 인터넷활용실태, 개인휴대용통신기기, 사회활동, 결혼 전 취업여부, 경력단절,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 심신장애여부의 전수 조사 이후, 2000년 조사에서 부터 모든 항목이 표본조사로 실시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여부는 2000년에 처음 조사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삭제되었으며, 컴퓨터/인터넷활용상태, 개인휴대용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보유여부 등 역시 2000년에만 조사되었다. 아동보육 문항의 경우 2005년에만 어머니 동거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표 10> 활동제약·고령·기타 등의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활동제약										○	○	○
심신장애					●							
고령자생활비원천 (60 세이상)										○	○	○
자녀거주장소(60 세이상)									○			
생계수단(60 세이상)									○			
주부양자(60 세이상)									○			
거동불편여부(60 세이상)									○			
아동보육									○	○	○	○
- 어머니 동거여부										○		
컴퓨터활용상태									○			
인터넷활용상태									○			
개인휴대용통신기기									○			
사회활동											○	○
결혼전 취업 여부												○
경력단절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		○

(2) 가구

가구부문은 가구원의 집합적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크게 가구 구분 및 주인(대표) 가구 여부 항목과 점유형태 및 임차료 항목, 거주기간, 건물 및 거주층 항목, 가구의 생활시설 형태 관련 항목 그리고 가구의 생활수준 관련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2017, 박주언 외).

가구 관련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의 거주환경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규 항목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항목이 삭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구의 생활시설 형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항목의 변화들이 발견되는데, 연료사용과 관련된 문항들은 2000년 이후에는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아궁이형태, 굴뚝상태, 대청마루 유무 및 평수 항목은 1960년 이후

에 조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인 가구 구분 및 주인가구 여부 항목, 점유 형태 및 임차료 항목, 거주기간과 건물 및 거주층 항목에는 큰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생활수준 관련 항목에서는 가구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문화시설 및 가재 문항이 1970년부터 5회 조사 후 중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보유는 2010년 이후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자동차보유 대수와 이용횟수는 2015년 조사에서 주차시설 문항으로 흡수되었다.

가구 부분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 관련 조사결과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1990년에 일회적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후술할 것이다. 또한 가구의 심신장애자 역시 1980년에 일회적으로 조사되었는데 장애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11> 가구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가구구분					●	●	●	●	●	●	●	●
주인가구여부									◎	●	●	◎
- 타지 주택소유여부										●	●	◎
점유(소유)관계	●		●	●	●	●	●	●				
점유형태									●	●	●	◎
임차료							◎	◎	◎	◎	◎	◎
거주기간	●							◎	◎	◎	◎	◎
거주층										◎	●	◎
- 건물층											●	◎
사용방수	●				●	●	●	●	●	●	●	◎
주거(전용)시설	●						●		●	●	●	◎
- 부엌시설	●						●		●	●	●	◎
- 화장실 시설	●		◎			●	●	●	●	●	●	◎
- 목욕 시설							●		●	●	●	◎
- 식수(상수도)시설			◎				●		●	●	●	◎
- 식수사용형태											◎	
주된연료				◎								
취사연료			◎		●	●	●		◎			
난방연료					●				◎			
난방시설						●	●		◎	●	◎	◎
아궁이형태	●											
조명시설			◎									
굴뚝상태	●											
대청마루유무 및 평수	●											
식수종류(이용식수원)	●				●		●					
문화시설 및 가재			●	◎	●	●	●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정보통신기기 보유									◎		◎	
자동차보유대수									◎	◎	◎	
- 이용횟수											◎	
주차시설(장소)									◎	◎	◎	◎
가구소득							◎					
가구의 심신장애자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3) 주택

주택 부분의 항목은 거처의 종류, 대지면적, 주거용연면적, 거주가능 가구 수, 총 방수, 동거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 수선 상태, 집 또는 거주의 개수, 건물 내 입주여부, 지붕재료, 외벽재료, 주거시설, 주택용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항목이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이 중 거주가능 가구 수와 동거가구 수 항목은 1990년에 독립된 항목으로 1회적으로 조사되었으며, 건물 수선 상태, 집 또는 거주의 개수, 건물 내 입주여부 등의 항목은 1960년 이후 삭제되었으며, 지붕재료, 외벽재료의 항목 역시 1990년 이후 삭제되었다.

<표 12> 주택 항목(1960년~2015년)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거처의 종류	●		●	●	●	●	●	●	●	●	●	●
- 건물층수										●		
대지면적							●	●	●	●	◎	●
주거용연면적			●		●	●	●	●	●	●	◎	●
거주가능가구수							●					
총방수			●	●	●	●	●	●	●	●	●	◎
동거가구수							●					
건축연도	●		●	●	●		●	●	●	●	●	●
건물수선상태	●											
집 또는 거주의 개수	●											
건물내 입주여부	●											
지붕재료	●		◎	◎	●		●					
외벽재료	●		◎	◎	●		●					
주거시설 (부엌, 화장실 등)					●		●	●	●	●	●	◎
주된 난방시설					●							
주택용도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4) 시도 특성 항목³⁾

2005년과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시도별로 3개 항목을 표본항목으로 자체 설정하여 병행 조사하였다. 시도에서 가장 많이 선정한 특성항목은 두 해 모두 노후준비방법과 이동사유, 지역생활여건 만족도에 관한 항목이었다.

<표 13> 시도별 특성항목: 2005년, 2010년

항 목		2005년 선정 시도 수	2010년 선정 시도 수
자원봉사 활동		1	-
자녀 출산시기		3	1
노후 준비방법		7	9
간호 수발자		5	3
치매, 중풍 시설 입소여부		1	-
노인요양시설 입소여부		-	3
현 거주지 만족도 및 거주 사유		-	2
현 거주지 거주사유	시도	3	2
	시군구	1	-
이동사유	시도	5	7
	시군구	1	-
전입 이유 및 전 거주지		-	3
식수사용형태		2	-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8	10
가구 생활비 원천		2	2
컴퓨터 보유 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4	-
최초 주택 마련시기 및 방법		4	-
최초 주택 마련시기 및 희망 주택형태		1	-
최초 주택 마련시기 및 대출 비율		-	3
여가 활용 형태		-	3

출처: 2017. 박주연 외, 18-20pp 재구성

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검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전수조사항목 12개(인구 7개, 가구 1개, 주택 4개), 표본조사 항목 52개(인구 34개, 가구 12개, 주택 6개)로 총 53개 항목⁴⁾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현장조사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인구주택총조사의

3) 박주연, 박선희, 서수희(2017) 순환센서스 3차 시험조사 항목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참조.

4) 53개 항목은 표본조사항목에 포함된 전수조사항목 11개를 제외한 수이다.

품질저하 및 대규모 현장조사(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행정자료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로 실시되던 19개의 항목 중 9개의 항목(인구: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 사용방수, 건물 및 거주층,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타지주택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주택: 총방수, 주거시설 수)이 표본조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0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이전 조사에서 전수항목이었던 본관과 2010년 조사에서는 표본항목이었던 대지면적 항목의 경우, 등록센서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음의 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전수항목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의 전수항목과 수집 방법을 보여준다.

<표 14> 2010년과 2015년의 전수조사 항목 비교

분야	항목	2010 총조사	2015 등록 센서스	행정자료별					비고
				주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	외국인 등록	건축물, 주택공시	기타	
인구	성명	●	●	●		●			
	성별	●	●	●		●			
	나이	●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교육정도	●	○					학적부	
	혼인상태	●	○		▲				법적혼인상태
	국적	●	●		●	●			
	입국연월	●	●			●			
	출생지	○	○		▲				DB 수록
	1년전 거주지	○	○	▲					
	5년전 거주지	○	○	▲					
	혼인연월	○	○		▲				DB 수록
	총 출생아 수	○	○		▲				DB 수록
본관	-	●		●					
가구	가구구분	●	●	●					
	사용방수	●	○						
	건물 및 거주층	●	○	▲			▲		
	주거시설형태	●	○						
	점유형태	●	○						
	타지주택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	○				▲	재산세 자료	
주택	거주기간	○	○	▲					
	거처의 종류	●	●				●		
	주거용 연면적	●	●				●		
	건축연도	●	●				●		
	대지면적	○	●				●		
	총 방 수	●	○						
주거시설 수	●	○							
전수항목 계		19	12	5	2(1)	5(2)	4		

출처: 2017.10.21. 통계청. <http://meta.narastat.kr>

(1) 인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 부분의 전수 항목은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연월, 본관 등 7항목이다. 이 중 본관을 제외한 6항목은 UN권고항목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본관의 경우 고유항목으로 15년 마다 조사되어 2015년 전수항목에 포함되었다.

표본 항목을 통해서는 전수항목 이외에 입국연월, 종교, 교육정도, 전공계열, 출생지,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아동 보육, 활동 제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장소, 혼인상태, 혼인연월, 출산자녀수, 자녀출산시기, 추가 계획 자녀 수,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 단절, 사회활동,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 28개 항목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직관적으로 문항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는 항목이나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예,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을 제외한 모든 인구 항목들에 대해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조사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입국 연도의 경우, 국적 항목에서 출생시 국적과 현재 국적 중 어느 하나라도 외국일 경우 기입한다.

종교 항목은 ‘불교’,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구체적인 종교명 기입)’의 9개 중 선택한다.

전공계열의 경우 교육정도의 항목에서 대학교(2, 3년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출생지는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살던 곳을 기준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다른 시·군·구’, ‘북한 또는 외국’ 중 선택하며, ‘다른 시·군·구’와 ‘북한 또는 외국’의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년전 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기본 4개 항목 이외에 ‘태어나지 않았음’이라는 항목이 추가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보육은 1세부터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의 주 보육자(혹은 보육장소)를 기입한다.

활동 제약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치매’, ‘뇌졸중(중풍)’, ‘걷기, 계단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육체적 제약’,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제약 없음’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은 지속 기간의 전제 없이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집 안 돌아다니기’, ‘장보기(쇼핑), 병원 가기, 집

밖 돌아다니기’, ‘(16세 이상) 취업 활동’, ‘계약 없음’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근·통학장소는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의 위치를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다른 읍·면·동’으로 나누어 수집하며 ‘다른 읍·면·동’의 경우 행정구역명을 상세히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상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가족의 수입이 되는 일을 도와준 것까지 일한 것에 포함된다. ‘주로 일하였음’, ‘가사, 학업(학교, 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일하지 않았음’의 4개 항목으로 수집하며, ‘일하지 않았음’을 제외한 3개 항목에 응답자는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 장소 항목에도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월급 등 보수 받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보수 없이 가족의 사업을 도움)’의 4개 항목으로 수집되며, 산업은 ‘직장·사업체의 이름’과 ‘사업체가 하는 일’을, 직업은 ‘근무부서’, ‘직책(직업)’, ‘하고 있는 일’을 기입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 장소는 ‘사업장(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 작업 현장’, ‘운송 수단’, ‘기타(구체적인 장소 기입)’의 7개 항목으로 수집된다.

혼인 상태는 ‘미혼’, ‘배우자 있음’, ‘동거’, ‘사별’, ‘이혼’, ‘별거’의 6개 항목으로 수집된다. 자녀 출산 시기는 첫째 자녀와 마지막 자녀가 태어난 연도와 월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결혼 전 취업 여부와 경력 단절은 21세 이상의 여성만 응답하며, 경력 단절의 경우 그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취학 전 아동)’, ‘교육(취학 자녀)’, ‘가족 돌봄(부모 등)’, ‘기타(구체적인 사유 기입)’의 6개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활동은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단체 또는 동호회를 다중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 분야 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인권단체 등)’, ‘경제 분야 단체(노동조합, 직업 단체 등)’, ‘문화 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정치 분야 단체(정당 활동 등)’, ‘종교’, ‘지역 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친목 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교육 단체(학부모회, 교사 단체 등)’, ‘기타(구체적으로 활동 기입)’, ‘없음’의 10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은 61세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마련 방안을 수집한다. 여기에서는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예금, 적금’,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등’, ‘함께 사는 자녀’, ‘따로 사는 자녀’, ‘친척·인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보조’, ‘기타(구체적으로 기입)’의 10항목으로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두 개까지만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 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조사항목

전수	표본		
1) 성명	1) 성명	13) 아동 보육	24) 현 직업 근무연수
2) 성별	2) 성별	14) 활동 제약	25) 근로 장소
3) 나이	3) 나이	15)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26) 혼인 상태
4) 가구주와의 관계	4) 가구주와의 관계	16) 통근·통학여부	27) 혼인 연월
5) 국적	5) 국적	17) 통근·통학장소	28) 출산 자녀수
6) 입국 연월	6) 입국 연월	18) 이용 교통수단	29) 자녀출산시기**
7) 본관*	7) 종교**	19) 통근·통학소요시간	30) 추가 계획 자녀 수
	8) 교육정도	20) 경제활동 상태	31) 결혼 전 취업 여부**
	9) 전공 계열	21) 종사상 지위	32) 경력 단절**
	10) 출생지	22) 산업	33) 사회 활동
	11) 1년전 거주지	23) 직업	34) 고령자 생활비원천
	12) 5년전 거주지		

* 전수에만 있는 항목

** 2010년 대비 신규 항목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2) 가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 부분의 전수 항목은 가구 구분의 1개 항목이다. 표본 항목을 통해서는 전수항목 이외에 거주기간, 건물 및 거주 층, 사용 방 수, 주거시설 형태, 난방시설 주차장소, 주거전용·영업겸용 여부, 점유 형태, 임차료, 타지 주택 소유 여부, 주인(대표) 가구 여부 등 11개 항목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관적으로 문항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는 항목을 제외한(예, 건물 및 거주 층, 주거전용·영업겸용 여부 등), 모든 가구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부문 조사항목

전수	표본		
1) 가구 구분	1) 가구 구분	5) 주거시설 형태	9) 점유 형태
	2) 거주 기간	6) 난방시설	10) 임차료
	3) 건물 및 거주 층	7) 주차장소	11) 타지 주택 소유 여부
	4) 사용 방 수	8) 주거전용·영업겸용	12) 주인(대표) 가구 여부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가구 구분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남남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남남이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집된다.

거주 기간의 경우 가구원 중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1년 미만부터 25년 이상 까지 9개 수준으로 나누어 거주 기간을 수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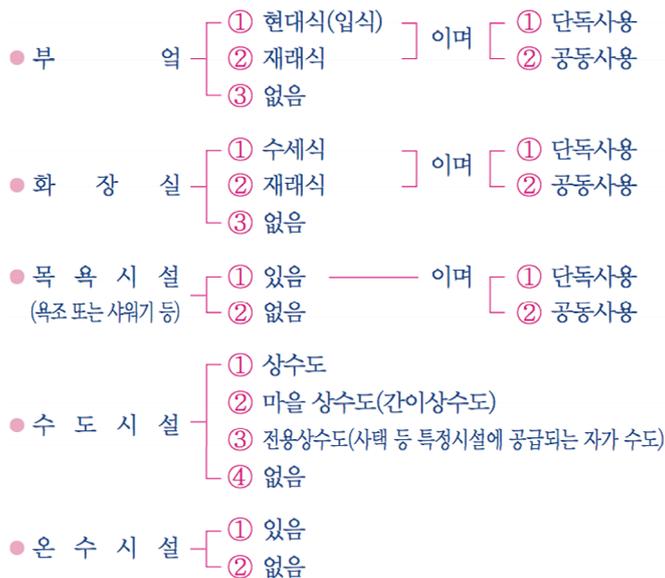
사용 방수는 ‘방’, ‘거실(사명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대청마루 포함)’, ‘식사용 방(식탁 등이 놓여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나누어 방의 개수를 기입하며, 방의 경우 ‘잠을 자는 방’과 ‘기타 용도의 방(서재, 옷방 등)’으로 나누어 개수를 기입한다.

주거시설 형태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온수시설’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주거시설 형태’ 문항

34 주거시설 형태

이 가구의 주거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난방시설은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의 3개 항목으로 수집하며,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한 곳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개별난방’으로 응답한 경우, 다시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LPG(프로판가스) 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화목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구체적 기입)’의 9개 항목 중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차장소의 경우 자동차 보유여부와 주차장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소 문항의 경

우, 주로 주차하는 지역을 ‘자가 주차장(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노상 주차장(주차선이 그려진 곳,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포함)’, ‘도로변, 골목길(주차선이 없는 곳)’, ‘공터’, ‘기타(구체적 기입)’의 6개 항목으로 수집하되,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주차하는 곳이 다르면 주로 주차하는 두 곳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유형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에 대한 문항으로 ‘자기 집’, ‘전세(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OO개월(개월 수 기입)’, ‘무상(관사, 사택 등)’의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집한다.

임차료는 ‘전세금(보증금)’, ‘월세(사글세)’에 대해 각각 그 금액을 기입한다.

타지 주택소유 여부는 가구원 중 가구주의 직계 가족만 응답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주인(대표) 가구 여부 문항의 경우, ‘주인가구’, ‘세 든 가구’ 중 택하되, ‘세 든 가구’의 경우 다시 ‘세 든 가구 중 대표 가구’와 ‘그외 세 든 가구’를 다시 표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주택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 부분의 전수 항목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연도의 4개 항목이다. 표본 항목을 통해서는 전수항목 이외에 총 방수, 주거시설 수 등 2개 항목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표 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부문 조사항목

전수	표본	
1) 거처의 종류	1) 거처의 종류	4) 총 방 수
2) 주거용 연면적	2) 주거용 연면적*	5) 건축 연도*
3) 대지 면적	3) 대지 면적*	6) 주거시설 수
4) 건축 연도		

*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표본항목

출처: 2017.1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거처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기타(구체적 기입)’의 10개 항목으로 수집되며, 단독주택은 다시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영업 겸용 단독주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기타(구체적 기입)’에 응답한 응답자는

이외의 주택 부문 항목(총 방 수, 주거시설 수)에 응답하지 않는다.

총 방 수는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수를 기입하며,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된다. 이의 수집 항목은 ‘방’, ‘거실(사명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대청마루 포함)’, ‘식사용 방(식탁 등이 놓여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의 수이다. 주거시설 수는 주택의 ‘독립된 출입구’, ‘부엌’, ‘화장실’의 수를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3장 해외사례

1) 개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조사 환경은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센서스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부분에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센서스 관련 형태를 알아보고, 이로부터 한국의 등록센서스 실시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8>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센서스 자료를 산출하는 국가들의 현황이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국가들이 행정자료를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한 대안적 센서스방법 개발에 대한 관심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센서스에서는 예는 주로 전통적인 면접 방식으로 센서스가 실시된 국가가 대부분인데 반해, 2010년 라운드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UNECE 55개 회원국 중 40%인 22개국이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를 시행하고 있다.

<표 18> 행정자료 활용 센서스 실시국가 현황

유형	2000 라운드(11 개국)	2010 라운드(25 개국)
행정자료 (완전등록센서스)	덴마크(2001) 핀란드(2000) 안도라(2001)	덴마크(2011), 핀란드(2010), 안도라(2011) 노르웨이(2011), 스웨덴(2011) 슬로베니아(2011), 오스트리아(2011)
행정자료 + 기존 표본조사 (경상조사)	네덜란드(2001)	네덜란드(2011), 벨기에(2011) 아이슬란드(2011)
행정자료+ 표본조사	싱가포르(2000), 슬로베니아(2001) 스웨덴(2001) 노르웨이(2001)	이스라엘(2008), 대만(2010), 독일(2011) 스페인(2011), 폴란드(2011), 스위스(2010) 싱가포르(2010), 터키(2011) 리히텐슈타인(2010)
행정자료+ 전수조사	스페인(2001) 포르투갈(2001) 이탈리아(2001)	이탈리아(2011), 체코(2010), 포르투갈(2011) 에스토니아(2011), 라트비아(2011) 리투아니아(2011)

출처: UNSD 보고서(2011. 7)

이러한 조사방식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입 초기에 현장조사와 행정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만으로 인구·주택의 상세한 특성까지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등 2000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국 중 3개국(독일, 스웨덴, 아이슬란드)은

2010년 전후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2) UN 권고안

(1) 센서스 형태별 특성⁵⁾

해외 주요 국가 센서스 조사는 실시 방법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단기간에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있다. 현장조사 방식은 전화, 우편, 인터넷 혹은 방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누적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로 다른 지리학적인 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해당 년도를 대표하는 데이터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간이조사 방식의 전수조사와 상세조사 방식의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둘째, 순환센서스 방식은 특정 기간(주로 몇 년)에 걸쳐서 해당 국가의 전체 지역을 포함하는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누적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순환센서스 방식에서 조사방법에 중요한 결정사항은 표본조사 기간과 표집률이다. 순환센서스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가 있다.

셋째, 혼합방식으로 인구와 주택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파악하고, 행정자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정보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스위스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이스라엘은 별도 조사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기존 행정자료와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도출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의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개인과 가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기존에 실시한 여러 분야들의 설문조사의 자료를 개인수준의 행정자료들과 결합시키며, 별도의 새로운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자료를 기존 행정자료로부터 얻는 조사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 행정통계들을 개인 수준의 자료와 결합시켜 결과물을 얻는다.

(2) UN 항목 권고안⁶⁾

UN의 2020 센서스 라운드 인구에 관한 권고항목은 총 49개이다. 이는 조사 내용에 따라 지

5) UN(2015).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6) “순환센서스 3차 시험조사 항목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참고

리적 및 국내 이동 특성, 국제 이동 특성, 가구 및 가족 특성,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출산력 및 사망력, 교육적 특성, 경제적 특성, 농업 등 8개 부문으로 구분된다(표 19, 20, 21 참조).

<표 19> UN 2020 센서스 라운드 권고항목: 인구 부문(1) - 지리 및 이주 특성

세부 부문	조사항목
지리적 및 국내 이동 특성	1. 상주지 2. 센서스 시점 현재지 3. 출생지 4. 거주기간 5. 전 거주지 6. 과거 특정시점 거주지 7. 총 인구수 8. 소재지 9. 도시와 농촌
국제 이동 특성	1. 출생국 2. 국적 3. 국적 취득 4. 입국 년도

<표 20> UN 2020 센서스 라운드 권고항목: 인구 부문(2)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세부 부문	조사항목
가구 및 가족 특성	1. 참고 가구원과의 관계 2. 가구 및 가족 구성 3. 가구 및 가족 상태
인구 및 사회적 특성	1. 성별 2. 연령 3. 혼인상태 4. 민족문화적 특성 5. 종교 6. 언어 7. 인종 8. 원주민 9. 장애 상태
출산력 및 사망력	1. 총 출생아수 2. 생존 자녀수 3. 마지막 출생 자녀 생일 4. 지난 1년간 출생아수 5. 지난 1년간 출생아 중 사망아수 6. 초혼 연령, 낳자 또는 기간 7. 첫 출산 시 모 연령(낳자 또는 기간) 8. 지난 1년간 가구의 사망자수 9. 모계 또는 부계 고아
교육적 특성	1. 문맹 여부 2. 재학상태 3. 교육정도 4. 교육훈련 전공, 자격

<표 21> UN 2020 센서스 라운드 권고항목: 인구부문(3) - 경제적 특성 및 농업

세부 부문	조사항목
경제적 특성	1. 경제활동상태 2. 종사상 지위 3. 직업 4. 산업 5. 근로 장소 6. 고용의 제도적 부문 7. 근로시간 8. 자기 소비재 생산 참여 9. 소득
농업	1. 자기 계정 농업 생산 (Own-account agriculture production) 2. 지난 해 모든 농업 작업 특성

UN의 2020 센서스 라운드 권고항목과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조사항목을 비교하면, UN에서 권고하는 핵심항목은 한국 조사에서도 대부분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센서스 시점 현재지, 국적 취득, 언어, 인종, 원주민 등에 관한 항목은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출산력 부문에서 지난 1년간 출생아 수와 그 중 사망아 수는 조사하지 않았다. 교육적 특성 부문에서는 문맹 여부와 재학상태를 조사하지 않았다. 경제적 특성 부문에서는 근로시간과 소득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농업 부문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UN의 2020 센서스 라운드에서 주택에 관한 조사항목은 총 40개이다(표 22). UN의 권고항목 중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에 관한 항목으로 거주 층 수, 사용 방 수, 주거전용영업겸용 여부, 점유형태, 임차료를 조사하고, 주택에 관한 항목으로 거처의 종류, 총 방 수, 연면적, 건축년도를 조사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UN의 권고항목 중 소유형태, 식수원천, 취사연료, 외벽재료, 바닥 및 지붕재료, 엘리베이터, 수리상태, 주거비용, ICT 기기, 자동차 수, 내구성 가전제품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표 22> UN 2020 센서스 라운드 권고항목: 주택부문

세부 부문	조사항목	
주택	1. 거처의 종류 2. 거처의 위치 3. 거주 여부 4. 소유형태 5. 방 수 6. 침실방 수 7. 연면적 8. 상수도시설 9. 식수 원천 10. 화장실 종류 11. 하수 처리 12. 고형 폐기물 처리 13. 목욕 시설 14. 부엌 시설 15. 취사 연료 16. 조명 및(또는) 전기 종류 17. 난방 시설 및 연료 18. 온수 시설 19. 배관가스 시설 20. 주거전용·영업겸용 여부	21. 점유 가구 22. 거주자 수 23. 건물 유형 24. 건축시기 25. 건물 내 주택 수 26. 거주 층 수 27. 주택 접근성 28. 외벽 건축 재료 29. 바닥 및 지붕 건축 재료 30. 승강기 가용성 31. 농업용 건물 여부 32. 수리 상태 33.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34. 점유형태 35. 임차료 및 주거비용 36. 가구 완비 여부 37. ICT 기기 가용성 38. 활용 가능한 자동차 수 39. 내구성 가전제품 가용성 40. 옥외 면적

3) 유럽연합 센서스(European Union Census)⁷⁾

(1) 개괄

2011년 유럽연합 센서스는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이 유럽에서 더 나은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유럽의 국가들의 센서스 자료를 방법론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취합하였다.

(2) 문항⁸⁾

유럽연합 센서스는 지리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민족문화적 상태, 경제적 특성, 교육 상태, 가구 및 가족 특성, 주거 환경 특성, 이주 상태 등을 조사한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은 한국 센서스와 항목에 큰 차이가 없으나 법적인 혼인상태와 다르게 동거 횟수를 묻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민족문화적 특성에서 민족성, 언어 등을 묻고 있다(표 23).

7) <http://ec.europa.eu/eurostat/web/population-and-housing-census/overview>

8) EU Commission. EU legislation on the 201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Explanatory Notes.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EU Commission, 2011.

<표 23> 유럽연합 조사항목: 지리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및 민족문화적 상태

세부 부문	조사항목
지리적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소 2. 도시/시골 3. 직장주소/학교주소 4. 통근수단/통학수단 5. 통근시간/통학시간
인구학적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 2. 연령 3. 법적 혼인상태 4. 자녀 수 5. 결혼 횟수 6. 동거 횟수 7. 장애
민족문화적 상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족성(Ethnicity) 2. 언어 3. 종교

유럽연합 센서스에서 경제적 특성과 교육 상태 문항 중에서 한국 센서스에서 묻고 있지 않는 문항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와 ‘주요 생계 수단’이다. 교육 상태의 경우 한국 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다(표 24).

<표 24> 유럽연합 조사항목: 경제적 특성과 교육 상태

세부 부문	조사항목
경제적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활동 상태 2. 직업 3. 무급서비스 제공여부 4. 종사 산업 5. 고용 상태 6. 비공식 노동 여부 7. 작업장 형태 8. 근무 시간 9. 불완전 고용 기간 10. 실직 기간 11.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 12. 생계 수단 13. 소득 14.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 상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수준 2. 전공 분야 3. 문맹 4. 컴퓨터 사용능력

유럽연합 센서스 조사항목 중 가구 및 가족 특성과 주거 공간 환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25). 그 중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다른 조사항목은 ‘동성혼’, ‘차량 소유 대수’ 등이다. 주거 공간 환경을 묻는 문항 중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없는 문항은 ‘건물에서 주거지 위치’이다. 2005년에 한국 센서스에서 건물 층수를 묻는 문항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삭제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주택 항목에는 건물의 건축연도, 대지면적 등을 묻는 문항이 있으나, 유럽연합 센서스 항목에는 없다.

<표 25> 유럽연합 조사항목: 가구 및 가족 특성

세부 부문	조사항목	
가구 및 가족 특성	1. 가족 구성원 간 관계 2. 동성혼 3. 가구 지위 4. 가족 유형 5. 가구 규모 6. 주택 소유/임대 7. 차량 소유 대수 8. 주차공간 여부 9. 전화와 인터넷 연결	
주거 공간 환경	1. 주거공간 존재 여부 2. 부수적인 거주공간 여부 3. 방 유형 4. 방 점유 상태 5. 온수 6. 소유 형태 7. 하수처리 유형 8. 주거공간 사용자 수 9. 주방 10. 공동공간 숫자	11. 조리 시설 12. 온열 방식 13. 수도 공급 체계 14. 전기 15. 화장실 16. 가스 배관 17. 목욕 시설 18. 공기 상태 19. 건물에서 주거지 위치 20. 엘리베이터

유럽연합 센서스 항목에서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크게 다른 점은 이주 상태를 묻는 문항들이 자세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표 26). 한국의 경우, 출생국과 거주국을 질문하여 이주민 여부를 판별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문항을 설계하였으나, 유럽연합 센서스의 경우 이주 상태에 관한 1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고 있다.

<표 26> 유럽연합 조사항목: 이주 상태

세부 부문	조사항목
이주 상태	1. 출생한 나라/ 출생 날짜 2. 이전에 거주하던 나라 3. 시민권 여부 4.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전체 기간 5. 해당 국가에 거주를 시작한 날짜 6. (센서스 조사 전) 5년간 주요 거주 공간 7. 현재 주거지에 살게 된 날짜와 이전 주거지 8. 이주 이유 9. 배우자 출생지 10 시민권 획득

4) 미국센서스 (전수조사 + 순환센서스)와 ACS

(1) 방법론⁹⁾

미국은 10년 주기의 전수 대상 간이 현장 조사와 함께, 전체 표본을 매일 분할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누적시켜 일정 시점에 공표하는 순환표본조사(Rolling Sample Survey)를 실시하는 혼합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미국 센서스 전수조사는 2010년 기준으로 7개 항목(성명, 가구원과의 관계, 성별, 나이, 히스패닉·라틴·스페인계 여부 및 유형, 인종 유형, 일시적 타지 거주 여부 및 종류 등)을 조사한다. 1번 가구원의 경우, 7개 항목에서 1번 가구원과의 관계를 제외한 6개의 항목과 추가로 4개 항목(총 가구원 수, 미집계 가구원 여부, 주택 점유형태, 전화번호)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을 조사한다.

미국의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이하 ACS)는 연방헌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실시되었던 센서스 표본조사의 개선방안으로, 월간 표본조사를 누적하여 연속성 및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존의 미국 센서스 표본조사(long form) 결과는 인구·사회 변화상을 보여주는 활용성 높은 통계이나, 조사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시의성 개선 등의 장점 때문에 순환센서스 방식의 ACS가 도입되었다.

ACS는 200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매일 평균 295,000가구를 조사하며, 2011년 6월 기준으로 1년간 전국적으로 3만 5천 4백만 가구(표본)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카운티(county)나 이에 준하는 교구(parish; Louisiana주)나 면(borough; Alaska주)의 총 3,142개 지역단위에서 매일 ACS 조사를 수행하였다. ACS의 자료수집방법은 1차 우편조사, 2차 CATI,

9) 순환센서스 도입을 위한 미국, 프랑스 사례와 시사점

3차 CAPI 순서로 수행되었는데, 2011년 인터넷 시험조사를 거쳐, 2013년 부터 Web 조사 도입으로 1회 차에 우편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게 되었다. 자료수집 방법별 조사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1차 우편조사에서 약 50%가 실행되고, 2차 CATI는 약 10%, 3차 CAPI는 약 40%로 이뤄졌다.

미국의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은 인구조사의 표본틀을 만드는 데 활용하였던 마스터 주소 파일(Master Address File; 이하 MAF)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ACS의 표본틀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MAF는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의 일반거주시설, 집단거주시설 및 선택된 비거주시설(공공, 개인 및 상업용)에 대한 우편주소, 위치주소, 지리코드 및 거주구역에 관한 기타 정보 등이다. MAF는 TIGER(Topological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라는 디지털 센서스 지도 및 관련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와 연동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자동화된 주소를 부여하는 기능(geo-coding)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센서스를 준비하면서 센서스 국은 MAF에서 가구정보를 갱신하였으며, 주소정보를 수정하였다. 한편, MAF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DSF 자료 갱신을 포함하여 ACS 무응답 가구 자료의 보완, Geographic Support System, 인구학적 지역 주소 리스트(DAAL) 갱신, 지역 공동체 주소 갱신 시스템(CAUS) 등을 활용하여 MAF를 보완하였다.

ACS의 표본은 D.C.를 포함한 미국 내의 3,143개 카운티와 푸에르토리코의 78개 기초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각각 선정된다. 일반거처(HU)와 집단거주시설(GQ)에 대한 표본은 분리되어 선정된다. 일반거처에 대한 첫 번째 완전이행표본은 2005년에 선정되었다. 매년 미국 내 약 3만 5천 4백만 일반 거처와 푸에르토리코 내 약 3만 6천 일반 거처가 표본으로 선정된다.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첫 번째 완전이행표본은 2006년에 선정되었으며, 연간 집단거주시설 내의 약 2.5%의 사람들이 ACS 표본에 포함된다. 표본의 신뢰도를 유사하게하기 위해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의 추출률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며, 200가구(약 500명) 미만의 지역은 연간 10%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2) 문항¹⁰⁾

ACS 설문지는 일반가구(Questionnaire)와 집단가구(Questionnaire Group Quarters)용 설문지로 구분되며, 일반가구 설문지는 개인(Population)과 주택(Housing) 영역으로 구분된다. ACS의 개인 항목은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으로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인종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에 관해 조사하는 항목이다(표 27).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가구주’를 주민등록상

10) 순환센서스 3차 시험조사 항목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ACS는 같이 사는 아동을 생물학적자녀/입양자녀/의붓자녀/위탁자녀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배우자도 동거 파트너를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종, 조상, 히스패닉/라틴계 여부 등을 3개 항목이나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출산력의 경우, 최종 혼인시기를 조사하여 재혼 여부 등 혼인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언어 부문에 있어서는 다인종/다문화인 미국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영어 구사 수준, 집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표 27> 미국 2017 ACS 조사항목: 인구 (1) - 기본 특성,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세부 부문	조사항목
기본 특성	1. 성명 2. 1번 가구원과의 관계 3. 성별 4. 연령 및 생년월일 5. 히스패닉, 라틴, 스페인계 여부 및 유형 6. 인종 유형 7. 조상 또는 민족 8. 혼인상태
출산력	1. 지난 12개월 동안 혼인상태 변화 2. 혼인횟수 3. 최종 혼인시기 4. (15-50세 여성) 12개월 간 출산 여부
언어	1. 사용언어

둘째는 사회분야로 교육 수준과 학위 분야, 진학, 혼인력과 혼인지위 및 출산력, 1년 전 거주지와 이민 및 입국 년도, 장애, 시민권 취득 여부 및 언어, 조부모 돌봄, 재향군인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표 28). 한국은 교육수준에서 최고학력을 기준으로 재학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나, 미국은 최근 3개월 내 재학여부와 학년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조부모 양육과 관련하여서, 한국보다 자세하게 묻고 있으며, 군복무 경험은 미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경제분야로 경제활동상태와 취업형태,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 통근, 소득 및 건강보험, 빈곤 등에 관해 조사한다(표 29). 경제활동에서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지난 주 기준 취업자에 대해서만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ACS는 5년 이내 경험한 일로 확장해서 취업자가 아니어도 과거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소자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득

에 대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 자영업자의 소득, 금융소득, 공적 및 사적 연금소득, 생활보조금, 실업수당 등 각각 세부 소득원별 규모와 이를 합산한 개인의 총소득을 개방형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유형을 묻는 문항은 미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표 28> 미국 2017 ACS 조사항목: 인구 (2) - 사회적 특성 및 이주 특성

세부 부문	조사항목
교육	1. 최근 3개월 내 재학 여부 2. 최고학력 3. 학사 학위 전공
활동제약	1. 청각 2. 시각 3. (5세 이상) a. 집중, 기억 의사결정 / b. 걷기, 오르기 / c. 옷 입기, 목욕하기 4. (15세 이상) a. 진료, 쇼핑 등
인구 이동	1. 출생지 2. 시민(citizen) 여부 3. 입국연도 4. 1년 전 거주지
기타	1. 조부모 양육 (a. 18세 미만 손자녀 동거 여부/ b. 손자녀 양육 여부/ c. 손자녀 양육 기간) 2. 군복무 (a. 미군, 예비군, 방위군 복무 여부/ b. 현역으로 복무한 시기/ c. 군 복무 장애 등급 여부, 장애 등급 종류)

<표 29> 미국 2017 ACS 조사항목: 인구 (3) - 경제

세부 부문	조사항목
경제활동	1. 직장 해고 여부, 지난 주 일시 휴직 여부, 6개월 내 o복직 여부 2.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3. 지난주 취업가능성 4. 마지막으로 일한 시기 5. 마지막으로 일한 기간 6. 12개월 내 주당 근로 시간 7. 종사상 지위 8. 기업, 회사 또는 고용주의 이름 9. 사업체가 하는 일 10. 산업 11. 직업명 12. 주요 업무 13.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득 여부 및 금액 14. 지난 12개월 총소득
통근	1. 통근장소 2. 통근 수단 3. (통근 수단에서 자동차, 트럭, 밴을 선택한 경우) 동승 인원 수 4. 출근 출발 시간 5. 통근시간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유형

ACS 개인 설문지의 주택항목은 물리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에 관한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30). 총 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건물 형태, 건축 시기, 대지면적, 총 방과 침실 수, 주거시설, 난방연료, 가구의 컴퓨터 보유와 인터넷 접속 현황, 차량 보유 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주거 비용으로는 일반적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관리비뿐만 아니라, 주택 유지비용(부동산세, 재해보험 비용, 주택대출 상환액 등)도 조사하고 있다.

<표 30> 미국 2017 ACS 조사항목: 주택

세부 부문	조사항목	
주택	1. 건물의 형태 2. 건물 건축시기 3. 이사 온 시기 4. 대지면적 5. 생산된 농산물 매출액 6. 총 방 수, 침실방 수 7. 주거시설 유무(온냉수, 욕조 등) 8. 보유한 컴퓨터 유형 9. 인터넷 접속 및 유료 여부 10. 인터넷 접속 방법 11. 1톤 이하 차량 수 12. 난방 연료	13. 주거비용(전기, 가스 등) 14. Food Stamp 또는 SNAP 15. 공동주택 여부 및 월 비용 16. 점유 형태(주택 대출 여부 포함) 17. 월 임차료/ 식비 포함 여부 18. (자가) 주택 예상 매매가 19. (자가) 연간 부동산 세 20. (자가) 재해보험 비용 21. (자가) 대출 여부 및 월상환액 22. (자가) 2 순위 대출여부 및 월상환액 23. (이동식 주택) 재산세, 임대료, 등록 수수료 및 라이선스의 연간 총 비용

한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미국은 난방연료, 가구의 컴퓨터 보유수와 인터넷 접속 현황, 차량 보유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ACS는 세부적인 주거비용과 주택 유지비용 등 주택과 관련한 가구의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프랑스 센서스

(1) 방법론

프랑스는 1999년까지 현장조사 방식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였으나 2004년부터 연군표본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누적하여 작성하는 순환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박시내·엄주희·엄홍재, 2016). 프랑스는 인구등록부가 없으며,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센서스 방법론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레슬리 키쉬(Leslie Kish)는 순환조사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 방법을 제안하였고, 1995년 Michel Jacod & Jean-Claude Deville은 센서스 개혁안의 기초를 INSEE에 제공하였다. 2001년

“programme de renovation du recensement”라는 이름의 프랑스의 새로운 센서스 방법론이 제안되었으며, 2004년 이 방법론이 실행되었다. 프랑스 센서스 조사에서 일반 가구는 거주자 명부(List), 인구 조사표(Individual form) 그리고 주택 조사표(Dwelling questionnaire)를 작성해야 한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약 37,000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위해 순환총조사의 표본전략은 매우 특별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샘플 사이즈로 인하여 표본이 비효율적이며, 반대로 큰 지역의 경우, 거주지에 기반하여 표본추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우선적으로 거주자가 1만명 이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한다. 프랑스 인구 중 약 3천만 명이 인구 1만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5개 집단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은 5년 기간 중 1번만 조사한다. 한편, 1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거주지의 8% 거처만 조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5년 후에 40% 인구를 조사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5년 주기 동안 70% 인구를 조사한 것이 된다.

(2) 문항

<표 31>은 2017년 프랑스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영역 조사항목을 기본특성, 인구이동, 교육, 경제활동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조사항목은 전통적인 방식의 센서스와 유사하다.

<표 31> 프랑스 2017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 인구

세부 부문	조사항목	
기본 특성	1. 성별 2. 생년월일 및 출생지 3. 혼인상태 및 사실혼 여부	
인구 이동	1. 입국연도 2. 국적 3. 교육기관 등록 여부 및 통학장소 4. 거주지 5. 연방국가 거주 여부 6. 통근장소 7. 통근 수단	
교육	1. 교육 수준	
경제 활동	1. 경제활동상태 2. 현재 근로 여부 3. 과거 노동 경험 3. 과거 종사상 지위 4. 과거 주요 직업 5. 현재 구직활동 여부 6. 사업체명 7. 직종	8. 전일제/시간제 여부 9. 종사상 지위 10. (자영업자) 고용원 규모 11. 직업명(개방형) 12. 고용계약 형태 13. 주요 업무 형태

프랑스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 특성 영역의 경우 혼인 상태에서 사실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동거에 대해 시민연대협약(in a civil union(PACS)¹¹⁾와 관습법 동거(In a non-marital or common-law union)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제활동 조사항목은 2015년 한국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특성 관련 질문이 많은 편이다. 한국은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자리 관련 질문을 하는 반면에, 프랑스는 현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분류하게 된다. 또한 비취업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구직활동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31).

프랑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관련 문항은 거처의 종류, 건물 준공시기, 엘리베이터 시설 여부, 가구의 사용 방 수, 주거용 연면적, 점유형태, 공공주택 여부, 현 거주지 거주시작 연도, 욕실 및 화장실 시설, 난방시설, 난방연료,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공간 여부 등을 조사한다(표 32). 프랑스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항목과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항목 간 차이점은, 프랑스의 경우 공공주택 여부를 조사한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는 시설 측면에서 엘리베이터 여부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조사한다.

<표 32> 프랑스 2017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 주택

세부 부문	조사항목	
주택	1. 거처의 종류 2. 건물 준공시기 3. 엘리베이터 시설 여부 4. 가구의 사용 방 수 5. 주거용 연면적 6. 점유형태 7. 공공주택 여부	8. 현 거주지 거주시작 연도 9. 욕실 및 화장실 시설 10. 난방시설 11. 난방연료 12. 자동차 보유 대수 13. 주차공간 여부

6) 캐나다 센서스

(1) 방법론

캐나다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법으로 센서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동일하게 간이조사(short-form) 방식의 전수조사와 상세조사(long-form) 방식의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11) 시민연대협약은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법적으로 결혼관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다.

캐나다의 조사대상은 해당 가구가 주 거주지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머무르지만 다른 거처가 없는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부모가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주지 조사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업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항목

<표 33>은 캐나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을 기본특성, 언어, 활동제약, 인구이동, 교육,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캐나다 센서스는 인구의 기본 특성, 사용 언어, 향후 센서스 정보 이용 동의 여부, 일상생활에서 활동제약 정도를 조사한다.

캐나다 센서스 조사 항목 중에서 한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캐나다 센서스는 한국과 달리, 혼인상태를 먼저 질문하고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또한, 언어의 경우 다문화, 다민족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와 불어 의사소통 여부,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따로 묻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이용하면 장소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상의 민족문화적 기원과 원주민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또 특징적인 부분은 캐나다 센서스에서 향후 92년 동안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2015년 취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근로를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의 유무와 비용에 대해 묻고 있다. 또한, 이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금액에 대해 묻고 있다¹²⁾.

캐나다 센서스 주택 조사항목은 주거 환경과 주거 비용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주택의 전반적 특성으로 점유형태, 총 방 수 및 침실방 수, 건축시기, 보수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택의 임차료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누가 납부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관리비와 재산세는 얼마인지 등도 상세하게 묻고 있다. 특히 주택의 예상 매매가에 대해 질문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34).

12) 본 보고서에서는 비용이 지출된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으므로, 해당 질문을 경제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33> 캐나다 201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 인구

세부분문	조사항목	
기본특성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혼인상태 5. 사실혼여부 6. 1번 가구원과 관계
언어	1. 영어 의사소통 가능 여부 2. 불어 의사소통 가능 여부 3.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주언어, 다른 언어) 4. 어릴 때 집에서 처음 배우고 현재도 사용가능한 언어 5.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주언어, 다른 언어)	
정보이용	1. 향후 센서스 정보 이용 동의 여부	
활동제한	1. 장애	
인구이동	1. 출생지 2. 시민권 3. 영주권 취득 여부 4. 영주권 취득 연도 5. 조상의 민족문화적 기원 6. 원주민 여부	7. 인종 8. 캐나다 등록 인디언 여부 9. 1년전 거주지 10. 5년 전 거주지 11. 부모님 출생국가
교육	1. 고등학교 졸업여부 2. 대학(college) 교육 이력 3. 대학교(university) 이상 교육이력	4. 최고 자격 전공 5. (학사 이상) 최고 자격 이수 지역 6. 현재 재학 여부
경제활동	1. 지난주 근로시간 2. 지난 주 일시휴직 여부 3. 4주 내 취업 예정 4.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5. 취업 가능성 및 취업 불가 이유 6. 마지막으로 일한 시기 7. 전년도와 당해연도 근로했던 회사명, 부서명 8. 산업 9. 직업 10. 주로 하는 일 11. 종사상 지위 12. (자영업체) 법인 여부 13. 통학장소 14. 통근수단, 통근 시 동승자 수 15. 출근 출발 시간, 출근 소요 시간 16. 전년도 1년간 근로 주수 17. (전년도 취업경험자) 전일제/시간제 여부 18. (전년도 취업경험자) 본인의 근로를 위해 보육비 사용 여부 및 금액 19. (전년도) 이전 배우자에게 아동 또는 배우자 생활비 지급 여부 및 금액	

<표 34> 캐나다 201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 주택

세부 부문	조사항목	
주택	1. 임차료/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자 2. 주택 점유 형태 3. 콘도미니엄 개발 일부 여부 4. 총 방 수 / 침실방 수 5. 건축시기 6. 보수 필요 여부 7. 농장 내 위치 여부 8. 지난 12월간 전기/연료/수도 및 기타서비스 비용	9. (임차인) (1) 월 임차료 (2) 보조금 여부 10. (집주인) (1) 월간 총 주택담보대출 납부액 (2) 주택담보대출납부액에 재산세 포함 여부 (3) 연간 총 재산세 (4) 주택 예상 매매가 (5) 월 콘도미니엄 비용

7) 호주 센서스

(1) 방법론

호주는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식으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캐나다와 달리 전수를 대상으로 상세조사(long-form)를 실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도 상세조사 기준으로 설문을 제시한다. 호주 센서스는 조사시점(2016년 8월 9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한다. 1년 중 6개월 이상 해당 거주지에 살거나 거주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을 '부재한 사람'으로 하고 해당 응답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수집한다.

(2) 항목

호주 센서스 인구 항목은 기본 특성, 언어, 활동 제약, 인구이동, 출산력, 교육, 경제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35). 호주 센서스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비슷하게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종교와 같은 기본적인 특성과 거주지, 출생국가, 입국연도, 통근에 관한 인구이동, 활동제약, 교육 정도 및 전공, 출산자녀 수,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특성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한국과 달리 가구 구성원에게 현재 부부(동거자)의 자녀인지 다른 한 쪽의 자녀인지를 묻고 있어서 최근 가족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가족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캐나다 등과 같이 다민족/다인종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주민 여부와 조상의 유형도 묻고 있다.

언어의 경우 주 언어를 묻고,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구사능력을 질문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 주로 활동제약 여부만 질문한 반면에 호주 센서스 문항에서는 활동제약

으로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 이유를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서 호주 센서스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호주는 무급 활동을 조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급활동은 무급가사 여부 및 시간, 다른 가구원에 대한 무급 돌봄 제공 여부, 무급 아동 돌봄 여부(본인 자녀 여부),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표 35> 호주 201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 인구

세부 부문	조사항목	
기본 특성	1. 거처 주소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혹은 연령	5. 가구주와 관계/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 관계 6. 혼인상태 7. 조상의 유형 8. 종교
언어	1. 가정에서 언어 외 사용 언어 2. (영어 외 사용자) 영어 구사 수준	
활동 제한	1. 신체이동 지원 필요 여부 2. 의사소통 지원 필요 여부 3. 위 두 문항에 대해 지원 필요 이유	
인구 이동	1. 상주 거주지 2. 1년전 거주지 3. 5년전 거주지 4. 호주 시민 여부 5. 출생국가 6. (호주 외 국가 출생자) 입국연도	7. 아버지 출생국가 8. 어머니 출생국가 9. 통근장소 10. 통근수단 11. 거처 내 상주자 12. 부재자 정보
출산력	1. 총 출생아 수	
교육	1. 재학 여부 2. 재학 중인 교육기관 유형 3. 최고 이수 학년 4. 자격(eudcational qualification) 취득 여부	5. 최고 자격 6. 최고 자격 전공 7. 1998년 이전 취득 여부
경제 활동	1. 개인소득 2. 경제활동상태 3. 임금근로/자영업자 여부 4. (자영업자) 법인 여부 5. (자영업자) 고용원 규모 6. 직업 7. 주로 하는 일 8. 사업체명 9. 산업	10. 사업체의 주된 생산 상품 혹은 서비스 11. 지난주 근로시간 12. 지난 4주간 구직 여부 13. 지난주 취업가능성 14. 지난주 무급 가사 여부 시간 15. 지난 2주 내 무급 돌봄 여부 16. 지난 2주 내 무급 아동돌봄 여부 17. 지난 12개월 내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여부

호주 센서스 주택 항목은 6개이다. 호주는 한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가구 내 자동차 수와 점유형태, 임대 유형 그리고 인터넷 접속여부를 묻고 있다.

〈표 36〉 호주 201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 주택

세부 부문	조사항목	
주택	1. 등록된 자동차 수 2. 침실방 수 3. 점유 형태 4. 임대 유형 (임차, 무상 등)	5. 임차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포함) 6. 인터넷 접속 여부

8) 소결

지금까지 UN의 권고안과 유럽연합 센서스 조사항목 그리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센서스 조사항목을 살펴보았다.

해외국가 센서스는 기본적으로 UN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특정 부문에 대해서 각 국가의 개별 실정에 맞게 조사하지 않거나 상세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구 기본 특성에 관하여서 공통적으로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종교 등을 조사하였다. 반면에 프랑스와 미국은 다민족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종, 민족, 원주민, 주요 언어, 작업장 언어 등에 관하여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센서스 항목과 큰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와 혼인상태는 모든 경우에 조사되었지만, 혼인 상태의 개별 내용에 관하여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특히, 호주의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현재 부부(동거자)의 자녀인지 다른 한 쪽의 자녀인지를 묻고 있어서 최근 가족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가족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의 경우,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있다.

해외국가 센서스와 한국 센서스 조사항목 중에서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 항목은 경제분야 조사항목이다. 한국의 경우, 일주일 전 취업자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 반면에 미국은 5년 이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있다. 또한, 유럽센서스와 미국의 센서스에서는 주요 생계수단에 대해서 묻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본인의 근로를 위해 사적으로 보육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어서, 자녀양육환경과 경제 분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도 있다. 호주는 무급 활동을 조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급활동은 무급가사 여부 및 시간, 다른 가구원에 대한 무급 돌봄 제공 여부, 무급 아동 돌봄 여부(본인 자녀 여부),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주택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세부적인 주거비용과 주택 유지비용 등 주택과 관련한 가구의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주택임차료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가구구성원 중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외 국가들 중에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대수를 조사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한국은 2015년에는 이들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다.

제4장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향

향후 한국의 센서스 개선방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신규항목의 추가, 기존 항목의 수정, 그리고 기존 조사연구와의 연계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 항목수정 및 신규항목 제안

(1) 항목수정

1.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성이나 연령과 같이 응답자의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 법과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센서스에서 질문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속성 중 하나이다. UN에서는 혼인상태를 “혼인에 관련하여 개인이 그 국가의 법이나 관습과 관련하여 갖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혼인상태에 관해 최소한 ①미혼(결혼한적 없음), ②법적으로 결혼(법률혼), ③종교적, 합의, 관습상 결혼(사실혼), ④사별 후 재혼하지 않음, ⑤이혼 후 재혼하지 않음, ⑥결혼하였지만 별거 등 6가지의 상태를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2008).

최근 혼인상태를 질문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구분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전통적인 혼인의 형태가 남녀 간의 법률혼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혼인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률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인 반면 사실혼은 혼인관계가 가구 구성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주로 법률혼 관계만을 인정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들어 실질적으로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간의 혼인관계 역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조사방법론상으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자료 역시 국제적 자료 공유를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동성간의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도 동성혼이 일반적인 혼인의 범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성간의 결합 대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적 기준에서 국가간 비교를 한다는 의미에서 동성간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파악은 장기적으로 센서스에 포함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동성혼 여부에 대한 질문은 유럽의 국가들의 질문들을 참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이성간 결혼에 대해 결혼, 사별, 이혼, 별거 등을 묻고 동시에 같은 상태범주를 동성간의 혼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 방식은 영국이 civil

partnership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배경 하에 만들어진 문항이므로 한국 사회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 영국의 2011년 센서스 혼인상태 질문지

4 On 27 March 2011, what is your legal marital or same-sex civil partnership status?

<input type="checkbox"/> Never married and never registered a same-sex civil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In a registered same-sex civil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Married	<input type="checkbox"/> Separated, but still legally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Separated, but still legally married	<input type="checkbox"/> Formerly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which is now legally dissolved
<input type="checkbox"/> Divorced	<input type="checkbox"/> Surviving partner from a same-sex civil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Widowed	

2. 주택: 주거방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태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거처라고 하는 공간에 거주하면서 자연적 위협과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취사와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면서,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를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는 인간 생존의 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다(통계개발원, 2016). 이와 관련하여 SDGs에서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목표 11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11.1에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민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하여 거처형태, 점유방식, 주거비용, 주거지 공간구조(방의 수) 등 여러 영역에서 통계가 생산되나, 한국에서는 주로 거처의 형태와 점유방식을 기본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점유형태는 현재 사는 집을 점유하는 형태로 정의되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자가와 임차의 이분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임차 형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자가인 경우 이를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명목상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출 상환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율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임차 항목에 월세 혹은 전세로 사는 경우만 기입하게 되

어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가 소유 현황 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영국 2011년 센서스의 주택 소유관련 질문지

H12 Does your household own or rent this accommodation?

➤ Tick one box only

- Owns outright ➔ Go to **H14**
- Owns with a mortgage or loan ➔ Go to **H14**
- Part owns and part rents (shared ownership)
- Rents (with or without housing benefit)
- Lives here rent free

H13 Who is your landlord?

➤ Tick one box only

- Housing association, housing co-operative, charitable trust, registered social landlord
- Council (local authority)
- Private landlord or letting agency
- Employer of a household member
- Relative or friend of a household member
- Other

<그림 6> 한국의 2015년 센서스 종교 질문지

종교	6 종교가 있습니까?
	• 「9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종교명을 기입합니다.
	1 있음
	→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원불교
	⑤ 유교
	2 없음
⑥ 천도교	
⑦ 대순진리회	
⑧ 대중교	
⑨ 기타 <input style="width: 80px; height: 20px;" type="text"/>	

그러나 유럽 각 국가의 예를 비교해 살펴본다면,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향후 종교에 대한 몇 가지 응답항목이 추가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사회의 다양화 및 이주 환경과 연관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전체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동남아시아 및 중동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종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국가들 역시 이주 상황에 따라 종교 질문지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터키로부터 다량의 이슬람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역사가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세분화되었다.

<그림 7> 독일의 2011년 종교 질문지

15 Which of the following religions, persuasions or beliefs do you adhere to?

Answering this question is voluntary.

- Christianity
- Judaism
- Islam
- Sunni
- Shiite
- Alevi
- Buddhism
- Hinduism
- Other religion, persuasion or belief
- No religion, persuasion or belief

한국 역시 이주노동자나 혹은 결혼이민자 중 어느 정도는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출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각종 산업, 학술적 교류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기 될 이슬람 문화권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이슬람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슬람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이슬람 인구의 증가에 대한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의 각 국가와 같이 이슬람을 각 종파별로 파악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슬람 인구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증가 또는 감소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산출 할 필요가 있다.

2) 신규항목 제안

항목 수정과 더불어 현재 센서스의 항목이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편이다. 그 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으며, 신규 항목이 꾸준히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대체로 충분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국내 정책이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국제수준의 비교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1. 인종과 민족: 현재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이민자들의 증가이다. 한국의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질문지는 출생시 국적과 현재 국적을 물어 출생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를 이주배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 패턴은 이것 보다 훨씬 복잡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과 더불어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중국 한족과 한국계 중국인(이른바 조선족)은 이들의 여러 생활 패턴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연구의 초점들이 달라져야 한다. 현재 센서스 조사표에서는 이를 위해 “조선족은 중국(한국계)으로 기입합니다”라는 지시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민족에 대한 질문을 독립적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그림 8).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표에서는 인종의 측면에서도 이주민의 인종을 이주민이 태어난 국가의 다수의 인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국적으로는 유럽지역 국가 출신 이주민이지만 인종적으로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민에 대한 정확한 인종적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8> 2015년 한국 센서스 국적 질문지

국적	<p>5 출생 시 국적과 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 조선족은 중국(한국계)으로 기입합니다.</p> <p>● 출생 시 국적 ① 대한민국</p> <p>② 외국 국가명: <input type="text"/></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 현재 국적 ① 대한민국</p> <p>② 외국 국가명: <input type="text"/></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5-1은 위 국적 중 어느 하나라도 외국일 경우만 기입합니다.</p>
입국 연도	<p>5-1 거주나 취업, 학업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때는 언제입니까? * 여행 등을 위해 단기간 입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p>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그림 9>)이나 호주(<그림 10>)의 경우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물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질문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대표적인 이주국가 만큼 자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인종이나 민족 등 개인의 혈통적 배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항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림 9> 2010년 미국 센서스 인종/민족 질문지

8. Is Person 1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No, not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Yes, Mexican, Mexican Am., Chicano

Yes, Puerto Rican

Yes, Cuban

Yes, another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Print origin, for example, Argentinean, Colombian, Dominican, Nicaraguan, Salvadoran, Spaniard, and so on.* ↴

9. What is Person 1's race? Mark one or more boxes.

White

Black, African Am., or Negro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 *Print name of enrolled or principal tribe.* ↴

<input type="checkbox"/> Asian Indian	<input type="checkbox"/> Japanese	<input type="checkbox"/> Native Hawaiian
<input type="checkbox"/> Chinese	<input type="checkbox"/> Korean	<input type="checkbox"/> Guamanian or Chamorro
<input type="checkbox"/> Filipino	<input type="checkbox"/> Vietnamese	<input type="checkbox"/> Samoan
<input type="checkbox"/> Other Asian — <i>Print race, for example, Hmong, Laotian, Thai, Pakistani, Cambodian, and so on.</i> ↴	<input type="checkbox"/> Other Pacific Islander — <i>Print race, for example, Fijian, Tongan, and so on.</i> ↴	

Some other race — *Print race.* ↴

<그림 10> 2016 호주 센서스 민족집단 질문지

16 What is your ethnic group?
 Choose **one** section from A to E, then tick **one** box to best describe your ethnic group or background

A White

- English/Welsh/Scottish/Northern Irish/British
- Irish
- Gypsy or Irish Traveller
- Any other White background, write in

B Mixed/multiple ethnic groups

- White and Black Caribbean
- White and Black African
- White and Asian
- Any other Mixed/multiple ethnic background, write in

C Asian/Asian British

- Indian
- Pakistani
- Bangladeshi
- Chinese
- Any other Asian background, write in

D Black/African/Caribbean/Black British

- African
- Caribbean
- Any other Black/African/Caribbean background, write in

E Other ethnic group

- Arab
- Any other ethnic group, write in

2. 이주 배경: 현재 한국의 센서스 질문지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정보를 묻지 않는 것과 더불어 이주배경에 대한 정보 역시 제한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주 배경의 경우 <그림 8>과 같이 출생 시 국가와 현재의 국적을 통해 출생지와 국적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장기 체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시점을 질문하여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대량 이주가 시작된 기간은 길게는 약 25년 짧게는 15년 이상이 지나고 있다. 이는 이주자들이 이미 한국 땅에 정착하여 2세를 낳고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

을 뜻한다. 이 경우 실질적 이주 2세인 아이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였지만 이들의 문화적 배경 및 성장시 경험하는 사회적 배경은 한국인 부모를 둔 사람들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보다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질문지는 자신의 이주 배경만을 질문 할 뿐,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어, 결혼이주를 통해 입국한 이주민의 아이가 이른바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 성인이 된 경우, 혹은 이주민끼리의 혼인을 통해 아이가 한국에서 자란 경우의 이주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경우 2016년 센서스를 예로 들면, 조부모 이상의 조상들의 인종적 기원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캐나다 인구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림 11> 2016 캐나다 센서스의 조상의 이주배경 질문지

This question collects information on the ancestral origins of the population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omposition of Canada's diverse population.

17. What were the ethnic or cultural origins of this person's **ancestors**?

An ancestor is usually more distant than a grandparent.

For example, Canadian, English, Chinese, French, East Indian, Italian, German, Scottish, Cree, Mi'kmaq, Salish, Métis, Inuit, Filipino, Irish, Dutch, Ukrainian, Polish, Portuguese, Vietnamese, Korean, Jamaican, Greek, Iranian, Lebanese, Mexican, Somali, Colombian, etc.

한국에는 현재 200여만명 가량의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가운데 이민자들은 내국인들과 섞여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만의 고유문화나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과정에서 거주지역이나 직업 등에서 정주민들과 물리적, 문화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민 중 많은 수가 단순 기술직이나 서비스 업종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이민지위는 사회계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민에 대한 질문이 단순히 이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이민국가들 내에서 이민자와 내국인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분화되는 현상, 그리고 집단들 사이의 갈등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및 학문적 연구 수요는 점차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각종 사회조사가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민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센서스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전수조사 함으로써, 다른 조사를 시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표본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3. 장애: 각국에 센서스에서 장애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수요와 연구의 수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던 SDGs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센서스를 통해 장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 센서스에서 일상 활동의 제약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이 문항과의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전통적 서베이를 통해 질문을 추가하는 것 보다 공식적인 장애등록자료를 사용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특히 장애에 대한 종류 및 등급 판정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상당히 표준화 된 형태로 자료가 생성되므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른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통계청 승인통계 중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133개 조사 중 장애항목을 포함하는 조사는 23.3%에 해당하는 31개 조사에 불과하고, 질문 방식 역시 국가의 공식적인 장애 분류법을 따르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득: 현재 센서스 질문지에는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여부만 질문 하고 있으나, 소득 그 자체에 대한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득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상당히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문항 중 하나이다. 한국의 센서스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에 대한 질문은 1975년도에 포함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제외 된 채 지금에 이르렀다.

해외의 센서스의 경우 소득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묻지 않았으나, 호주, 싱가포르와 같이 수입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센서스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ACS에서 소득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센서스에서 소득이 제외된 것은 아마도 응답자들이 소득 문항에 대한 질문에 예민하고 대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응답지를 제공한다던지, 혹은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자료나 사회보험 납부실적 등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산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12〉 2016년 호주 센서스의 개인별 소득 질문지

<p>33 What is the total of all income the person usually recei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k one box only. • Do <i>not</i> deduct: tax,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amounts salary sacrificed, or any other automatic deductions. •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ges and sala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r overtime - Commissions and bonuses Government pensions, benefits and allow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 pension - Family tax benefit - Parenting payment - Disability support pension - Newstart allowance - Youth and student allowances - Carer allowance - Any other government pension/allowance Profit or loss f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ncorporated business/farm (e.g. sole traders, partnerships) - Rental properties Other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ome from superannuation - Private pensions - Child support - Interest - Dividends from shares - Workers' compensation - Any other income • Information from this question provides an indication of living standards in different areas. <p>i Go to census.abs.gov.au for more inform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3,000 or more per week \$186,000 or more per year <input type="checkbox"/> \$2,000 - \$2,999 per week \$104,000 - \$155,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1,750 - \$1,999 per week \$91,000 - \$103,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1,500 - \$1,749 per week \$78,000 - \$90,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1,250 - \$1,499 per week \$65,000 - \$77,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1,000 - \$1,249 per week \$52,000 - \$64,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800 - \$999 per week \$41,600 - \$51,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650 - \$799 per week \$33,800 - \$41,5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500 - \$649 per week \$26,000 - \$33,7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400 - \$499 per week \$20,800 - \$25,9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300 - \$399 per week \$15,600 - \$20,7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150 - \$299 per week \$7,800 - \$15,5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1 - \$149 per week \$1 - \$7,799 per year <input type="checkbox"/> Nil income <input type="checkbox"/> Negative income
---	---

3) 통계청 조사통계와 통합조사 가능한 표본항목 제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다 시의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사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5년 주기의 20% 표본조사보다 더 자주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표본조사의 주기를 더 짧게 하여 자주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보다는 기존의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인구, 사회, 경제 관련 조사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기준 389개의 작성기관에서 총 1052종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작성기관별로는 통계청에서 직접 생산되는 통계가 총 60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더하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주요 지표(사회지표, 국가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 등)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자료를 이용한 센서스 자료 산출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사회·경제관련 조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센서스와 연계할

수 있다면, 비용절감과 더불어 통계청이 생산하는 조사 자료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37).

<표 37> 국가승인통계 현황

기관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78	59	319	189	150	39
통계청	60	38	22	37	2	21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통계청이 생산하는 주요 지표체계들과 인구·사회·경제 조사들을 검토하고, 다른 국가의 통합 조사사업을 참고하여 센서스와 다른 조사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기존 조사 사업들의 전체 지도를 조사주기별 및 조사내용별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 기존 조사 사업들의 전체 지도를 조사주기별 및 조사내용 분류하고자 한다.

(1) 통계청 사회조사 현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계청 작성통계는 60종이며, 이는 조사통계 37종과 가공·보고통계 2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37종의 조사통계는 통계의 분야별로 다시, 개인 및 가구 대상 조사 19종과 기업체 16종, 기타 7종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와 연계 가능한 사회조사로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8종의 조사 중 농림(3), 수산(1), 어가(1), 농가(1), 외국인(1), 인구동향조사(1)를 제외한 10종의 조사를 선별하였다.

10종의 조사는 기본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2)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양곡소비량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사교육비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등이다. 각 조사의 기본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8〉 통계청 인구, 가구 관련조사 현황

조사명	통계 분야	조사주기	작성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조사담당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5년	전수	가구	—	조사관리국 인구주택총조사과
주택총조사	주택	5년	전수	가구	—	조사관리국 인구주택총조사과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가계소비 (소득)	1년	표본	가구	전국 약 20,000 가구 (금융부문 1만가구, 복지부분 1만가구)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지출조사	가계소비 (소득)	매월	표본	가구	매월 1,000 가구 선정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양곡소비량조사	가계소비 (소득)	1년	표본	가구	1,559 가구 2,767 사업체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	월	표본	개인	전국 32,000 가구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고용	반기	표본	개인	9,949 개 조사구의 약 199,000 가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약 32,000 가구 포함)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교육	1년	표본	개인	1,094 학교, 1,407 학급 담임교사 및 학부모 44,000 명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교육부
사회조사	사회	1년	표본	개인	17,664 가구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사회	5년	표본	개인	18,000 가구	사회통계기획과

(2) 통계청 사회조사 항목 비교 검토

통계청의 기존 조사 중 인구주택총조사 문항과의 연관성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앞서 선별한 11종의 통계청 조사의 항목들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항목 포함 여부를 정리하고 그 중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진한 색으로 표기하였다(표 39).

검토 결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항목의 반 이상의 항목들이 다른 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었다. 현재 통계청 인구·사회·경제 조사들이 그 주제 및 조사 내용에 있어 조사들 간 중복과 유사성이 많으며, 이는 이들 조사와 센서스의 연계조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46개 항목 중에 26개의 항목이 다른 조사에서 이용가능해서 56.5%의 중복율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배경 문항들은 사망자녀, 자녀계획, 출생지, 이전 거주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이 되어 대체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정보, 특히 거주시설의 물리적 특성과 주택 부분에서 질문하고 있는 문항들은 다른 통계청 조사에서 잘 조사가 되지 않는 문항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건강상태, 복지, 노동, 사회참여 항목들은 다른 조사로 대체 가능하였으나, 통근, 통학 등과 관련한 질문들은 대체 가능한 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주기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가계지출조사(매월 조사하고 연간으로 공표)나 지역별 고용조사(반기)등과 연계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 보인다.

1.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조사로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고용현황 및 산업 현황에 대해 매우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조사될 경우 조사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특히 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에 한번씩 20만 1천가구(2017년 10월 기준)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시기별로 세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자료의 효용성이 높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성, 연령, 가구관계 등과 같은 기본 정보와 더불어 지난 1주일간의 경제활동 상태, 구직활동 여부, 직장의 취업 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구주택총조사의 문항을 대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는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더 많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주업 및 부업 시간”, “급여 지급 형태”, “3개월간의 직장 월평균 임금” 등은 인구주택총조사 질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항들이다 (표 40 참조).

2. 가계지출조사: 가계지출조사는 2017년부터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의 지출부분과 소득부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개편되었다 (통계청 고시 제2016-396호). 이 조사는 소득 부분에서 월 6,500가구, 지출부분에서 월 1,000가구를 추출하게 되는데 매월 자료를 산출 한다는 특성과, 소

득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개인과 가구의 배경 변수 뿐 만 아니라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그리고 교통수단 보유 및 주거형태, 면적, 점유형태 등을 물어보고 있으면서도, 같은 문항을 물어보는 다른 조사(예, 가계금융복지조사, 생활시간조사) 등에 비해 조사주기가 짧기 때문에 더욱 더 시의적절한 조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소득 뿐 아니라 가구원별 소득, 연간 사적 이전소득, 항목별 소비 지출현황 등을 질문 하고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다(표 40 참조).

한편, 아래 분석표를 기준으로 보면 특히 주거환경 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계청 조사 자료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다른 조사를 신설하거나 인구주택총조사에 문항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통계청 이외의 부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표본조사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와 연계하여 주거시설의 형태나 기능 크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해 전수조사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물에 관련된 행정자료를 이용해 건물의 종류, 연면적, 건축연도 등의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난방, 식수, 거주기간 등의 정보는 누락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를 이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중복 항목을 다른 조사로 대체 할 경우, 조사 간 중복 항목의 질문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아래 그림은 가구주의 관계 항목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지출조사의 질문 방식으로 중복 항목 간의 질문 방식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인구주택총 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가구주(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친손자, 친손녀 및 그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 ‘증손자, 증손녀 및 그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기타 친척·인척’,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의 15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나누어 수집하고 있어, 9개 항목으로만 구분하여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를 수집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지출조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중복항목에 대한 항목 대체 시 각 조사에서의 질문 구성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13> 중복 항목 중 가구주와의 관계 질문 비교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p>4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항목을 선택한 경우 「□」명 중 「□」번째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p>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 명 중 □ 번째 ④ 자녀(□ 명 중 □ 번째)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친손자, 친손녀 및 그 배우자 ⑧ 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 ⑨ 중손자, 중손녀 및 그 배우자 ⑩ 조부모 ⑪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⑫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 ⑬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⑭ 기타 친척·인척 ⑮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p>	<p>2 가구주와의 관계</p> <table border="0"> <tr> <td>1 가구주</td> <td>6 부모(장인, 장모)</td> </tr> <tr> <td>2 배우자</td> <td>7 조부모</td> </tr> <tr> <td>3 미혼자녀</td> <td>8 미혼형제·자매</td> </tr> <tr> <td>4 기혼자녀(배우자)</td> <td>9 기타</td> </tr> <tr> <td>5 손자녀(배우자)</td> <td></td> </tr> </table> <p>가계지출조사</p> <table border="1"> <tr>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 ④ 기혼자녀 또는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⑧ 미혼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⑨ 기타</p>	1 가구주	6 부모(장인, 장모)	2 배우자	7 조부모	3 미혼자녀	8 미혼형제·자매	4 기혼자녀(배우자)	9 기타	5 손자녀(배우자)		1				
1 가구주	6 부모(장인, 장모)															
2 배우자	7 조부모															
3 미혼자녀	8 미혼형제·자매															
4 기혼자녀(배우자)	9 기타															
5 손자녀(배우자)																
1																

〈표 39〉 통계청 10종 조사의 항목 분류: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명	인구주택 총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가계 지출조사	양곡소비량 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초, 중, 고 사교육비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조사주기		1년	매월	1년	매월	반기	1년	1년	5년
성별	0	0	0		0	0	0	0	0
생년월일(연령)	0	0	0		0	0		0	0
성명	0	0	0			0			
자녀 수	0						0		
사망 한 자녀 수	0								
자녀 계획 수	0								
가구원 수	0	0	0						
가구주와의 관계	0	0	0		0	0		0	0
교육정도	0	0	0		0	0		0	0
혼인상태	0	0			0	0		0	0
국적	0	0							
출생지	0								
1년 전 거주지	0								
5년 전 거주지	0								
산업	0	0	0					0	
직업	0	0	0					0	
근로 장소	0				0				
종사상의 지위	0	0	0		0			0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0	0			0	0		0	0
아동보육	0	0							
가구구분	0								
거주 기간	0								
가구사용방 수	0								
주거시설형태	0								

조사명	인구주택 총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가계 지출조사	양곡소비량 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초, 중, 고 사교육비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조사주기		1년	매월	1년	매월	반기	1년	1년	5년
건물 및 거주 층	0								
난방 시설 형태	0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0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0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0		0						
주차 장소	0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0	0	0						
주택									
거처종류	0	0	0					0	0
점유형태	0	0	0					0	0
주거면적	0	0	0						0
총 방 수	0								
건축연도	0								
주거시설수	0								
건강상태									
육체적, 정신적 제약 항목	0	0							
복지									
생활비 마련방법(노인대상)	0	0						0	
노동									
구직활동 여부	0	0			0	0		0	
직장의 취업 시기	0				0	0			
사회참여									
단체참여	0							0	
통근 통학									
통근, 통학 여부	0								
통근, 통학 장소	0								
통근, 통학 교통수단	0								
통근, 통학 소요시간	0								

(3) 통계청 통계조사와 통합 가능한 조사항목 제안

위의 논의에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중 통계청 조사를 통해 조사 될 수 있는 항목 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질문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청 조사 통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항목 중,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될 만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조사에서 항목은 응답자와 관련된 사실을 질문하는 문항과, 응답자의 의견이나 태도, 행동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분 될 수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의 문항은 응답자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응답자의 거주지에 대한 질문 등 사실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특성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가 있으며(예, 가계금융·복지조사), 의견이나 태도를 묻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조사도 있다(예, 사회조사). 이번 분석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격에 맞게 이 중 응답자 자신이나 응답자의 환경에 대한 사실을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 40).

질문 문항 중 주로 취업 등 문항이 포함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인 경제활동 사항인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급여지급 형태 등의 문항들이 새로이 포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활동 측면에서는 가계지출 조사에서 주거, 광열, 주택설비, 오락, 운동, 예식, 가전 등 각 부문에 걸쳐 가계지출 현황을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다 포함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만, 각 시기에 따라 필요한 문항을 모듈화해서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지출 항목을 순환시켜서 2-3년에 한번 씩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겨울철 조사에서는 주거 및 광열 질문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는 등록 장애인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항이다.

<표 40> 통계청 8종 조사의 사실판단 질문 문항

분류	조사항목	사회조사	사교육비 실태조사	생활시간 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양곡 소비량 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 지출 조사
기본 사항	미취학자녀 유무 및 수			0					
	부모의 생년월일		0						
	동거 여부				0				0
	부모의 교육정도		0						
	학교명 및 학급(번호)		0						
	지난 1주간 경제 활동							0	
	주업 및 부업 시간			0	0		0	0	
	일한 사업체 및 내용			0	0			0	
	일의 종류 및 부서, 직책			0	0				
	일에서의 지위			0	0				
	사업체 종사자 수				0				
	사업체 취직 시기 및 현재 종사유무, 퇴직 시기					0			
	일의 계약 상태							0	
	일의 근로 형태							0	
	직장 근로의 지속 가능성 및 이유							0	
	일의 급여지급 형태							0	
	지난 1주간 직장이 있었으나 일하지 않은 이유						0	0	
	등록 장애인 여부					0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0					0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0						
	개인소득				0	0			
	가구소득	0	0						
	교통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다른 부동산 구입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유무					0			
	월세평가액(시장가격)								0
	주 행동				0				
	함께한 사람, 장소, 동시행동				0				
평소 시간 부족 및 이유				0					

분류	조사항목	사회조사	사교육비 실태조사	생활시간 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양곡 소비량 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 지출 조사
보건	건강상태	유병기간	0						
		육체적, 정신적 제약 상태			0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여부	0						
	건강결정 요인	건강관리	0		0				
		양곡 소비량 및 재고량					0		
의료, 복지	의료, 복지 품목지출 지출시기 및 금액							0	
교육	교육공통	학생여부	0						
		재학생여부	0						
		대학생 여부	0						
		학생자녀 유무	0						
가족	가족관계	0							
	가족구성	부모 동거 여부	0						
		분거가족	0						
환경	환경오염 인식	거주지역, 분거이유, 분거기간	0		0				
		공적 연금 지출				0			
		사적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자산 또는 연금형 부채 유무				0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여부	0						
	노인복지	본인의 노후 준비	0		0				
		준비하지 않는 이유	0						
		가구주 은퇴 여부				0			
		은퇴 연령 인식				0		0	
		노후 월평균 최소 및 적정 생활비				0			
		은퇴 연령				0			
생활비 충당 정도				0					
소득 소비	소득재정 상황	소득/부채의 변화	0						
		가구원별 소득액							0
		연간 사적 이전소득액							0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0						

분류	조사항목	사회조사	사교육비 실태조사	생활시간 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양곡 소비량 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 지출 조사	
	건축소비 지출항목	0								
	자동차 소유 유무				0				0	
	자동차 외 기타 실물자산				0					
	입출금 자유 저축 유무				0					
	적립식 저축, 펀드 유무				0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 유무				0					
	예치식 저축, 펀드 유무				0					
	주식, 채권 유무				0					
	권리금 자산 유무				0					
	기타 금융자산(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깃돈)				0					
	가구 소득 증가 및 여유 자금의 운용				0					
	담보대출 유무				0					
	신용대출 유무				0					
	신용카드 대출 유무				0					
	외상할부 관련 미결제 잔액 유무				0					
	1년 전에 비해 부채 규모 변화				0					
	부채상환 방법				0					
	지난 1년간 원금 상환, 이자 납부일 지나친 경우				0					
	납부기일 지나친 이유				0					
	원금과 이자 납부의 생계 부담				0					
	가계부채 상환 가능여부				0					
	연간 비소비 지출금액				0					
	연간 비소비 외 지출금액				0					
	소비생활	주거, 광열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가구 및 조명기구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가구와 기타 실내장식 용품 등의 수선 및 설치 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가전 및 가정용기기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주택설비기구, 전동공구, 커튼 중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분류	조사항목	사회조사	사교육비 실태조사	생활시간 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양곡 소비량 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 지출 조사	
노동	취업	오락문화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악기와 운동 및 오락기구 등의 유지, 보수, 대여 관련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예식비용, 수수료 지출품목 지출시기 및 금액							0	
	취업	첫 직장 근로 형태 및 업종, 내용							0	
		첫 직장 취업 및 이직 시기, 이직 사유							0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속기간 및 현재 근무여부							0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퇴직 연령							0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로 형태 및 근무 내용							0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퇴직 이유							0	
		이직 및 퇴직 유무 및 시기						0		
		이직 횟수				0			0	
		지난 1년간 일한 기간				0				
		지난 1년간 직장의 생애 경력과의 관련성							0	
		지난 주 유급으로 가족 운영 사업체나 가족 종사 임금근로 일의 도움 유무							0	
		1주 36시간 미만 근무 여부 및 이유							0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0	
		근무 시간 및 업무량 확대를 위한 이직 희망여부							0	
		근무 시간 및 업무량 확대를 위한 이직 유무 가능성							0	
		최근 3개월간 직장의 월평균 임금						0	0	
		고용 시 근로기간 선정유무 및 기간						0	0	
		지난 1년간 교육 훈련 참여 유무						0	0	
		교육 훈련 기관						0		
		교육의 직업교육 관련 유무 및 직업훈련 목적						0		
		노동조합 가입 유무							0	
		유연근무제 활용유무 및 형태						0		
		유연근무 미활용 시 향후 희망 형태						0		
		정기 휴일				0				

4) 조사항목별 조사주기 제안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본으로 앞에서 살펴본 통계청 조사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양곡소비량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사교육비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가계지출조사 등의 조사를 각 조사주기를 고려하여 여러 조사들을 다음의 예와 같이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우처럼 가구조사와 사회조사를 통합시킨 형태고 각 조사의 내용과 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형태이다.

이와 같은 조사형태는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기본항목에 각 조사를 결합시킨 것으로, 여러 조사가 결합된 조사의 경우 각 조사에서 필요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의 표본 추출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표본 추출 방식 및 문항의 조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조사의 조합 방식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순환센서스의 구성은 11개 조사내용의 중복을 고려하여 조사를 설계한다면 유사 조사간의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표 41> 통계청 인구, 가구 관련조사 현황

조사	조사명	통계 분야	조사주기	작성방법	조사대상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5년	전수	가구
	주택총조사	주택	5년	전수	가구
A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가계소비	1년	표본	가구
B	가계지출조사	가계소비	매일	표본	가구
C	양곡소비량조사	가계소비	1년	표본	가구
D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	월	표본	개인
E	지역별고용조사	고용	반기	표본	개인
F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교육	1년	표본	개인
G	사회조사	사회	1년	표본	개인
H	생활시간조사	사회	5년	표본	개인

각 항목의 조사주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료의 시의성과 조사의 효율성이다. 문제는 이 두 요소가 서로 대립되는 요소라는 점인데 즉 조사를 통해 산출된 자료가 실제 현상의 변화를 의미 있게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나치게 자주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비용대비 자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목의 조사주기를 결의 수집은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변화하는가를 고려해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번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다른 주요 조사를 통해 각 해당 현상들이 얼마나 변화를 보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인가

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조사주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4> 통계청 조사현황과 조사주기 조정 항목 (9개 항목)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주기 조정항목
A			○	○									혼인상태 1년전·5년전 거주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주차장소 거주기간 총방수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F						○				○			
G					○								
H							○		○		○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주기 조정항목
A			○	○									혼인상태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F						○				○			
G					○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주기 조정항목
A			○	○									혼인상태 1년전·5년전 거주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주차장소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F						○				○			
G					○								

(1)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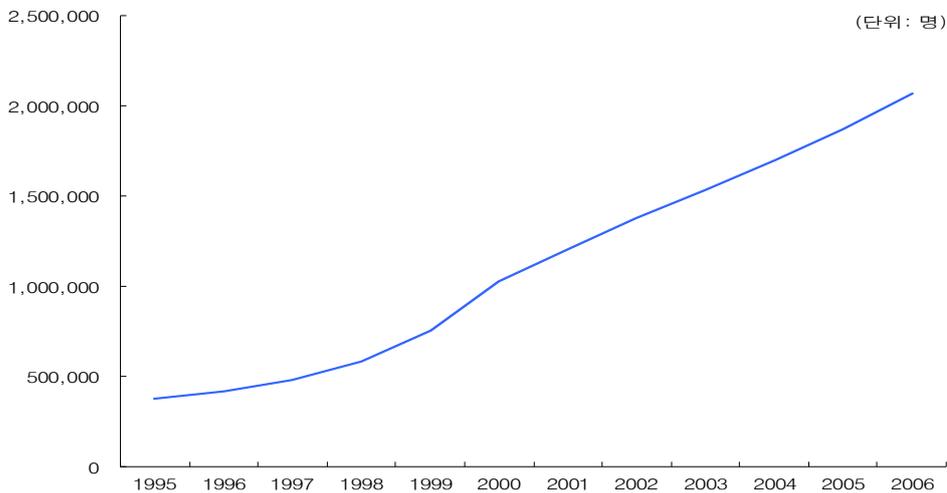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제약 여부와 이유를 간략하게 물어보고 있으나,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조사자료 전반에서 장애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산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인구주택총조사는 활동제약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장애의 심각성 정도는 파악하지 않으며, 장애의 원인도 병이나 사고, 선천성 장애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질병과 장애, 노화 등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현재 활동제약 문항의 수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인구주택총조사에 광범위한 장애 관련 문항을 한꺼번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조사 항목을 점차로 보강하여 충실히 하고 조사주기를 보다 짧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여부

는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애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정책, 노인 정책 등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장애인 출현율’은 1995년에 2.4%에서 2005년 4.6%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지체 장애가 2%, 시각장애 0.4%, 청각장애 0.4% 등 인데,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장애 출현율 10%나 미국 19.3%, 영국 19.7%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조사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5> 등록 장애인수: 1995-2006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료

한편 활동제약의 문제는 노령화의 문제와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 노령인구의 절대적인 수와 상대적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노령인구의 활동제약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적 인지적으로 기능저하가 없는 노인은 전체 노령인구의 60%이며 나머지 40%의 인구는 신체적, 인지적, 혹은 두 영역에 모두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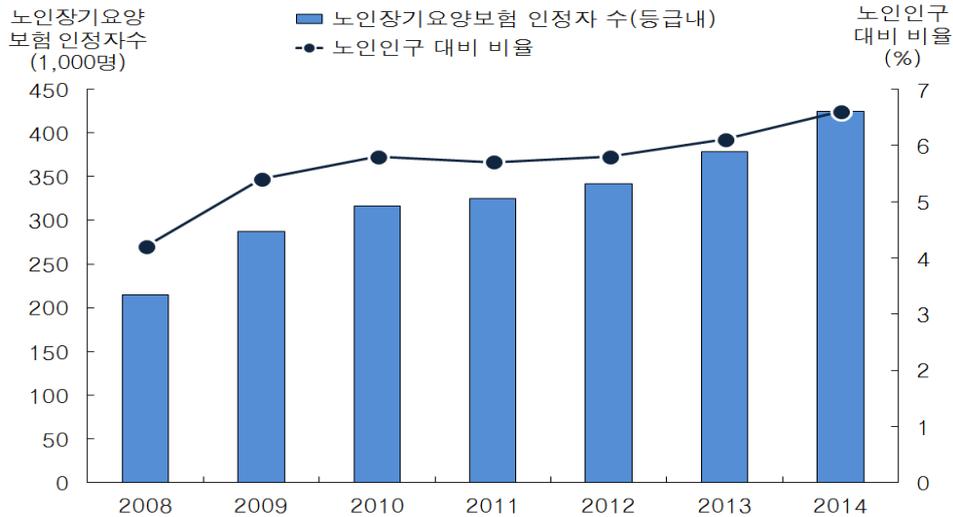
<표 42>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별 구성비율, 2014

		신체기능		
		기능제한 없음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IADL) 제한	일상생활능력 (ADL) 제한
인지기능	저하 없음	60.0	6.0	2.5
	저하 있음	23.2	5.1	3.1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4.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활동의 제약의 문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08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의 경우 42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령인구의 6.6%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림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와 노인인구 대비 비율, 2008-201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2015.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제약에 관한 문항은 그 조사 주기를 2년 내지 3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조사주기를 줄이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활동제약의 원인과 심각성, 활동제약의 기간 등을 여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이용교통수단 - 2년

한국의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주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201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의 버스 환승체계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것은 해운의 수송 분담률은 낮지만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 역시 이용객 들이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표 43>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수송량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1980-2013

(10만 명당)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대중교통	84,760	79,774	90,863	95,606	96,931	99,100
철도	8,373	9,510	10,609	11,186	11,515	12,248
지하철	22,352	20,204	22,731	23,588	24,109	24,764
해운	97	111	143	143	145	161
항공	225	172	202	210	216	224
버스	53,713	49,777	57,178	60,479	60,946	61,703
비대중교통	-	-	-	198,952	198,884	201,723
택시	50,388	38,242	37,808	38,593	36,961	36,829
승용차	-	-	-	160,359	161,923	164,894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	-	32.5	32.8	32.9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각 년도.

통근 및 통학의 경우를 국한해서 살펴보면 역시 통근 및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통근과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전체적인 수송 분담율의 변화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표 44). 통근, 통학 수단의 경우 1990년 8.3%에 불과했던 승용차 이용률이 2005년에는 32.3%까지 증가하였으며, 반면 버스는 같은 기간 48.7%에서 22.8%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급격하면서도 다른 자료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기간을 2년 정도로 줄여 교통수단 이용의 변화의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전반적인 수송 부담률과 통근, 통학 시 이용률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 가능한 방향으로 자료를 산출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통근 시간 이외의 업무 시, 혹은 단순 이동시 교통수단의 이용현황을 따로 질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표 44> 통근·통학 교통수단: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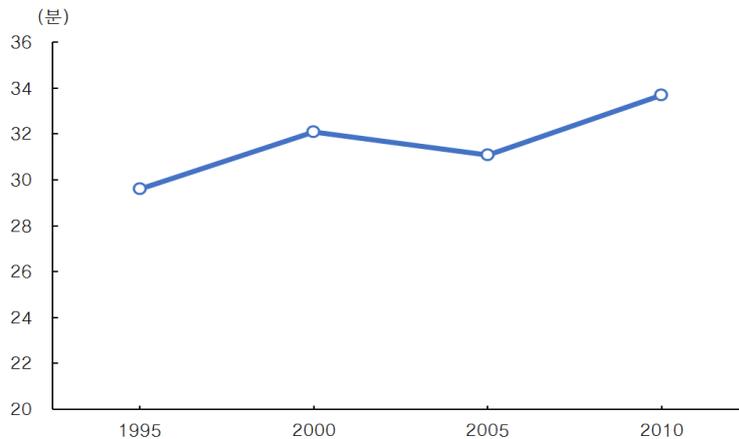
	(단위: %)							
	도보	승용차	버스	전철, 지하철, 기차	택시	자전거	기타	복합수단
1990년	26.6	8.3	48.7	4.6	0.9	2.8	2.1	5.9
1995년	27.9	20.4	34.8	4.7	0.8	1.8	5.5	4.2
2000년	26.1	27.5	28.6	6.5	0.8	1.3	4.4	4.8
2005년	29.3	32.3	22.8	7.3	0.5	1.2	3.5	3.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3) 통근통학소요시간 - 2년

평균 통근시간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그림 17).

<그림 17> 평균 통근시간,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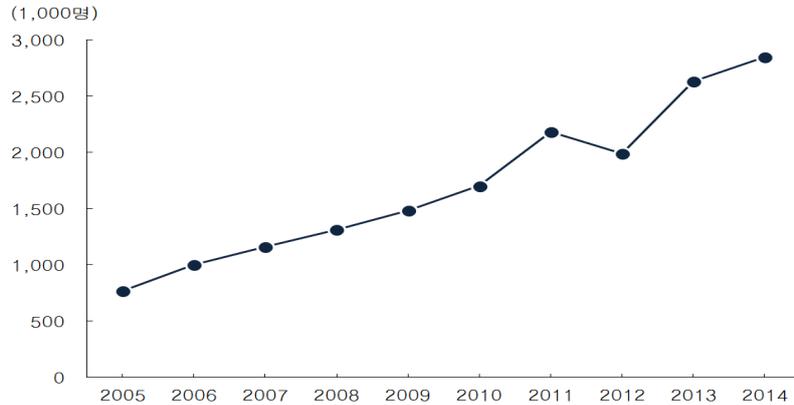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근 및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통근 및 통학이 주목적이라고 여겨지는 KTX 정기권 여객 수는 연도별로 큰 폭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광역화 및 서비스 체계 역시 향상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통근 및 통학의 거리가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통근 및 통학의 시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통근 및 통학 자료를 2-3년 주기로 조사하되, 현재의 조사와 같이 통근 및 통학의 방향(도시->교외 혹은 교외->도시)과 이

용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략의 거리를 함께 측정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통근 및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조사한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8> KTX 정기권 여객수, 200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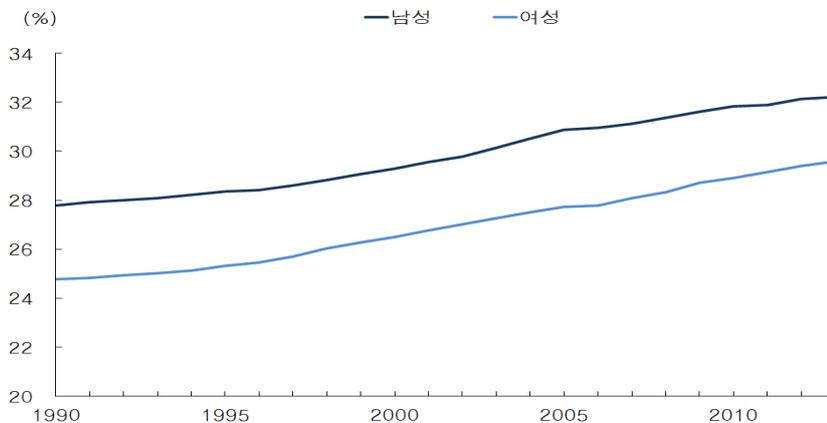


출처: 한국철도공사, 「KTX 여객 수송 추이」, 각 년도.

(4) 혼인상태 - 1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혼인상태 및 양상은 지난 수십년간 빠르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급격히 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별 초혼연령은 1990년 남성은 27.8세, 여성은 24.8세였던 것이, 2013년에는 남성은 32.2세, 여성은 29.6세로 각각 4.4세와 4.8세가 늘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그림 19> 성별 평균초혼연령, 1990-2013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와 같은 혼인상태의 비교적 급격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시기와 관련해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자주 자료를 수집하여야만 정책적으로 시의성이 있는 자료를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한국의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혼인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혼인 상태에 대한 자료는 매년 수집해야 할 것이다.

(5) 1년전·5년전 거주지 (1년 혹은 2년) 및 가구의 거주기간 - 3년

전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인구 이동은 현재 한국의 각 지역의 인구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방향과 빈도를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 표와 같이 현재 한국의 인구이동률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1970년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며, 최근 20년간 절대적인 이동인구의 수도 9백만 명 수준이다. 다만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1990-1995년을 기점으로 이동인구와 이동률이 정점을 찍은 후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은 인구 이동의 방향과 이동률에 대해 보다 조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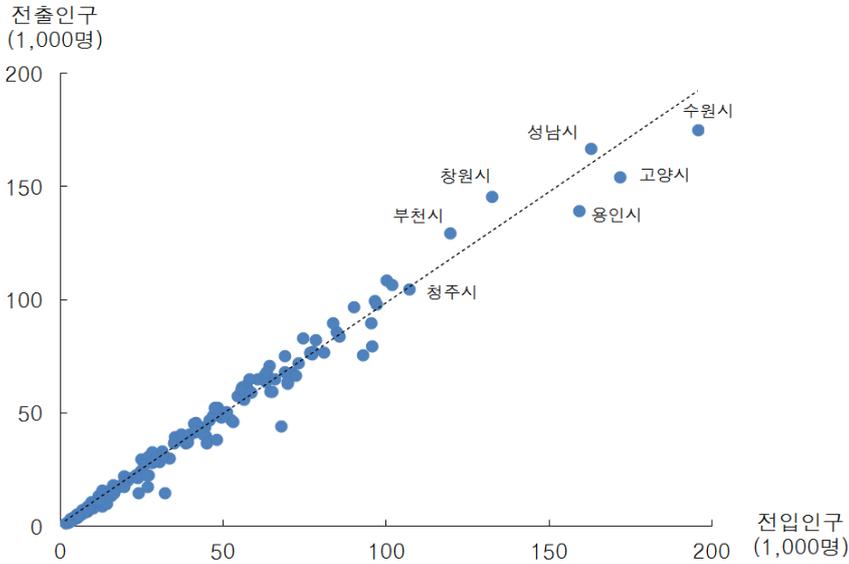
<표 45> 이동인구와 이동률, 1966-2010

기간	이동인구(1,000 명)	이동률(%)
1966-1970	4,394	16.2
1970-1975	5,209	17.1
1975-1980	7,658	22.9
1980-1985	8,402	22.8
1985-1990	9,831	22.0
1990-1995	10,087	25.0
1995-2000	9,723	23.1
2000-2005	9,175	20.8
2005-2010	8,572	18.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기존 자료(그림 20)에 의하면 인구이동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 전입과 순 전출은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 보다는 인구의 이동이 활발한 지역과 비교적 인구 이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인구 이동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시군구별 인구 전입량과 전출량의 관계, 201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전반적으로 거주기간 및 거주지 이동은 5년 보다는 짧은 주기로 조사 되어야 할 것이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주차장소 - 2년

주거와 관련해 주차장소에 대한 문항의 조사 주기는 자동차의 증가 추세와 연관되어 논의 할 수 있다.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0년에서 1995년에 이르면서 증가세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5년간 2만대가 넘는 증가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히 인구의 증가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보다 자주 수집,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가세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시설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매년 자료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2년 내지 3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 산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표 46> 자동차등록대수, 1990-2014

연도	자동차등록대수 (1,000 대)	가구당 자동차등록대수	인구 1,000 명당 자동차등록대수
1990	3,395	0.30	79.2
1995	8,469	0.65	187.8
2000	12,059	0.83	256.5
2005	15,397	0.96	319.8
2010	17,941	1.03	363.1
2011	18,437	1.04	370.4
2012	18,871	1.05	377.4
2013	19,401	1.07	386.3
2014	20,118	1.09	399.0
2015	20,990	1.12	414.7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0; 「장래가구추계」, 2012; 「장래인구추계」, 2011.

(7) 주택의 총 방수 - 3년

실제로 지난 세 번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방의 수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표 47). 그러나 주택에서 방의 수는 가구구성의 변화와 주거의 질의 변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소득의 증가 및 분배에도 영향을 받는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방의 수의 변화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3년 이내의 주기로 조사 되어야 하며, 특히 가구원수 등 가구구조와 가구의 소득 등의 자료와 함께 교차분석이 가능한 조사의 형태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연도별 평균사용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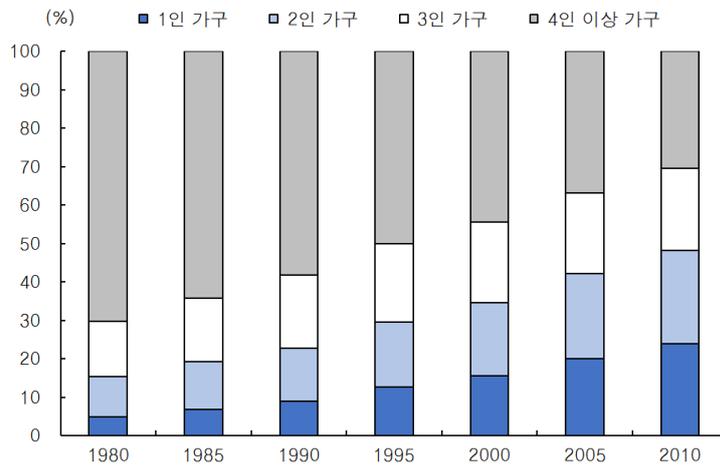
연도	평균사용방수
2000 년	3.4
2005 년	3.6
2010 년	3.7

출처: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각 년도.

거주 주택의 방의 개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구구성의 변화이다. 다음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일반가구의 가구원 수는 지난 30여년 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4인가구는 절반가량으로 그 비율이 줄어든 반

면, 1인가구의 비율은 27.2%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방의 개수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1>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 비율, 1980-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반대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개인별 주거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의 방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택의 방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은, 평균적인 가구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전 가구에 걸쳐 고르게 주거의 질이 향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에 의한 것인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방당 인원수의 변화인데, 지난 1970년 이후 방 당 인원수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가구원 수보다 방의 수가 더 많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49).

<표 48> 방당 인원수의 변화: 1970-2005

(단위: 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2.30	2.24	2.14	1.95	1.62	1.15	0.91	0.68
아파트	2.55	1.94	1.48	1.31	1.06	0.96	0.92	0.83
연립/다세대주택	2.78	2.74	2.00	1.73	1.30	1.03	0.93	0.82
기타	2.60	2.52	2.31	2.21	1.77	1.30	1.01	0.73
주택 이외 거처	-	-	2.56	2.27	1.92	1.44	1.14	-
전국 평균	2.32	2.25	2.10	1.87	1.48	1.08	0.92	0.76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소결

최근 십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조사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여 왔다. 한편으로는 행정자료의 양이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양질의 행정자료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베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조사 자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센서스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센서스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전통적인 방식의 센서스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조사자료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자료를 행정, 혹은 등록 자료로 대치하는 방식, 조사자료를 순환센서스 방식으로 수집하는 방식, 전면적인 행정 혹은 등록자료로만 센서스 자료를 산출 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일부 조사자료와 등록, 행정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수집방법을 전환하여 자료수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비전통적인 자료수집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센서스자료수집 방식이 어떤 추세를 띄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센서스의 문항 및 조사방식을 발전시킴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을 위한 기초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센서스 자료 구축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간의 센서스 항목들을 수집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분석하였다.

UN이나 유러변합의 권고안,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의 센서스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인구항목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교육, 가구, 출산력 등에서는 항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이동, 특히 국제적 인구이동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여 질문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특성 역시 충분히 질문이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항목 수정과 신규항목을 제안하였는데, 혼인상태, 주택소유, 종교 등에 대한 항목은 응답항목 혹은 질문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과 민족, 문화적 배경, 이주배경, 장애, 소득 등의 문항은 세계적인 추세 뿐 만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서도 점차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통계청조사를 통해 통합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8개의 개인, 가구 대상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통계조사와 통합 가능한 조사항목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조사자료 항목 중 응답자와 관련된 사실을 질문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통합 가능한 조사항목을 제안하였다. 조사주기와 관련해서는 자문과 기타 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제약,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혼인상태, 이전 거주지, 주차장소, 주택의 방 수, 등에 대한 조사 기간을 제안하였다.

2) 기술적 이슈와 제언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내용의 중복과 조사 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센서스 디자인 연구 필요하다.
2. 통계청 이외 기관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조사와의 결합과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사교육비의식조사는 통계청의 초, 중, 고 사교육실태조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 및 조사의 효과성 차원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충실한 형태의 통합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3. 통계청 외 기관과의 협조와 더불어 통계청 내부에서도 조사추진체계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통계청 내부 부처간 협업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조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센서스 조직의 법적 권한 확보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4. 실제 가용자원에 기반하여 실제 추가할 수 있는 문항의 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5.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청의 지표체계들을 위해 별도의 조사 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면접조사 이외에 전화 및 인터넷 등 대안적인 조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
7. 장기적인 자료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자료 생성과정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 대한 파라데이터 수집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메뉴얼을 계속해서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